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

2026.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1
II . 2026년 시행계획	6
1. 정책 여건	7
2. 추진방향	11
3. 과제 및 예산 규모 현황	14
4.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16
5.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	27
6. 주요과제 추진일정	28
III . 중앙행정기관별 2026년 시행계획	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
2) 교육부	40
3) 외교부	76
4) 법무부	85
5) 행정안전부	405
6) 문화체육관광부	418
7) 농림축산식품부	455
8) 산업통상부	478
9) 보건복지부	492
10) 고용노동부	502
11) 성평등가족부	534
12) 국토교통부	551
13) 해양수산부	563
14) 중소벤처기업부	582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601
16) 국가데이터처	612
17) 경찰청	627
18) 해양경찰청	645
19) 국세청	655
20) 질병청	665
21) 재외동포청	674

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수립 대상기관 및 정책

4. 2025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비전 및 정책목표

1

추진 배경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수립

- '23.12.27.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확정

☑ **비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 **5대 정책목표**

- ① **【경 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② **【안 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③ **【통 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④ **【인 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⑤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정책목표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 경과

- ☐ '23. 12. 27.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확정
- ☐ '25. 7. 17.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 ☐ '25. 9. ~ 10.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시행계획 제출
- ☐ '25. 11. ~ 12.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종합
- ☐ '25. 12. 10. 제37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대면)
- ☐ '26. 2. 2 ~ 2. 6. 제3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3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및 정책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위원부처 등 21개 기관(14부·1위원회·1처·5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경찰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 20개 위원부처 중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가 없는 재경부, 기획처, 국조실은 제외하고, 추진과제가 있는 국세청, 해경청, 질병청, 재외동포청은 대상기관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 서울 등 17개 광역지자체

※ 1 특별시, 1 특별자치시, 6 광역시, 3 특별자치도, 6 도

☐ 대상 정책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에 따른 외국인정책*

*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 이주 제외)과 동일한 의미

□ 주요 정책 대상 ('25년 12월 말 기준)

○ 체류외국인 약 278만 명

- (단기체류 약 62만 명) 친지방문, 관광, 사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 약 216만 명) 취업, 유학 등 91일 이상 장기 거주 및 결혼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외국인은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적취득자 약 34만 명

- 외국인 중 귀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

4

2025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 (체류외국인) '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5,112만 명) 대비 약 5.4%에 해당 (출처: 법무부·행안부)

※ ('21년) 196만 명(3.8%) → ('22년) 225만 명(4.4%) → ('23년) 251만 명(4.9%) → ('24년) 265만 명(5.2%) → ('25년) 278만 명(5.4%)

- (불법체류자) '25년 12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7,598명,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율 12.8% (출처: 법무부)

※ ('23년) 42만 명(16.9%) → ('24년) 39만 명(15%) → ('25년) 35만 명(12.8%)

- (난민) '94년~'25년 12월 말까지 난민신청 136,720건 중 107,642건 심사 종결

※ 난민인정 1,679명, 인도적 체류 2,727명 (출처: 법무부)

❖ (국적취득자) '25년 1월~12월까지 귀화자(11,344명), 국적회복자(4,037명) 등 총 15,381명 (출처: 법무부)

※ '91년~'25년 12월까지 총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약 34만 명

❖ (외래관광객) '25년 1월~11월까지 외래관광객*은 1,446만 명이며, 전년 동월 1,242만 명 대비 약 16.5% 증가 (출처: 한국관광공사)

* 외래관광객 = 총 외국인 입국 - (외교+동거+거주+군인+영주) + 재외국민 입국자 수 + 승무원

❖ (외국인투자액) '25년 기준 외국인투자액은 360.5억 달러, 전년 대비 4.3% 증가 (출처: 산업부)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 책 목 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중 점 과 제	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③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①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②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 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Ⅱ . 2026년 시행계획

- 1. 정책 여건**
- 2. 추진 방향**
- 3.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 4.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 5.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 현황**
- 6. 주요과제 추진일정**

1 정책 여건

□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 유지

주요 언론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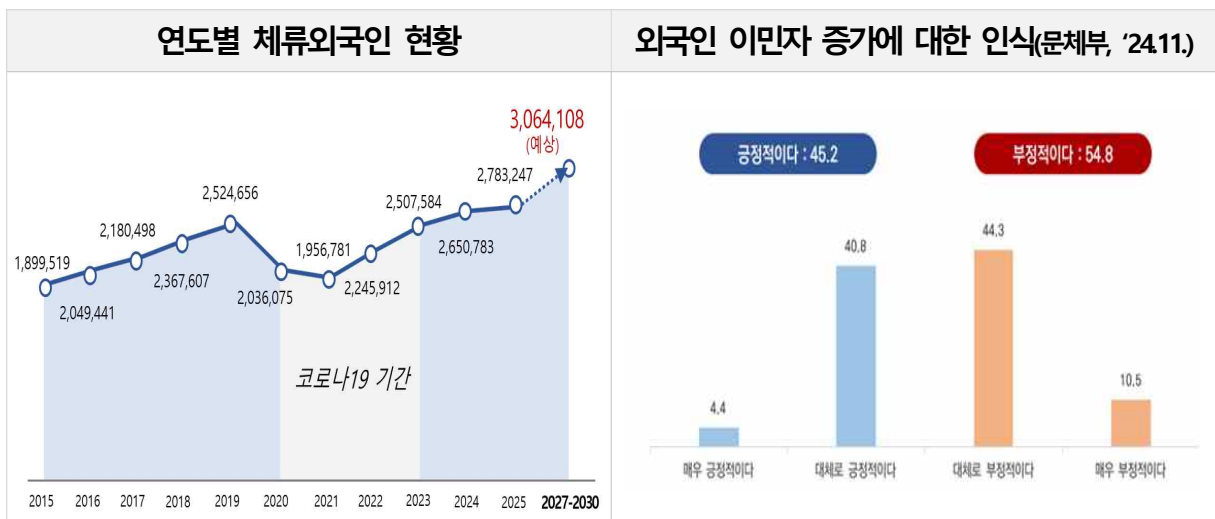
- ❖ 인구소멸 위험 부산,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증가 (MBC, '25.9.)
- ❖ 외국인 늘면서 범죄도 증가... "수사 등 대응 한계" (KBS, '25.4.)

○ 체류외국인은 전체 인구('25년 기준 5,112만 명) 대비 5.4%로 '26년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며, 이민자 증가는 인구감소, 노동력부족 해결 기대와 함께 사회적 비용 증가, 치안 상황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

- (현 상황) 新출입국·이민정책 발표 시점('24.9.)의 향후 5년 내 300만 돌파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며, 국민인식 조사 결과 외국인 이민자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고 안전·사회문제 해결이 중요

※ 가장 시급한 이민정책으로 "안전·사회문제 해결"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문체부, '24.11.)

- (시사점) 인구감소 대응과 단순 인력공급 차원의 외국인 유입 관점에서 벗어나, 인구·노동력·지역·안전·인권·사회통합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민행정 필요



□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화

주요 언론동향

- ❖ 유럽·日·영국 'AI 두뇌' 유치 총력... 韓도 인재 붙잡을 대책 시급 (조선비즈, '25.8.)
- ❖ "100년에 한번 기회" 美 떠나는 인재들 잡으려 세계 각국 경쟁 (연합뉴스, '25.5.)
- ❑ (대통령실 수보회의, '25.9.)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글로벌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로 활용 필요

○ 고령화로 인한 인력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 경쟁 치열

※ '23년 기준 한국의 세계 숙련노동자 유치 경쟁력은 회원국 38개국 중 25위(OECD, 인재유치지표)

- (현 상황) 조선업 등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확대 유치하였으나, 최고급 우수 인재 등 주요 전문인력은 정체* 상태

* 전문인력(교수·회화·연구·기술지도·점수제 우수인재 등) 42,159명('20년) → 56,313명('25년)

- (시사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주거·교육·세제 등 생활 여건 유인책 제공 필요

□ 지방소멸 가속화

주요 언론동향

- ❖ 지방인구소멸 가속화...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조선비즈, '25.3.)
- ❖ "지역소멸 마지노선 2만 명... "50년 안에 78곳 붕괴 (KBS뉴스, '24.8.)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사회 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

※ 경제활동인구 1만 명 미만 사군구가 현재 0곳에서 '42년 1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 '25.9.)

- (현 상황)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나, 지역 이민정책은 지자체마다 관심 사안*이 다르고, 중앙 주도 정책에 지자체가 따라가는 단계

* 수도권 지역은 우수 인재, 유학생 유치 중심, 지방은 계절근로, 단순노무인력 유치 중심

- (시사점) 외국인 유치가 지역소멸 위기의 실질적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 주도로 지역 실정과 수요에 맞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필요

□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미흡

주요 언론동향

- ❖ 한국인 자리 메우는 유학생 알바생... 차별적 시선은 여전(국민일보, '25.11.)
- ❖ "지게차에 묶어 공중에 들어올려 조롱"...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논란(뉴스1, '25.7.)
- 대통령 말씀(국무회의 '25.8.12.) "이주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주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 당부"

- 이민자 차별과 외국인 노동자·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나, 이민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

※ 한국 생활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17.4%로 유학생(27.7%)이 가장 높고, 차별의 주된 이유로 '출신 국가(54.5%)'가 가장 높게 나타남(이민자 체류실태 조사, '25.3.)

- (현 상황)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은 피해 구제가 어렵고, 미등록 아동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사각지대 발생
- (시사점) 침해 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신분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사회통합 수요 증대

주요 언론동향

- ❖ 장기 거주 외국인 258만 명 '사상 최대'... 사회통합은 새 과제(디지털타임스, '25.10.)
- ❖ 일하는 평일에 몰린 한국어 수업... 이주노동자 발 동동(MBC강원, '25.3)

- 정주형 외국인 증가와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내국인과의 갈등, 언어·사회부적응 문제 등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 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민과 이민자 간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 (현 상황) 이민자의 한국사회 이해·적응을 돕는 사회통합 정책의 외형적 확대에 비해 교육 접근성이 낮고, 이민 2세대·계절근로자·비전문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의 공급 부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15년) 25,795명 → ('25년) 90,180명 (3.5배 증가)

※ 계절근로자('23년), 외국인근로자와 재정착난민('24년)을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대상에 포함

- (시사점) 일방향적 정책에서 탈피 국민과 이민자가 상호 교류하는 양방향적 사회통합, 정책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 추진 필요

□ 반(反)이민정서 확산

주요 언론동향

- ❖ “캄보디아인 버스서 내려라” 까지... 납치 사건 이후 번진 ‘혐오’(동아일보, ‘25.10.)
- ❖ ‘차이나 아웃’... 혐오정서 키우는 반중 집회 1년간 110건 열려(서울신문, ‘25.9.)
- ▶ 대통령 말씀(국무회의 ‘25.11.11.)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 장치 마련 필요

- 국민 일자리 침해, 외국인 범죄 증가 우려 등 이민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과 특정 사건이나 가짜 뉴스 등을 통해 나타나는 이민자에 대한 오해, 외국인 혐오 등으로 반(反)이민정서* 확산

* 최근 중국 관광객 무사증 입국에 따른 반중 시위,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외국인 혐오 등

- (현 상황) 특정 국가에 대한 반감, 외국인 혐오로 인한 인종차별 등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미흡하고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음

※ ‘24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성인은 53.38점, 청소년은 69.77점(성평등부, ‘25.6.)

- (시사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과 이민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필요

- 체류외국인 300만 대비 미래지향적·사회통합적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
-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및 국민 인식 개선 강화

□ 통합적·체계적 외국인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

- 단기 수요에 초점을 맞춘 인력정책에서 탈피, 과학적 기반을 둔 인력 유입과 정주·통합을 고려한 이민정책을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27년까지 불법체류자 20만 명 이하로 감축, 다부처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질서있는 체류 환경 조성

□ 글로벌 우수인재 적극 유치

- 「Top-Tier 비자」 적용 분야를 AI·미래 모빌리티·로봇·방산 등 신규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교수·연구 인력까지 적용 대상 확대
 - ※ 'K-Tech Pass 정착지원패키지'와 연계 세제·교육·주거 등 혜택 부여
- KAIST 등 現 5개 특성화대학에 우수 일반대학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영주·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K-STAR* 트랙 신설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 지역 내 전문대학을 활용,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기술 수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 지역특화 비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규모 확대, 광역비자 시범사업 평가분석을 통한 운영성과 검토 및 정식 제도화 추진

□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 장기 출국대기자의 인도적 처우 향상 등을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에 출국대기소를 신설하고 법적 근거 마련
- 인권침해 외국인이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제화하여 운영 활성화

□ 정책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확대

-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인권보호, 산업안전 등에 관한 내용 편성
-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이 한국어·한국문화 등 한국 적응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前 온라인 사회통합 교육 제공

□ 반(反)이민정서 해소를 위한 국민 인식개선

-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국민 수용성 제고, 이민정책 관련 데이터 연계 확대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 이해 등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확대

3

과제 및 예산 규모 현황

□ 총괄 현황

○ (총괄) 전체 추진과제 1,636개, 총 예산 **약 7,902억 원**

- 전년도 예산(7,307억 원) 대비 약 595억 원 증가(8.1% ↑)
- 전년도 추진과제(1,504개) 대비 과제 수 132개 증가(8.8% ↑)

○ (중앙행정기관) 전체 추진과제 162개, 총 예산 **약 4,027억 원**

- 전년도 예산(3,747억 원) 대비 약 280억 원 증가(7.5% ↑)

○ (지방자치단체) 전체 추진과제 1,474개, 총 예산 **약 3,875억 원**

- 전년도 예산(3,560억 원) 대비 약 315억 원 증가(8.8% ↑)

(단위 : 개, 백만원)

'26년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합 계	1,636	790,257	162	402,741	1,474	387,516
	(100%)	(100%)	(100%)	(100%)	(100%)	(100%)
1. 【경 제】	278	334,249	57	252,360	221	81,889
	(17.0%)	(42.3%)	(35.2%)	(62.7%)	(15.0%)	(21.1%)
2. 【안 전】	48	14,845	26	13,521	22	1,324
	(2.9%)	(1.9%)	(16.0%)	(3.4%)	(1.5%)	(0.3%)
3. 【통 합】	1,084	354,812	36	109,611	1,048	245,201
	(66.3%)	(44.9%)	(22.2%)	(27.2%)	(71.1%)	(63.3%)
4. 【인 권】	158	76,154	21	20,090	137	56,064
	(9.7%)	(9.6%)	(13.0%)	(5.0%)	(9.3%)	(14.5%)
5. 【협력/인프라】	68	10,197	22	7,159	46	3,038
	(4.2%)	(1.3%)	(13.6%)	(1.8%)	(3.1%)	(0.8%)

□ 중앙행정기관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 관 \ 연 도	2026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62	402,741
교육부	9	152,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3,734
외교부	1	0
법무부	94	34,791
행정안전부	3	34
문화체육관광부	8	33,842
농림축산식품부	5	6,217
산업통상부	3	977
보건복지부	1	5,911
고용노동부	9	2,030*
성평등가족부	4	80,441
국토교통부	2	0
해양수산부	3	10,812
중소벤처기업부	3	13,27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0
국가데이터처	1	2,630
경찰청	4	1,700
해양경찰청	1	0
국세청	1	0
질병관리청	1	0
재외동포청	6	4,186

*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과제 사업(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 추출 불가로 관련 예산 제외

□ 지방자치단체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 관	연 도	2026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474	387,516
서울특별시		106	52,209
부산광역시		50	11,922
대구광역시		79	10,623
인천광역시		34	21,951
광주광역시		67	14,299
대전광역시		57	12,039
울산광역시		59	8,191
세종특별자치시		20	739
경기도		241	93,853
강원특별자치도		72	16,836
충청북도		99	12,288
충청남도		144	16,948
전북특별자치도		88	26,019
전라남도		147	24,987
경상북도		113	25,858
경상남도		69	32,789
제주특별자치도		29	5,965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가.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 노동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유입 영향 등을 고려하여 취업비자 발급규모 발표 (법무부)
※ '25년 : 숙련기능인력(E-7-4) 35,000명, 계절근로(E-8) 95,700, 선원(E-10) 23,300명
-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활성화) 산업계·지자체 등의 비자 개선 수요를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 후 정책에 반영 (법무부)
-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등 지원)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외국인 관련 데이터 분석·활용하도록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개방 확대 (법무부)

나.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 우수·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

- (K-STAR* 트랙 신설)^{신규} 現 5개 특성화대학(KAIST, DGIST, UNIST, GIST, UST) 외에 지방거점 국립대 등 우수 일반대학 석·박사에게 영주·귀화 절차 단축(석·박사 → (학위취득) 거주 → 국적(3년)) (법무부)

* Korea - 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툽티어 비자 및 우수연구자 지원 확대) 비자 적용 대상을 AI·첨단 모빌리티·로봇·방산 분야와 교수·연구 인력까지 확대하고, 우수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법무부, 산업부, 과기부)
※ 'K-Tech Pass 정착지원패키지'와 연계하여 세제교육주거 등 종합 이민정책 혜택 부여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신규} 지역 내 전문대학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 수준의 기술인력 양성 (법무부)

□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

-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확대)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 신설 및 점진적 확대 (법무부, 노동부, 국토부)
※ (E-7-4 전환) 1,781명('22년) → 12,035명('23년) → 13,392명('24년) → 11,510명('25.12.)
- (유학생 취업 특화비자 신설)^{신규}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외 구인난이 심각한 비전문 산업분야에 취업 허용 (법무부)
- (뿌리산업 숙련기술인력 지원) 뿌리산업 양성대학* 추가 선정,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기량 검증을 통해 숙련인력을 선발하여 산업체에 공급 (산업부)
* 외국인 유학생 양성 및 뿌리기업 취업 연계 지원 (現 경기과학기술대 등 12개 운영)

□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도입) 젊은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운영 (법무부, 복지부)
※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전국 24개 대학 선정 (2년 시범사업 운영)
- (계절근로 전문기관* 신설)^{신규}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와 민간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성격의 전문기관 지정·운영 (법무부, 농식품부)
* (업무)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계절근로자 선발·입출국·교육·통역·체류 지원 등
-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노동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여 신규 허용 업종 확대 추진 (노동부, 농식품부, 법무부)

□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 국제화 역량 제고 (교육부)
- (우수 유학생 취업 연계) 유학생과 지역 소재 국내기업 간 채용 연계를 위한 박람회 및 권역별 상담회 개최 (교육부, 산업부)

- (ODA 활용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 및 교환학생을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교육부)

다.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 (지역특화 비자제도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규모 확대 등 제도 개선 (법무부)
- (초단기 계절근로 수요 지원) 지자체 초청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일괄 고용 후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농업 법인 등을 통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도입 (농식품부, 법무부)
- (「광역형 비자」 정식제도화 준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평가분석을 통한 운영성과 검토 및 정식제도화 추진 (법무부)
 - ※ (유학 D-2) 10개 지자체 4,420명 배정 (특정활동 E-7) 5개 지자체 2,190명 배정
- (지자체 참여 촉진)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지자체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민정책 수립·심의 시 의견제시 (법무부)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및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교육)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역 이민정책 현안 파악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법무부, 행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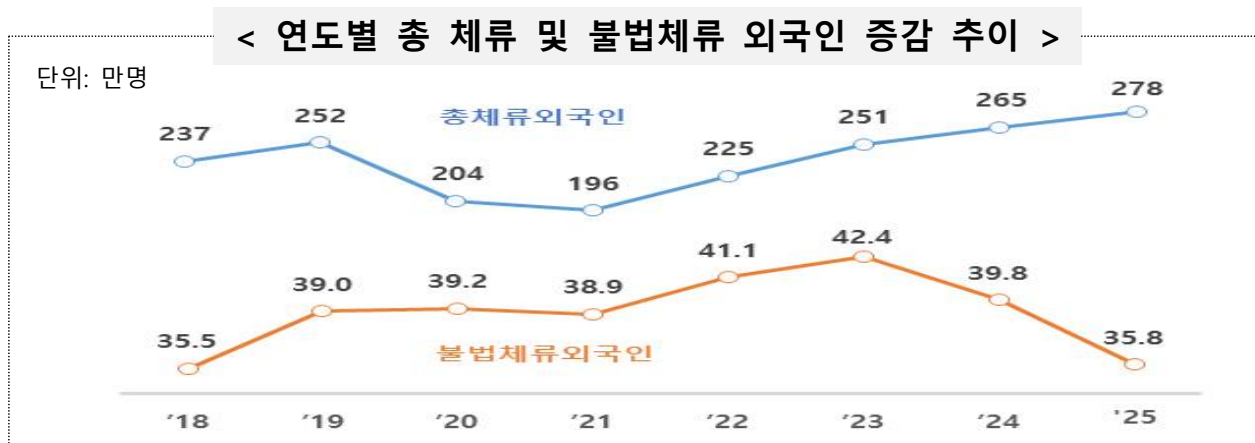
라. 이민정책과 국가 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K-Pop,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신규 콘텐츠 발굴,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한시 시행 (문체부, 법무부)
- (크루즈 관광 활성화) 해외 거점 지사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크루즈 박람회 개최 및 크루즈 상품 개발 (문체부, 해수부)
-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 확대, 의료관광 유치 기관 평가·인증제 활성화, 의료통역 지원 강화 (복지부, 법무부)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가.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불법체류 감축 지속)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법무부)



※ 정부합동단속 2회 실시 등 불법체류 외국인 총 48,458명 적발

- (근로감독 강화)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외국인고용법,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지도·점검 (노동부)
-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대응, 치안 협력 네트워크(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외국인 문제 해결 (경찰청)
-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건설협회 설명회 개최를 통해 건설업체 담당자의 인력정책 이해도 제고, 합법체류자 고용 유도 (국토부)
- (민생침해 및 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배달업 등 서민 일자리 잠식 업종,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및 집중단속 실시 (법무부, 경찰청)
- (불법취업 등 정보수집 체계화) SNS 등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업 알선 등 정보 취득을 위해 이민특수조사대(서울청 등) 등 활용 (법무부)

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국적제도에 대한 지식과 인권감수성 등을 갖추어 국적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법무부)
- (국적 법령 정비 및 홍보 강화)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국적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설명회를 통해 복수국적, 국적이탈 등 관련 제도 안내 (법무부)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 실시 (국토부)
- (치안 활동 전개) 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실질적 참여 증진 (경찰청)

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 (AI 기반 출입국 절차 간소화)^{신규} 고위험 외국인 선별을 위한 AI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 AI 활용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구축 (법무부)
-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 개선) 챗봇 기반 이용자 맞춤 자동응답 서비스 제공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사업 수행 (법무부)
- (공항만 검역 대응·협력 강화) 입국자에 대한 관계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모니터링 및 방역 실시 (질병청)
- (항만 보안 강화) 선박검색과 항만순찰 강화로 밀입국·밀수 등 외국인 범죄 단속, 법무부(인천청) 신규 감시정 건조 (법무부, 해경청)
- (항만 테러 예방)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등 항만 보안시설·장비 개선, 전국 항만 합동 보안 세미나 개최 등 항만 분야 점검 (해수부)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외국인력, 동포,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일정 단계 이상 이수 요건 규정 (법무부)
-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농·어촌 계절근로자 이수 의무화, 조선업·건설업 근로자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2시간) 운영 (법무부)
- (입국 前 사회통합 교육 제공) 장기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前에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법무부)

나.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 · 소통 증진

- (공무원 대상 상호문화 이해 교육 확대) 중앙부처·지자체·경찰 공무원 및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이민정책의 이해」 교육과정 확대 운영 (법무부)
- (다문화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제공)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를 통한 교육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인식개선 관련 홍보 (성평등부)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및 학교 내 다문화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개최 (교육부)
- (국민과 이민자의 어울림 행사)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등 지역 주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법무부)
- (문화다양성 정책 시행) ‘문화다양성의 날(매년 5.21.)’과 ‘문화다양성 주간(매년 5.21.~5.27.)’ 기념행사 개최,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조사 실시 (문체부)

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AI 교육 등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교육 제공 (농식품부)

- (외국인근로자용 맞춤형 교재 개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입문·기초·심화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부속자료(교사용 지침서, 수업용 보조자료) 개발 (문체부)
- (외국인력 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내방·전화상담 및 3자 통역 서비스 제공 (노동부)
- (외국인 대상 라디오 방송 제작) 통신서비스 활용 방법과 피해 예방 교육 제공,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방미통위문체부)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지속)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강화, 기초학습 지원, 청소년기 진로 상담 등 사업 시행 (성평등부)
-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외국인·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 지원 강화, 한국어 집중교육 및 학교적응·학업 지원 (교육부법무부)
- (이주배경 학생 관련 용어 정비)^{신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행정·통계 용어를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용어 표준안 마련 (법무부)

라.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 (동포 체류자격 통합과 취업 범위 확대) 한국어 교육 확대 등 동포 사회 통합 교육 강화, 산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포(F-4) 취업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법무부)
- (동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동포의 국내 정착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법제화 추진 (법무부)
- (「국내 거주동포 실태조사」 실시) 동포 취업 현황, 생활 실태 및 자녀 교육 등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동포 지원 정책 수립 (법무부)
- (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신규} 동포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 지원, 한국어 및 한국이해 교육 제공, 국내 취업 희망 동포 청년 취업 연계 지원 등 국내 유입 → 적응 → 취업 → 정주 선순환 구조 구축 (재외동포청)
- (고려인 동포 사회통합 강화)^{신규} 고려인 동포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개발, 동포 정체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법무부)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제도 안내·홍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노동부)
- (재난·재해 정보 제공) 재난안전포털(eng.safekorea.go.kr), 재난·안전 모바일 앱(Emergency Ready App)의 국민행동요령, 재난안전시설 등 자동번역 제공 (행안부)
-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 외국인·이민자·타 문화 등에 대한 편견, 차별적 방송 사례 소개 및 심의 규정 안내 (방미심위·방미통위)
- (출국대기자 처우 향상) 장기 출국대기자의 인도적 처우 향상 등을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의 출국대기소 설치와 법적 근거 마련 (법무부)
-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신규} 보호기간 상한, 보호해제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독립적 형태의 보호위원회 운영 (법무부)
- (권리구제 절차 보장)^{신규}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의 실질적 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법제화 추진 (법무부)

나.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통과 추진) 미등록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기본권과 법적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률안* 논의 협조 (법무부)
*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 3건, 22대 국회 계류 중
- (다문화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1:1 면담·멘토링 실시 (경찰청)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 보호) 피해자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33개소)·상담소(9개소) 운영을 통한 상담·의료·법률·숙식,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성평등부)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피해자 발견과 보호조치, 올바른 식별지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법무부)

다. 국제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심사제도 구축) 난민 전담 공무원 교육, 「난민 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난민전문통역인 통역 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한 난민인정 심사 역량 강화 (법무부)
 - (난민 이의신청 절차 공정성 강화) 추가 면접, 서면질의 등 이의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법무부)
 -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년도), 주요 난민 수용국(EU, 호주 등) 국가정황정보 기관과 교류·협력 (법무부)
- *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안보, 정치·경제, 사회문화, 법체계, 주요 사건 등을 의미하며 난민심사 시 핵심 판단 자료임
- (난민 처우 개선) 난민인정자의 영주허가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난민인정자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난민법령 개정 추진 (법무부)
 -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국제사회 요구와 우리사회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대상, 규모, 사업국 등 결정 및 국내 정착지원 제공, 난민의 보충적 유입경로인 학생난민 수용 추진 (법무부)
 - (난민 관련 국제기구 교류) UNHCR,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 등 국제협의·회의 참여, IOM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 교류 지속 (법무부, 외교부)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가.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전담조직 신설 검토) 공론화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출입국·이민 정책 전담조직 신설 방안 지속 검토 (법무부)
- (외국인정책실무분과위원회 정례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이민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 개최 (법무부)
 - ※ 5개 실무분과위원회: 전문인력 유치지원, 동포·난민·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협력,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나.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 (이민정책 연구기반 마련) 법무부·이민정책연구원·지역연구원 등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계 강화 지속 (법무부)
-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이민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중점·기본 연구과제 확대 수행 (법무부)
-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출입국·이민정책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완성도 제고 (법무부)

다.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 (이민행정 대민포털 개편 ISMP 추진) 대민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자민원 처리 체제로 전면 전환 및 AI 활용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법무부)
 - * Hi-Korea, 비자포털, 사회통합정보망, 유학생정보시스템 등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국내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모바일 등록증 발급(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법무부)
 -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36,383건 발급 ('25.1.10 ~ '25.12.31. 기준)

- (외국인 관련 통계 공표) 「인구총조사」,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국제인구이동통계」, 「이주배경인구통계」 등 생산·제공 (국가데이터처)
- (AI 활용 체류 심사 체계 구축)^{신규} 전자적 방식의 외국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AI 분석 기반 확립으로 신속·정확한 체류 심사 지원 (법무부)

라.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 (GCM* 이행점검 대응) GCM 목표의 자발적 이행력 확보, 주기적 점검을 위한 내부 협의체 운영 및 이행점검 회의 대응 (법무부)
 - *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국제이주의 효과적 관리 및 이주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최초 합의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력 체계
- (국제이주 관련 협력) OECD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참여, 이주 전문가그룹(SOPEMI) 연례회의 참석 (법무부)
- (KOICA 협력 ODA 사업 추진) ODA 사업 분야 및 대상 국가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 방안 추진, 개발도상국 이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출입국분야 강의 등 KOICA 협력 연수 제공 추진 (법무부, 외교부)
- ※ 인도네시아 이민청 대상 국익 위해자 관리 역량 교육, ANDEX 회원국 대상 문서감식 역량 강화 등 추진 예정

5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 현황

체류주기		사 업 현 황
	단기체류	전자입국신고서 활용 제고,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K-컬처 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보완,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입국 전 온라인 사회통합교육, AI 기반 출입국 심사 및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 등
	장기체류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요자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추진,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 정비, AI 활용 체류심사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이용 확대 등
체류자격		사 업 현 황
D계열	유학생 (D-2, D-4)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실태조사 실시,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졸업 유학생 취업특화 비자 운영 등
	투자자 (D-7~D-9)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등 국내 기술창업 지원 등
E계열	전문인력 (E-1~E-6)	「Top-Tier 비자」 대상 확대, K-STAR 비자트랙 운영, 해외 우수과학자 초빙·유치 사업, K-Tech Pass 정착지원패키지 운용 등
	특정활동 (E-7)	「광역형 비자」 정식제도화,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 요양 보호사 양성대학 운영,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기량 검증,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등
	단순노무인력 (E-8~E-10)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단순노무 신규 허용 업종 확대 검토,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조기 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추진 등
F계열	결혼이민자 등 (F-2, F-6)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대상 농업교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점검·운영, 지역특화비자 제도 개선 등
	다문화 가족 (F-1, F-3)	이주배경 청소년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용어 정비,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논의 협조 등
	외국국적동포 (F-4)	동포 자격 통합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동포 정체성 제고 프로그램 연구 등
G계열	난민 등 (G-1)	출입국향 난민심사 절차 개선, 재정착난민 수용 사업 추진, 난민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국가정황보고서 번역·감수 사업 지속, 난민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기구 교류 강화 등
기타 계열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비자·체류정책 제언제」 운영,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등

중점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연계 확대	뿌리산업 직종 확대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연중)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한국유학종합 시스템 운영 / 뿌리산업 양성 대학 협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 지원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단순노무 신규 허용 업종 검토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성과교류회
1-3. 지역기반의 이민 정책 체계 구축	외국인주민 정책 참여 현황 분석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2~4분기)	외국인 행정데이터 및 제공 (연중)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평가
1-4. 이민정책과 국가 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코리아그랜드 세일 개최 / 크루즈 마케팅	크루즈 박람회 / 의료·웰니스 관광행사 개최	K-ETA 고도화(3차)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2.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불체감축계획 수립 / 특별단속지역 지정	정부합동단속 실시(연중)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연중)	정부합동단속 실시(연중)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외국인범죄 예방교실(연중)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연중)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선박검색 및 항만순찰 강화(연중)	AI 기반 과학적 국경관리 방안 검토(연중)	신규 법무부 감시정 건조 추진(연중)	전자여행 허가제(K-ETA) 고도화(3차) 사업 수행
3.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완화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연중)	유학생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연중)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연중)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이민정책이해 교육 실시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현장기반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

중점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계획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대학생 멘토링 주관 대학 간담회	결혼이민자 농업교육 워크숍 및 결과보고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민간단체 보조 사업 지원	동포 사회통합 강화 방안 마련	동포 맞춤형 교육과정 고도화 및 과목 개발	동포 취업범위 확대 / 고려인 동포 사회통합 교재 개발

4.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등 지속 실시 및 홍보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외국인 보호위원회 개최(연중)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지원(연중)	인신매매 방지 등 직원교육 및 소속기관 간담회(분기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현장점검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실태 점검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난민위원회 개최(연중)	유엔난민기구 교류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난민인정자 국내 정착 실태 파악

5.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 체계 구축	실무분과 위원회 개최(분기별)	외국인정책 위원회 개최	실무분과 위원회 개최(분기별)	외국인정책 위원회 개최
5-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난민전문 통역인 인증제 (연중)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연중)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사업 보고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출입국·이민 행정 대민 포털 ISP 추진	「'26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25년 인구총조사 전수조사 결과 공표	전국 장래인구추계 등 공표
5-4. 국제 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국제이주점검 포럼(IMRF) 대응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개도국 이민업무 담당 공무원 연수 제공	유엔난민기구 등 교류 협력(연중)

Ⅲ. 중앙행정기관별 2026년 시행계획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1	100%	38,817	53,734	38.4%
1. 경 제	1	100%	38,817	53,734	38.4%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전략적인 유치 기반 마련, 유입·정착 지원 체계화

주요 내용

- ▶ 국내 연구기관의 박사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장기(3년, 10년) 초청·유치 지원
 - (Brain Pool) 연간 인건비(최대 3억 원), 체재비, 연구비 등 12개월~3년간 지원
 - (Brain Pool⁺) 인건비·체재비·연구비 등 연간 최대 6억 원까지 10년간 지원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등 핵심분야 연구자 정규직 영입 지원
- ※ '25년 성과 : 해외 우수 연구자 149명 초빙·유치, SCI(E)급 논문 723건, 등록 특허 7건 등('25.2. 기준)
-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책적 필요와 기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지원유형 도입하여 블록펀딩 형식으로 지원
 - ※ 기관의 유치 활동비, 초빙과학자 인건비 및 체재비, 연구비,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34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34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36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37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2-①-②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37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1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1개					00.0	'의 경우'△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1개)	38,329	31,817	38,817	53,734	38.4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38,329	31,817	38,817	53,734	38.4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 정책여건
 -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우수 R&D 인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더욱 전략적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필요
 - ※ (Choose Europe) '25~'27 1차 집중 투자기간로 하여 5억유로 규모의 예산 투입,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25년 해외 과학연구자를 위한 박사후연구원 과정 12개 신설, (프랑스 엑스마르세유국립대) '25년 미과학자 15명 내외 3년간 최대 1,500만유로 지원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 우수 연구자 149명(예정)을 유치 수요가 있는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으로 신규 초빙·유치하여 논문, 등록특허 등 우수한 성과 도출
- '25년 성과 : SCI(E)급 논문 723건, 등록특허 7건 등 ('25.2월 집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 전략 및 연구현장 수요에 따른 인재 유치 방안 필요

-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글로벌 탐티어 연구자 유치를 위한 기관 단위 유치 유형 신설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기관 단위 유치 유형 신설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책적 필요와 기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지원유형 도입하여 블록펀딩 형식으로 지원
- 기존 개별 과제별 수요 중심의 사업을 보완하여, 기관 단위의 전략적·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탐티어 연구자 발굴 및 초빙, 유치까지 패키지 지원 방식 도입

※ 기관의 유치 활동비, 초빙과학자 인건비 및 체재비, 연구비, 인프라구축비 등 지원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공고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선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2-1-2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 초청·유치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 과제 내용

- 국내 연구기관의 박사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초청·유치를 지원
 - (Brain Pool) 연간 인건비(최대 3억원)·체재비·연구비 등 12개월~3년간 지원
 - (Brain Pool+) 인건비·체재비·연구비 등 연간 최대 6억원까지 10년 간 지원하여 국내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등 핵심분야 연구자 정규직 영입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994. 2.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 사업 착수
- 2015. 3.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KRF)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0. 1.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Plus(Brain Pool⁺) 사업 신설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 추진절차 : 과제공모 →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운영 및 관리

2. '25년도 추진 실적

☐ 해외 우수 연구자 149명 신규선발(외국인·재외한인)

○ 2024년 성과

- SCI(E)급 논문 723건, 등록특허 7건 등 ('25.2월 집계)

3. '26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계 획
1/4분기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공고
2/4분기	▪ 신규과제 선정
3/4분기	▪ 신규과제 협약(연구개시) 및 입국 지원
4/4분기	▪ 성과교류회 개최

☐ 소요예산 : 총 53,73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38,329	31,817	38,817	53,734	38.4	
- 국 비 : 일반회계	38,329	31,817	38,817	53,734	38.4	

☐ 산출내역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 53,734백만원

- (계속, BP 개인유치형) 223개 × 103.96백만원 × 12/12개월 = 23,183백만원

- (계속, BP 기관유치형) 8개 × 866.25백만 × 12/12개월 = 6,930백만원

- (계속, BP+) 18개 × 508.4백만 × 12/12개월 = 9,151백만원

- (신규, 통합기관유치형) 5개 × 3,000백만 × 6/12개월 = 7,500백만원

- (신규, BP 개인유치형) 80개 × 150백만 × 6/12개월 = 6,0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명 수	127	183	매년 신규 유치인원 산출
'24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명 수	88	119	매년 신규 유치인원 산출
'25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과제 수	144	-	매년 신규 유치인원 산출
'26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해외연구자 신규 유치 과제 수	85	-	매년 신규 유치인원 산출

※ 실제 유치 과제 수(개인유치형)는 선정 상황에 따라 예산 기준 목표치와 다를 수 있음

5. 담당자

소관부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전화번호	044-202-4826
담당자	5급 양준호	이 메 일	jhjh12@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교육부

교육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9	100%	147,724	152,158	3.0%
1. 경 제	5	55.6%	131,397	135,871	3.4%
2. 안 전					
3. 통 합	3	33.3%	15,600	15,600	0.0%
4. 인 권	1	11.1%	727	687	△5.5%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지원
- ▶ 다문화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

주요 내용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활동 지속 추진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운영, '26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산업부 공동), '26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
-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선발·관리
 - '26년 선발규모(장기+단기) : 2,480명 (장기학위 1,900명, 단기(교환학생) 580명)
- ▶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등
- ▶ 다문화이해 교육 및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 연구학교 지정·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원격연수 개발,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안내, 한국어학급 운영 등
- ▶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43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44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48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50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2-④-①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50
1-2-④-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52
1-2-④-③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54
1-2-④-④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59
1-2-④-⑤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지원 강화	63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3-2-②-④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67
3-3-③-①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69
3-3-③-②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70
3-3-③-③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72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2-①-③ 세계시민교육 제고	74

I .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9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5)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10개			147,724	152,158	3.0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5)	94,094	116,556	131,397	135,871	3.4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1,620	1,384	833	610	△26.7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75	80	80	80	-	
		241	241	261	261	-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	-			비예산 '26종료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93,278	114,726	130,096	134,787	3.6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97	125	127	133	4.7	
		-	-	-			비예산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4)			15,600	15,600	0.0	
3-3-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20,530	29,020	-	-		특교청추진
3-3-3-1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20,530	29,020	-	-		특교청추진 '26종료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20,530	29,020	-	-		특교청추진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6,750	15,600	15,600	15,600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852	930	727	678	△5.5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852	930	727	687	△5.5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년 253,434명으로 '24년(20.9만명)대비 21.3% 증가하여 '27년 30만 유치를 위한 단계별 목표 수준에 안착, 지역별 취업·정주여건 개선 및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제고 필요

* ('22) 166,892명 → ('23) 181,842명 → ('24) 208,962명 → ('25) 253,434명

- 지역·산업 수요 등에 따라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필요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유학생 유치 지원 >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 운영
※ 어학연수 과정(4월), 영어 트랙 과정(6월), 전문대 특화 과정(7월), 지자체 연계(9월), 웨비나 입학설명회(11월)
- 글로벌 인재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과 국내 유망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 연계 기회 제공
※ 참가 규모: 구인 기업 102개 사, 면접 상담 건수 4,817건
- 2024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 결과 발표('25.2.) 및 4주기('25~'28) 개편 사항을 반영한 2025년 사업 공고 및 평가 실시('25.9.~)
- 지역 주도의 해외인재 유치 전략 수립·이행을 위해 지자체 부서장 협의회('25.1.) 및 담당자 워크숍('25.3.) 개최 등 추진

○ GKS 신규 선발인원: ('23) 2,456명 → ('24) 2,902명 → ('25) 1,970명

- 이공계 장학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첨단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 지원 강화

※ 이공계 신규 선발 장학생수 : '23 559명 → '24 920명 → '25 985명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한 외국인 유학생회(11개국) 활동 지원

※ 2025년 1~8월 누적 상담 건수: 5,750건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 한국어 센터 가이드라인 안내('25.1.) 및 K-MOOC를 통한 한국어 강좌 제공 추진

※ 한국어·한국학 강좌: ('21) 105개 → ('22) 217개 → ('23) 332개 → ('24.) 439 → ('25.6) 478개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확대 운영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입학 후 한국어 집중 교육을 통해 초기 적응 지원

<세계시민교육 강화>

○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역량 강화 지원

- (교사 연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및 연구회 활동 지원·운영, 지역별 세계시민교육 특강 실시

※ ('25) 제11기 중앙선도교사(64명) 연수 실시(1.21.~2.12., 2.21., 7.23.~24.), 선도교사 소속 학교 관리자 세미나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4.8.), 시도교육청 선도교사(620명) 대상 전달 연수 실시(연중)

- 고등교육기관(대학)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및 사례 확산

※ 학부과정 10개교 및 대학원과정 3개교 등 총 13개교 강좌지원(411명 수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지역·대학에서 해외인재 유치·정주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수요 지속
- GKS 장학생 지원 규모 확대 및 학생 특성 다변화에 따라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 유학 지원 및 친한·지한 인재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의 활동의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지자체 수립 해외인재 유치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여 유학생 유치·정주 여건 개선
- 찾아가는 오리엔테이션, 장학상담 및 수학대학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지원 및 동문회 개최 지원 등 동문관리 강화
- 세계시민교육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다양한 국내외 공유를 통한 세계 시민교육 인식 확산 및 실천 촉진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한국유학 정보,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 제공 등 유학생 유치 지원 활동 지속 추진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기반 박람회 운영을 통한 한국유학 홍보 활성화
- '26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내기업과 유학생 간 채용 연계 제공

- 2026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 국제화 역량 제고 도모
-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수립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의 실적 점검·모니터링, 취업 관련 제도개선 및 지역별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 ※ 시·도 취업박람회 및 해외인재 유치·양성 워크숍(성과공유회) 추진
- '26년도 GKS 사업 추진계획 수립, '26년도 학부 장학생 및 상반기 우수 교환학생 선발
 - ※ '26년 선발규모(장기+단기) : 2,480명(장기학위 1,900명 / 단기(교환학생) 580명)
-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지원을 위해 지자체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 및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지속 추진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신규 지정·운영 및 공모전 등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 한국어 예비과정, 한국어 학급 등을 확대하여 이주배경학생의 입국 시기, 한국어 역량 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및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및 지역선도교사 활동 지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 內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 강화대학 선정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 (GKS) 운영(교육부)	■ '26년 학부 신입생 선발(~1월) ■ 상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1월) ■ '26년 대학원 신입생 선발계획 수립(1월)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한국어문화이해 교육 지속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학교 신규 지정·운영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별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계획 수립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2026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참여 대학 및 멘티 모집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1차) 실시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개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 (GKS) 운영(교육부)	■ '26년 대학원 신입생 선발(1~6월) ■ '26년 GKS 장학생 상담 및 멘토링(4~6월)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한국어문화이해 교육 지속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관련 원격 연수 개발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상반기 공교육 진입 안내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및 간담회 실시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지원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결과 분석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2026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공고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 (GKS) 운영(교육부)	■ '27년 학부 신입생 선발계 획 수립(8월) ■ 하반기 우수 교환학생 선발(6-7월)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 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한국어문화이해 교 육 지속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계획 수립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멘토링 주관대학 간담회 실시 등 참여 대학과 지속적 소통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2차) 실시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8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연중)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1-2-4-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2026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심사(서면, 현장)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4	국제장학프로그램 (GKS) 운영(교육부)	■ '27년 학부 신입생 선발(9~12월) ■ '26년 동문 초청 연수(10월) ■ 동문 정보 현행화(11~12월)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1-2-4-5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 지원 강 화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연중) ■ 한국어·한국어문화이해 교 육 지속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3-2-2-4	초·중등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다문화교육 컨퍼런스 개최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하반기 공교육 진입 안내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사업 참여 대학 및 기관 점검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4-2-1-3	세계시민교육 제고	■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성과 보고회 및 워크숍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2-4-1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 유학 정보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한국 유학 수요층 확대

☐ 과제 내용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
 - ※ 박람회 운영,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 제공,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온라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운영('11)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한국유학박람회 개최('15)
- 온라인 기반 한국유학박람회 확대·개편 운영('20)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ISP 수립('21)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1차년도('22) → 2차년도('23) → 3차년도('2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시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22~'24) 및 안정화('25) 완료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통한 유학생 유치 지원 지속 추진

-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채용정보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한 한국유학 정보 제공 및 국내 대학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 사용 확대

○ 국가별 성공적인 한국유학박람회 운영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

* 참가 기관 모집, 참가자 사전 접수, 박람회 온라인 홍보, 결과 보고 및 집계 등

□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시스템 3차년도 구축('24.5.~'25.4.)을 바탕으로 안정화('25년/연구용역* 수행)

* 용역명: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빅데이터 활용과제 발굴 및 융합분석 활성화 연구

3. '26년도 추진계획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한국유학 정보 제공, 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 제공 등 유학생 유치 지원 활동 지속 추진 예정

□ 소요예산 : **총 61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620	1,384	833	610	△26.8	
- 국 비	1,620	1,384	833	610	△26.8	

□ 산출내역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1식×61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명)	7,749	8,215	온라인 자동집계
'24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명)	8,524	10,364	온라인 자동집계
'25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명)	8,524	6,070	온라인 자동집계 ('25.7.말 기준)
'26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학신청자수	신청자 수(명)	8,524		온라인 자동집계

5. 담당자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59
담당자	전산6급 박현화	이 메 일	ydj1231@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와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이후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졸업 후 국내 취업 연계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년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주관, 10.4.~10.5.)
- '11년~'23년 국립국제교육원-KOTRA(산업부) 공동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24년 국립국제교육원-KOTRA(산업부) 공동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8.27.~8.28.)
- '25년 국립국제교육원-KOTRA(산업부) 공동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5.19.~5.2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공동주관)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시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5.19.~5.20./COEX)

- 글로벌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과 국내 유망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간 채용 연계 지원

※ 참가 규모: 구인 기업 102개사, 면접 상담건수 4,817건

-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JOB 콘서트를 개최하여 기업 채용설명회, 취업 선배 특강,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학생의 실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3. '26년도 추진계획

☐ 2026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2분기) 기본계획 수립, 행사 홍보 및 운영 준비, 채용박람회 개최
- (3분기) 결과 분석

☐ 소요예산 : 총 8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80)	80	80	80	0.0	
- 국 비	75	80	80	80	0.0	

☐ 산출내역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등(2회×4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참가 유학생 수 /참가 업체 수	1,000 /100	3,953 /97	결과보고
'24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참가 유학생 수 /참가 업체 수	1,000 /100	3,669 /102	결과보고
'25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참가 유학생 수 /참가 업체 수	2,000 /100	4,817 /102	결과보고
'26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유학생수 및 업체수	참가 유학생 수 /참가 업체 수	3,000 /100	-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당자	7급 이효원	이 메 일	86lhw@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수준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 도모
-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정착형 인재 유치·양성

☐ 과제 내용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인증을 부여
 - 인증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 출입국 심사 일부 완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수확대학 선정 등 정책적 혜택 부여
 -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인증과는 별개로 매년 전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한 대학 지정
 - 부실한 정도에 따라 컨설팅, 모집제한 권고*로 단계별 제재조치
- *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에 대한 비자발급 시 제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업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RISE 체계에서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의체를 구성, 유치-학업-취업·정주를 지원하는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토록 컨설팅 지원

- 지자체별 특화산업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메뉴판 개발·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11.5.)
- '11년도 인증제 시범도입 및 결과 발표('11.5.~12.)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1주기 시행('12~'15)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주기 시행('16~'19)
 - ※ 1주기 평가대상은 학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2주기 평가대상은 학부 외에 어학연수,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
-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0.2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유학생 감소 등을 반영, 코로나19 영향 지표(불법체류율, 어학 요건 등)를 조정하여 평가 시행('20년, '21년)
 - 대학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년도 계획이 아닌 안정적인 3주기 보완방안('22~'24)* 마련('22.9월) 및 실시
 - * 코로나19 영향 지표 재검토(예 : 불법체류율 산식 조정, 대학 자체 언어능력 검증 인정 등)
- 4주기('25~'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4.8월)
 -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공고 및 실시('25.9월~현재)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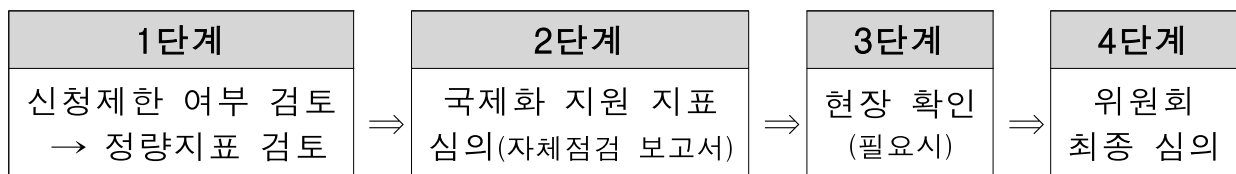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23.8.16.)

- ‘교육국제화특구 3기(‘23~‘27) 육성종합계획’ 수립(‘23.9.)
- ‘해외인재 유치전략 수립 지원’ 컨설팅 실시 및 워크숍 개최(‘23.11.~12.)
- RISE 시범지역 중심 수요 맞춤형 ‘해외인재유치 전략’ 수립 지원 컨설팅(‘24.1.~5.)
- 해외인재 유치 관련 지자체 부서장 협의회(‘25.1.), 지자체·글로벌대학 담당자 워크숍 개최(‘25.3.)

□ 추진체계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추진주체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추진주체 :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 추진절차 :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지자체, 교육부 컨설팅) → 지역-대학-기업
협업체(TF) 구성 → 지역 산업특화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2. '25년도 추진 실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 인증 희망 신청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재적 대학 대상 평가 실시(‘24.10.~‘25.2.)
- 인증제·실태조사 결과 발표(‘25.2.) ※ 학위과정 총 158개교 인증대학 선정

☐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 4주기 주요 개편 사항* 및 대학 현장과 관계기관(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계획 공고('25.9.)

* 불법체류율 지표(학위과정 분모) 개선, 평가지표 감축, 신입생 언어능력 입증기준 강화 다양화 등

- 인증 희망 신청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재적 대학 대상 평가 실시('25.9.~'26.1.)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

- 해외인재 유치·양성 전략 수립 관련, 지자체 부서장 협의회('25.1.21.)

- ‘해외인재 유치 관련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추진('25.3.24.)

※ 지자체 및 글로벌대학 담당자 포함 100여명 참석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부산 '25.8.19., 경북 '25.9.30., 전북 '25.10.23.)

- 2025 산학연협력 EXPO,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성과 공유('25.10.29.~31.)

3. '26년도 추진계획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2026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1분기)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 강화대학 선정
- (3분기) 2026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공고
- (4분기) 2026년 인증(서면, 현장) 심사

☐ 소요예산 : 총 261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 원)		241	241	261	261	0.0	
- 국 비	▪ 특별회계(고등 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	241	241	261	261	0.0	

☐ 산출내역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61백만원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양성 전략 수립 지원

○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 전략 마련 완료로 과제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100개교	134개교	인증평가결과
'2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100개교	158개교	인증평가결과
'25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100개교	-	인증평가결과
'26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운영	인증 기준 값을 만족할 만큼 역량이 강화된 대학 증가	인증대학(원) 수	100개교	-	인증평가결과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 '26년 과제 종료

5. 담당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6
담당자	5급 이시우	이메일	fooppers@korea.kr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9
담당자	4급 신소영	이메일	ssy013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국가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대 및 국내 대학의 국제화 견인

☐ 과제 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 (‘67년~, 장기)	한국어연수와 국내 학위과정(전문·학석·박사)을 지원하여 한국·한국어·한국문화에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우수인재 양성 ※ 최근 5년간 ODA국가 선발 비율 83% ▶ (‘26년 예산) 132,220백만원 ▶ (1인당 지원금액) 약 25백만원 ▶ (지원기간) 한국어연수 1년+학위과정 2~6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원 (‘10년~, 단기)	ODA 및 외교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되는 국가 출신 우수 학생이 단기 지원 사업(교환학생)을 통해 한국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26년 예산) 2,567백만원 ▶ (지원기간) 4개월 ▶ (지원내용) 학업장려금, 왕복항공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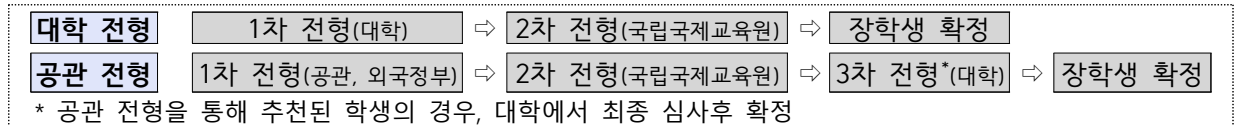
- 한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시작(‘ 67)
- ‘Study Korea Project’ 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역점사업 지정(‘ 05)
-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재정비 및 신규사업 신설 등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국가 브랜드화(‘ 10)
-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관계부처 합동, ‘17)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장학생, 초청연수 등 국제장학프로그램(GKS) 대폭 확대 / 이공계 비율 상향 조정 / 초청연수 사업을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신규 학위과정(R&D/UIC) 신설(‘ 22)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 23)
 - ※ 첨단·신기술 분야, 지역대학 인재 유치 확대 및 국가 차원의 협력 수요 반영하여 장학 선발 규모 확대 및 장학사업 운영 방식 다각화
-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GKS 장학생의 국내 취업·정주 제고 노력 확대(‘ 25)
 - ※ 국제기구 추천 전형(ADB, WB) 신설, 전문학사·산학협력 트랙 장학생 선발

확대 및 GKS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장학생 추천(재외공관, 대학)
→ 장학생 선발(국립국제교육원) → 장학생 확정 및 수학(대학)



2. '25년도 추진 실적

☐ GKS 신규 선발 : ('25년) 장기 1,970명, 단기 580명

☐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략적 선발 시행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지속을 통해 지방대 교육 국제화 및 지역균형 발전 기여

※ 지역대학: ('23) 671명(50.3%) → ('24) 1,469명(63.3%) → ('25) 1,163명(59.0%)

○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 유치 등 해외 인재 유치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력 담보

* [국정과제 99-4] 글로벌 AI 인재 육성 체계 구축

※ 이공계 신규 선발 장학생 수 : ('23) 559명 → ('24) 920명 → ('25) 985명

○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5.7.3.(목)~7.4.(금)(1박 2일), 졸업예정자 75명 참석

☐ GKS 학생선발 다각화 및 학생 지원 강화

○ 국제기구 추천 전형(ADB·WB)을 신설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 ADB 고등교육 분야 차관사업 수혜대학의 연구자 및 졸업생 20명 초청, WB 주요 협력대학 추천 학생 3명 초청 등 총 23명 선발·지원

○ ‘찾아가는 GKS 대학원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신규 장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국내·외 동문회 개최 지원 등 체계적인 동문 관리** 지속 추진

* 2025.9.10.(수) 대구·경북지역 8개교 146명(45개국) 대상

** △국외 GKS 동문회 현지 개최 51개국, \$86,995 지원 및 한국 GKS 동문 송년의 밤 개최, △GKS 동문초청 연수, △GKS 국외 홍보사절 및 버디 운영, e-뉴스레터 정기 제작, △동문 정보 현행화 지속(연 1회)

3. '26년도 추진계획

☐ GKS 장학생 선발·관리

○ (1분기) '26년도 GKS 사업 추진계획 수립, '26년도 학부 장학생 및 상반기 우수 교환학생 선발

※ '26년 선발규모(장기+단기): 2,480명 (장기 학위 1,900명, 단기(교환학생) 580명)

○ (2분기) '26년도 대학원 장학생 선발

○ (3분기) 하반기 우수교환학생 선발

○ (4분기) GKS 수학대학 담당자 워크숍 등

☐ 소요예산 : 총134,78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92,061	114,726	130,096	134,787	3.6	
- 국 비 □ 일반회계	92,061	114,726	130,096	134,787	3.6	

☐ 산출내역

○ (장기) 학위과정 지원 132,220백만원 / (단기) 교환학생 지원 2,567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적	산출근거
'23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32%	98.45%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24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6%	99.1%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25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6%	-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26	GKS의 전략적 추진	GKS 외국인 장학생 수학 성공율	중도포기 인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관리인원 비율*	98.6%	-	중도 포기자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전화번호	044-203-6775 (02-3668-1368)
담당자	행정사무관 이예진 (교육연구사 이명주)	이 메 일	jin10278@korea.kr (coxycoxy72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학생 지원 강화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학업과 생활 적응을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센터(국립국제교육원 내) 연중 운영
 - 한국 생활, 국내대학 학업 등 각종 고충에 대한 상담 진행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권역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K-MOOC 등) 보급, 입학 초기 이중언어 교육 병행, 국내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유학생의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지원

* 대학 한국어교육 시설 또는 지자체 평생학습시설 등을 한국어센터로 지정·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개설('10)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RISE 시범지역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배포(24.4.)

- 유학생 한국어센터 가이드라인 안내('25.1)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25.8.26.)

□ 추진체계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추진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추진주체 : 대학, 자치단체
- 추진절차 :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마련(교육부) → 시도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지원(대학·지자체)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고충 등 상담
- 장학금 정보, 국내대학 학사 운영, 취업 및 비자 등 상담 추진
 - ※ 상담 언어(4개):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 상담 실적('25.1월~8월누적) : 5,750건(AI 상담* 포함)
 - * AI 상담: 2025년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도입된 AI 상담 챗봇 시스템

○ 한국 유학 가이드북 제작 · 배포

-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생활 및 졸업 후 취업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 · 실질적 정보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한국 정착 지원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지역에서 유학생 유치 후 한국어 교육 및 적응을 지원하도록 거점 한국어센터 가이드라인 안내('25.1.) 및 지정계획 수립·추진 중
 - ※ 8개 시도(부산^{지정완료},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지정계획 제출·추진 중

○ K-MOOC를 통해 유학생 대상 한국어·한국이해 강좌 제공 및 해외 학습자·사회 수요 등을 반영한 신규 강좌 개발 추진

※ 한국어·한국학 강좌(개) : ('21) 105 → ('22) 217 → ('23) 332 → ('24) 439 → ('25.6.) 478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25.8.26.)하여 한국어 능력 우수자 발굴·시상,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활성화

※ 경북 <2025 대학생 모의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에 포함, 각 시·도별 대표 외국인 유학생 참가자 13명 중 8명 시상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 장학금, 학사, 한국 생활, 취업 등 다양한 주제의 유학생 상담 제공

☐ 소요예산 : 총 13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97	125	127	133	4.7	
- 국 비 □ 일반회계	97	125	127	133	4.7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지원을 위하여 지역에서 대학과 협업을 통해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계획 수립·추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한국어센터를 통해 지역 내 한국어교육의 체계적 지원, 외국인 유학생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유학생 상담·교류 지원, 지역 내 협의체 운영 등 추진

○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과 학습지원을 위하여 K-MOOC 등을 활용한 한국어·한국어문화이해 교육 지속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학습, 적응지원 강화	다국어 상담 제공 언어	개수(개)	7	7	결과보고
'24	학습, 적응지원 강화	상담 건수	개수(건)	4,200	5,229	결과보고
'25	학습, 적응지원 강화	상담 건수	개수(건)	4,200	5,750	결과보고 (’24.8월 말 기준)
'26	학습, 적응지원 강화	상담 건수	개수(건)	6,000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	-	-	-	-
'24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1건	1건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배포(4월)
'25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시·도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계획 수립	3곳	8곳	RSE 시범지역(7개)
'26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시·도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계획 수립	10곳		17개 시도

5. 담당자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소관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한국유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1380
담당자	7급 이효원	이 메 일	86lhw@korea.kr

<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지원 >

소관부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9
담당자	4급 신소영	이 메 일	ssy013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학교구성원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이주배경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이해도 제고 및 교과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
-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 함양 및 단위 학교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학교 모델 개발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14~'18) 및 정책학교('19~) 운영
 -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 ('21) 277교 → ('22) 287교 → ('23) 317교
- 다문화교육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운영('15~)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다양한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15년)
 - *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존중, 협력성, 세계시민의식 등
- 다문화, 다양성 존중 등을 포함한 교수학습자료 개발('16~'18)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수립('23.9.)
- 2022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문화이해교육 포함('24)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수립('25.2.)

☐ 추진체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 결과 보고
 - (교원의 다문화이해교육 역량 강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교원 연수

2. '25년도 추진 실적

- 학교 전체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우수 교육모델 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확대 운영
 -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 운영 도움 자료' 및 사례집 제작·배포('25.6.)
- 교과 연계 다문화이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직무연수 등 온·오프라인* 교원 연수 과정 개설·운영

*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온라인 연수 2종 운영 / '25.7.~8. 집합연수 4회 총 461명 참여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 계획

- (1분기) 학교 중심의 우수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교육과정 기반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 연구학교를 지정·운영('26. 25개교 운영 예정)
- (2~3분기)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편을 통한 수업 사례 부문 신설, 원격 연수 신규 개발*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 지원
 - * 법정 의무연수(다문화이해교육) 등 원격 연수 4종 개발 예정('26.上)
- (4분기) 다문화교육 컨퍼런스를 운영하여 사업 성과 환류

☐ 소요예산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예산(특별교부금)은 총액 지원으로 시도 여건에 맞게 운영하므로 사업 예산을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학교 구성원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350	609	시도교육청 운영 결과보고서
'25	학교 구성원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수	400	→*	시도교육청 운영 결과보고서
'26	학교 구성원 다문화 수용도 제고	다문화 수용도 제고	**	25	-	시도교육청 운영 결과보고서

* '25년 실적은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없음('26.1월 결과보고서 수합)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사업 개편(미정)에 따라 성과지표 추후 기재 예정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이주배경학생지원팀	전화번호	044-203-6197 044-203-6198
담당자	5급 박지애 / 교육연구사 양가운	이메일	pjablue@korea.kr kayun@korea.kr

1. 과제의 개요

- ☐ (목적) 이주배경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 및 기초학습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통합적 성장 지원
- ☐ (과제 내용)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을 운영하여 이주배경 유아의 맞춤형 교육 지원
-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도입·운영('15~)
 -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보급('20.8.)
-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 결과보고

2. '25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 운영을 통해 이주배경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 모든 유아에게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운영 도움 자료' 제작·배포('25.6월)

3. '26년도 추진계획 : ' 26년 사업 개편에 따라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 26년 과제 종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이주배경학생지원팀	전화번호	044-203-6197 044-203-6198
담당자	5급 박지애 / 교육연구사 양가운	이메일	pjablue@korea.kr kayun@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도입국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한국어 집중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 과제 내용

-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 중도입국·난민 자녀 등의 개인 정보를 연계하여 이주배경가정에 국내학교 진입 절차 안내
-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 등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한국어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예비학교 도입('12~'19) 후 한국어학급으로 확대('19~) 운영
- 한국어(KSL) 교육과정 도입('12) 및 개정('17.9.)
-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여 중도입국·외국인자녀에게 학교 편·입학 등 자료 안내('17~)
-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운영('19~)
- 온라인 한국어교육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 개통·운영('24.3.~)

☐ 추진체계

<공교육 진입 안내>

- 추진주체 : 교육부(법무부 협업),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정보 요청(교육부→법무부) → 정보 제공(법무부→교육부) →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보호자에게 안내 자료 발송

〈한국어학급 운영〉

- 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한국어학급 지정·운영 → 결과 보고

2. '25년도 추진 실적

-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학 절차, 학교 제도 등을 안내하는 '우리아이 학교보내기'를 개정·발송
- 중도입국·외국인 등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한국어학급 및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 계획

- (1분기) 시도교육청별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계획 수립
- (2분기) 상반기 공교육 진입 안내 문자 발송
- (4분기) 하반기 공교육 진입 안내 문자 발송

☐ 소요예산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예산(특별교부금)은 총액 지원으로 시도 여건에 맞게 운영하므로 사업 예산을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530	555	시도교육청 운영 결과보고서
'25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540	→*	시도교육청 운영 결과보고서
'26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550	-	시도교육청 운영 결과보고서

* '25년 실적은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없음('26.1월 결과보고서 수합)

**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성과지표를 '한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로 변경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이주배경학생지원팀	전화번호	044-203-6197 044-203-6198
담당자	5급 박지애 / 교육연구사 양가운	이메일	pjablue@korea.kr kayun@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주배경·북한배경학생과 대학(원)생 간 매칭을 통해 이주배경·북한배경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등 지원

☐ 과제 내용

- 국내 대학(원)생과 이주배경·북한배경학생을 매칭하여 기초·한국어 학습, 진로·진학 상담 등 멘토링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이주배경·북한배경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교·사대생 멘토링 사업 도입('09년) 후 참여 대학 및 활동기관 등 확대 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멘토·멘티 모집 및 매칭 → 결과보고

2. '25년도 추진 실적

- 멘토링 지원 계획 수립 및 멘토링 사업 추진

※ '25.9월 기준 멘토 3,032명, 멘티 4,113명 참여 중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분기) 2026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참여 대학 및 멘티 모집
- (1~4분기, 상시) 사업 운영 및 멘토·멘티 모집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총 15,6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6,750	15,600	15,600	15,600	0.0	
- 국 비	▪ 일반회계	6,750	15,600				
	▪ 특별회계(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			15,600	15,600		

☐ 산출내역

○ 156,000,000원 = 4,000명 × 15,000원 × 260시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4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토링 확대	멘토링 참여대학 수	80	114	멘토링 결과 보고
'25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토링 확대	멘토링 참여대학 수	100	-	멘토링 결과 보고
'26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토링 확대	멘토링 참여대학 수	105	-	멘토링 결과 보고

* 25년 사업 진행 중으로 실적은 '26. 상반기 확인 가능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이주배경학생지원팀	전화번호	044-203-6197 044-203-6198
담당자	5급 박지애 / 교육연구사 양가윤	이 메 일	pjablue@korea.kr kayun@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및 지속적 확산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자유,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 양성 교육

☐ 과제 내용

○ 유네스코 등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공유,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속 실시하여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기반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및 「인천선언문*」 채택(' 15.5.)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기회 증진」을 글로벌 교육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GCED) 확산 반영

○ 유엔 개발정상회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15.9.)

※ 세부목표 4.7에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증진' 반영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지원(' 15~계속)

○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문' 개정(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23.11.)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시도교육청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교육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APCEIU, 시도교육청)

2. '25년도 추진 실적

☐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확산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실시 및 교사연구회(중앙 및 시도) 운영·지원(739명, 연중)

- 중앙선도교사 연수 2회(1, 7월), 학교관리자 세미나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4월), 선도교사 성과보고회(11월)

○ 세계시민 교육 고등교육 강좌 개설 지원(총 13개교, 13개 강좌)

○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 개최(4.10.)

○ 제10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8.27.~28., 서울드래곤시티)

※ (주제) 탈진실 위기 속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주의

3. '26년도 추진계획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및 활동(연중)

※ 중앙선도교사 1차연수(1분기) → 시도선도교사 전달연수(2분기) → 중앙 선도교사 2차연수(3분기) → 성과공유 워크숍(4분기)

○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조직·운영 및 시도연구회 지원(연중)

○ 세계시민교육 우수 실천사례 국내외 공유 활성화(연중)

○ (2분기)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지원 및 성과 공유 워크숍

☐ 소요예산 : 총 68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852	930	727	687	△5.5	
- 국 비	852	930	727	687		

☐ 산출내역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687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양성(100백만원x1회) + 세계시민교육 강좌지원 (120백만원x1회) + 세계시민교육 UN 유네스코 포럼(270백만원x1회) + 국제 네트워크운영(100백만원x1회) + 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97백만원x1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 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0교	11교	3년 간 개설 지원교 평균(9.33)의 올림 값
'24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 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0교	13교	3년 간 개설 지원교 평균 값(10)
'25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 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2교	-	3년 간 개설 지원교 평균(11.33)의 올림 값
'26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	세계시민 교육 확산 및 전파	강좌 개설 고등교육기관 수	12교	-	3년 간 개설 지원교 평균(12.3)의 내림 값

5. 담당자

소관부서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60
담당자	교육연구관 전구슬	이 메 일	gskorea@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외 교 부

외 교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1	10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 국가 간 외교관계를 고려한 외국인정책 추진과제 협조

주요 내용

- ▶ UNHCR 협력 등 난민 분야 국제협의·회의 참여
 -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의 지속
 - 아프간 난민 지원 해법 핵심그룹 회의 참석,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난민 분야 회의
- ▶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 우리 측 공약 이행
 - '26년 對 UNHCR 기여금 제공, 난민·수용국 대상 인도적 지원
 - * 글로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로 2018년 말 유엔총회 계기 채택, 4년 주기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을 통해 각국의 공약 발표 및 이행점검
- ▶ 외국인정책 관련 부처 협조과제 협력
 - 재외공관 사증정밀심사 강화, 주한 공관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 강화,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 등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79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80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81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82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4-3-③-②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82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1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1개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비예산

Ⅱ.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 최근 전세계적인 무력분쟁과 갈등 격화로 인해 세계 강제피난민 수는 지속 증가하여 '24년말 기준 1.2억명 이상으로 추정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 '25년 주요과제 성과
 - 글로벌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참여
 - 3년 만의 UN 난민최고대표 방한(2025.10월)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을 포함, 난민 분야 국제 협력 체계 참여 지속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유엔난민기구 교류 및 재정 기여 지속(상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유엔난민기구 교류 및 재정 기여 지속(상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유엔난민기구 교류 및 재정 기여 지속(상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유엔난민기구 교류 및 재정 기여 지속(상시)	외교부 인권사회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글로벌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 체계 참여

☐ 과제 내용

- 유엔난민기구(UNHCR) 회의 등 난민 관련 주요 국제협의 참여
-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약 발굴 및 이행

* 글로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로 2018년말 유엔총회
계기 채택 / 4년 주기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을 통해 각 국의
공약 발표 및 이행 점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1월 신규과제 수록 이래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외교부, 법무부 등
- 추진절차 : 사안별로 별도 또는 협업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난민 분야 국제 협의·회의 참여

- 한-UNHCR 협의
 - UNHCR 최고대표 면담(2월) 및 방한(10월)
 - UNHCR 부최고대표 면담(4월)

- UNHCR 동아프리카 본부장 면담(4월)
-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면담(2월, 9월)
- UNHCR 본부 과장 면담(9월)

○ 난민 분야 국제회의 참여

- UNHCR 제92-94차 상임이사회(3월, 6월, 9월), 제76차 집행이사회(10월) 참석
- 유엔 안보리 난민최고대표 브리핑 공식회의 참석(4월)
- 유엔 총회 미얀마 로힝야 무슬림 고위급회의 참석(9월)
- 아프간 난민 지원 해법(Solution Strategy for Afghan Refugee)* 로컬 핵심 그룹 회의 참석(1, 5, 9월)

* 아프간 난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11년 UNHCR 및 아프간수용국 주도로 설립 / 우리측은 '20.10월 출범한 동 해법 핵심그룹 참석 중

□ 난민 글로벌 콤팩트 우리측 공약 이행

○ 2025년 對 UNHCR 비지정기여* 확대('23년 약 380만불 → '25년 약 1,700만불)

* 국제기구가 난민위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나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제공하는 기여

○ 난민 분야 인도적 지원 지속

3. '26년도 추진계획

□ 난민 분야 국제 협의·회의 참여

- 고위급교류를 포함한 UNHCR과의 협의 지속(수시)
- 제95-97차 상임위원회(3, 6, 9월), 제77차 집행이사회(10월) 참석
- 아프간 난민 지원 해법 핵심그룹 회의 참석(수시)
- 여타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내 난민 분야 회의(수시)

- ☐ 난민 글로벌 콤팩트 우리측 공약 이행
 - '26년 對UNHCR 비지정기여금 제공(상반기)
 - 난민 분야 인도적 지원 지속(상시)
- ☐ 소요예산 : 비예산
- ☐ 산출내역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근 거
'23	난민 분야 국제협력체계 참여	국제사회의 난민 분야 규범·협력 논의 과정 참여	난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4	7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1	7	정량/횟수
'24	난민 분야 국제협력체계 참여	국제사회의 난민 분야 규범·협력 논의 과정 참여	난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4	8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1	8	정량/횟수
'25	난민 분야 국제협력체계 참여	국제사회의 난민 분야 규범·협력 논의 과정 참여	난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4	9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4	7	정량/횟수
'26	난민 분야 국제협력체계 참여	국제사회의 난민 분야 규범·협력 논의 과정 참여	난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5	-	정량/횟수
			한-UNHCR 인적교류	5	-	정량/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	전화번호	02-2100-7263
담 당 자	5급 최형통	이 메 일	htchoi20@mofa.go.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법 무 부

법 무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94	100%	34,012	34,791	2.3%
1. 경 제	29	30.9%	4,400	2,404	△45.4%
2. 안 전	13	13.8%	5,572	3,620	△35.0%
3. 통 합	19	20.2%	15,963	19,831	24.2%
4. 인 권	13	13.8%	4,300	4,407	2.5%
5. 협 력 / 인프라	20	21.3%	3,777	4,529	19.9%

추진 방향

- ▶ 우수인재 유치 및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 ▶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 ▶ 수요자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확대 및 취약계층 인권보호 강화

주요 내용

-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Top-Tier」비자 대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규모 확대 및 개선,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운영,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 운영 등
-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불법취업 정보수집 강화, 전자입국신고서 활용성 제고, AI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 등
-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확대, 입국 前 사회통합교육 제공,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행정·통계 용어 정비 추진, 동포 청소년 정체성 제고,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등
- ▶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독립적·전문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등
-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AI 활용 체류허가 접수 심사 체계 개선,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기반 마련,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등

I. 2026년 시행계획 총괄	92
II. 2026년 시행계획 개요	95
III. 주요정책 추진계획	105
IV.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12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1-1-①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운영	112
1-1-1-②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116
1-1-1-③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118
1-1-1-④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120
1-1-1-⑤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지원	122
1-1-2-①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124
1-1-3-① 해외기술인재트랙 구축	126
1-1-3-② 국내유학인재트랙 구축	128
1-1-3-③ 숙련기능인재트랙 구축	130

1-2-1-1 (신규) K-STAR 비자트랙 신설	134
1-2-1-3 [글로벌최상위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136
1-2-1-4 [글로벌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활성화	139
1-2-1-6 ^{가칭} 청년드림비자 신설 추진	141
1-2-1-7 (신규) 육성이민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143
1-2-2-1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146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148
1-2-2-3 (신규) 유학생 취업 특화비자 신설	152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154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158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60
1-2-3-6 (신규) 계절근로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162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64
1-2-5-2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166

- 87 -

1-3-①-①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168
1-3-①-②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	171
1-3-①-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173
1-3-②-①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176
1-3-②-②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178
1-3-②-③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181
1-3-②-④ 중앙-지방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185
1-3-③-②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187
1-3-③-③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190
1-3-③-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192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①-③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194
1-4-①-④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197
1-4-①-⑤ 방한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199
1-4-②-①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201
1-4-②-② 위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203
1-4-②-③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205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①-①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207
2-1-①-②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209
2-1-②-①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211
2-1-②-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213
2-1-③-①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215
2-1-③-②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217
2-1-③-③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220
2-1-③-④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222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①-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선	224
2-2-①-④ 귀화 면접심사 개선	226
2-2-①-⑤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229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①-① (신규) AI 기반 출입국심사 시스템 도입 추진	232
2-3-①-②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시스템 고도화	235
2-3-①-③ 안전 위해(危害)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238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240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3-1-1-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243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245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247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250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252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255
3-1-2-5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제공	258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260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262
3-2-1-3	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266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269
3-3-3-2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272
3-3-3-4	(신규)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행정·통계 용어 정비	274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276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278
3-4-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280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282
3-4-2-2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285
3-4-2-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287
3-4-2-4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289
3-4-3-1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291
3-4-3-2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293
3-4-3-3	(신규)동포 청소년 정체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295
3-4-3-4	국내 정주 희망 동포를 위한 해외 홍보 강화	297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1-5	(신규)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법제화	299
4-1-2-1	출국대기소 설치 추진	301

4-1-②-②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303
4-1-②-③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305
4-1-②-④ (신규) 독립적·전문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 도입 및 운영	307
4-2.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①-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310
4-2-②-②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313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4-3-①-①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316
4-3-①-② 출입국향 난민심사 절차 개선	321
4-3-①-③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323
4-3-①-④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326
4-3-②-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난민정책 추진	329
4-3-②-② 난민의 처우 개선	331
4-3-③-①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334
4-3-③-②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338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5-1-①-①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	341
5-1-①-②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343
5-1-②-①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346
5-1-②-②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349
5-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5-2-①-①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352
5-2-①-②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355
5-2-①-③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358
5-2-②-①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361
5-2-②-②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364
5-2-②-③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367
5-2-②-④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371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5-3-①-①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구축	374
5-3-①-②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377
5-3-①-③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379
5-3-①-④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382
5-3-②-①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384

5-3-②-③ (신규) AI를 활용한 체류허가 접수·심사 체계 개선	386
5-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5-4-①-①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388
5-4-①-②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391
5-4-①-③ 유엔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395
5-4-①-④ 다자간 국제협력 체제 유지	397
5-4-②-① 이민과 개발(Migration & Development)의 정책화	400
5-4-②-②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402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94개 ※ 종료과제, 통합과제 등 제외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9)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3)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9)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3)개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2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116개	43,566.9	26,887.6	34,012.0	34,790.9	2.3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9)	8,452.3	1,357.3	4,400.3	2,404.3	△45.4	
1-1-1-1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운영	80	351	836	351	0.0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1-1-1-3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8,079	492				종료('24)
1-1-1-4	법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1-1-1-5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 지원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1-1-3-1	해외기술인재트랙 구축						종료('23)
1-1-3-2	국내유학인재트랙 구축						종료('24)
1-1-3-3	숙련기능인재트랙 구축						
1-2-1-1	K-STAR 비자트랙 신설						신규
1-2-1-3	[글로벌최상위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1-2-1-4	[글로벌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활성화						
1-2-1-6	청년드림비자 신설 추진						
1-2-1-7	육성이민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신규
1-2-2-1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종료('23)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1-2-2-3	유학생 취업 특화비자 신설						신규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300		△100	
1-2-3-2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1-2-3-6	계절근로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신규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368		△100	
1-2-5-2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종료('24)
1-3-1-1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1-3-1-2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						
1-3-1-5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1-3-2-1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48.3	48.3	38.3	38.3	0.0	
1-3-2-4	중앙-지방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110	2,502	1,506	△39.8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종료('24)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245	356	356	509	43.0	
1-4-1-4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종료('23)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종료('23)
1-4-2-1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추진						종료('25)
1-4-2-2	위케이션(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종료('24)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5)	761.0	2,917	5,572	3,620	△35.0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2-1-3-1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2-1-3-2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2-1-3-3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종료('25)
2-1-3-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2-2-1-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2-2-1-4	귀화 면접심사 개선	596	596	596	596	0.0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297					
2-3-1-1	AI 기반 출입국심사 시스템 도입 추진						신규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	162	2,093	876	564	△35.6	
2-3-1-3	안전 위해(危害)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종료('24)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228	4,100	2,460	△40.0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4)	11,556	12,375	15,963	19,831	24.2	
3-1-1-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신규)				‘27년 추진
3-1-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90	662				‘27년 추진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10,096	10,439	13,594	13,640	0.3	
3-1-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종료('25)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1,059	964	1,919	3,561	85.6	
3-1-2-5	입국전 사회통합 교육 제공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311	310	310	430	38.7	
3-2-1-3	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3-3-3-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행정·통계 용어 정비						신규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3-4-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1-3-1-1)통합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2,020	100	
3-4-2-2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 체류 안내 강화						종료('23)
3-4-2-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3-4-2-4	국내 체류 동포 실태 조사	-	-	140	90	△35.7	
3-4-3-1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3-4-3-2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3-4-3-3	동포 청소년 정체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90	100	신규
3-4-3-3	국내 정주 희망 동포를 위한 해외 홍보 강화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5)	19,613.6	2,685.6	4,299.6	4,406.6	2.5	
4-1-1-5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법제화						신규
4-1-2-1	출국대기소 설치 추진						
4-1-2-2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18,707	1,764	652		△100	종료('25)
4-1-2-3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종료('25)
4-1-2-4	독립적·전문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 도입 및 운영				1,830	100	신규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213.6	213.6	213.6	216.6	1.4	
4-3-1-2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38	38	38	42	10.5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192	210	3,058	1,925	△37.1	
4-3-2-1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난민정책 추진		40		55	100	
4-3-2-2	난민의 처우 개선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463	420	338	338	0.0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23)	3,184	7,552.7	3,777.1	4,529	19.9	
5-1-1-1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						
5-1-1-2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91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5-1-2-2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113	113	113	113	0.0	
5-2-1-2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5-2-1-3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40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2,268	2,562	3,455	3,786	9.6	
5-2-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5-3-1-1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448	100	
5-3-1-2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5-3-1-1)통합
5-3-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4,602				
5-3-1-4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481					
5-3-2-1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일시중단
5-3-2-3	AI를 활용한 체류허가 접수·심사체계 개선						신규
5-4-1-1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13	16.7	18.1		△100	
5-4-1-3	유엔대테러실(UNOCT) 업무 공조						종료('24)
5-4-1-4	다자간 국제협력 체제 유지	218	219	191	182	△4.7	
5-4-2-1	이민과 개발(M&D)의 정책화						
5-4-2-2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Ⅱ. 20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내·외국인 출입국자 수 안정적 증가

- '25년 내·외국인 출입국자는 98,327,286명으로 전년(91,222,927명) 대비 약 7.8% 증가, 외국인 입국자 수는 19,584,714명으로 전년(16,968,203명) 보다 약 15.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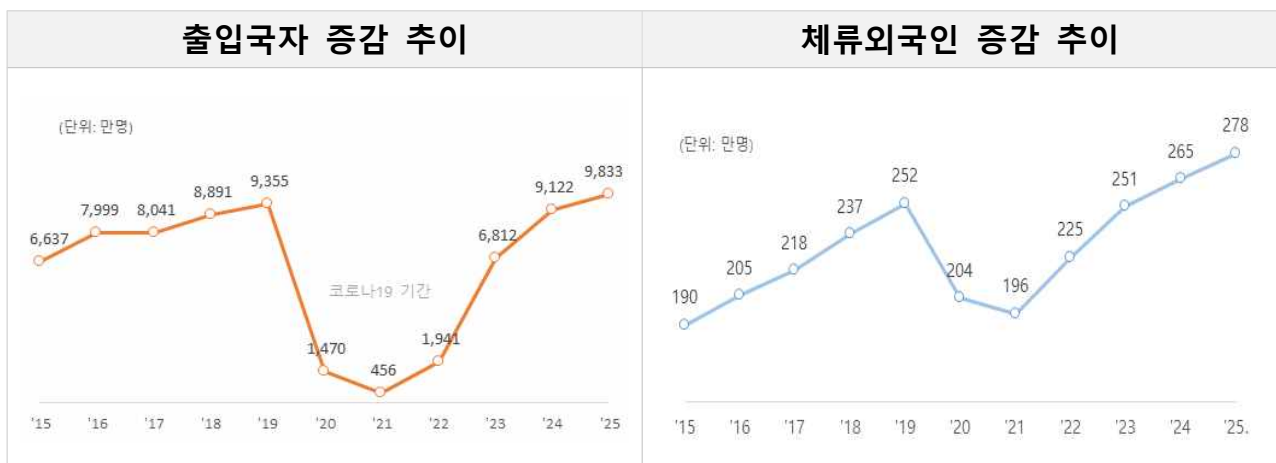
【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입국자	44,544,745	46,770,129	7,529,423	2,242,365	9,699,030	34,168,188	45,815,006	49,291,602
출국자	44,363,675	46,777,964	7,172,408	2,317,328	9,715,198	33,953,470	45,407,921	49,035,684
총 계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19,414,228	68,121,658	91,222,927	98,327,286

☐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 지속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년 12월 기준 2,783,247명으로 전년 동월(2,650,783명)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2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국적별 체류외국인 수는 중국(한국계 포함) > 베트남 > 미국 > 태국 순이며,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수는 재외동포(F-4) > 비전문취업(E-9) > 영주자(F-5) > 유학생(D-2) 순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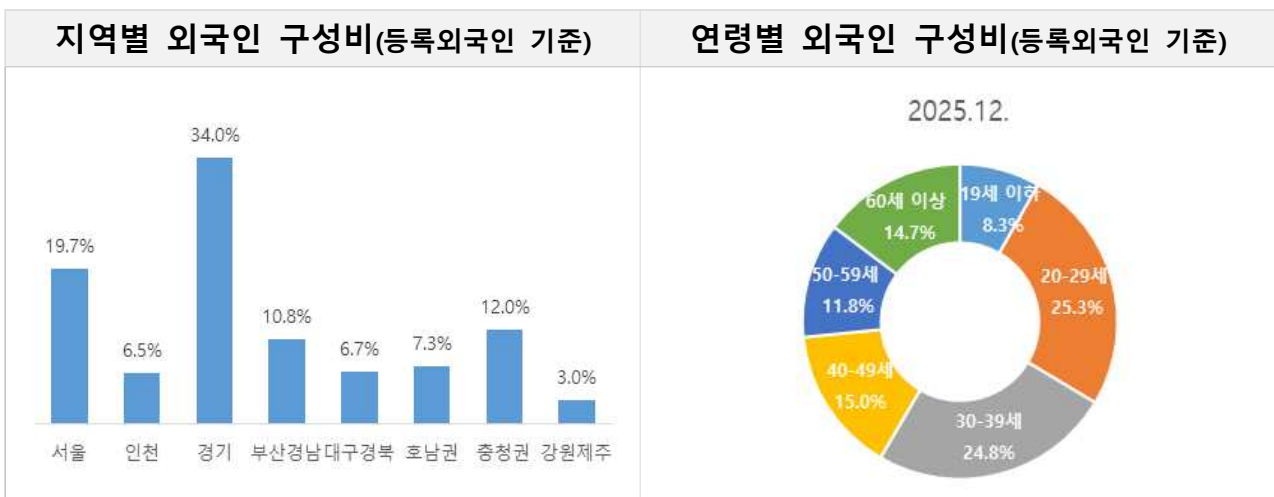
【 국적별·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불체자포함, '25.12. 기준) 】

(단위 : 명)

국적별 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중국(한국계포함)	980,670	네팔	91,895	사증면제(B-1)	192,126	비전문취업(E-9)	344,403
베트남	337,183	인도네시아	77,015	관광통과(B-2)	174,726	재외동포(F-4)	556,288
미국	180,230	필리핀	74,125	단기방문(C-3)	173,498	영주자(F-5)	221,021
태국	169,848	일본	70,375	유학생(D-2)	219,571	결혼이민(F-6)	154,903
우즈벡	102,804	기타	699,102	특정활동(E-7)	82,226	기타	664,485

□ 체류외국인의 수도권 집중 및 고령화

- '25년 12월 기준 장기체류외국인의 60.2%인 1,299,155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지역별로는 경기(34.0%) > 서울(19.7%) > 충청권(12.0%) > 부산·경남(10.8%) > 호남권(7.3%) 순으로 거주
- 등록외국인의 약 14.7%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22.3%) > 경기(17.8%) > 인천(17.6%) 순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진행



【 장기체류외국인 지역별 구성비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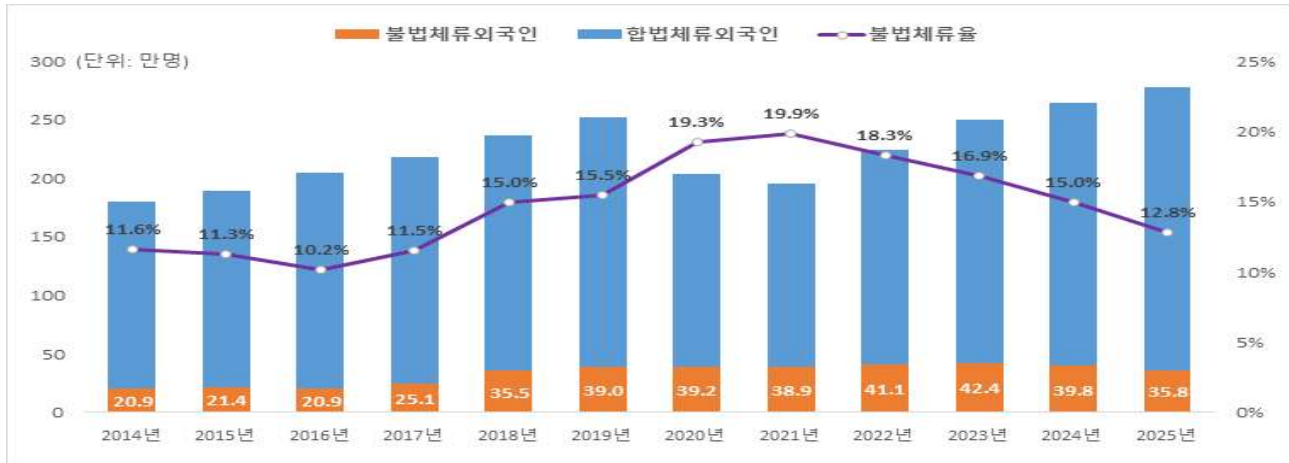
구분	총계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기타
2014년	1,377,945	903,451	122,631	241,278	77,966	32,619
		66%	9%	17%	6%	2%
2025년	2,159,052	1,299,155	259,427	377,250	157,561	65,659
		60.2%	12%	17.5%	7.3%	3%

□ 불법체류 외국인 수 감소 추세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3년 말 423,675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상시 단속체계 구축, 자진출국 유도 등 불법체류자 감축 노력으로 '25년 12월 기준 357,598명까지 지속 감소

※ ('23.12.) 423,675명 → ('24.6.) 414,730명 → ('24.12) 397,522명 → ('25.12.) 357,598명

【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



□ 난민 유입 증가

- 코로나19 이후 국경 이동 정상화 및 국제정세 급변 등으로 난민인정 신청자 및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절차 요구

※ 난민인정 신청은 11,539건('22년) → 14,626건('25년)으로 26.8% 증가, 난민 이의신청은 3,744건('22년) → 5,802건('25년)으로 55% 증가

2. '25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 ('25. 1.)

- 비자 종류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규모 산정·공표

※ 숙련기능인력 35,000명, 계절근로 74,689명, 고용허가제 130,000명, 선원 23,300명 등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25. 1.)

- 외국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37,446건 발급 ('25.1.10 ~ '25.12.31.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일부 유료화 시행 ('25. 1.)

- 무상 운영하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학습효과 제고 등을 위해 참여자에게 교육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운영방식 개선

※ 각 단계(100시간)당 10만원(교육원가의 20%) 부과, 사회적 약자 등 교육비용 감면 대상 설정

○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편성·운영 ('25. 1.)

- 급증하는 산업현장 외국인력의 사회통합 교육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으로 숙련기능인력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편성·운영

※ '25년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 330개 과정 개설 6,367명 참여

○ 전자입국신고 제도 도입 ('25.2.)

- 외국인 입국심사 편의 및 입국 외국인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전자입국신고자 4,551,399명, 전자신고비율 38.7%('25.12. 기준)

○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25. 2.)

-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편
- ※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추가, 쿼터 배정 방식 개선(전년도 실적 평가 등),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등

○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25. 2.)

- 이민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1시간) 및 범죄예방교육(1시간) 신설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학교 등에 찾아가는 형태로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운영 ('25. 7.)
- ※ 조기적응프로그램 37,514명 이수('25. 12월 기준), 이주배경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운영 18건('25. 12월 기준)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연장 ('25. 3.)

- '25.3.31. 종료 예정이던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3년 연장 시행
- ※ 총 3,996명(아동 1,684명, 미성년 형제자매 275명, 부모 2,037명) 체류자격 부여('25.12. 기준)

○ 경제·산업계 등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25. 3.)

-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하여 6개 제안* 수용
- *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 경력요건 완화 등

○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25. 4.)

-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의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그 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정착지원
- ※ 탑티어 비자 17명(배우자 등 동반가족 비자 18명) 발급('25.12. 기준)

○ 지자체 수요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25. 4.)

-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유학 비자(D-2) 및 특정활동 취업비자(E-7) 요건을 설계하고 법무부 주관 민·관 합동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유학(D-2) 자격 10개 지자체 4,600명, 특정활동(E-7) 자격 5개 지자체 2,190명 배정

○ 보호기간 상한 설정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5. 6.)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보호기간 상한(9개월 원칙, 중대범죄자 등 20개월) 설정 및 독립적 보호 통제기구 외국인 보호위원회 신설

*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54회 개최, 보호기간 연장 등 안건 1,437건 심의·의결('25.12 기준)

○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 ('25. 7.)

-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불법 브로커 개입 방지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3항(전문기관 지정·운영) 신설(시행 '26.1.23.)

○ 체류기간 도과 동포 대상 특별 합법화 조치 ('25. 8.)

- 동포 포용 이민정책 일환으로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25.9.1. ~ 11.28.)

※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총 1,544명 체류자격 부여(2,522명 신청)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25. 8.)

-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여 유학생 유치에서 취업까지 체계적 관리

※ 전국 24개 대학·전문대학 선정(2년 시범사업 운영)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통보의무 면제 ('25. 9.)

- 임금체불 등 산업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25. 11. 6. 시행)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제5호 신설

○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 ('25. 9.)

-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25.9.29. ~ '26.6.30.)

○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및 배정인원 확대 ('25. 10.)

- 인구감소지역 4개(강원 철원, 전남 담양·보성·신안)를 사업지역에 추가하고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쿼터 추가 배정

○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5. 12.)

- 국가정황정보*의 효율적 수집·활용을 위해 웹크롤링, 자동번역 기능 도입 및 제반 업무를 통합 DB로 전산화

*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안보 상황, 정치·사회적 상황 및 법체계, 주요사건 등에 관한 정보로 난민심사 시 핵심 근거자료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 확대

- 「Top-Tier 비자」 적용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 인력까지 확대
 - ※ 'K-Tech Pass 정착지원패키지'와 연계 세제·교육·주거 등 혜택 부여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에 지방거점 국립대 등 우수 일반대학을 포함하는 K-STAR* 트랙으로 확대 개편
 -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 現 5개 특성화기관(KAIST, DGIST, UNIST, GIST, UST) + 지방거점 국립대 등 우수 일반대학
- 지역 내 전문대학을 활용,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기술 수준 인력 양성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규모 확대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광역형 비자」 제도 점검 및 쿼터 재배정 등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평가분석을 통한 운영 성과 검토 후 정규사업화
-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 정기 개최 및 운영 지침 정비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안정적 운영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및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 근거를 (현행)대통령령에서 (개정)법률로 상향

☐ 불법체류자 감축 노력 지속

- 상시 단속체계 유지 및 정례적 정부합동단속 실시,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등 다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집중단속 및 안전 위협 분야 기획조사 강화, 사이버상 불법취업 알선 정보수집 체계화 및 동향조사 활동 강화
- 고위험 외국인 선별을 위한 AI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 및 AI 활용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 한국어에 집중된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수요를 반영하여 직무능력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
- 정착 초기의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범 이민자가 멘토링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사회 적응 지원 및 동기 부여 강화
-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이 한국어, 한국문화 등 한국 적응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前 온라인 사회통합 교육 제공

□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 지원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방문취업(H-2) 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고, 산업계 인력 부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 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인권보호 강화

- 장기 출국대기자의 인도적 처우 향상 등을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의 출국대기소 설치와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인권침해 외국인이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법제화 추진
- 계절근로자 안전·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계절근로자 업무 지원 전문기관 지정 예정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질병·사망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관련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 (26.2. 시행)

-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추진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인권보호, 산업안전 등에 관한 내용 편성

☐ 난민정책 제도 개선

- 해외 입법사례 검토 등을 통해 난민 심사 및 소송 수행 방식 등 난민 심사 절차 개선, 국제적 기준과 국익을 고려한 처우 지원 제도 개선
-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난민인정자의 영주허가 요건 완화, 학력인정 절차 신설 등 처우 개선 및 난민인정자 사회통합·국내정착도 연구를 통한 정책 기반 마련

☐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개편 지속 추진

-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치 추진
- 전자적 방식의 외국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AI 분석 기반 마련 및 AI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체류 심사 지원체계 구축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1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 '26년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한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체류관리과
1-1-1-5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지원	■ 출입국관리법에 통계 작성 활용 및 데이터 포털 운영 근거 신설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1-1-3-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 '26년도 숙련기능인력 제도 운영 개시	법무부 체류관리과
1-2-1-7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선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운영 개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체류관리과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및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불체감축계획 수립	법무부 이민조사와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국경·체류·안전실무분과위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와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AI 기반 과학적 국경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ISP 예산 신청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 계획 수립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선박검색 및 항만순찰 강화 ■ 인천청 신규감시정 건조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요건 완화로 교육 기회 확대	법무부 이민통합과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 소관 부처 의견수렴 및 논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1-2-1	출국대기소 설치 추진	■ 출국대기소 근거법령 제정 및 설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4-2-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외국인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자체 지침 개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3-1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법무부 난민정책과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3-1-1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포털 개편 ISMP 추진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발표회 개최	법무부 이민정보과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수행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4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표준화 연계 확대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 비자신청센터 운영 등 점검	법무부 체류관리과
1-2-1-3	[글로벌최상위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 제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1-2-1-6	가칭 청년드림비자 신설 추진	■ 희망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 추진	법무부 체류관리과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시범운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2-3-6	계절근로 지원 전문기관 지정 운영	■ ODA 사업 승인 추진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계절근로 지원 전문기관 지정 운영 계획 수립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및 추진	법무부 체류관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이민조사과
		■ 정부합동단속 실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주한공관원 간담회 면담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법무부 이민조사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AI 기반 과학적 국경관리 방안 검토 및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 수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선박검색 및 항만순찰 강화 ■ 인천청 신규감시정 건조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3-2-1-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이민통합과
3-3-3-2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중도입국자녀 신상정보 제공	법무부 이민통합과
3-4-1-1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 동포의 사회통합교육 강화 방안 마련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4-1-2-4	독립적 전문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 외국인보호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 보호위원회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2	출입국향 난민심사 절차 개선	■ 출입국향 난민심사 정기적 모니터링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난민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정보 순회교육	법무부 난민심의과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중점연구과제 수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4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3-1-1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포털 개편 ISMP 추진	■ 본사업 구축 예산 신청	법무부 이민정보과
5-3-2-3	AI를 활용한 체류허가 접수·심사 체계 개선	■ 사업계획 수립 및 ISP 예산신청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4-1-1	GCM 자발적 이행점검 강화	■ 이행점검회의 대비(제2차 국제 이주점검포럼(IMRF) 대응)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4-2-1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1-2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한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체류관리과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시증심사 전문성 강화	■ 비자신청센터 신규 운영기관 선정	법무부 체류관리과
1-3-2-2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내 유학생 현황 분석·시각화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및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 축 계획’ 추진	■ 조사과장회의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1-2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국경·체류·안전실무분과위 개최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역량강화 교육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AI 기반 과학적 국경관리 방안검토 및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선박검색 및 항만순찰 강화 ■ 인천청 신규감시정 건조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 유학생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법무부 이민통합과
3-1-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조선업·건설업 근로자 특화 산업 안전 교육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3-1-2-5	입국전 사회통합 교육 제공	■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	법무부 이민통합과
4-1-2-4	독립적 전문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 외국인보호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 보호위원회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및 소속기관 간담회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2-2	난민의 처우 개선	■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 발간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법무부 난민심의과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중점연구과제 수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3-1-1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포털 개편 ISMP 추진	■ ISMP 사업 완료	법무부 이민정보과
5-4-1-2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4-2-1	이민과 개발(Migration & Development)의 정책화	■ 이민과 개발 정책화 방안 마련 및 추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3	[글로벌최상위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 제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1-3-1-2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	■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 지역체류과
1-3-1-5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평가	법무부 지역체류과
1-3-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1-3-3-2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내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현황 분석·시각화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3-3-3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 지원센터 기능 확대	■ 사회통합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 이민통합과
1-4-1-3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및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1-1-1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이민조사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1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주한공관원 간담회	법무부 이민조사과
2-2-1-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선	■ 제도개선 검토 보고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2-2-1-4	귀화 면접심사 역량강화 교육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법무부 국적과
2-2-1-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국적법령 정비 ■ 국적설명회 개최	법무부 국적과
2-3-1-1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AI 기반 과학적 국경관리 방안 검토 및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1-2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 수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3-2-1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 선박검색 및 항만순찰 강화 ■ 인천청 신규감시정 건조 추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3-3-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 소관부처의 부처별 역할, 세부 기준 마련 및 공론화 방안 마련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3-4-1-2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 동포의 취업범위 확대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3-4-2-1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 동포체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추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3-4-3-3	동포 청소년 정체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 고려인 동포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개발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4-1-2-4	독립적 전문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 외국인보호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4-2-2-2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및 소속기관 간담회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법무부 난민정책과
4-3-1-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 난민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1-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개최 ■ 국가정황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난민심의과
4-3-2-1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난민정책 추진	■ 난민인정자 국내정착 실태 파악	법무부 난민정책과
4-3-3-2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국제회의 참석	법무부 난민정책과
5-1-2-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1-1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법무부 이민통합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2-1-2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법무부 난민정책과
5-2-1-2	공무원(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 관계기관 업무 협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1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이민행정 분야의 중앙-지방 협력 체계 지속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2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3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및 교육 실적 보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2-2-4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5-4-2-1	이민과 개발(Migration& Develpoment)의 정책화	■ 코이카 등 ODA 사업 협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IV.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1-1-1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등을 고려한 과학적 총량 관리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24. 제도 설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절차 수립

※ 서울대·연세대·경희대 경제학과 연구팀

- ('24. 고도화) ①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②범죄·불법체류 등 리스크 요인 분석, ③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제조업 분야 현장 실태조사 등 심층 연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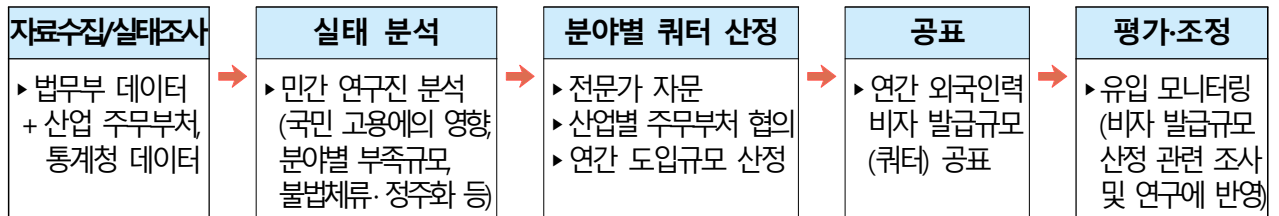
- ('25. 정식 도입) 심층 연구 결과,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비자 발급규모(쿼터) 사전 공표('25. 1.)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추진절차



○ (조사 및 분석) 민간 연구진 연구 및 현장 실태조사

- 민간 연구진 주관으로 ▲ 인력 부족 규모 ▲ 국민 일자리 침해, 불법체류 등 사회적 비용 ▲ 주요 산업 분야(농업·제조업) 현장 실태 등 분석

○ (산정 및 검토) 부처 의견수렴 및 적정 비자 쿼터 검토

- 민간 연구진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주요 부처와 전문·기능인력 및 비전문인력 도입 분야, 적정 비자 쿼터 등 논의

※ 국민 일자리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 소관 부처와 함께 실태 심층 파악→ 도입 조정

○ (결정 및 발표) 비자 쿼터 최종 결정·공표

- 협의 및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비자 발급분야·규모 최종 결정·공표

○ (모니터링 및 평가) 분야별 외국인력 유입 상황 모니터링

- 과다·과소 유입 여부 파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대응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1.)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식 운영

○ ('25. 3~10.) 비자 발급규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계량분석 연구용역 실시

※ 수행기관 : 이민정책연구원(총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대·연세대 등

○ ('25. 8.) 관련 학술포럼 개최

※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및 이민정책연구원 공동주관

○ ('25. 9~12.)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급규모 공표(안) 마련

3. '26년도 추진계획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 고도화

○ ('26. 1.) '26년 비자 발급규모 공표

○ ('26. 2~10.) 적정 비자 발급규모 산정 관련 정례 연구 실시

○ ('26. 12.) '27년 비자 발급규모 공표(안) 수립 및 발표

○ ('26. ~) 유학·연수생, 동반가족, 관광객 등 신규 분석대상 추가

○ ('26. ~) 제도 법제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가칭}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지침」훈령 제정

☐ 소요예산 : **총 351백만 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351	351	836	351	△58.0	
- 국 비	▪ 일반회계	80	351	836	351	△58.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수립·공표 : 351백만 원

- 실태조사(246백만 원)+총량 산출(105백만 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25년도 비자 발급규모 선정 고도화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1건	1건	연구보고서
'25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25년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25년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1회	1회	대외 발표
'26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26년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26년도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1회		대외 발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2
담당자	5급 이운호	이 메 일	ais20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변화와 이민자 유입 영향 등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민자의 유입관리, 사회통합, 정착 및 정주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비자 체계 정비 추진

☐ 과제 내용

- 산업 현장, 지역 수요 기반,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 등 맞춤형 비자 신설(개선)로 국익 및 지역 경제 발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선별적·체계적 비자제도 운영으로 국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력 등 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년~'17년)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조항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체계 정비
- ('22. 9. / '22. 1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24. 1.)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사업,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 ('24. 11.) 민간 수요반영을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 ('25. 3., '25. 9.)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및 제도 개선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지침 등 정비

2. '25년도 추진 실적

☐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본격 시행

○ 경제·산업계 등 민간 및 관계부처(지자체)의 비자개선 수요에 대한 정책 제안서 제출, 검토 및 협의회 운영 절차 등 제도 정비('25. 5.)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2회 개최를 통한 비자개선 추진('25. 3, '25. 9.)

※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자동차 부품제조·성형·용접원 등 도입 등 6개 제안 수용

※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건설기계 부품 제조원, 도축원 직종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특례 신설 등 6개 제안 수용

3. '26년도 추진계획

☐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안정적 운영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비자 제도개선 지속 추진(1분기, 3분기)

○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운영 지침 정비 등 제도 보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제도 신설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공문
'24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제도 신설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공문
'25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제안제 도입·시행	협의회 등 운영	1회	2회	관련공문
'26	수요자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비자제안제 안정적 운영	협의회 등 운영	2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당자	5급 김진겸	이 메 일	jkyeom8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행정정보 관리·연계를 체계화하고 분산된 정보의 융·복합으로 창출된 새로운 외국인 데이터를 활용, 보다 정밀한 국가 외국인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표준화된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안전한 외국인 신원확인 체계구축
- **(외국인정보 연계)** 부처별로 외국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 자체 보유자료와 관계기관 간 공유정보, 공공데이터 등 제반 외국인 행정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21. 7.)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2. 5.)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완료 ('23. 11.)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인프라 보강 ('24. 1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실적 ('24년 종료)

☐ 종료사유

○ 종합플랫폼 구축(1차) 완료 및 해당 플랫폼 인프라 보강(2차)까지 완료하여 사업 종료, 해당 플랫폼 활용하여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예정

※ '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3년 플랫폼 구축(1차) ▶ '24년 인프라 보강(2차, 최종완료)

3. '26년도 추진계획 ('24년 종료)

☐ 소요예산 : 총 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8,079	492	0	0	0	
- 국 비	▪ 일반회계	8,079	492	0	0	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2
담당자	5급 이운호	이 메 일	ais20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된 반면, 외국인은 부처별 다른 인적정보 표기방식으로 동일한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

☐ 과제 내용

-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등을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인적정보 법정부 통일 기반 마련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으로 국제표준 제정(한국 1952년 가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법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기관 실무담당자 대상 1·2차 실무협의회 개최('22. 9.)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23. 3.) 및 국회 제출('23. 8.)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24. 12.) 및 시행('25. 6.)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형사사법기관, 주요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법무부 (협업)
- 추진절차 : 표준화 협의체 구성 → 출입국관리법상 법적 근거 마련 → 표준화 시범운영 → 표준화 연계 확대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연계의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 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 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별지 제126호의17서식

-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 질병관리청, 인천항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25.12. 기준 총 6개 기관, 6개 시스템 연계

3. '26년도 추진계획

-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연계 확대 지속 추진

-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고용부, 병무청 등) 및 지자체 인적정보 표준화 기반 확대 추진 (연중)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법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마련 및 국회제출	완수율(%)	100%	100%	공문
'24	법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관계부처와 외국인기본인적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연계율(%)	100%	100%	공문
'25	법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관계부처와 외국인기본인적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연계율(%)	100%	100%	공문
'26	법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관계부처와 외국인기본인적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연계율(%)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2
담당자	5급 이운호	이 메 일	ais20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앙부처·지자체의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외국인정책’ 추진 지원

☐ 과제 내용

-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외국인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운영 개시 ('24. 1.)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4. 5.~ '24. 11.)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 활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신규 데이터 분석 수요 취합 ('24. 9.)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추진절차 : 빅데이터팀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 관계기관

2. '25년도 추진실적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활용 이민행정 데이터 및 분석 지원

- 문체부, 과기부, 행안부 등 관계 중앙부처 75건, 지자체 54건 지원('25. 1. ~ 12.)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추가 개발 ('25. 4.)

- 지자체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23. ~ 24.)에 따른 예산, 프로그램명, 지자체의 외국인 국적별 현황 등을 시각화한 자료 하이코리아 누리집 등재

3. '26년도 추진계획

- ☐ 「출입국관리법」에 통계 작성·활용 및 데이터 포털 운영 근거 신설 추진
 - 출입국관리, 체류, 사회통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5(통계자료의 생산 및 공개 등) 신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사무처리규정(법무부 훈령) 신설
-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중앙부처 대상 이용 확대 (연중)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관계부처 분석의뢰 회신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분석의뢰 회신	회신 건 수	150건	226건	플랫폼
'25	관계부처 분석의뢰 회신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분석의뢰 회신	회신 건 수	180건	443건	플랫폼
'26	관계부처 분석의뢰 회신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분석의뢰 회신	회신 건 수	216건*		플랫폼

* 매년(~'27)전년 대비 20% 상향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2
담당자	5급 이운호	이 메 일	ais200@korea.kr

1-1-2-1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추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증 심사를 제외한 사증 신청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재외공관의 업무적체 해소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사증 접수 건수 대비 심사 인력이 부족한 공관 또는 여건상 민원인 대기가 곤란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비자신청센터 설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9.) 비자신청센터 시범운영 개시(광저우, 칭다오)
- ('18.9 ~ '19.7.) 중국(3개소), 베트남(2개소), 인니(1개소) 비자신청센터 개소
- ('19.9.)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을 위한 법무부-IOM 간 MOU 체결
- ('20.3 ~ '21.1.)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 개시
- ('22.9, '25.9.) 유럽·몽골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을 위한 법무부-IOM 간 MOU 갱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교부(협조)
- 추진절차 : 개소 지역 선정 → 센터 운영기관 선정 → 비자신청센터 개소

2. '25년도 추진 실적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간 만료일 도래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신규 지정
 - '25. 2월,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및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25. 4월, 중국(상하이, 우한, 청두)

☐ 신규 비자신청센터 설치

○ 중국 시안 지역에 비자신청센터 개소('25. 7월)

☐ 비자신청센터 관련 법무부-IOM MOU 갱신

○ 비자신청센터 운영을 위한 법무부-IOM 간 MOU 갱신

- 갱신기간 : '25. 9. 1. ~ '27. 8. 31.

3. '26년도 추진계획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검토(2/4분기)

○ 규정 개정 사항 등 점검

☐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2/4분기)

○ 운영기간 만료 도래한 비자신청센터의 신규 운영기관 선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설	3개	7개	관련 문서
'24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규수요 검토	1회	1회	관련 문서
'25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설·연장	1개 이상	6개	관련 문서
'26	비자신청센터 확대	비자 신청자 편의 제고	비자신청센터 신설·연장	1개 이상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당자	4급 최준호	이 메 일	choijh72@moj.go.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민 희망자의 자격증·경력·학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산업계에 필요한 해외 우수기술인재(IT, 인공지능(AI), 반도체 등)를 유치하는 트랙 마련

☐ 과제 내용

- 산업계에 필요한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거주(F-2) 비자 부여
 -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동반 체류 지원

※ 첨단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자격증·경력·학력 등 점수제 평가를 통하여 검증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2. 점수제 우수인재(F-2-7) 관련 지침 등 정비
 -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IT, 나노, 디지털전자 등 유망산업 분야와 과학기술 연구분야 잠재적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내 정착 유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지침 등 정비

2. '25년도 추진실적 ('23년 종료)

- '23년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과제 종료

3. '26년도 추진계획 ('23년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해 외기 술인재 트랙 구축	우수인재 확보 지원	제도개선	1회	1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 당 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비자제도 마련

☐ 과제 내용

- 유학생이 졸업 후 구인난 심각한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유학-취업-정주' 단계적 비자 승급 제도 마련
 -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졸업생의 구직·인턴 기간을 확대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2. '24년도 추진실적

-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24. 1. 11.)
 - ※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 주요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실시('24. 4. 8. ~ 19.)
 -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요 대학 실태조사
-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발표('24. 9. 26.)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24. 하반기 예정)

3. '25년도 추진계획(해당 없음)

☐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 향후 졸업 유학생 취업 현황 모니터링 및 취업 가능 분야 검토 지속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추진전략 수립	1건	1건	관련 보도자료
'24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취업 연계트랙 신설	지침 개정	2건	2건	관련 보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당자	5급 김은호	이메일	keh2005v@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기능인력을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자체계 구축 필요

☐ 과제 내용

-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경력·학력·연령·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7. 7.)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입안 보고
- ('23. 9. 25.)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 ('24. 2. 1.) '24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 개시
- ('24. 11. 19.)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간 쿼터 설정 및 관련 지침 개정

2. '25년도 추진 실적

☐ 과제 내용

- '25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 개시
 - 연간 쿼터 '24년도와 동일한 35,000명 규모로 운영

3. '26년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26년도 숙련기능인력 제도 운영 개시('26. 1분기)

○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26.1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4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5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25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5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6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26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6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당자	5급 김진겸	이메일	jkyeom8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우수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KAIST 등 학계의 요구로 ’21. 12월 시범 도입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 과제 내용

-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및 유입 촉진 등 활성화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대상자는 취업 등 조건 없이 총장추천서만으로 거주(F-2-7S) 자격 부여 △3년 후 점수 요건 충족* 시 영주(F-5-S1) 자격 부여 △연구실적 우수 시 특별귀화 가능

* 학력·연구경력·실적 등의 평가항목 중 90점 이상(총 배점 200점) 획득 필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카이스트-법무부” 우수인재와 소통 간담회 개최(’21.10.)
- 패스트트랙 제도 시범 시행(’21.12.)
-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마련(’22.12.) 및 제도 본격 시행(’23.1.)
- 패스트트랙 확대 방안 실무자 간담회 개최(’24.5.)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패스트트랙 통합 지침 마련 → 제도 시행 → 제도 확대 방안 위한 실무자 회의 → 참여대학 확대 선정

2. '25년도 추진실적

☐ K-STAR 비자트랙으로 확대 개편

- 기존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패스트트랙을 K-STAR 비자트랙으로 확대 개편 위해 우수 일반대학 중 사업 참여 신청 접수('25.10.)

- 대학 선정 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최종 선정('25.12.)

3. '26년도 추진계획('25년 종료)

☐ 해당없음 (과제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패스트트랙 제도 유입 촉진 및 홍보 활성화	설명회 개최	2회	2회	관련공문
'24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패스트트랙 제도 유입 촉진 및 홍보 활성화	간담회 개최	1회	1회	보고서
'25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패스트트랙 제도 유입 촉진 및 홍보 활성화	대학 선정	1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당자	5급 김종승	이메일	kjs5676@hanmail.net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 및 유출방지 위해 국내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우수한 유학생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여 국내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 과제 내용

- 기존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여개 이상의 우수 일반대학까지 확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대상자는 취업 등 조건 없이 총장추천서만으로 거주(F-2-7S) 자격 부여 △3년 후 점수 요건 충족* 시 영주(F-5-S1) 자격 부여 △연구실적 우수 시 특별귀화 가능

* 학력·연구경력·실적 등의 평가항목 중 90점 이상(총 배점 200점) 획득 필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K-STAR 비자트랙 시행계획 수립 ('25. 9.)
-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공모 ('25. 10.)
-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선정 ('25. 11.)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K-STAR 비자트랙 참여 대학 선정 → K-STAR 비자트랙 지침 마련 → 제도시행 → 대학별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2. '25년도 추진실적

☐ K-STAR 비자트랙으로 확대 개편

○ 기존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패스트트랙을 K-STAR 비자트랙으로 확대 개편 위해 우수 일반대학 중 사업 참여 공모('25.10.)

○ 대학 선정 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최종 선정('25.11.)

3. '26년도 추진계획

☐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자체평가 (4/4분기)

○ 총장 추천 절차, 유학생 관리 등 점검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K-STAR 비자트랙 신설	K-STAR 비자트랙 유입 촉진 및 홍보 활성화	대학선정	20개 대학 선정	1회	관련공문
'26	K-STAR 비자트랙 신설	K-STAR 비자트랙 유입 촉진 및 홍보 활성화	자체평가	1회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당자	4급 최준호	이메일	yesmile308@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첨단산업 분야 등 국가간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해외 우수인재의 선제적 유치·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 요구

☐ 과제 내용

- 관계부처(산업부)와 협업하여 비자·체류 혜택 뿐만 아니라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맞춤형 “툼티어 비자 제도” 신설
 - (비자혜택) 온라인 비자발급·연장 신청, 우대카드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부모 및 가사 도우미 동반 체류 허용, 동반가족 취업 허용 등
 - (정착지원프로그램 연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세제·교육·주거 지원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첨단분야 우수인재 확보 및 정착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등('23. 5~'25. 2)
 - * 산업부·교육부·과기부·중기부 등과 첨단산업 분야 국가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톼티어 비자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 산업부와 톼티어 비자 신설에 따른 정착지원프로그램(K-Tech Pass) 연계 합의('25. 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협업
- 추진절차 : 관련 지침 등 정비

2. '25년도 추진 실적

☐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를 위한 톱티어 비자 신설('25. 4.)

- 첨단분야* 최우수인재 유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추천한 최우수 인재를 위한 비자·체류 혜택이 포함된 구직·취업·정주·영주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비자 제도 시행

* '25. 4.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 우선 시행

- '25. 9. 톱티어 비자 적용 분야를 AI·미래모빌리티·로봇·방산 등 신규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요건 】

- ▶ (기본) ^(학력)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해외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8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자
 - ▶ (추가) ^(취업)국내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소득)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약 1억 5천만 원)인 자
- ※ 연간 근로소득이 GNI 4배인 경우 학력 또는 경력요건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의 'K-Tech Pass 정착지원패키지'와 연계하여 세제·교육·주거 등 생활 밀착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이민정책혜택 부여

3. '26년도 추진계획

☐ 톱티어 비자 적용 분야 확대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과학기술 연구분야 교수, 연구원 등 연구인력까지 적용 대상 확대 예정

- '30년까지 첨단 산업분야 250명, 과학기술 연구분야 100명 유치 목표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유치 목표 설정

- 톱티어 비자 관련 고시 및 '첨단분야 해외 인재 대상 톱티어 비자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정비 등 제도 지속 보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해 외기 술인재 트랙 구축	우수인재 확보 지원	제도개선	1회	1회	관련공문
'25	해 외기 술인재 트랙 구축	우수인재 확보 지원	제도개선	1회	1회	관련공문
'26	해 외기 술인재 트랙 구축	우수인재 확보 지원	관계부처 회의	2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당자	4급 최준호	이 메 일	yesmile308@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AI등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분야 인재 대상 비자제도 활성화 필요

☐ 과제 내용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 (활동범위) 비자 발급 요건 충족 시, 기존 허용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
 - ※ 단, 단순노무활동 및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경우 등 제외
 - (고소득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고소득자
 -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종사 예정인 외국인(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 우수인재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홍보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월)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신설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홍보 자료 작성 및 배포

2. '25년도 추진실적

○ 네거티브 전문인력 비자(E-7-S) 93건 발급

3. '26년도 추진계획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홍보자료 배포('26. 3월, 9월)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 신설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1회	1회	대외 발표
'25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활성화	전문인력 비자발급 활성화	네거티브 전문인력 비자(E-7-S) 발급 건수	60건	93건	내부 통계
'26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활성화	전문인력 비자발급 활성화	네거티브 전문인력 비자제도 홍보	2회		카드뉴스 등 홍보 건수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당자	5급 김진겸	이메일	jkyeom8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한국어 연수·지역 문화체험·직업탐색 등 폭넓은 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한국 알리미 역할 기대, 한류 저변 확대

☐ 과제 내용

- 가칭청년드림비자 신설

- (참가 대상) 주요 경제협력국 29세 이하 청년
- (체류 자격)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신설
- (활동 내용) 지역 문화체험, 어학연수, 직업 탐색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지역

- ('24. 11.) 관심 표명 3개 지자체(경북, 경남, 전북) 대상으로 청년드림 비자 제도 소개 및 건의사항 청취
- ('25. 2.) 코이카와의 협업 가능 여부 실무자급 논의 진행
- ('25. 3.) 관심 표명 3개 지자체 대상 기획(안) 제출 요청
- ('25. 5.) 전북·경북 기획(안) 제출
- ('25. 7.) 지자체 제출 기획(안) 검토 및 협의 진행
- ('25. 12.) 지자체 제출 기획(안) 재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자체
- 추진절차 : 시범 사업 지자체 선정 및 세부사항 논의

2. '25년도 추진 실적

☐ 지자체와의 협의 진행

- 관심 표명 3개 지자체(경북·전북·경남) 대상으로 지역 상황을 반영한 자체 기획(안) 제출 요청('25.3.)
- 전북·경북 제출 기획(안) 검토 및 협의 진행('25.7.)
- 전북·경북 제출 기획(안) 재검토('25.12.)

3. '26년도 추진계획

☐ 세부 추진(안) 변경 등 검토

- 연수 비자는 구조적으로 외국인 인권(노동력 착취에 따른 인신매매, 브로커 개입 등)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연수생 인권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추가 검토 필요
 -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세부 추진(안) 변경 등 검토

☐ 소요예산 :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가칭 청년드림비자 신설 추진	잠재력이 높은 해외 청년 대상 지한(知韓) 그룹 양성	참여 희망 지자체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업무 협의	2회	2회	관련 문서
'26	가칭 청년드림비자 신설 추진	세부 추진(안) 변경 등 검토	전문가 등 의견 수렴	1건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당자	5급 용창식	이메일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의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산업 수요를 고려한 전문대학 학과를 지정하여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

☐ 과제 내용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어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도입
 - 인권침해 우려가 큰 저임금 단순노무 인력 공급에서 벗어나, 적정임금 기반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주관), 체류관리과·이민통합과(협조)
 - 광역지자체-산업계-전문대학(전문대교협)과 협력 체계 구축
- 추진절차 : 전문대학 내 학과 중 국민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 분야(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등)* 관련 분야로 지정하고,
 - 해당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취업 시 신규 E-7-M (K-CORE) 비자* 발급

* 인문·사회·예체능 및 서비스 분야 학과(예: 호텔, 보건)는 제외

* **K-College to Regional Employment** : 지역산업의 핵심(Core) 인력이라는 의미이며,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중간(middle-skill) 수준임을 고려하여 E-7-M 약호 부여

2. '25년도 추진 실적(신규)

☐ 제도 도입 검토 및 관계부처 논의

- ('25. 4.)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검토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실무진 회의
- ('25. 7.~10.) 관계부처(고용부·중기부·교육부·행안부) 협업 방안 등 협의(4회)
- ('25. 8.~9.) 전문대학교·지역 산업계 현장 방문 등 간담회(3회)
 - 구미대학교(경북), 대림대학교(경기), 동강대학교(전남)
- ('25. 9.) 광역지자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총 17개 광역지자체 중 15개 참석)
 - 시범사업 추진 방향 안내 및 광역지자체 의견 수렴
- ('25. 12.)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모집공고
 - ※ '25. 12. 8. ~ 26. 1. 9. 기간 공고하였으며, 신청 대상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22개교 중 총 16개 대학이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

3. '26년도 추진계획

☐ ('26. 2.)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선정 및 유학생 모집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을 희망하는 전문대학은 광역지자체 추천 및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지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6	「육성형 전문기술 인력 제도」 도입	K-CORE 비자 부여	「육성형 전문기술 학과」 지정	10개 학과 지정		전문학과 지정 심의 결과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당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kiw120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숙련 기능인력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 확대 공급 추진

☐ 과제 내용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 (쿼터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
 - (K-point E74 도입) 기존 점수제의 11개 이상 항목을 5개로 혁신적 간소화
 - (한국어능력 강화) 스스로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어 소통력 강화
 - (장기근속 우대) 동일 근무처 장기근속 가점부여로 숙련도 향상 스스로 노력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6. 28.) 법무부장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3년 숙련기능인력 (E-7-4) 쿼터 확대 예정 발표('22년 : 2,000명 → '23년 : 35,000명)
- ('23. 7.) △관계부처 신속 협의체 △광역지자체 서면 실무 협의 △경제 단체·연구기관 간담회를 통해 업종별 인력 부족 상황 및 건의사항 등 청취
- ('23. 9. 25. ~ 12. 20.)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 ('24. 2. 1.) '24년도 K-point E74 운영 개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

2. '25년도 추진실적(해당사항 없음)

☐ '23년 종료과제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23. 9. 25.)

3. '26년도 추진계획(해당사항 없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당자	5급 황민하	이메일	hminha2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근로자 공급부족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공급 방안 필요

☐ 과제 내용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 신설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제조업, 뿌리산업, 건설업, 농어업, 조선업 분야 별도 쿼터 운영 중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 '23년도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확대 발표(2,000명→5,000명)
- ('23. 9. 25.)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 (쿼터 확대) '22년 2,000명이었던 쿼터를 35,000명으로 확대
- ('24. 2. 1.) '24년도 K-point E74 운영 개시
- ('25. 1.) '25년도 K-point E74 운영 개시
- (쿼터 규모) 전년도와 동일한 35,000명 규모로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5년도 K-point E74 운영 개시

2. '25년도 추진 실적

☐ 과제 내용

○ 숙련기능인력 쿼터 전년도와 동일한 35,000명 규모로 운영

3. '26년도 추진계획

☐ 과제 내용

○ '26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 개시('26. 1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3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4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4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5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25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25년 K-point E74 운영계획 발표	1회	1회	관련 공문
'26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숙련기능인력 제도 활성화	숙련기능인력 전환 건수	33,000 명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당자	5급 김진겸	이 메 일	jkyeom8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비자제도 마련

☐ 과제 내용

- 유학생이 졸업 후 구인난 심각한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유학-취업-정주' 단계적 비자 승급 제도 마련
 -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졸업생의 구직·인턴 기간을 확대(최대 2년→3년) 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지침 개정

2. '25년도 추진 실적

- 유학생 구직(D-10)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지침 개정('25. 10.)
-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대상 특화된 취업비자 신설('25. 10.)

3. '26년도 추진계획

- '25년 종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추진전략 수립	1건	1건	관련 보도자료
'24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취업 연계트랙 신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건	1건	개정공고
'25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지침 개정	1건	1건	개정 지침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당자	5급 안재필, 5급 김진겸	이 메 일	anjp6854@korea.kr jkyeom8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어 능력 등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외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취업하여 국내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 과제 내용

- 일정 등급이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하고 학업성실도가 우수한 졸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비자 신설

※ 특정활동(E-7) 내 전문인력(E-7-1) 67개, 준전문인력(E-7-2) 10개, 일반기능인력(E-7-3) 12개 등 총 92개 직종에 제한적으로 허용 중

- 유학-취업-정주 단계로 운영 중인 현 비자 체계 내에서 추후 거주(F-2) 자격 전환 등 장기 정주를 위한 취업 체류자격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유학생취업특화비자(^{가칭}E-7-G) 체류관리지침」 제정 ('26. 2분기)

2. '25년도 추진 실적

- 해외사례(캐나다, 미국 등) 조사 및 관련 통계 조사 ('25. 4분기)

3. '26년도 추진계획

- 유학생 특화 취업비자 지침 제정안 마련 ('26. 2분기)
- 유학생 특화 비자 제도 실시 ('26. 3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6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지침 제정	1건	1건	관련 보도자료
'26	국내 유학인재 트랙 구축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비자발급건수			체류관리 통계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당자	5급 김진겸	이 메 일	jkyeom8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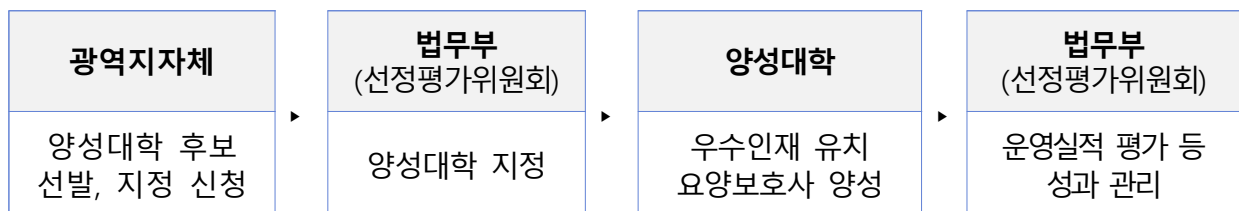
- 저출생·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공급에 한계가 있는 요양보호,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 (요양보호사 부족 전망, 건보연구원) '25년(3천7백명)→ '26년(4만명)→ '27년(7만9천명)

□ 과제 내용

-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 도입 검토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D-2, 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취업 시 취업비자(E-7) 발급 허용 시범사업 시행
-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요양보호사 해외 도입 방안 마련
 - 관계기관(복지부, KOICA)과 협업을 통해 해외 요양보호사 도입 방안 마련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과정 실시
 -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요양보호사 학위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지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 도입 검토

- ('22. 12.) 저고위,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발표

※ 추진과제에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포함

- ('23. 6.)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반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회의,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에 대한요양보호사 활용 방안 논의

- 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하고 졸업 유학생(D-10)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허용

- ('24. 6.)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요양보호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동포(H-2)에게 재외동포(F-4)로 자격 변경 허용

- ('24. 7.)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비자(E-7) 발급

※ 법무부,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및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 개정)

※ 복지부, 재학 중인 유학생(D-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복지부 등

○ 추진절차 : 관계부처(요양보호 분야 : 복지부·외교부)와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활용 세부방안 논의

2. '25년도 추진 실적

☐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 도입 검토

○ ('25. 1.)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출신 요양보호사(E-7) 비자 최초 허가

○ ('25. 3.)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안건 논의

○ 준전문인력(E-7-2) 요양보호사 직종 시범사업 평가 및 정규화 검토

☐ ODA를 활용한 요양보호사 해외 도입 방안 마련

- ('25. 1., 7.) 법무부-KOICA '이주-개발 연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ODA 활용 방안 협의
- ('25. 1.) KOICA 베트남 ODA 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 ('25. 2.) KOICA 베트남 보건인력 양성 등을 위한 ODA 사업 신청
- ('25. 3.) KOICA '개도국 산업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발간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과정 실시

- ('25. 8.)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전국 총 24개 대학을 선정하여 양성대학 지정

3. '26년도 추진계획

☐ 돌봄인력 도입 확대

- 준전문인력(E-7-2) 요양보호사 직종 시범사업 평가에 따른 시범사업 기간 연장 또는 정례화 예정
- 베트남 보건인력 양성 등을 위한 ODA 사업 최종 승인시 용역 입찰 후 '26. 2~3분기부터 사업 시행 예정(KOICA)
- 외교부, 코이카, 복지부 등에서 교육(대상자 선발, 인턴) 및 비자 발급에 관하여 협조 요청 시 법무부에서 적의 검토
- ('26. 상)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학위과정 개시

□ 소요예산 : 비예산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0	0	32	0	△ 100	
- 국 비	▪ 일반회계	0	0	32	0	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체류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제도 중단 결정으로 관련 예산(3억) 중 교재·교안 제작, 강사로 등 3천2백만원 집행(약 2억 7천만원 미집행)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관계부처 논의 등	2회	2회	회의실적
'24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확대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 확대를 위한 지침 개정	1회	1회	지침개정 실적
'25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확대	국내 체류외국인 활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실시	1회	0회*	조사 결과 보고서
'26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돌봄분야 외국인력 확대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성과평가 실시	1회		평가 보고서

* '25. 8.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제도 중단 결정으로 미실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10 02-2110-4057 02-2110-4064
담당자	6급 김인우, 6급 이혜미, 6급 이용준	이 메 일	kiw1206@korea.kr leehm413@korea.kr onseditu@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어업 종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절근로 성실 참여 및 이탈 방지

☐ 과제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절근로 참여 횟수, 기간 등 고려하여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한 장기 체류자격 인센티브 부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단기취업(C-4, 90일))
- 2019. 12. 계절근로(E-8, 5개월) 체류자격 신설
- 2022. 9.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 2023.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체류기간 연장허용, 5+3개월)
- 2025.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체류기간 상한 확대, 8개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장기 체류자격 전환 요건 설정 → 관련 지침 개정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성실·숙련 계절근로자에게 전자비자 등 비자 발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1차년도) 구축 완료

3. '26년도 추진계획

☐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 숙련 계절근로자가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성실 계절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제도 개선	1회	1회	관련 문서 등
'24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성실 계절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제도 개선	1회	1회	관련 문서 등
'25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성실 계절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제도 개선	1회	1회	관련 문서 등
'26	농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관련 제도 개선	1회		관련 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전화번호	02-2110-4087
담당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산업계의 내국인 구인난 심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춰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 분야별 외국인력 도입의 탄력성 등 제고

☐ 과제 내용

- 외국인력 선발 방식 확대 및 요건 강화
 - 유학생, 기타 연수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적극 활용
- 외국인력 도입 필요 분야 지속 발굴
- 기타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비자 제도 개선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8.) 2022년도 비전문취업(E-9) 자격 도입 규모 등 확대
- ('22. 12.)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발표(정부 합동)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추진

- 서비스업 신규 업종 허용 요건 개선('25. 5.)
 - 택배업의 상·하차 및 분류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 전국 한식·외국식 음식점업 중 업력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 서울·부산·강원·제주 내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청소원,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 호텔·콘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 일반청소업체 청소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 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소수 업종으로 업종 간 변경 허용('25. 5.)

3. '26년도 추진계획

☐ 2026년도 1~4분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 출입국관리법령,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개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6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계 지원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7
담당자	5급 김진겸	이메일	jkyeom8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불법 브로커 개입 방지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체류 지원 등의 위탁 업무 수행
- ※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으로 근로자의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발생

☐ 과제 내용(전문기관의 주요 업무)

-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 지원
- 계절근로자 선발 · 입국 · 교육 · 통역 · 체류 · 출국 지원 등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5. 5. 전문기관 지정·운영 관련 연구용역 추진 완료('25. 12.)
- '25. 7. 계절근로 지원 전문기관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25. 9. 2026년 예산 확보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전문기관 공모 → 심사 → 지정 → 운영

2. '25년도 추진 실적

☐ 계절근로 지원 전문기관 운영 법적 근거 마련('25. 7.)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3항(전문기관 지정 · 운영) 신설('26. 1. 23. 시행)

3. '26년도 추진계획

☐ 전문기관 지정·운영 관한 고시 제정

○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정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세부규정 마련('26.3.)

☐ 전문기관 지정·운영

○ 전문기관 선정 공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 선정('26.6.)

☐ 소요예산 : 총 827백만원('26년 정부 예산안 미반영)

※ 기획예산처와 예산 반영 방법 협의 예정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6	계절근로 지원 전문기관지정·운영	계절근로 체계적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획수립 및 지정	1건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전화번호	02-2110-4170
담당자	4급 전강섭	이 메 일	jksv093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을 위한 비자정보와 부처별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산업체 구인난 해소 지원

☐ 과제 내용

- 비자 및 부처별 취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유학생이 졸업 후 변경 가능한 비자 정보 및 부처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제도 정보 제공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에서 취업과 연계한 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부스 운영 등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 추진절차
 - 부처별 취업지원제도 현황 파악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산업부 KOTRA 주관)’ 상담부스 운영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부스 운영('25. 5.)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고도화 ISMP 사업 완료('25. 12.)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취업비자 상담부스 운영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고도화 사업을 위한 예산 신청('26. 상)

☐ 소요예산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0	0	368	0	△100	
- 국 비	▪ 일반회계			368	0	△1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채용 박람회 비자 상담 지원	비자상담 부스 운영	2개	100%	관련 문서
'24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채용 박람회 비자 상담 지원	비자상담 부스 운영	2개	100%	관련 문서
'25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정보 제공 지원	유학생 채용박람회 비자상담 부스 운영	2개	100%	관련 문서
			유학생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사업자 선정	1회	100%	관련 문서
'26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유학생 채용 박람회 비자 상담 지원	비자상담 부스 운영	1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당자	5급 용창식	이 메 일	imbest@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체류허가 혜택에 부합하는 투자이민 기준 등 조정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촉진을 위해 관련 체류허가 제도 조정

☐ 과제 내용

- 투자이민 투자금 도입기준 명확화 및 투자금 출처 심사 강화를 통해 건전한 투자이민제 정착
- 우수인재 기술창업 요건 완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2.)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 (’13. 5.)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
- (’21. 2.)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및 투자이민제도 개선방향 논의
- (’23. 5. ~ 6.)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 변경(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및 기준금액 상향,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상향
- (’23. 12.)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거주·영주 자격 부여 요건 강화

☐ 투자이민협의회 규정(법무부 훈령 제1239호) 개정

- 투자이민제 관련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비율 상향(’24. 11월)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개정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후 시행기간 내에 실적저조, 투기과열 등의 사유로 지정 해제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 ('24. 11월)

☐ 기술창업 관련 지침 개정

- 우수인재에 대한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 완화 ('24. 1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정, 지침 개정

2. '25년도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24년 과제 종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투자이민 정책 제도개선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인의 유입 촉진	관련 지침 개정	2건	2건	관련 문서
'24	투자이민 정책 제도개선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인의 유입 촉진	관련 규정·지침 개선	2건	3건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당자	5급 김은호	이메일	keh2005v@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과제 내용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장기체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 필요직군,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을 추천

-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취업활동 제한 완화*

* 현재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단순 노무(53개 직업)를 허용

- (숙련기능인력) 비전문인력(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근로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6.)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특화비자 도입 국정핵심과제 세부 과제로 선정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핵심과제 지역특화비자 신설 포함
- ('22. 7.) 대통령 지시사항 지역특화비자 도입 지시
- ('22. 10.~'23. 10.) 시범사업 실시

○ ('23. 12.)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 지자체 공모

○ ('24. 1.)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운영계획 수립 → (지자체) 필요 인원 제출 →
(법무부) 광역지자체별 인원(쿼터) 배정

2. '25년도 추진 실적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및 개선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포함한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25. 2.)

※ 단,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소득요건 완화(GNI 70% →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 ('25. 7.)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운영실적 ('25.1.~'25.12.)

○ (지역우수인재) 834명, (외국국적동포) 146명, (숙련기능인력) 3,349명

3. '26년도 추진계획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규모 확대 및 지역활력 고용특례 등 제도 개선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규모 확대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4년 사업 계획 수립	1회	1회	관련 공문
'24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5년 사업 계획 수립	1회	1회	관련 공문
'25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6년 사업 지침 개정	1회	1회	관련 공문
'26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2027년 사업 지침 개정	1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전화번호	02-2110-4364
담당자	5급 김은영	이 메 일	mongi35@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특화, 광역 비자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 수요 증대
- 이민정책 전문조직, 예산 등이 부족한 지자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

☐ 과제 내용

- (지자체 협력 강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기획·집행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 및 지역사회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강화
- 지자체의 이민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인적교류 활성화
-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지자체별 외국인 관련 현안 논의 및 정책 연구 결과 공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설립방안 및 타당성 검토 → 연구용역 수행 → 관련 법령 제정 → 예산확보 → 설계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2. '25년도 추진 실적

- ☐ (‘25. 9.)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이민 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

※ 향후 지역기반 이민제도의 구체적 내용 정립 후 재추진 여부 검토 예정

3. '26년도 추진 계획

- ☐ ('26. 上) 지자체의 이민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및 의견 수렴
- ☐ ('26. 下) 지자체와 '27년 지역기반 이민정책 관련 사업방향 논의 및 교류 강화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4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지역기반이민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연구용역 실시	1회	1회	연구보고서
'25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지역기반이민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가칭)「지역이민특별법」 제정 입안보고	1회	1회	관련 공문
'26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	지역기반이민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지자체 간담회 등 개최	2회		관련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전화번호	02-2110-4364
담당자	5급 김은영	이 메 일	mongi35@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

☐ 과제 내용

- (추진 방향) 현행 출입국관리법 체계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실시
- (대상 체류자격) 유학(D-2), 특정활동(E-7)
- (기간) 2년('25 ~ '26)
- (절차)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의 요건을 마련하면, 광역지자체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및 쿼터 확정 등 시행 여부 결정
- (업무처리) 광역지자체가 광역형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추천, 법무부는 추천서와 기타 요건을 확인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4. 7.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주재: 대통령)에서 지역맞춤형 비자 (광역형 비자) 도입 발표
 - ※ 울산시장, 충북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광역형 비자 도입 필요성 제기
- '24. 8.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주재: 법무부차관)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논의
- '24. 12.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5. 2.)
- '25. 4.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울산, 경남은 추가심의 거쳐 '25. 6월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법무부)광역형 비자 요건 마련 → (광역지자체)사업계획서 제출
→ (법무부)지자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위원회 상정 → (위원회)광역형
비자 시행여부 등 결정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4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운영현황) 총 15개 광역지자체, 총 6,790명

- 유학(D-2) : 10개(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총 4,600명

- 특정활동(E-7) : 5개(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총 2,190명

☐ 소요예산 : 비예산

3. '26년도 추진계획

☐ ('26. 上) 광역형 비자 점검 및 쿼터 재배정

☐ ('26. 上) 광역형 비자 지자체 간담회

☐ ('26. 下)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평가분석 및 정식 제도화 여부 결정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도입으로 지역활력 제고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등 시범사업 실시	1회	1회	관련 공문 및 보고서
'26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도입으로 지역활력 제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점검	1회		관련 공문 및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전화번호	02-2110-4364
담당자	5급 김은영	이 메 일	mongi35@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이민정책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 기반 이민정책 필요성 증가
- 지자체 업무량 증가 대응,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한 정책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 과제 내용

- 지자체 단위 이민정책 실행력 확보 및 지방 출입국관서와 연계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이민자 거주 지자체에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04.)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에서 지자체 의견제시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23.07.) “법무부-광역지자체 이민정책 협력·추진 세미나”에서 일부 지자체가 법무부 등 중앙부처의 협력 요청
- ('23.10.)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국가정책수요 의견으로 제출 (법무부→행정안전부)
- ('24.01.) 행정안전부의 '2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지자체 이민정책 강화” 내용으로 국가정책수요 의견 반영(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행정안전부(협업)
- 추진절차 : 관계기관(지자체, 행안부 등) 의견 청취 →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및 안전 협의·논의 → 법적 근거 마련

2. '25년도 추진 실적

☐ 지자체 외국인 관련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

○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이민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외국인 관련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

※ 제주 인구정책담당관('25.1.) 신설, 인천 다문화사회과('25.1.) 조직 개편 등

3. '26년도 추진계획

☐ 관계기관(지자체, 행안부 등) 실무자 협의 및 회의 개최(연중)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지자체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자 협의 지속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관계기관 회의 개최 등 협의	1회	1회	결과보고서
'24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연구용역 수행	1건	1건	연구보고서
'25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비율*	60%	64%	광역지자체별 조직현황
'26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확대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비율	70%		광역지자체별 조직현황

* 지자체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 설치는 지자체 조례 개정 사안이므로 성과지표 변경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당자	6급 오명수	이메일	kyebaeg@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민정책에 관한 현안 논의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안건 발굴 및 정책 논의 필요

☐ 과제 내용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시 지자체 참여를 촉진하고, 과제 안건 발굴과 의견을 제시할 기회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0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시 계절근로자 배정, 지역특화비자 운영 등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논의

* 국무총리 주재, 법무부 등 5개 부처 참석

- ('22.11.)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신설 및 구성

※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여가부, 농식품부, 경찰청,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 ('24.09.)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지자체 참여 법률안 발의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지자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의*

* 유상범의원 대표 발의('24.9.27.) 및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이민정책에 관한 지역 수요 파악 → 협업 및 교류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 등 지자체 참여 회의 개최 → 안건 논의 및 정책화 가능성 검토

2. '25년도 추진 실적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25.1)
 -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수 확대(30인 → 40인),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지역 이민정책 관련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개최 ('25.6.)
 -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우수 지자체 사례 소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소득 기준을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으로 적용 등 논의
 -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 지침 검토 및 운영 방향, 계절근로자 의료보장 강화 방안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논의
-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관련 의견 제출 ('25.9.)
 - 법제처와 행안부가 협업으로 추진 중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정비(안)에 대한 수정 수용 의견* 제출
 - * 위원 수 확대(40인) 및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원(2명) 명시 등 수정 의견 제출
- 전문인력 육성형 이민 지자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 ('25.9.)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K-CORE, E-7-M)” 시범사업 추진 방향 안내 및 광역지자체 의견 청취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정책 관련 현안 논의 활성화(연중)
 - 지역 이민정책 관련 논의를 위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등 회의 개최

☐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대표 참여 법제화(연중)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지자체 대표가 참여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회 통과 및 법률안 개정에 맞춰 시행령 개정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등 지자체 참여 횟수	1	1	회의 결과보고서
'24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등 지자체 참여 횟수	2	3	회의 결과보고서
'25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등 지자체 참여 횟수	2	3	회의 결과보고서
'26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자체 참여 확대	외정위/실무위/분과위 등 지자체 참여 횟수	2		회의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당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간 교류·협력 강화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
 - 체류외국인 수의 지속 증가('10년 126만명 ↔ '25년 272만명)와 달리 지자체 공무원의 외국인정책(체류·사증·사회통합·귀화 등)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해소 필요

☐ 과제 내용

- (방문 교육)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관련 수요*가 지역마다 달라 지자체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연구원 등과 연계한 지역 이민정책 거버넌스 논의 등 협업 필요

*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관리, 주민과 갈등, 외국인 가사관리인, 우수인재(유학생) 유치 등

(비수도권)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등 지역소멸 대응, 외국인 유학생 정주화 방안 등

- (정책 협업)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이민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4.09.) 법무부-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최초 개최
 - '15년부터 광역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대상으로 연1회 1박2일 교육 실시

- ('22.05.)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4회 실시(경기·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 ('23.09.)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5회 실시(수도권·강원, 경상권, 난민정책, 계절근로·지역특화, 충청·전라권)
- ※ 지자체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수요가 높은 주제별(계절근로 등) 워크숍을 전국 단위로 실시
- ('24.12.)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6회 실시(서울시, 경북·강원권, 전북·전남권, 부산·경남권, 충청권, 경기·인천)
- ('25.10.) 전국 권역별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5회 실시(경상권, 수도권, 계절근로, 전라권, 강원·충청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추진절차 : 법무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위탁운영업체 선정 → 계약 체결 → 위탁업체에서 권역별 장소 섭외 등 교육 준비 → 권역별 교육 실시(개최) → 지자체 외국인 관련 업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중앙부처 지자체 담당자 간 업무 협력·교류 등 강화 → 확대 시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5개 권역 방문 개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총 739명 참석

회차	개최일자	개최장소	개최 권역	참석인원
제1회	'25. 6. 12. ~ 13.	경북 안동시	경상권	104명
제2회	'25. 7. 9.	서울시	수도권	156명
제3회	'25. 8. 27.	충북 청주시	주제별교육(계절근로)	226명
제4회	'25. 11. 26. ~ 27.	전북 전주시	전라·제주권	155명
제5회	'25. 12. 18. ~ 19.	강원 강릉시	강원·충청권	98명

3. '26년도 추진계획

- 권역별 방문 개최 및 지자체 교육수요가 높은 출입국정책(사증·체류), 외국인력(계절근로·지역특화비자) 정책 등에 대한 발표·토론 수행, 교육참여 대상 확대 및 교육장소 선정 방식 개편
- (교육컨텐츠 개선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간 소그룹 토론시간 등 확대, 빅데이터·통계 등을 활용한 지자체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자문·지원, 비자정책 교육 세분화(유학생·전문인력, 동포, 지역기반 이민정책) 등
 - (1분기) 「'26년도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사업 입찰 공고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
 - (2분기) 권역별 개최(제1회~제2회), 수도권, 강원·충청권
 - (3분기) 권역별 개최(제3회~제4회), 경상권, 주제별교육
 - (4분기) 권역별 개최(제5회), 전라·제주권
- (교육참여 대상 확대) 교육대상을 지역 연구원 및 외국인 지원단체까지 확대하여 지역연구 기반 구축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
 - 기존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및 지역연구원에 한정된 참석자를 지역 대학 교수 등 관계자까지 확대하여 이민정책의 이론과 정책 적용사례,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주요 통계자료 분석 등의 교육 제공
- (교육장소 선정 방식개편) '26년 교육장소를 '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또는 지역소멸지역 위주로 선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 및 회복 이미지 제고 도모

☐ 소요예산 : 총 3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48.3	48.3	38.3	38.3	0.0	
- 국 비	▪ 일반회계	48.3	48.3	38.3	38.3	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38,276천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진행 및 교재 발간 6,379
천원 x 6회 = 38,276,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인원	270명	457명	참석자 수
'24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인원	297명	609명	참석자 수
'25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인원	327명	739명	참석자 수
'26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강화	지자체 워크숍 확대	워크숍 참석인원	584명	-	참석자 수

* - ('23년~'25년) 광역(17개) 및 기초지자체(228개) 참석자 수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10% 상향 조정

- ('26년) 그간 실적 추세를 고려, 직전 3개년도 평균 참석자 수로 목표치 조정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1
담당자	7급 박근유	이 메 일	geunyou25@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국내 체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중앙부처 -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안정적인 계절근로 제도 운영

☐ 과제 내용

-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전담 업무 통합플랫폼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
- 2017.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2022. 9.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 2023. 7. 계절근로제도 운영 근거 「출입국관리법」19조의5 신설
- 2024. 8.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완료 및 '25년 구축 예산 확보
- 2025. 6.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1차년도) ('25.6. ~ 12.)
- 2026. 2.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시범운영 개시('26.2. ~ 3.)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플랫폼 구축('25. ~ '28.)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1차년도) 구축 완료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2차년도) 구축 추진

☐ 소요예산 : 총 1,50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0	110	2,502	1,506	△39.8	
- 국 비	▪ 일반회계	0	110	2,502	1,506	△39.8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	110백만원	110백만원	관련 공문 등
'24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통합관리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회	1회	관련 공문 등
'25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통합관리플랫폼 (1차년도) 구축	1회	1회	관련 공문 등
'26	중앙-지방 계절근로자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정보공유 활성화	통합관리플랫폼 (2차년도) 구축	100%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전화번호	02-2110-4488
담당자	5급 최정인	이 메 일	james5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자체의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통계·데이터 분석 수요에 대응
- 중앙·지방 간 데이터 기반의 이민정책 협력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통한 분석 및 제공 지원
 - 행정구역별 외국인 거주 비율 등과 국적·체류자격·연령대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대시보드 및 지자체별 국적, 체류자격, 연령별 외국인의 수 등 기초 통계·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 제공

☐ 추진 경과

- 법무부 지역특화비자 참여 지자체 대상 데이터분석 지원 개시 ('22. 7.)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20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시범운영 개시 ('24. 1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추진절차 : 지자체 요청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분석지원

2. '25년도 추진실적

- ☐ 지자체 대상「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온라인 설명회 개최 ('25. 4.)
 - 지자체 외국인 전담부서 공무원 대상 분석플랫폼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플랫폼 이용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 광역지자체 이민전담 부서 및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추가 개방 확대 및 데이터분석 지원('25. 4.)
 -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 관련, 신규 비정형 통계 52건 생성, 제공 (전국 30개 지자체)

3. '26년도 추진계획

-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내 지자체 맞춤형 분석자료 개발·제공
 -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D2, D4) 현황 분석·시각화 (3/4분기)
 - 연도별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증감 추이
 - 대학별 전공별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증감 추이
 - 외국인 유학생(D-2, D-4)의 국내 정주 현황 (D-2 ▶ E-1, E-7, D-10 등)
 -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현황 분석 시각화 (4/4분기)
 -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세부 현황
 - ①배정/참여자 수, ②참여 업종, 국적, 연령대, 성별 현황, ③월별 입국시기 등
- ☐ 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수행
 - (수원시) 관내 이주민 서비스 시설 관련 분석 (4/4분기)
 - 외국인 거주 인구, 서비스 시설 입지 분포 등 공간 분석 및 확대지역 도출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100%	공문
'24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100%	공문
'25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100%	공문
'26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분석자료 제공	제공률 (%)	100%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2
담당자	5급 이운호	이 메 일	ais20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교육·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대외기관 및 이민자의 상담창구를 이민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단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사회통합정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단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7.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 설치
- '11. ~ 현재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매년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2. '25년도 추진 실적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25. 4.)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5. 6. 12.~6.13.)

3. '26년도 추진계획

- ☐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간담회) 개최
- ☐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전담 창구 상설화 추진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개최횟수	1회	1회	결과보고서
'24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개최횟수	2회	2회	결과보고서
'25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개최횟수	2회	2회	결과보고서
'26	이민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업무 역량 강화	개최횟수	2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당자	5급 최재원/ 5급 천승재	이 메 일	choijw72@korea.kr/ hw00431@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 외국인주민 대상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요 서비스 제공자인 지자체 공무원에게 최신 정보(외국인관련 정책 등)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성 보장 필요

☐ 과제 내용

-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자들의 직무 효율성 제고 및 지역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용 외국인업무 지침서」 제작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0. 행안부, 지자체(김포시, 시흥시 등)과 대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24. 1. 「지자체 공무원용 외국인업무 지침서」 책자 발간
- '24. 3. 「지자체 공무원용 외국인업무 지침서」 공개본 제작(PDF)하여 법무부, 하이코리아 등 웹게시를 통한 대국민 공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지자체

2. '25년도 추진실적 ('24년 종료)

☐ 「지자체 공무원용 외국인업무 지침서」 책자 발간 및 배포 ('24. 1.)

※ 전국 138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1,200권 배포

3. '26년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24년 과제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지자체공무원용 외국인업무지침서 발간	지자체공무원 직무전문성 강화	발간횟수	1회	1회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당자	5급 박병건	이메일	okkev813@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한 외래 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연중)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등 개선

※ 다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2개→8개)('23. 4.), K-ETA 허가서 유효기간 확대('23. 7.), 청소년(17세 이하)·고령자(65세 이상) 의무 적용 대상 제외('23. 7.)

- ('23. 5~ 8.)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4. 6~ 12.)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20억 9천3백만원)
- ('25. 8~ 12.) 전자여행허가(K-ETA) 2차 고도화 사업 수행(8억 7천6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도 및 시스템 개선(상시)
- '26년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 계획 수립(1/4) 및 수행(2/4~4/4)

2. '25년도 추진 실적

☐ 이용자 편의 제고

○ 전자여행허가(K-ETA) 홍보 동영상 수정 제작('25. 6.~8.)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홍보 동영상 수정 제작

3. '26년도 추진계획

☐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2-3-1-2)」 과제와 병합, 지속 개선 추진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 수행('26년)

- '26. 3. 조달청 입찰 공고
- '26. 4. ~ 5. 업체 선정 및 계약
- '26. 5. ~ 12.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 수행

☐ 소요예산 : 총 509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245	356	356	509	43.0	
- 국 비	▪ 일반회계	245	356	356	509	43.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적	산출근거
'23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사항 이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24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25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수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26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 수행	100%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73
담당자	7급 김은정	이 메 일	zamarin@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단체관광 비자제도 개선

☐ 과제 내용

-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신청 대상 범위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6. 3. 중국 단체전자사증 전면 시행
- '19. 6.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업인센티브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대상 단체전자사증 시행
- '23. 6.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행('23. 6.)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전파

2. '25년도 추진실적 ('23년 종료)

☐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 '23. 6. 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완료

3. '26년도 추진계획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단체전자비자 제도 확대	단체전자비자 제도개선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당자	5급 나영미	이메일	laym74@korea.kr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23년 종료]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동남아 단체전자비자 신청대상 범위 확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확대 등에 따른 정책 대상자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과제 내용

- 방한 관광객 단체전자비자 신속 발급을 위한 현재 서울청 전자민원 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명칭변경 및 확대·개편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 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개소
- (’16.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직제 반영
- (’19.1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정식 직제 확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소요정원 요구서 제출 → 검토 및 부처협의(행안부) → 예산협의 및 확정(기재부) → 예산 정부안 국회 심의·의결

2. ’25년도 추진실적 (’23년 종료)

☐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3. ’26년도 추진계획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신속한 단체전자사증 발급	명칭변경 및 인력 확충	직제 반영 여부	직제 반영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전화번호	02-2110-4012
담 당 자	5급 옥효재	이 메 일	hyojae12@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K-컬처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K-컬처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 신설

☐ 과제 내용

- (가칭) K-컬처 비자 신설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0.)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입안
- (’22. 12.) 국무총리실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지시(국무회의)
- (’23. 3.) K-컬처 연습생 대상 생활환경 현장 점검 실시
- (’23. 12.)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내 K-컬처 융합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일환으로 K-컬처 연수비자 지정
- (’24. 3.) 유관 부처(문체부) 실무자 협의
- (’24. 8.) 유관 부처(문체부)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 논의
- (’24. 11.) 유관 부처(문체부)·관련 업계(연예 기획사 4곳, 사설 교육기관 1곳) 참석 간담회 개최
 - K-컬처 비자 추가 신설 관련 수요조사 및 의견 청취
- (’25. 3.) 유관 부처(문체부) 실무자 업무 협의
- (’25. 5.)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종결

2. 과제 추진 주요내용

☐ 쟁점사항 및 검토사항

- K-컬처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현 비자제도에서도 가능하며
- 종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등에서만 국내 연수가 허용되던 외국인 청소년(미성년자 포함)이 K-컬처 (사설)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시 미성년 외국인의 연수기관 이탈·부적응 등 발생 우려
- K-컬처 연수 특성상 주요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예상되는바, 미성년 외국인의 학습권 보장·아동 인권침해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K-컬처 비자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하여 과제 추진 중단 필요

3.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62
담당자	5급 안재필	이 메 일	anjp685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 과제 내용

-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 수집 및 분석
- 디지털노마드 비자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제정 및 시범운영 실시
- 민원인 및 관광업계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사항 없음(신규 추진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신설 → 재외공관 및 소속기관 전달 → 제도 홍보
→ 시범운영 실시

2. ’25년도 추진실적

☐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 ’24. 1.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자 제도 개선

☐ 소요예산 : 비예산

3. '26년도 추진계획 ('24년 종료)

※ '24년도 비자 신설 및 시범운영 실시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지침 신설	1회	1회	관련 공문 등
'24	워케이션(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실시 및 제도개선	디지털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1건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100
담당자	5급 유수열	이 메 일	eculaw1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시장 확대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비자제도 및 우수유치기관 지정 기준 등 개선

☐ 과제 내용

-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 제출서류 생략 등 의료관광객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 의료관광 간담회 실시 등 관련 부처 및 업계 의견 수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 5. 의료관광 지침 제정 및 비자 신설
- '15. 6.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관리기준 신설
- '20. 9. 보건복지부 지정 유치기관에 가점 부여 기준 도입
- '23. 8.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제도 개선(계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지침 개정 → 재외공관 및 소속기관 전달

2. '25년도 추진 실적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관련 제도 개선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수시 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및 개최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관련 실적 추가 인정

- 의료기관의 진료실적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유치실적도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대

3. '26년도 추진계획

☐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 비자발급 현황·실태 분석 및 의료관광 비자 허용국가 재정비

○ 초청실적 50명 이하 유치기관에 대한 초청 인원 확대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4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관련지침 개정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관련지침 개정	1건	2건	관련 공문 등
'26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관련지침 개정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당자	5급 나영미	이메일	laym7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22년 말 41만여 명대 불법체류 외국인을 향후 5년 내('27년) 20만 명대까지 감축 추진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정부합동 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하여 불법체류 단속 강화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으로 자진출국 적극 유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23. ~ '27.)」
- 정부합동단속 실시('23년 3회 실시, '24년~'25년 각 2회 실시)
- 특별자진출국기간 운영('23년~'25년 각 2회 실시)
- 불법체류 외국인은 '23. 10월 4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25. 12월 35만명 대로 감소

※ (감축 현황) 43만명('23.10.) → 39만명('24.12.) → 35만명('25.1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외국인기관,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협업)

2. '25년도 추진 실적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48,458명 적발
 - 정부합동단속 2회 실시(1차: 4.15~6.30, 2차: 9. 30.~11. 30.)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총 42,675명 자진출국
- '25년 「특별자진출국 기간」 운영 중('25. 12. 1. ~ '26. 2. 28, 90일)

3. '26년도 추진계획

☐ 상시 단속체계 유지

- 자체 광역단속 체계 유지 및 테마별 집중단속 기간 운영으로 엄중하고 일관된 단속 실시
- 소속기관별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확고한 단속 기조 표명

☐ 자진출국 적극 유도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기간 운영하여 자진출국 적극 유도
※ 자진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로 설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30,000	39,038	불법체류외국 인 감축 목표
'24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40,000	45,442	불법체류외국 인 감축 목표
'25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40,000	48,458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목표
'26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 추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실적	40,000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목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당자	5급 김택균	이메일	kimtae7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감소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불법체류율 등 위기에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과제 내용

- 불법체류율 단계별 대응 전략안을 수립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부처별 역할 마련
 -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 누적 불법체류율, 연도별 불법체류 증가 규모 등 불법체류 현황에 따른 기관별 역할 정립
- 국가별 불법체류 현황 공개, 국민과 관계부처의 관심 제고 및 관계부처를 통한 해당국의 자발적 협조 유도, 정부합동단속 시행, 사증면제 일시중지를 위한 사전 예고 기능 등으로 활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23. ~ '27.)」
- 불법체류 감소 방안 논의를 위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23년 3회, '24년 2회, '25년 2회)
- 관계부처 참여 정부합동단속 실시('23년 3회 실시, '24년~'25년 각 2회 실시)
- 불법체류 외국인은 '23. 10월 4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25. 12월 35만명 대로 감소

※ (감축 현황) 43만명('23.10.) → 39만명('24.12.) → 35만명('25.1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체류율 등 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2. '25년도 추진 실적

- 부처별 불법체류 감축 방안 논의를 위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1회: 3. 4., 2회: 9. 10.)
- '25년 정부합동단속 실시(2회)

3. '26년도 추진계획

- 부처별 불법체류 감축 대응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3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세칙
'24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2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세칙
'25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2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세칙
'26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2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세칙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당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로 불법체류 신규 유입 차단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다발국가 대사관을 대상으로 자국민 불법체류 전략 방지, 자진출국 유도, 신속한 강제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업무 협조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신규발생 방지 및 자진출국 유도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 ('24. 10월) 주한 공관원 간담회 실시
※ 태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체류 다발국가 주한공관원과의 업무 협조

2. '25년도 추진 실적

- 주한 9개 공관원* 간담회 개최('25. 6월)
 - 개정 출입국관리법(보호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도입) 설명 및 신속한 여행 증명서 발급 협조, 자국민 불법체류 전략 방지 등 업무 협조 요청
- *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3. '26년도 추진계획

- 자국민 불법체류 전락 방지를 위한 자진출국 유도, 신속한 강제퇴거를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협조 등 주한 공관원과의 협조체제 구축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1회	관련공문
'24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1회	관련공문
'25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자진출국 홍보를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1회	관련공문
'26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주한공관원 대상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간담회 또는 협조 요청	1회		관련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당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범죄 증대 우려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과제 내용

-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안전 위협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관계 기관과의 상시 합동단속 체계 구축
-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민원 빈발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단속지역 지정, 불법고용 분위기 억제 및 국민 치안 불안감 해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23~‘27.)」
- 정부합동단속 실시(‘24년~‘25년 각 2회 실시)
- 서민 일자리 잠식 등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단속 기간 운영(‘24년~‘25년 각 1회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2. '25년도 추진 실적

- 정부합동단속 2회 (1차 4.16.~6.30, 2차 9.30.~12.5) 실시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및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중점 단속 실시
- 불법체류 외국인 20,058명, 불법고용주 4,115명 마약사범 57명, 대포차·무면허 33명,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51명 적발

- 서민 일자리 잠식·국민안전 위협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단속(8.12.~9.12.)
 - 불법체류 및 취업 4,617명, 불법고용주 등 991명, 무면허·대포차 운전 33명, 택배·배달업 32명, 건설업 136명 적발
- '25년 특별단속지역 지정·관리
 - 불법체류 3,497명, 불법고용주 등 407명 적발, 특별단속지역 616회 순찰·단속

3. '26년도 추진계획

-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체류질서 문란 행위자 등에 대한 유관 기관과 범정부 단속체계 구축 및 연중 집중단속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360회	508회	18개 사무소 월 2회 이상 실시
'24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360회	545회	18개 사무소 월 2회 이상 실시
'25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특별단속지역 순찰·단속	360회	616회	18개 사무소 월 2회 이상 실시
'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강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집중 단속기간 운영	2회	-	시행계획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당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1. 과제의 개요

SNS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취업 알선 홍보·정보 제공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사이버 정보수집·조사팀 활용 및 이민특수 조사대 전문 사이버 범죄 수사 기능 및 동향조사 활동 강화

☐ 목적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관련 정보수집 체계화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과제 내용

- 인천공항청 사이버 정보조사팀, 서울청(이민특수조사대)과 남부권(김해 공항, 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 사이버 정보수집·조사팀 활용 SNS 등 사이버상 불법취업 알선 정보수집 강화 및 알선자 적발
- 각 청(사무소) 관할 온·오프라인 외국인 커뮤니티 현황 파악 및 커뮤니티 대표자, 협조원 등과 협조 관계 구축
- 이민조사관 직위 정보수집 활동을 통한 정보관 역할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연중 사이버 정보수집·조사팀 및 이민조사관 등 동향조사요원의 정보 수집 활동, 커뮤니티 현황 파악 및 협조원 구축 활동 지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불법취업 알선 정보수집 강화 및 체계화 → 알선자 적발·처벌

2. '25년도 추진실적

- ☐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첩보 수집
 - 정첩보 3,356건 수집
 - 3,262명 적발(형사입건 325명, 강제퇴거 등 2,937명)
- ☐ 외국인 커뮤니티 및 협조망 구축

3. '26년도 추진계획

- ☐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첩보 수집(연중)
- ☐ 온·오프라인 외국인 커뮤니티 및 협조망 구축 활동(연중)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정보수집 체계화	정첩보수집/적발	달성도	2,000건/ 1,000명	3,694건/ 5,267명	ICRM 정첩보수집 및 기획조사 실적
'25	정보수집 체계화	정첩보수집/적발	달성도	2,000건/ 2,000명	4,937건/ 3,262명	ICRM 정첩보수집 및 기획조사 실적
'26	정보수집 체계화	정첩보수집/적발	달성도	2,000건/ 2,000명		ICRM 정첩보수집 및 기획조사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6
담당자	5급 손병찬	이메일	praiser@korea.kr

1. 과제의 개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송치 인력 확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기획조사 활성화를 통한 국내 체류질서 확립 등

☐ 목적

-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불법고용·입국 알선 브로커, 허위초청·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등 외국인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 또한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송치 인력 확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불법입국 외국인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 증대
- 최근 국·내외 외국인들이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법취업 알선, 불법입국 요령 안내, 허위 난민신청 방법 안내 및 알선 등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불법출입국, 허위초청, 국익위해사범, 불법취업 알선, 대테러 관련 등의 분야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동향조사 기법 발표회 등을 통한 기법 공유를 통해 조사역량 강화 필요

☐ 과제 내용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관리 규정 마련
 - 디지털 증거 수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증거 수집·분석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사이버·집합 교육 실시
-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대상 출입국사범 직접 수사·송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법무연수원 사이버 '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실시(연중)
-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대상 출입국사범 직접 수사·송치(연중)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관리 규정 마련(연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관리 규정 마련 →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2. '25년도 추진 실적

- ☐ 법무연수원 사이버·집합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 ☐ 서울·부산청 특조대 지방 소규모 기관 필요시 송치 담당 직원 교육
- ☐ 서울청 특조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장비 고도화 사업 완료

3. '26년도 추진계획

- ☐ 법무연수원 사이버·집합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 실시(연중)
- ☐ 서울·부산청 특조대를 지방 소규모 기관 필요시 송치 담당 직원 교육(연중)
- ☐ 단순 불법체류자 단속보다는 불법취업 알선책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을 근본적으로 차단
- ☐ 서민 일자리 보호 목적으로 불법취업알선 적발에 대한 기획조사 실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이민특수조사대의 자연스러운 조사 역량 강화를 지향
- ☐ 불법취업 알선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조사 실시로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엄단하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에 기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이민특수조사 역량강화	포렌식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행	사업시행 여부	1건	1건	사업시행 완료 보고서
'25	이민특수조사 역량강화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규정 마련	지침시행 여부	1건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규정
'26	이민특수조사 역량강화	불법취업알선 적발	기획조사	60건		기획조사 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6
담당자	5급 손병찬	이 메 일	praiser@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 동향조사 관련 규정에 사업장 등 출입 권한이 불명확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적 규정 필요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단속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 업무 효율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조사 규정 신설 추진
 - 출입국관리법 기타 조항 개정 지연을 우려, 논란이 있는 사업장 출입·조사 근거 규정 신설 제외
- '15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 등 출입 및 조사 규정 신설 추진
 - '16. 2. 16. 법사위 소위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외하기로 결정
- 사업장 출입·조사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유사 입법사례 및 판례 검토

2. 과제 추진 내용

☐ 검토사항

- 사업장 출입·조사는 국민의 사생활,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법류상 근거·절차 및 통제장치 마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현행 법령 및 제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적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과제 추진을 종료함
- 향후 관련 법령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검토할 예정임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관련 규정 신설	관련 규정 신설 추진	1	-	관련 규정 신설
'24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관련 규정 신설	관련 규정 신설 추진	1	-	관련 규정 신설
'25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관련 규정 신설	관련 규정 신설 추진	1	-	관련 규정 신설

4.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당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감축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속 및 출입국사범 관리 (사범·보호·퇴거)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을 위한 불법체류 단속 인력 총 500명(매년 100명) 사범·보호·퇴거 인력 총 300명(매년 100명) 증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 '23년 하반기 수시직제 단속인력 88명 증원 및 배치

※ 단속전담 인력 302명 → 390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인원 증원 지속 요청

2. '25년도 추진 실적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에 따른 불법체류 단속 전담 인력 총 153명 소요정원 요구

3. '26년도 추진계획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에 따른 불법체류 관리 인력 총 110명 증원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단속·사범·보호·퇴거 인력 증원	200명	88명	소요정원 요구 등
'24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단속·사범·보호·퇴거 인력 증원	100명	187명 요구	소요정원 요구 등
'25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단속·사범·보호·퇴거 인력 증원	100명	153명 요구	소요정원 요구 등
'26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단속·사범·보호·퇴거 인력 증원	100명		소요정원 요구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82
담당자	5급 김택균	이 메 일	kimtae7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 과제 내용

- 기간제한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자에게 국내 영주의사가 없는 경우 영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영주권 최소 거주 일수 해외사례 조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개정 →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3. '26년도 추진계획

- ☐ 영주제도 요건 개선을 위한 검토 보고서 작성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출근거
'24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국민과 외국인이 신뢰하는 영주제도 마련	해외사례 조사	1회	1회	보고서
'2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국민과 외국인이 신뢰하는 영주제도 마련	현황 조사	1회	1회	보고서
'26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국민과 외국인이 신뢰하는 영주제도 마련	제도개선 검토 보고서	1회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493
담 당 자	5급 김유신	이 메 일	ky599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귀화 신청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
- 면접심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귀화 민간면접관의 역량 강화 필요

☐ 과제 내용

- (면접심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귀화 면접심사 제도 운영
- (귀화 민간면접관) 귀화 신청자의 기본소양 평가를 담당하는 민간면접관에 대한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귀화 민간면접관 제도 도입('11년) 및 전국 확대 운영('17년)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보수교육 정례화('18년)
- 귀화 면접심사 심사문항 연구용역 실시('21년)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2. 12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 예산

2. '25년도 추진 실적

☐ 귀화 민간면접관 신규 위촉('25년 8월)

○ 임기만료 등에 따라 신규 민간면접관 총 14명 선발

※ 현재 민간면접관 총 48명 ('25. 12월 기준)

☐ 출입국공무원 귀화 면접심사 참여('25년 9월)

○ 면접심사 제도 운용의 법적 안정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 공무원 1명과 귀화 민간면접관 2명 등 3명이 1개 조로 귀화 면접 심사 실시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면접심사 실무, 민원 빈발사례 등 교육 실시('25년 10 ~ 11월)

3. '26 년도 추진계획

☐ 귀화 면접심사 매뉴얼 개정('26년 2월)

○ 출입국공무원 면접심사 참여에 따른 면접심사 방식 변경 내용 반영

○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자의 한국어 능력 및 질문지 영역(기본 소양 등 평가)에 대한 질문 난이도 하향·합격 기준 완화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귀화 민간면접관이 귀화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인권감수성 등을 갖추어 귀화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26년 3 ~ 4분기, 2회)

- 국적제도, 면접심사관의 자세, 면접심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전문 강사 초빙 인권감수성 교육 신설

☐ 소요예산 : 총 59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596	596	596	596	0.0	
- 국 비	▪ 일반회계	596	596	596	596	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귀화민간면접관 면접심사비: 면접관 1인당 160,000원 × 3,725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귀화 면접심사 개선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연간 교육 실적	2회 (100%)	2회 (100%)	-
'25	귀화 면접심사 개선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연간 교육 실적	2회 (100%)	2회 (100%)	-
'26	귀화 면접심사 개선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연간 교육 실적	2회 (100%)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27
담 당 자	5급 김경아	이 메 일	okpd6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복잡하고 어려운 국적법령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하여 신뢰성 있고 예측이 가능한 국적 제도 추진

☐ 과제 내용

- (국적법령 정비) 복잡하고 어려운 국적법령을 수요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비
- (제도 홍보 강화)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병무청, 재외동포청)과 협조하여 홍보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2. 12월)
- “알기쉬운 국적신고제도(한·영)”리플릿 제작 및 배포('23. 9월)
-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24. 4월)
-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25. 3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적법령 정비) 국적법령 개정 수요 파악 → 법령안 개정 입안보고
- (국적설명회 개최) 재외동포 대상 국적 설명회 계획 → 관계기관(병무청, 재외동포청 등) 협업 → 온·오프라인 국적설명회 개최
- (국적 제도 홍보 강화) 국적 설명자료 제작 → 관계기관 협업 → 홍보자료 배포

2. '25년도 추진 실적

☐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개정('25. 4분기)

○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통합(외국국적 동포 회복지침은 폐지)

- 성격이 유사한 두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지침의 체계화 및 활용도 제고, 지침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 「병역법」 등 타법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

- 국적이탈 요건과 관련, 병무청 의견을 반영하여 현역 등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유형을 명확히 정함

☐ 재외동포대상 온·오프라인 국적설명회 개최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 제고

○ 국적제도 등을 제대로 안내하고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적제도 홍보 강화

- (온라인) 재외국민 대상 국적·병무 화상 설명회 실시('25. 1. 21. 일본, '25. 10. 29. 미국 등)

- (오프라인) 재외동포 및 공관직원 대상 국적·병무 설명회 개최('25. 11. 2.~ 11. 4. 중국, 11. 24.~11. 27. 캐나다)

3. '26년도 추진계획

☐ 국적법령 정비

○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6년 3분기~4분기)

- 국적 신고 및 신청 서식의 용어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에 추가

- 국적 신고 및 신청 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송달받을 수 있도록 동의 항목 추가

☐ 국적 제도 홍보 강화

○ 온라인 국적설명회 참여

- 재외국민 대상 국적·병무 화상 설명회 참여(연중)

○ 국적 설명회(대면)를 통해 복수국적, 국적이탈 등 국적 제도 안내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재외동포 및 공관직원 대상 국적 설명회 개최(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홍보강화를 통한 국적제도 이해 제고	국적업무 관련 설명 자료 제작·배포	1회(50%)	1	관련 공문
			화상 설명회 실시	2회(50%)	2	
'24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국적법령 개정 및 홍보물 배포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회(50%)	1	관련공문
			국적 관련 안내서 배포	1회(50%)	1	
'25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국적법령 개정 및 국적설명회 개최	국적법령 개정	1회(50%)	1	관련공문
			국적설명회 참여 (대면, 화상)	1회(50%)	4	
'26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국적법령 개정 및 국적설명회 개최	국적법령 개정	1회(50%)	1	관련공문
			국적설명회 개최	1회(50%)	1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22
담당자	5급 강성진	이 메 일	ksjksj01@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법체류 우려 등 고위험 외국인 유입 차단 및 저위험 외국인 입국심사 편의 제공 등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
- AI 기술 기반으로 입국자 정보 사전분석 및 생체정보 인식 향상을 통한 고위험 외국인 선별 정확도 향상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추진

☐ 과제 내용

- 입국자 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입국신고 제도 도입 및 활용
- 고위험 외국인 선별 등 입국심사 정확성, 신속성 향상을 위해 AI 기반 과학적 국경관리 방안 추진
 - 각종 출입국 정보 등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입국자 사후 분석을 통한 정밀 심사대상자 선별 강화
 - AI 학습을 통한 얼굴인식률 향상을 통해 다수 동시 이용 가능한 자동출입국 심사 도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5.)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25. 2.~12.)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 및 전자 입력 기기 도입
- ('25. 6.~12.) 자동심사대 각 세대별 얼굴인식 테스트(얼굴 통과기준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내용 :

- AI 기반 입국 외국인 사전분석 시스템 도입

- AI 활용 자동출입국 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과학적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추진절차 : ISP 예산신청 ('26.) → ISP 수립('27.) → 본사업 수행('28.)

2. '25년도 추진 실적

☐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25. 2.)

○ 입국 외국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25. 2.)

○ 전자입국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국장 내 전자 입력기기 도입 및 정보 활용을 위한 통계 개발('25. 8~12.)

☐ AI 기술 활용 자동출입국 심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 수행

○ 자동출입국 심사대 세대별 안면 인식률 테스트('25. 6. ~ 12.)

3. '26년도 추진계획

☐ 고위험 외국인 선별을 위한 AI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 추진

○ 입국 외국인 AI 정보분석 시스템 ISP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신청(上)

☐ AI 활용 자동출입국 심사 시스템 구축

○ AI 학습을 통한 얼굴인식률 향상 시스템 ISP 예산 신청(上)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전자입국신고서 정보화전략계획 (ISP)수립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산출물 (전자입국신고서 포함)	1	1	ISP 수립 산출보고서
'24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개발·구축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1	1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25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전자 입력기기 도입	전자 입력기기 도입 사업 수행	1	1	전자 입력기기
'26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AI 기반 과학적 국경관리시스템 추진	AI 기반 과학적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100%		'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서(ISP) 제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73
담당자	7급 김은정	이 메 일	zamarin@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 향상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 수행
 - 챗봇 기반 이용자 맞춤 자동응답 서비스 제공
 - K-ETA 심사 시 신청자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반 업무 자동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 단체관광객 등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22. 12.)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 5~8.)
- ('24. 6~ 12.)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20억 9천3백만원)
- ('25. 8~ 12.) 전자여행허가(K-ETA) 2차 고도화 사업 수행(8억 7천6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26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1/4)
- '26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 수행(2/4~4/4)

2. '25년도 추진 실적

- ☐ 전자여행허가제(K-ETA) 2차 고도화 사업 수행
 -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보강
 - OCR(광학식 문자 판독 솔루션) 이중화, GPU 서버증량 등
 - 다국어 지원 확대
 - K-ETA 홈페이지에 2개 언어(튀르키예어, 카자흐스탄어) 추가 지원 및 16개 언어로 이용자 매뉴얼 제작
 - 활용도 높은 통계·분석 시스템 개발

3. '26년도 추진계획

-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 수행
 - '26. 3. 조달청 입찰 공고
 - '26. 4. ~ 5. 업체 선정 및 계약
 - '26. 5. ~ 12.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수행

☐ 소요예산 : **총 56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62	2,093	876	564	△35.6	
- 국 비	▪ 일반회계	162	2,093	876	564	△35.6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2025년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비 : 5억 6천4백만원

- (개발비) 2억 4천3백만원 + (인프라)(H/W, S/W) 3억 2천1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ISP)수립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산출물	1	1	ISP 수립 산출 보고서
'24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25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 수행	1	1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26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스템 고도화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개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 수행	100%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스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73
담당자	7급 김은정	이 메 일	zamarin@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마약 등 중대범죄를 사유로 입국금지된 외국인 지속 증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사회적 파급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필요

※ '23. 12월 기준, 입국금지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6,124명이며, 유학생·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유입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도 지속 증가

☐ 과제 내용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등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기간을 현행 기준보다 상향하여 입국규제 강화 추진
- 강화된 입국규제로 국민안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여 마약 등 중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없음(신규 추진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입국규제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2. '25년도 추진실적

☐ 외국인 마약류 사범 입국규제 강화

- '24년 상반기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 사회적 파급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등 중대범죄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입국금지기간 상향

☐ 소요예산 : 비예산

3. '26년도 추진계획

☐ '24년도에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26년도 추진계획 없이 종료함

- 종료사유 : 성과목표인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24년 상반기에 개정·시행하여 목표 달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안전 위해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입국규제 강화 (지침 개정)	마약 등 중대범죄 입국금지기간 상향	1회	1회	개정 공문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8
담당자	7급 오윤지	이메일	yooong38@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운수업자가 제출한 입·출항 보고 등에 의존한 간접 심사방식에서 부두접안 선박 및 내·외항 정박 선박의 감시정을 통한 승선검색 등 직접 심사방식을 확대하여 항만 보안 강화 기여

☐ 과제 내용

- 선박 등의 입·출항시 승선자의 출입국 적격 여부 확인, 법령 위반자의 승선 방지, 밀입국 및 무단이탈 방지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법령상 임무 수행
- 내·외항 정박 선박까지 승선검색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 감시정을 도입·운용('22. 4월~)하고 20년 이상 노후 감시정 대신 출입국업무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출입국 신규 감시정 건조
 - 1차 신조('25. 12월) 감시정은 부산청에서 운영하고, 부산청의 기존 감시정은 사무소 규모, 연간 입출항 선박 수, 항만보안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 타사무소로 이관
 - 인천청 감시정 대체를 위해 신규 감시정 2차 건조 필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접안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업무 강화('20. 3월~)
 - 전국 19개 항만 출입국관서 중 입출항 선박이 많은 주요 5개 사무소*(6개 항만)에 신규인력 33명을 배치('20. 3월~)하여, 승선검색 및 항만순찰 업무 상시화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울산출입국, 여수출입국, 광양출장소

○ 내·외항 정박 선박까지 승선검색 대상 선박 확대('22. 4월~)

- 세관 감시정 2척을 관리전환 받아 부산항과 인천항에 배치하여 내·외항 정박 선박까지 승선검색 활동 확대

☐ 추진체계

○ 추진 주체 : 법무부

○ 추진 절차 : 조달청(사업자 선정)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건조용역 실시

2. '25년도 추진실적

☐ 선박검색 및 항만순찰 강화

○ 접안 및 내·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실시

☐ 부산청 신규 감시정 건조

○ 출입국업무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장착 친환경 선박으로 '25. 12월 인도 완료

3. '26년도 추진계획

☐ 선박검색 및 항만순찰 강화

○ 접안 및 내·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실시

- 연간 목표 검색 선박 수 : $\{(\text{증원 승선검색 인원})/2 \times \text{연간 근무일수}(365) \times \text{일별 검색 가능 선박 수}\} / 3 = 8,030\text{척}$

☐ 인천청 신규 감시정 건조 추진

○ '26년 신조 사업은 통상적인 선박 건조 기간과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2개년 사업('27년까지)으로 추진

- 1년차 60% 공정율, 2년차 40% 공정율

☐ 소요예산 : 총 2,46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0	228	4,100	2,460	△ 40.0	
- 국 비	▪ 일반회계		228(설 계)	4,100(건조)	2,460(건조)	△ 40.0	2년 사업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4	신규 감시정 설계	설계용역	이용률 (%)	100%	100%	중간보고
'25	신규 감시정 건조	건조용역	이용률 (%)	100%	100%	
'26	항만검색	승선검색	승선검색 실적	8,030척		연말통계
	신규 감시정 건조	건조용역	건조율 (%)	60%		중간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42
담당자	6급 최장호	이 메 일	choijh08@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활용, 국익과 사회통합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예산 효율성 제고

☐ 과제 내용

- 시계열적 변화 추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3년주기)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공표 등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 추진
※ (국내 입법례) 「양성평등기본법」, 「가족친화법」, 「상생협력법」 등 다수 법률에 관련 지수의 산정과 공표, 환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2. 국내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 측정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완료 및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 '21. 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 (11.28.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 '24. 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정기 측정(3년 단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년 단위 계획)

3. '26년도 추진계획

☐ 해당없음 (3년 단위 계획)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정기조사 실시	연구용역	1회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당자	5급 최재원	이메일	choijw72@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사회 이민자 사회통합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개선방향 제시

☐ 과제 내용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정책컨설팅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2. 국내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고 정책 평가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완료
- '22. 12.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 '23. 5.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시범사업 수행
- '24. 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컨설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해당없음 (3년 단위 계획)

3. '26년도 추진계획

☐ '24년 측정한 사회통합지수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정책컨설팅 시범실시	연구용역실시	연구용역	1회	1회	결과보고서
'24	정책컨설팅 실시	연구용역실시	연구용역	1회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당자	5급 최재원	이메일	choijw72@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는 정주형 체류자격 변경 혜택을 부여하여 이민자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정책 구현

☐ 과제 내용

- 외국인력, 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난민 등 국내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일정단계 이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 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혜택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1.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변경 시 이수자 가점 부여
- '12. 4. 장기체류자(F-2-99) 체류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확대
- '22. 10.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변경 시 3단계 수준 이상 요건 규정
- '23. 8. K-point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변경 시 2단계 수준 이상 요건 규정
- '24. 1. 일반숙련기능(E-7-3) 체류기간연장시 1단계 수준 이상 요건 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 확대 대상 및 혜택 부여 관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연중 외국인 근로자가 E74 자격변경을 위한 한국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양성 특별반 운영
※ 25년 330개 특별반 운영, 6,367명 참여
- '25. 연중 유학생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연계과정 확대 운영
※ '24년 11개 ⇒ '25년 41개
- '25. 2분기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변경 시 4단계 수준 이상 요건 규정

3. '26년도 추진 계획

- '26. 3분기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의 이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유학생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제공
- 소요예산 : 총 13,64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0,096	10,439	13,594	13,640	0.3	
- 국 비	▪ 일반회계	10,096	10,439	13,594	13,640	0.3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소요예산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체 예산이며, (3-1-2-2), (3-1-2-3) 과제 예산을 포함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지침 개정	1회	1회	결과 보고
'2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지침 개정	1회	1회	결과 보고
'2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지침 개정	1회	1회	결과 보고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90,000명		결과 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당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에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유료화)을 적용함으로써, 이민자에게 교육 참여의 책임성 부과 및 교육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완화, 학습 의욕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과제 내용

- 그간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통한 비용부담체계 개선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비용을 부담
 -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등)와 사회통합정책 핵심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감면 대상 설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 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유료화
- '19. 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수수료 유료화
- '22. 5.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 '22. 1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유료화 방안 추진 검토
- '23. 11. 유료화 법적근거 마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24. 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책정 협의 완료

- '24. 7.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개최(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 '24. 9.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법무부장관 고시)
- '24.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보도자료 배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기획)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운영)
- 추진절차 : 법령개정 → 법무부장관 고시→ 유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3. '26년도 추진계획 (25년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보도자료 배포	1회	1회	보도자료
'24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보도자료 배포	1회	2회	보도자료
'25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운영지침 개정	1회	1회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당자	5급 주도현	이메일	joodh9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기회 및 비대면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평가와 교육 참여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과제 내용

-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장 확대 및 평가 종류 및 일정 다양화
 - 현재 운영중인 광명, 대전 CBT센터 외에 평가 장소 추가 설치
 - CBT 사전·종합 평가 외에 중간평가 추가, 주말 평가 시행
- (교육) 참여자의 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화상교육 과정 확대
 - 중앙거점운영기관 외 운영기관의 비대면 화상교육 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0. 5. 사회통합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도입
- '19. 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민간위탁
- '22. 3.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 도입
- '23. 1. 중앙거점 외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도입(운영지침 개정)
- '23. 11. 대전 CBT 센터 추가 개소
- '24. 2. 대전 CBT 사전평가 주말평가 시범운영
- '24. 7. 보도자료 배포(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
- '24. 10. 대전 CBT 센터 사전평가 주말(토, 일) 확대·시범운영
- '24. 12. 서울 CBT 센터 추가 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평가)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수탁기관
- (교육)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 추진절차

- (평가) 법무부, 평가수탁기관 업무협약 → 서울·수도권 CBT 평가장 확보 및 개소
-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시달(법무부 → 운영기관)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연중 대전 CBT 센터 사전평가 주말(토, 일) 운영
※ '25년 101회, 6,294명 참여

- '25. 7 기존에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만 제공하던 CBT 평가를 중간평가까지 확대하여 시범 운영

3. '26년도 추진계획

- '26. 1분기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요건 완화로 교육 기회 확대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CBT 평가장 추가 개소 및 보도자료 배포	1회	1회	보도자료
'24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CBT 사전평가 주말 시행(시범운영)	4회	33회	결과보고서
'25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CBT 사전평가 주말 시행	52회	101회	결과보고서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온라인 화상교육 참여자	10,000명		사회통합 정보망 통계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당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다양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 단계에서 기초 법·질서와 필수 사회적응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기존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연예인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계절 근로자와 산업현장에서 근무중인 외국인력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 계절근로자와 산업현장 외국인력의 교육 접근성 제고, 현장 근로자 공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장에 방문하는 맞춤형 조기 적응프로그램 추진
 - 기초법질서, 필수 생활정보 이외에 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교육 진행
- 국내 장기 정주 가능성이 높은 재정착 난민에 대해서도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운영
 - 출입국·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재정착난민 입국시기에 맞춰 전문강사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 7. 결혼이민자 대상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 '14. 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 기존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 예술·흥행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재정착난민까지 포함한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조기적응지원단(조기 적응지원센터)
- 추진절차 :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단(지원센터) 선정 → 이민자 교육 신청 → 교육 실시

2. '25년도 추진 실적

☐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25. 2.)

- 범죄예방교육 추가(1시간)

※ 생활법률교육(경범죄·도로교통법 등)등 기존 교육에 중범죄(인신매매, 마약범죄, 강도, 절도, 성폭력, 보이스피싱 등)위주의 범죄예방교육 추가

- 산업안전교육 추가(1시간)

☐ 찾아가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운영('25. 7.)

- 학교 등에 찾아가는 형태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운영

3. '26년도 추진계획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대상자 확대

- 장기체류자의 배우자 및 가족(F-1, F-3 등)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추진
- 농·어촌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실시

☐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조선업·건설업 근로자 특화 산업안전교육(2시간) 실시

※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 개발

□ 소요예산 : 총 3,561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059	964	1,919	3,561	85.6	
- 국 비	▪ 일반회계	1,059	964	1,919	3,561	85.6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소요예산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전체 예산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4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41,200명	41,048명	결과보고서
'25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44,000명	37,514명	결과보고서
'26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47,000명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당자	5급 최재원	이 메 일	choijw72@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장기 거주 목적으로 입국 예정인 외국인이 입국 전부터 한국어 및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여 원활한 조기 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입국 전 온라인 사회통합교육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5. 3월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심의
※ 요양보호사 양성·도입의 과정에서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운영 예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 현지 혹은 온라인 교육 참여

○ 추진절차

- 관계기관 등 업무협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 → 교육 실시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8.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현지 업무협의(베트남)

3. '26년도 추진계획

- '26. 1분기 현지 교육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 '26. 3분기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적	산출근거
'25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운영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운영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시범운영 실시	1회	0회*	결과보고서
'26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운영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운영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운영 횟수	1회		결과보고서

* 현지 사정으로 시범 운영 미실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민자와 접점에 있는 중앙부처·지자체·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이해 등 이민정책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함양

☐ 과제 내용

-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등 각 기관 소속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민정책의 이해」 교육과정 개설·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최초 운영
- ('12년 ~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매년(2회)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법무연수원)
- 추진절차 : 교육 계획 수립 → 수요 조사 → 강의 개설 → 교육 실시

2. '25년도 추진 실적

☐ '이민정책의 이해' 과정 교육 실시

- 중앙부처·지자체 및 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법무연수원)
 - ('25. 7. 2. ~ 7. 4.) 제25기 이민정책 이해 과정 운영
 - * 중앙부처·지자체 및 경찰 공무원 등 29명 수료

- ('25. 12. 10. ~ 12. 12.) 제26기 이민정책 이해 과정 운영

* 중앙부처·지자체·경찰 공무원 및 교원 등 28명 수료(교육대상을 교원까지 확대)

3. '26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의 이해」 교육과정 개설·운영(총 3회)

○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2회(상·하반기) 운영 중인 교육 과정을 총 3회로 확대 운영

- ('26. 1월) 제27기 「이민정책의 이해」 교육 실시

- ('26. 5월, 11월) 「이민정책의 이해」 교육과정 운영(예정)

○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상자별로 교육과정 분리 운영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법무연수원 자체 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76명	결과보고서
'24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33명	결과보고서
'25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57명	결과보고서
'26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화	상호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수료인원	50명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당자	6급 오명수	이 메 일	kyebaeg@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 형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해외사례 : 호주 ‘Harmony day’(3.21), 캐나다 ‘Multiculturalism Day’(6.27), 싱가포르 ‘Racial Harmony Day’(7.21) 등

☐ 과제 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사회통합 유공자 정부포상 및 ‘올해의 이민자상’ 수여, 미담사례집 제작·배포
- 세계인의 주간 기념행사 개최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이민자가 함께 어울리는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7.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 세계인의 날) 제정
- ‘08. 5.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 ‘25. 5.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 ‘08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 (단, ‘14년도는 미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학,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단체 등
- 추진절차 : 기념식(기념행사) 계획수립 → 기념식(기념행사) 개최 → 결과보고

2. '25년도 추진 실적

☐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실시

○ 제18회 기념식 개최

- 일시·장소 : '25. 5. 20.(화),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 참석자 : 법무부장관, 주한외교사절, 수상자 및 가족 등
- 주요내용 : 정부포상, 장관님 등 축하,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

○ 세계인의 날 기념 홍보 영상 제작

-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외국인 정책 중요성 부각

○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미담사례집 제작

-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담사례집 제작
- 재한외국인의 성공적인 정착사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재한외국인 봉사활동 등 미담사례 선정

○ 세계인 주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별 기념 행사 및 이민정책 포럼 개최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자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방 특성에 맞는 자체 기념행사 개최

- 법무부, 한국이민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이민정책 전략과 실행방안」 및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주제로 이민정책포럼 개최

3. '26년도 추진계획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6. 5. 20.)

- 기념일 취지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품격있고 내실있는 중앙 행사 진행 및 최신 이민정책 동향을 반영한 정책메시지 발표
-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유공자 정부포상, '올해의 세계인상' 수여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범사례 발굴·홍보
- 수기, 사진 등 다양한 공모전 및 미담사례집 제작을 통해 내·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

☐ 소요예산 : 총 43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311	310	310	430	38.7	
- 국 비	▪ 일반회계	311	310	310	430	38.7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일반용역비 207백만원, 일반 수용비 80백만원, 사업추진비 23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17건	결과보고
'24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17건	결과보고
'25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17건	결과보고
'26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사회 인식제고	개최실적	17건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당자	5급 최재원	이 메 일	choijw72@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및 이민자·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하락 추세에 따라, 외국인은 시혜적 정책 수혜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필요

※ 재한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의 비중 감소('14년 41.3% → '24년 26.2%)(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과제 내용

- 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제고, 국민 ⇔ 이민자 간 교류·소통 증대
 -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 사회공헌활동 정례화
 - 이민자 멘토단, 이민자 네트워크,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 이민자 사회참여 다각화 추진
 -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외국인봉사단체(비영리단체), 자원봉사포털(1365)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이민자 사회참여 기반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9. 7. 이민자 대상 멘토교육 시범 운영(16회)
- '20. 6.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35명) 위촉
- '20. 11.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규정 제정
- '22. 2. 제2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14명) 선발

- '22. 8.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운영 규정 개정
- '24. 3.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39명) 위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교육부(협업), 행정안전부(협업)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
- 추진절차 : 협업 등 계획 검토 및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

2. '25년도 추진 실적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멘토교육 강사 활동(282회 출강)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멘토링 교육(10개 지자체, 36개 학교 참여)
- 멘토단의 강의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 연 2회 실시(3월, 12월)

3. '26년도 추진계획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멘토교육 강사 활동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교육 등 강사활동 연 2회 이상 실시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멘토링 교육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 내 학교 대상 멘토링 교육 실시(연 2회, 총 40회)
- 이민자 멘토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 진행
 - 역량 강화 워크숍 연 1회 개최

○ 기타 사회공헌활동

- 이민자 멘토단 및 사회통합 중앙협의회·자원봉사포털 간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2회	8.1회	결과보고
'24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2회	3.9회	결과보고
'25.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2회	5회	결과보고
'26	이민자 사회참여	이민자 사회기여	강사활동	2회		결과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9
담당자	5급 최재원	이 메 일	choijw72@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복지기준 불명확 및 체류외국인의 고령화로 인해 체류자격에 따른 복지 기준의 설정 및 지원 방안 마련

☐ 과제 내용

- 체류자격별 복지 기준안 마련

- 복지 유형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의 사회보장 기준 연구

- '21.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의 복지수급 등 사회 보장 혜택 연구

※ 「체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사회보장 기준 연구」 연구용역

- 기준 마련 관련 관계부처 논의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복지 제도 실태 등 파악 필요성 논의 ('23. 12.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

※ 공공 지출,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 가족 관련 복지는 글로벌인재 유치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침(OECD 인재매력지표) → 부처별 소관 정책 현황, 실태 파악 필요성 제안(법무부)

- 사회보장 제도(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돌봄서비스 등) 적용 대상·기준 및 관련 법, 예산, 소관 부처(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등) 정리('24. 11.)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복지부, 지자체 등 복지 소관 부처
- 추진절차 :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적용 실태 파악, 복지 유형별 소관부처
논의를 거쳐 체류자격별(국내 생활 기반, 연령층, 기여도 등 고려) 복지
기준안 마련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의 사회보장 범위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이민정책연구원)

- 이주민 사회보장체계 적용범위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체류외국인 복지 기준 개선 관련 복지부 업무협약(복지정책과, 기초생활
보장과, 보험정책과, 이민정책연구원)

- 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주권자의 공공부조 적용, 건강보험
대상 범위 등 외국인 복지제도 적용 범위 및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의 사회보장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수행

- 외국인 사회보장 수급현황 분석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이민정책연구원)

☐ 관계부처 협의

- ('26. 하)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등 외국인 복지정책
소관부처와 부처별 역할, 세부 기준 마련, 공론화 등을 위한 방안 논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관련 관계부처 논의	1회	1회	회의실적
'24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공공부조 분야 외국인 복지 기준 정리	1건	1회	복지 기준정리 보고서
'25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소관부처 의견수렴	1회	1회	회의 보고서
'26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기준 마련	부처별 역할 공론화	1회		회의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당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kiw120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중도입국자녀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 지원

☐ 과제 내용

-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 7. "다문화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협력을 위한 "법무부-교과부 업무협약 체결
- '14. 7.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 실시
- '15. 9. 결혼이민자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세부 약호(F-1-52)를 신설하여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통계 확보
- '16. 12. 중도입국자녀가 만 21세까지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17. 1. 중도입국 청소년(만 7세~만 17세)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17. 1.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18. 7. 중도입국 청소년(만 6세)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18. 7.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22. 12.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자녀에 대한 체류관리 지침 제정
- '25. 1. 중도입국자녀가 만 21세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침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교육부

○ 추진절차 :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교육부)에 따른 중도입국
자녀 정보제공(법무부) → 정규 교육과정 참여(중도입국 청소년)

2. '25년도 추진 실적

○ 중도입국자녀 등의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한 교육부 협조 요청에 회신
('25.5./ '25.11.)

3. '26년도 추진계획

☐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 교육부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 취학연령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중도입국청소년 정보 제공	1회	2회	결과회신
'25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중도입국청소년 정보 제공	1회	2회	결과회신
'26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중도입국청소년 정보 제공	1회		결과회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4
담당자	5급 김태진	이 메 일	kimtj81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가정과 순수외국인가정의 증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일된 용어 사용 필요
-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라 용어*를 임의로 사용해 왔으며, 불명확한 용어 정의로 인해 생성된 다양한 통계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음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일컫는 용어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또는 중도입국자녀(법무부),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성평등부), 외국인주민자녀(행안부), 다문화 학생(교육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 과제 내용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행정·통계 용어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성 있게 재정의하고, 법적 근거 마련
- 범부처 협의체 구성(용어 명칭, 정의, 연령기준 등 합의)
- 법령 및 통계조사 표준지침 제·개정 추진
- 지자체 조례·시행 지침 정비
- 대국민 홍보·교육을 통한 용어 확산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6년 신규 과제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교육부, 성평등부,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등
- 추진절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통계 용어 정비(법무부) → 정책수요자 명확화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실효성 강화(이주배경 아동·청소년)

2. '25년도 추진 실적 ※ '26년 신규 과제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추진계획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행정·통계 용어 정비 및 통계 산출 관련 논의
 - 통계 용어 관련 관계 기관 협의
 - 「이민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용어 표준안 마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6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행정·통계 용어 정비	정책대상 명확화를 통해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용어 일원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제도개선, 홍보실적 등	4건		관련 공문,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4
담당자	5급 김태진	이 메 일	kimtj810@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국적에 따라 부여하는 차별성·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구소련(CIS지역 6개국) 동포에게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여

☐ 과제 내용

-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 중국 및 CIS(구소련) 6개국 출신 동포에게 부여해 오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부여를 '26년부터 중단하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11. 재외동포 자격통합 및 동포 취업 범위 재설계 방안 연구용역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27년)에 동포 체류자격 통합이 과제에 포함
- '24. 9.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주요 과제로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동포비자 통합 및 취업 가능 범위 확대 추진 발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정책위 실무분과위원회('25.7.) 개최

-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로 통합 실행 방안 논의

☐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국민 인식 조사('25. 11.)

- 문체부의 '25년 하반기 정책 여론조사 사업에 선정되어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의 단순노무 취업범위 확대 및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방안’ 등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실행 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실시

3. '26년도 추진계획

☐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 중단('26. 上)

☐ 동포 체류자격 통합('26. 上)

- 동포의 사회통합 교육 강화 방안 마련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제도개선	1건	1건	보고서 등
'24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제도개선	1건	1건	보고서 등
'25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제도개선	1건	1건	보고서 등
'26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체류자격 개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	제도개선	100%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219
담당자	5급 이윤희	이 메 일	woong7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감소에 따른 구인난 해소와 국민 일자리 침해를 고려한 동포의 경제활동 보장 등을 위해 재외동포(F-4)의 체류 자격자의 취업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 과제 내용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범위 확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통해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직업은 점진적으로 완화
- 취업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서민일자리 보호 방안 마련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에게 단순노무 분야 제한직업을 추가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고용보험법 개정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책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5. 재외동포(F-4)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완화

* 허용 직업(6개)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국민 인식 조사('25. 11.)

- 문체부의 '25년 하반기 정책 여론조사 사업에 선정되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단순노무 취업범위 확대 및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방안’ 등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실행 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실시

☐ 외국인정책위 실무위원회 개최('25. 12.)

- 재외동포(F-4) 취업범위 확대 관련, 관계 부처 논의

3. '26년도 추진계획

☐ 재외동포(F-4) 자격자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26. 上)

- 기존 단순노무 취업 제한 직종인 단순노무(39개 업종) 및 서비스업(8개 업종) 중 국민 일자리 침해 여부 및 인력 부족 분야를 고려하여 10개 직종 우선 허용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4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6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00%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219
담당자	5급 이웅희	이메일	woong7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수도권에 밀집한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동포 및 배우자의 취업범위 확대

☐ 과제 내용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자격 신설
 -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참여 지자체로 이주할 경우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 및 취업 범위 확대
- 동포 가족에 대한 체류 혜택 부여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을 가진 동포의 가족에게 장기체류자격 부여 및 취업 허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 선정
- 2022. 10.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법무부, 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 지자체, 동포 유입 촉진

2. '25년도 추진실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 정식사업 실시('24. 1. 26.)

○ 지역특화동포(F-4-R) 121명, 지역동포가족(F-3-2R) 24명 체류자격 변경 ('24. 1~9월)

3. '26년도 추진계획

☐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1-3-1-1)과제와 통합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자 수	50명	70명	관련 통계 등
'2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 변경자 수	100명	121명	관련 통계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과	전화번호	02-2110-4364
담당자	5급 김은영	이 메 일	key31074@moj.go.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급증과 더불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필요

☐ 과제 내용

○ 법적 근거 마련

- 재외동포의 국내정착 및 사회 적응 지원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법무부 내규인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 중이나 동포단체 등은 법률에 직접 근거 마련을 요구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

- 일부 지역에 편중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수 확대

○ 센터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지원 및 정착 우수사례 발굴

-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국내 성공적으로 정착한 동포 사례를 발굴·홍보하는 한편, 성공 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7.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7개→ 11개)

○ '23. 6.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11개→ 16개)

○ '25. 6.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16개→ 23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 요건 심사 후 지정

2. '25년도 추진 실적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추진('25. 3)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5. 3.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5. 8. 박군택 의원 대표발의)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25. 6)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만료에 따른 신규 및 재지정 시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실시('25. 6., '25. 8., '25. 12.)

○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자 회의 개최 및 동포 지원방안 논의

3. '26년도 추진계획

☐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실시(연중)

○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자 회의 개최 및 동포 지원방안 논의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추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포체류 지원센터” 지정, 예산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소요예산 : 총 2,02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2,020	100%	
- 국 비	▪ 일반회계				2,020	1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 동포 사회통합 및 정체성 등 교육 지원 등 23개×87,826,087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 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센터 지정 확대	5개	5개	관련 공문 등
'24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 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간담회 개최	2회	2회	보고서 등
'25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 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간담회 개최	2회	3회	보고서 등
'26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동포 정착 지원	우수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동포 사회 실질적 지원 촉진	간담회 개최	2회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당자	5급 김연우	이 메 일	kimyw32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행정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동포 특성을 반영한 안내서비스 제작

☐ 과제 내용

- 동포 맞춤형 체류제도 안내서 발간
 - 동포 비자 및 체류제도, 출입국관리법령 주요 위반사례,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 동포 맞춤형 체류제도 안내서를 다국어로 제작·배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0. 안내서 제작
- 2022. 10.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4개국어 제작·배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례 조사 및 의견조회 → 안내서 제작·배포

2. '24년도 추진 실적 ('23년 종료)

3. '25년도 추진계획 ('23년 종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 체류 안내 강화	출입국서비스 접근성 제고	업데이트 자료 배포 여부	1건	1건	홈페이지 업데이트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당자	5급 김연우	이메일	kimyw32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특정 국가 동포를 대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사회 갈등 요인으로 기능함에 따라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 통합 추진

☐ 과제 내용

- 재외동포 인식 정립 및 동포정책 이해를 위한 홍보·언론대응
 - 사업·행사 홍보가 아닌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역할 및 정책방향 홍보
 - ※ 국내 동포 언론사,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동포지원단체, 동포밀집지역 지자체, 언론·SNS 등을 통한 홍보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대
 - 재외동포재단의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과 연계하여 국내 체류 동포 및 국민 대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 9. 방문취업(H-2) 동포 대상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동포지원단체, 관계부처
- 추진절차 : 홍보사례 발굴→언론 대응, 법무부-타부처 협업 교육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재외동포 정책의 이해를 위한 카드뉴스 홍보('25. 8.)

- 동포 자격통합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동포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 및 법무부 공식 SNS 소통채널 게시

☐ 동포 자격 통합 관련 국민 인식 조사('25. 10.)

- 문체부의 '25년 하반기 정책 여론조사 사업에 선정되어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의 단순노무 취업범위 확대 및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방안' 등 동포 자격 통합 실행 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실시

3. '26년도 추진계획

☐ 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동포 및 정책 홍보·언론대응

- 동포에 대한 '26. 세계인의 날 포상 추진으로, 모범적인 동포 사회통합 사례 홍보
- 주기적으로 우리부의 동포 정책을 동포체류지원센터와 공유하여 홍보 하도록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보도, 교육실시	2건	2건	관련 공문 등
'24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보도, 교육실시	2건	2건	관련 공문 등
'25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보도, 교육실시	2건	2건	관련 공문 등
'26	국내 체류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 추진	언론보도, 교육실시	2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당자	5급 김연우	이 메 일	kimyw32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동포의 취업과 거주, 교육,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동포지원 정책 수립

☐ 과제 내용

-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포의 취업 현황과 생활 실태, 자녀 교육실태, 동포 관련 정책 인식 및 향후 정주 계획 등 조사 시행
- 동포지원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외국국적 동포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국내거주동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25.8. ~ 25.1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국내거주동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25.8. ~ 25.12.)

- 동포 패널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동포 집중거주지역의 체류 행태 분석 및 지원단체 현황 파악

3. '26년도 추진계획

☐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실태조사 실시('26. 연중.)

○ '25년 실시한 「국내거주동포 실태 조사」 보완·추가 조사

☐ 소요예산 : 9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40	90	35.7%	
- 국 비	▪ 일반회계			140	90	35.7%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5	동 포 체 류 실태 조사	실태조사 실시	연구용역	1회	1회	결과보고서
'26	동 포 체 류 실태 조사	실태조사 실시	연구용역	1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219
담당자	5급 이웅희	이 메 일	woong7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 범위 확대 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포로서 기본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

☐ 과제 내용

- 한국어 능력 수준과 체류자격 연계
 - 한국어 등 기본소양을 갖춘 때만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을 허용하여 한국어 학습을 촉진, 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 유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기준 재정비 추진('25. 下)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에 따른 재외동포(F-4) 자격 1회 체류기간 차등 부여하여 한국어 학습 동기 유인 등 방안 마련

3. '26년도 추진계획

☐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한국어 능력에 따른 체류기간 차등 부여('26. 上)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 여부에 따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1회 체류기간 차등 부여 기준 마련 등 한국어 구사 능력 제고
-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게 영주 취득 요건 등 완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한국어 능력 강화	사회 통합 촉진	제도개선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한국어 능력 강화	사회 통합 촉진	제도개선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6	한국어 능력 강화	사회 통합 촉진	제도개선	100%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219
담당자	5급 이웅희	이 메 일	woong7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 범위 확대 이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미래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지원

☐ 과제 내용

- 일정 연령 미만 아동 동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고시국가 미취학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확대
- 동포 유학생 영주 신청요건 완화
 - 국내 유학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 입양한인 2세대 등 동포 입증방법 확대
 - 입양 동포 2세대 등 동포 입증이 곤란한 특수 사정의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동포입증 방법 관련 대안 제공
 - ※ 호적 기록 미비, 소실, 오기 등 동포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고시국가와 마찬가지로 동포를 증명할 수 있는 국가별 공적서류(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등)로 입증 방안 마련
- 동포 청소년 정체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여 동포 청소년의 한국어·한국문화 배움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차별 규정 폐지 관련 로드맵 마련('25. 下)

- 국적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던 차별 규정을 폐지하여 중국 동포와 고려인 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체류 및 미래 사회 인재 성장 지원

3. '26년도 추진계획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차별규정 폐지('26. 上)

- 국적별 추가요건 없는 재외동포(F-4) 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여 아동·청소년 동포의 안정적 체류 및 미래 사회 인재 성장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차세대 동포 국내체류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안정적 국내 체류	제도개선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5	차세대 동포 국내체류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안정적 국내 체류	제도개선	1건	1건	관련 공문 등
'26	차세대 동포 국내체류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안정적 국내 체류	제도개선	100%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219
담당자	5급 이윤희	이메일	woong7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동포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함으로써 동포가 우리 사회에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 내용

-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인 동포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 동포 청소년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동포 뿌리찾기 등 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도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사항 없음 ※ '26년 신규 과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연구용역(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연구)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2. '25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26년 신규 과제

3. '26년도 추진계획

- '26. 4분기 고려인 동포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개발
- '26. 4분기 동포 뿌리찾기 등 동포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 소요예산 : 총 9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	-	-	90	100	
- 국 비	▪ 일반회계				90	1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6	동포 청소년 정체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동포 청소년 정체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연구용역	1회		결과 보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1
담당자	5급 김연우	이 메 일	kimyw32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장기체류 예정인 동포가 한국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입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국 전 홍보
- 본국과의 생활·문화·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복수국적, 병역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 모국의 귀환 및 정착 유도

☐ 과제 내용

- 관계 기관(재외동포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국내·외 거주 재외동포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법·제도 설명 책자·리플릿 등 제작, 배포로 홍보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없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재외동포 대상 정착 지원 설명회 계획 → 관계기관(재외동포청 등) 협업
→ 설명회 개최

2. '25년도 추진 실적

- ☐ 해외 거주 재외동포 대상으로 재외동포(F-4) 정책 개선 계획 및 국적 취득 관련 설명회 개최(우즈베키스탄, '25. 9., 캐나다 '25.11.)

-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동포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한국 교육원, 세종학당 등)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거나, 사전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지 기관 방문('25.9.)
- 해외로 입양된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F-4) 비자, 국적회복 등 관련 설명회 참여('25.11. 재외동포청 주관)

3. '26년도 추진계획

☐ 재외동포 대상 정착 지원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연내)

-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동포가 입국 전부터 한국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습득하고 입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등 홍보 실시

☐ 소요예산 : 미정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동포관련 제도 홍보 강화	동포관련 제도 홍보	설명회 개최	1회	1회	관련 공문 등
'26	동포관련 제도 홍보 강화	동포관련 제도 홍보	설명회 개최	1회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219
담당자	5급 이웅희	이 메 일	woong7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 또한 미비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권익증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고충 신고 창구 운영

☐ 과제 내용

- 권익증진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 권익증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인권 침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허가 등을 협의회에서 심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권리구제 보장
 - 지방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고충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상설화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 전담 조직 신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이민자권의 보호팀을 신설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체계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6년 신규 과제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련 법령, 지침 개정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26년 신규 과제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추진계획

☐ 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및 이민자권익보호팀 신설 추진

○ ('26. 上) 「출입국관리법」에 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 ('26. 上) 이민자권익보호팀 신설 관련 관계부처 협의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6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법제화	외국인 인권보호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제도상 공백 해소	법령,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51
담당자	5급 천승재	이메일	hw00431@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출국대기실은 단기 출국대기자를 위한 시설로서 소송제기 등 장기 대기자의 인도적 처우에는 한계가 있어 공항 보안구역 밖에 장기 대기자를 위한 별도의 출국대기소 설치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과제 내용

- 출국대기소 법적 근거 마련
- 출국대기소 설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12. 출국대기소 근거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1대 국회)
- '23. 5.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1소위 회부
- '24. 5.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한 법률개정안 폐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원발의 추진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 → 출국대기소 신설

2. '25년도 추진실적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의원발의 추진('25. 下.)

3. '26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심사 대응 및 하위법령 제정 준비

☐ 소요예산 : 247억원('27년~, 소요예산)

○ '27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인천공항 출국대기소 신축사업 반영 추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개선 결과실적	연 1회	1	보고 문서
'24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개선 결과실적	연 1건	2	보고 문서
'25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실적	개선 결과실적	연 1건	1	보고 문서
'26	출국대기소 신축사업 추진	출국대기소 신축사업 예산 반영	출국대기소 신축사업 예산 반영 여부	100%		예산 반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화번호	02-2110-4037
담당자	6급 오래균	이 메 일	lakyunoh@korea.kr

4-1-2-2**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25년 종료]****1. 과제의 개요**☐ 목적

- 보호시설을 개방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이동권과 소통권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확대

☐ 과제 내용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시설로 전환·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화성외국인보호소 남성보호동 개방형 시설로 전환·운영(4/4분기)

- ’25년 7월 시설 공사 개시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

3. ’26년도 추진계획(해당사항 없음)☐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 소요예산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 만원)		18,707	1,764	652	-	△ 100	
- 국 비	▪ 일반회계	18,707	1,764	652	-	△ 1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1건	2건	결과회신
'24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1건	1건	결과회신
'25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및 운영	1건	1건	결과회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9
담당자	5급 최연준	이 메 일	neojun311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기간의 상한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대해 '23. 3.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과제 내용

-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신설 및 독립적 보호 통제 기구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4. 1.)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안
- ('24. 10.)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5. 2. 27.) 국회 본회의 통과
- ('25. 3. 18.) 공포 ('25. 6. 1. 시행)
- ('25. 6. 1.) 외국인보호위원회 발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 →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안 시행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발족

2. '25년도 추진 실적

○ 출입국관리법 개정 공포

- 보호기간 상한 도입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3. '26년도 추진계획(해당사항 없음)

☐ 해당과제 종료사유 : 성과목표 달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법령 정비를 통한 위헌성 해소	출입국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1건	1건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9
담당자	5급 최연준	이 메 일	neojun311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3.3)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인 보호의 적법·타당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운영

☐ 과제 내용

- 신설된 외국인보호위원회 제도 안착
 -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라 변경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훈령 제정,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사범·보호 담당자 간담회 개최 등
- 독립적·전문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호외국인 인권 보장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3.)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 ('24. 10.)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5. 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5. 6.) 외국인보호위원회 발족 및 업무 개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외국인보호위원회
- 추진절차 : 보호 심사청구 등 접수 → 사실조사 → 분과위원회 사전 심의 →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
- ('25. 5.)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 ('25. 6.) 외국인보호위원회 발족 및 업무 개시
- ※ '25.12.31.기준, 외국인보호위원회(28회) 및 분과위원회(26회) 등 총 54회 개최하여 보호기간 연장 등 안건 1,437건 심의·의결

3. '26년도 추진계획

- ☐ 외국인보호위원회 제도 안착
 -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련 훈령 제정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사범·보호 담당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위원회와 일선기관 간 행정 협조사향 조율
- ☐ 보호외국인 인권 보장
 - 외국인보호위원회 연중 지속 개최로, 보호기간 장기화 방지 및 보호 외국인의 권익 구제
- ☐ 소요예산 : 총 1,83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830	100	
- 국 비	▪ 일반회계				1,830	1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6	독립적·전문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 도입 및 운영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및 제도 안착	외국인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횟수	월 1회 이상		관련 공문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8036-9314
담당자	7급 이흥종	이 메 일	leehj21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여 아동의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관리

☐ 과제 내용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의무화 제도 도입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관계부처 논의 등

- ('18. 1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 ('18. 12. ~ '19. 7.)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이행추진자문단 구성, 운영
- ('20. 6. ~ 8.) 연구용역을 통한 해외사례 수집(태국, 베트남)
- ('21. 2.) 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안건 논의
- ('21. 3.) 제도 도입 관련 실무 회의(법무부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1. 4.)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안건 논의
- ('21. 4. ~ 10.) 법원행정처, 관련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의견 수렴

○ 법률안 발의

- ('22. 6. 28.)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권인숙 의원)
- ('23. 6. 15.)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소병철 의원)
 - ※ '24. 5. 30.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소병철·권인숙 의원안 폐기
- ('24. 10. 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김남희 의원)
- ('24. 12. 1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서미화 의원)
- ('25. 2. 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강일·주호영 의원)
- ('25. 7.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임미애 의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대법원,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률안 통과 → 제도 세부사항 마련 → 시스템 등 구축 → 제도 시행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주관, 외국인정책과 협조

2. '25년도 추진 실적

□ 법적 기반 마련

○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재발의 논의 협조

-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건(의안번호 2206753, 2208000)
 - 취지공감, 일부 수정 의견*
 -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게 출생등록사무 처리 권한 위임 확대 등
- ('25. 2.)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 ('25.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예비검토 참석 및 의견제시*

* 종전 법안 검토의견 내용과 동일(취지공감, 일부 수정)

- ('25. 8.)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3, 2208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직접 회부

☐ 소요예산 : 비예산

3. '26년도 추진계획

☐ 22대 국회 계류 중인 외국인 아동출생등록 관련 법안 논의 협조

☐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건(의안번호 2214673, 2214674)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제도 도입 관련 국회 논의 지원	1회	1회	검토안(보고서), 회의록 등 논의실적
'24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제도 도입 관련 국회 논의 지원	1회	1회	검토안(보고서), 회의록 등 논의실적
'25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재발의 법률안 논의 협조	1회	2회	검토안(보고서), 회의록 등 논의실적
'26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제도 도입	재발의 법률안 논의 협조	1회		검토안(보고서), 회의록 등 논의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3648, 4110
담당자	5급 박승혁, 6급 김인우	이 메 일	tonyp1903@korea.kr kiw120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활용을 통한 신속·정확한 피해자 발견과 보호

☐ 과제 내용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

※ 업무처리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인신매매 방지 교육, 식별지표 활용 및 교육실적 제출 등을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

- 식별지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직무 관련 공무원 실무교육 지속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4.) 여가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23. 1.)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 ('23. 4.) 「제1차('23~'27)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이하 “제1차 종합계획”)」 수립·시행(여성가족부 주관)
- ('23. 9.) 「제1차 종합계획」 관련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시행(여성가족부 주관)
- ('23. 10.)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수립·시행(자체 지침)
- ('24. 5.) 「제1차 종합계획」 관련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시행(여성가족부 주관)
- ('25. 3.). 「제1차 종합계획」 관련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시행(여성가족부 주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소속기관)

○ 추진절차 :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요청(여성가족부)
→ 종합(시행)계획 수립(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식별지표 활용(소속기관)

2. '25년도 추진 실적

☐ 소속 기관별 자체 교육 ('25. 1. ~ 12.)

○ 여성가족부 제작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동영상 교재 활용,
소속 기관별 체류·단속·사범·보호담당 전 직원 대상 분기별 직장교육 실시

☐ 소속기관 대상 간담회 ('25. 6., '25. 12.)

○ 전국 권역별 소속 기관*의 인신매매 방지 업무수행 실태 점검, 관리자
및 체류·단속·사범·보호 실무 총괄 담당 대상 의견수렴 등 실시

* (6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12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 '26년도 추진계획

☐ 인신매매 방지 자체 직원교육(분기 1회)

○ 인신매매 등 방지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인신매매방지법」에 규정된
매년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소속 기관별 분기 1회 실시

☐ 소속기관 대상 간담회(반기 1회)

○ 반기 단위 권역별* 기관 방문을 통한 지표 활용 등 업무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 등

* 경인1권역(서울·경기도 청 단위), 경인2권역(서울·경기·강원도 사무소·보호소),
중부권(충청도·경상북도), 남부권(전라도·경상남도·제주도)

☐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개정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국제기구 권고 사항 등을 반영, 지침 최신화를 통한 업무 활용성 강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연 4회 이상	5회	관련 공문
		지침 제정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처리 지침」 제정	1건	1건	관련 공문
'24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연 4회 이상	4회	관련 공문
		식별지표 번역	번역 외국어 개수	3건	3건	번역 결과물
'25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소속기관별 분기 1회	4회	관련 공문
		소속기관 간담회	지표 활용현황 등 업무추진 점검 실적	반기 1회 (반기 당 2개 권역)	2회	관련 공문
'26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직원교육	인신매매 방지 등 관련 직원교육 실적	소속기관별 분기 1회		관련 공문
		소속기관 간담회	지표 활용현황 등 업무추진 점검 실적	반기 1회 (반기 당 2개 권역)		관련 공문
		지침 개정	지침 개정	1회		관련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당자	6급 석봉준	이 메 일	bj85seok@gmail.com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평가 및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등을 통해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인정 심사제도 구축

☐ 과제 내용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추진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 매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연 6회 이상 교육 실시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 '21년 ~ 현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운영(연 1회)

※ '25. 12월 기준 393명(36개 언어) 활동 중

<연도별 인증 현황>

연도	2022	2023	2024	2025
통역인인증	160명(30개 언어)	148명(25개 언어)	109명(25개 언어)	147명(29개 언어)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 '20.~현재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연 4회)

<연도별 난민전문통역인 통역 평가 현황>

(단위: 건)

연도	2022	2023	2024	2025
통역평가	216건	197건	196건	197

- '22년 ~ 현재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 실시(연 2회)

<연도별 보수교육 참여 현황>

(단위: 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교육참여 인원	상반기		상반기	117	상반기	94	상반기	72
	하반기	30	하반기	83	하반기	155	하반기	202
	계	30	계	200	계	249	계	272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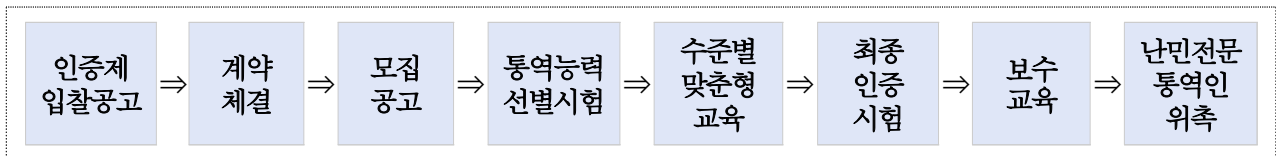
○ 추진주체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추진절차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계획 등 수립, 사무소별 참석자 취합 → 교육 실시
→ 참여자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교육 품질 개선

※ 법무연수원 난민실무 교육과정 관련, 강사 및 교육 콘텐츠 선정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2. '25년도 추진 실적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연간 6회 이상 국제기구 관계자·대학교수·법률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 교육과정 주기적으로 운영

-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점기관 난민전담공무원 자체교육 실시(2회)

○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난민정책 및 난민법」 과정 콘텐츠 제작

-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4. 1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 반영 등

□ 난민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외부 전문가 특강과 난민전담공무원의 심사기법 연구·토의 등을 통해 난민업무 전문성 제고

- (외부 전문가 특강) UNHCR 고위직(최고대표보)이 최초로 참여(온라인)하여 국제 난민 보호기준과 사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난민소송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강의

- (발표 및 토의) 서울청 등 7개 기관 난민전담공무원이 심사기법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 외부 전문기관의 통역능력 선별시험, 맞춤형 교육, 최종 인증평가, 보수교육 등 인증 절차를 통과한 민간인 147명(29개 언어)을 난민전문 통역인으로 위촉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

○ 외부전문가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능력을 평가하여 소속기관 등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 실시

3. '26년도 추진계획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연중)

○ 난민 관련 법·제도 등 이론 교육과 실제 심사 사례를 기반으로 조별 토론 및 발표형 실습 진행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연중)

- 통역인 인력풀(Pool) 확대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지속 추진 및 홍보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실시(연중)

- 외부 전문가를 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공유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난민통역 품질 제고

☐ 소요예산 : 총 21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214	214	214	217	1.4	
- 국 비	▪ 일반회계	214	214	214	217	1.4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 교육 및 교재 발간 등 18,600,000원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 난민통역인증제 79,600,000원
- 난민통역인 교육 78,440,000원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 평가

- 난민통역평가 4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인증제 사업 및 교육실시 등	10건	10건	보고서 등
'24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인증제 사업 및 교육실시 등	10건	10건	보고서 등
'25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인증제 사업 및 교육실시 등	10건	10건	보고서 등
'26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 역량 강화	인증제 사업 및 교육실시 등	10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61, 4178
담당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입국향 난민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난민은 적극적으로 난민심사에 회부하는 한편, 남용적 난민신청 방지

☐ 과제 내용

- 출입국향 난민심사 담당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출입국향 난민심사 절차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 7월, 출입국향 난민심사 제도 도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 출입국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 '25년도 추진 실적

☐ 출입국향 난민심사 절차 개선(출입국향 난민신청자 절차적 권리 보장 및 강화)

○ 출입국향 난민신청자 소지품 확인 절차 개선

- 출입국향 난민신청자 개인 소지품 정보 확인·열람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 확인·열람 시 신청자의 '동의'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며, 동의할 경우 '소지품 정보 확인 및 열람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난민신청자 대기실 입·퇴실 절차 개선

- 출입국향 난민신청자가 대기실 입·퇴실하는 경우 여권 등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입·퇴실 관리 대장'에 기재

- 대기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난민신청자 대기실 이용수칙' 안내 및 교부

☐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 난민 심사 회부 여부 결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배포

3. '26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항 난민심사 모니터링 강화

- 출입국항 난민심사 회부율, 소송 수행 상황 등을 분기별 점검

☐ 출입국항 난민심사 담당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 면담 등 심사 진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참고 자료, 국내·외 판례 분석 자료 등을 작성하여 배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입국항 난민심사 체계 구축	자료 발간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	1건	2건	보고서
'26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입국항 난민심사 체계 구축	자료 발간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	1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61
담당자	5급 최민수	이메일	choims9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의신청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신속하게 보호

☐ 과제 내용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제고
 -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문자 알림 확대,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확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등
-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 제고
 - UNHCR(한국대표부) 공동 난민조사관·국가정황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 발간, 난민연구모임 개최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3. 7. 난민위원회 출범(2013. 7. 1.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
- 2020. 2. 난민위원회 심의 지원 등 전담부서 '난민심의과' 신설
- 2022. 1.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신청 제도 도입(난민법 시행규칙)
- 2022. 10.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정·공개
- 2023. 2.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

※ 난민위원 제척·회피 근거 신설(제12조의 2), 난민조사관의 직급·경력 및 교육 이수 의무 등 자격 요건 신설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시행계획 수립 → 과제 이행(난민위원회 개최, 교육, 제도 개선 등) → 결과 보고

2. '25년도 추진 실적

☐ 난민위원회 개최

○ 난민위원회(9회), 분과위원회(32회) 등 총 41회 개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 3,434건 심의(연중)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문자 알림 확대('25. 9., 기존 6개 → 21개 언어)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 주제별 난민심사 매뉴얼(신빙성·위험 평가 기반 사실확정 편) 발간('25. 11.)

○ UNHCR(한국대표부) 공동 난민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5.1./'25.7.)

○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개최(3회, 연중)

3. '26년도 추진계획

☐ 난민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심의·의결을 위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개최(연중)

☐ 이의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확대

○ 추가면접, 서면질의 등을 통한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기회 제공 확대(연중)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난민조사관 필수교육 이수 및 연구모임 개최(연중), UNHCR(한국대표부) 공동 난민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연중) 등

☐ 주제별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제정

○ 군복무·징집 사유, 현지 체재 중 난민 관련 해외 심사 사례 등(연중)

☐ 소요예산 : 총 42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38	38	38	42	10.5	
- 국 비	▪ 일반회계	38	38	38	42	10.5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난민위원회 참석비 37,800,000원

○ 난민위원회 운영비 4,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심의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 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5건	법령, 규칙, 보고서 등
'24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심의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 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5건	법령, 규칙, 보고서 등
'25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심의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 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5건	법령, 규칙, 보고서 등
'26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보장	난민위원회 심의 인프라 구축	이의신청 심의 의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실적	5건	-	법령, 규칙,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전화번호	02-2110-4156
담당자	5급 조경희	이 메 일	chokh30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출신국 다변화(현 약 140개국)에 대응하여 난민인정 심사 중 진술의 신빙성 및 박해가능성 평가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정황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

*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안보 상황, 정치·사회적 상황 및 법체계, 주요사건 등에 관한 정보로 난민심사 시 핵심 근거자료

☐ 과제 내용

-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 국가정황정보 전문 분석 자료집 발간
 -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국내/국외) 운영
 - 1차 심사기관 난민심사 담당자 대상 국가정황정보 순회 교육 등
 -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번역 사업 등
- 국가정황정보 관리·활용 체계 고도화
 -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1. 7.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 채용(5명, 외국어·지역학 등 전문가)
- 2024. 9.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 추가 채용(4명, 외국어·지역학 등 전문가)
- 2025. 12.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차년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시행계획 수립 → 과제 이행(난민위원회 개최, 교육, 제도 개선 등) → 결과 보고

2. '25년도 추진 실적

☐ 국가정황정보 전문 분석 자료집 등 발간

○ 주제별 국가보고서 5건(파키스탄, 르완다, 시리아, 캄보디아 등) 발간(연중), 일일·주간·월간 난민동향 분석(연중)

☐ 국가정황정보 순회교육 실시

○ 1차 심사기관 난민담당자 대상, 국가정황정보 조사·활용 기법 교육('25. 3.)

☐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번역·활용

○ 공신력 있는 해외 주요 국가·기관 등에서 발간한 해외 국가정황정보 보고서(35건)를 국문으로 번역·활용('25. 12.)

☐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차년도)

○ 국가정황정보의 효율적 수집·활용을 위해 웹크롤링, 자동번역 기능 도입 및 제반 업무를 통합 DB로 전산화('25. 12.)

3. '26년도 추진계획

☐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년도)

○ 시스템 안정화 도모 및 오류 개선 등 고도화 추진('26. 12.)

☐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UNHCR 공동 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6. 12.)

☐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달기관 교류·협력 강화

○ EU, 호주 등 주요 난민 수용 국가의 국가정황정보 기관과 교류·협력 추진(연중)

☐ 소요예산 : 총 1,92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92	210	3,058	1,925	△37.1	
- 국 비	▪ 일반회계	192	210	3,058	1,925	△37.1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723,000,000원(2차년도)

○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감수비 192,200,000원

○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달기관 업무 협의 9,429,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5건	보고서 등
'24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5건	보고서 등
'25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5건	보고서 등
'26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가정황정보 조사 체계 구축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5건	-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전화번호	02-2110-4031
담당자	5급 장일권	이 메 일	chang8@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인정자의 국내 정착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립과 통합될 수 있도록 난민 처우정책 개발

☐ 과제 내용

- 난민인정자의 체류 실태, 자립정도, 사회통합도 등의 설문 항목 및 지표 개발
- 거주 지역별 표본 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조사 결과에 기반한 정책제언 및 사회통합 수준 분석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24. 12.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등 경제적 자립도 분석·보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난민인정자 국내 정착 실태 파악

- 보건복지부와 난민인정자 사회복지 수급 현황을 현행화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여 관련 자료 공유 및 연계 절차 추진 중

3. '26년도 추진계획

☐ 난민인정자 체류실태 패널조사

○ '26. 2월 입찰공고 및 연구수행기관 선정

○ '26. 6월 최종 연구결과물 산출 및 평가

☐ 소요예산 : 총 5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0	40	0	55	0.0	
- 국 비	▪ 일반회계	0	40	0	55	100	신규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정책연구용역

- 인건비, 경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 55,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출근거
'24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난민정책 추진	국내 정착도 파악	연구 결과물	1건	1건	보고서 등
'25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난민정책 추진	국내 정착도 파악	연구 결과물	1건	1건	보고서 등
'26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난민정책 추진	국내 정착도 파악	연구 결과물	1건	-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당자	5급 김형준	이 메 일	june172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재정착난민 등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등과 현안 공유, 협업 방안 마련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난민처우협의회(실무협의체 포함) 개최
- 난민인정자 등의 교육 보장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4. ~ '22. 5. 매년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 '23. 7.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 '24. 6. 실무협의체 개최
- '25. 난민지원단체와의 간담회(인도적체류자 등 관련),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추진절차 : 계획 수립, 부처별 의견 취합 → 행사 개최

2. '25년도 추진 실적

☐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

- 난민정책 홍보를 통한 난민 인식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난민소식지' 발간·배포(분기별)

- 재정착난민의 경북 산불 피해 발생 관련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기여('25. 4.)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계비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 관련 난민업무 지침 개정('25. 8.)

☐ 난민지원 체계 구축

- 인천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 협업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학령기 아동의 공교육 지원('25. 4.)
 - ※ 경인교육대학교 한국어 교육 참여(Pre-school 과정, 3개월)
- 난민 처우개선을 위해 ‘난민처우협의회’ 개최('25. 7.)
- 인도적체류자 관련 ‘난민지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25. 9.)

3. '26년도 추진 계획

- 난민인정자의 영주허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1분기)
- 난민인정자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난민법령 개정(2분기)
- 재정착난민 멘토 간담회 개최(2분기)
- 난민자문단 구성(2분기)
- 난민처우협의회 개최(3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난민처우 개선	난민처우 개선	처우개선 등 추진 실적	2건	3건	보고서 등
'25	난민처우 개선	난민처우 개선	처우개선 등 추진 실적	2건	2건	보고서 등
'26	난민처우 개선	난민처우 개선	처우개선 등 추진 실적	2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당자	5급 김형준	이 메 일	june172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대한민국이 글로벌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재정착 난민제도를 운영

☐ 과제 내용

- (재정착난민 제도)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제공
 - 수용 대상과 규모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계획 확정
 - 서류심사, 현지 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선발대상 결정
 - 재정착난민이 입국하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초기 정착 지원
 - 재정착난민이 지역사회 정착 후에도 정착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 (학생난민 프로그램)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 후보자 선정 시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 진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재정착난민 제도
 - '14. 10.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5. 4.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1차 시범사업('15년~'17년)으로 총 86명 수용
 - '18. 7.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2차 시범사업('18년~'19년)으로 총 80명 수용

- '20. 7.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 '21. 3.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 '22. 3.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 '20년, '21년 연도별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재정착 사업 지연
▪ 엔데믹 이후 '22년 67명, '23년 10명 입국

- '24. 5.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23년 정규사업으로 전환 후 '24년 7명 입국
- '25. 4.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 '25년 56명 입국

○ 학생난민 프로그램

- '22. 6. 「학생난민 민·관 후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2. 8.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 최종 선발 대상자 확정
- '22. 7.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22. 12. 최종 대상자 입국
- '23. 7.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24. 8. 난민 학력인증 관련 교육부 접촉
- '25. 학생난민 유치 관련 교육부와 지속 논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2. '25년도 추진 실적

☐ '25년 해외난민 수용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되었던 2개년 사업 동시 추진('24년, '25년)

☐ 재정착난민 국내 정착 지원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선발된 재정착난민 1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 후, 생활 멘토링 사례관리 등 정착 지원 지속

○ 지역사회 정착 후 가족별 멘토링 및 사례관리 지속

○ '25. 12월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학생난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접촉

○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면담 등 진행

3. '26년도 추진계획

☐ 재정착난민 수용계획 수립 및 추진 (1분기)

○ 수용 대상, 규모, 사업국 등 '26년도 수용계획 수립

☐ '26년도 재정착난민 수용사업 진행 (3~4분기)

○ '26년 수용계획 대상 서류심사, 신원 조회, 현지 면접, 건강검진 등 수용 절차 진행

☐ 재정착난민 국내 정착지원 (3~4분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초기 정착지원

○ 지역사회 정착 후 가족별 멘토링 및 사례관리 지속

☐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1분기)

○ 법무부-교육부-유엔난민기구,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 학생난민 선발 및 국내 입국지원 (3분기)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난민 선발 절차 진행

☐ 소요예산 : 총 33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463	420	338	338	0.0	
- 국 비	▪ 일반회계	463	420	338	338	-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재정착난민 국내정착교육비 59,576,000원

○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153,600,000원

○ 재정착난민 수용 위탁 100,000,000원

○ 재정착난민 선발 국외여비 25,791,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추진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1건	보고서
'24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1건	보고서
'25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1건	보고서
'26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수용 계획 수립	1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당자	5급 김형준	이 메 일	june172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

☐ 과제 내용

-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의체 참여
 -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 관련 논의, 재정 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Working Group on Resettlement), 재정착·보충적 수용경로에 대한 협의(CRCP, Consultations on Resettlement and Complementary Pathways), 글로벌난민포럼(GRF, Global Refugee Forum) 등 난민 관련 국제회의 및 협의체 등
- UNHCR, IOM 등 난민관련 국제기구와 교류 및 협력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과제 추진
- '23.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UNHCR, IOM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2. '25년도 추진 실적

☐ 난민 관련 국제회의 등 참석

-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참석 (2월)

○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참석 (4월)

○ 제76차 UNHCR 집행이사회 참석 (10월)

☐ UNHCR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 유엔난민기구 아·태지역본부 보호국장 면담 (2월)

-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보호국장 면담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면담 (8월)

-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면담

○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예방 (10월)

- 법무부 장관과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면담

3. '26년도 추진계획

☐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상시)

○ UNHCR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교류 지속

- 난민심사관 전문교육 지원, 국가정황정보 수시 제공을 위한 교류

- 난민제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각국 정부와의 협력 지속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난민 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2건	보고서
'24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2건	보고서
'25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2건	보고서
'26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국제회의 및 전문교육 참여	국제회의 등 참여실적(건)	2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78
담당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위기, 지방소멸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 과제 내용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검토
 - 인구감소, 지방소멸, 인력난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전담조직 신설 검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11.) 법무부 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 (~'23. 12.)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청 신설 방안 수립·발표
- ('24. 2.)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원발의 ※'24. 5. 임기만료 자동 폐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방안 검토 → 관계부처 협의

2. '25년도 추진 실적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방안 검토

- (공론화) 전담조직 관련 각계 전문가 토론회 실시

3. '26년도 추진계획

☐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방안 검토

○ ('26. 年中) 정부조직 개편 동향을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방안 검토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1건	1건	법안 발의
'25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방안 검토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관련 검토	1건	1건	보고서
'26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방안 검토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관련 공론화(토론회 등)	1건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218
담당자	5급 노종인	이 메 일	happymap21@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비한 새로운 이민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제시
- 외국인정책 관련 체계적·효율적 관리(중복, 사각의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증진 및 정책 조정 기능 마련

☐ 과제 내용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기본법’으로 개정
- 부처별 외국인정책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 논의 및 연석회의 시행 등 타 위원회와 협력 강화

*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가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23.12.) 정책연구용역 실시
 -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이민법제 개편방안」, 「이민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능 강화방안」
- (‘24.6.) 외국인정책 관련 심의기구 일원화 방안 발표
 - 외국인 관련 위원회 일원화 부처 합의안*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 현행 3개 위원회(외국인정책위·다문화가족정책위·외국인력정책위)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외국인·다문화가족·외국인력) 및 외국인정책협의체(의장:법무부장관) 설치

○ ('24.12.) 이민정책 포럼 개최

- 새로운 이민정책 기본방향으로서 지역 이민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등 법제화 추진 방향 모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무조정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 추진절차 : 국조실 주관 회의 참석 및 위원회 통합(안) 마련 → 관계 부처 의견 조정 → 외국인 심의기구 일원화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국조실 주관 외국인 심의기구 일원화 관련 실무회의 참석('25.2.)

○ 외국인 관련 위원회 일원화 합의안에 대해 국조실에서 마련한 관련 법령* 조정안 논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3. '26년도 추진계획

□ 국조실 주관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참석 및 대응

○ 외국인정책 관련 심의기구 일원화 관련 관계부처(고용부·여가부)에서 마련한 법령 개정(안) 대응

○ 국조실·법무부·여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 지속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면 개정 또는 '(가칭)이민정책 기본법' 제정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개정 등 정비	연구용역 실적	2	2	연구보고서
'24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개정 등 정비	관련 회의 참석 및 포럼 개최	2	2	결과보고서
'25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개정 등 정비	관계기관 회의 참석 등 논의	2	1	결과보고서
'26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법령 정비 등 공론화	관련 회의 등 참석 등 논의	2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6 / 4113
담당자	6급 명보경, 6급 오명수	이 메 일	audqhrud@korea.kr kyebaeg@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심의·조정
- 외국인정책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외국인정책의 기본원칙·방향·과제에 대한 정례적 논의

☐ 과제 내용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 외국인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 이민자 비자, 체류, 쿼터, 인력수급 등 외국인 관련 현안 논의 및 지자체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중앙행정기관(19개), 광역자치단체(17개)
- 추진절차 : 외국인정책 관련 안건 수요조사 → 관계부처 등 실무자회의 개최 → 관계부처 대상 심의안건 의견 조회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조정

2. '25년도 추진 실적

☐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대면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5. 3. 5.(수) 14:00, 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 : 주재권한대행(기재부장관), 고용부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18명

○ 내용 :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심의·확정,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등 3건 보고

□ 제35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및 제36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일자 : '25.1.13. ~ 1.17.(서면회의) / '25.2.13. ~ 2.18.(서면회의)

○ 내용 :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등 3건 보고

□ 제37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5. 12. 10.(수) 14: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주재법무부차관,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26명

○ 내용 :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등 3건 심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등 2건 보고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개최일자	분과위원회	주요내용	비고
'25.3.4.	국경·체류·안전	'25년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 시행방향 및 자진출국 유도 방안 논의	
'25.8.7.	거주·통합·국적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로 통합 실행방안, 동포 국적취득 우대방안 검토 등	
'25.9.10.	국경·체류·안전	'25년 제1차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 결과 평가 및 제2차 정부합동 단속 시행 방안 등	

□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신설('25.12.)

○ 이민 2세대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신설

* 법무부·교육부·성평등부·복지부·문체부·행안부·고용부·동포청 등 8개 부처 참여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연중)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실무분과위원회 개최(연중)

-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분과위원회(5개)* 개최

* 전문인력 유치지원, 동포·난민·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협력, 이민 2세대 성장지원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6	6	결과보고서
'24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6	10	결과보고서
'25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6	7	결과보고서
'26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확대	위원회 개최 횟수	6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3
담당자	6급 오명수	이메일	kyebaeg@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 마련

☐ 과제 내용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추가 및 배정인원 결정 등 안정적인 계절근로 인력 공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5.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시행
- 2017.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식 시행
- 2022. 6.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시행
 - ※ 5개 시·군, 5개소 선정,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190명
- 2023. 1. 공공형 계절근로 정식운영
 - ※ 19개 시·군, 19개소 선정,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990명
- 2024. 4. 관계부처 협업 '농·어업 외국인력지원TF'발족
 - ※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로 구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관계부처 간 협의 → 계절근로 인력 선발·도입·관리 등 운영

2. '25년도 추진 실적

- ☐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 지속 운영('24.4.~'25.12.)
- ☐ 계절근로자 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강화
 - 계절근로자 한국생활 및 농작업 안내 가이드북 농식품부 합동 제작·배포('25.1.)
 - 농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및 안전계약서 마련 및 지침 반영('25.9.)
- ☐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무부-농식품부 합동 워크숍 개최('25.8.)
- ☐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시범 도입('25.9.)
 -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에서 농작업 대행이 가능하도록 계절근로 허용

3. '26년도 추진계획

- ☐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 연장을 기반으로 ‘지역채류지원과’ 신설 ('26)
- ☐ 국정과제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제도 개선 지속 ('26)
 -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계절근로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5회	10회	관련문서 등
'24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관계부처 협업TF 구성	1회	1회	관련문서 등
'25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관계부처 협업TF 운영	1회	1회	관련문서 등
'26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공동 과제 발굴	2회		관련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전화번호	02-2110-4087
담당자	5급 박정석	이 메 일	sami903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신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다문화사회 전문가* 를 양성하여 고품질 이민행정 교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을 취득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 과제 내용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 양성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연 2회)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연 1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2. 1. 출입국관리법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 신설
- ‘13. 1. 같은 법 시행규칙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 등 조항 신설
- ‘14. 11.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마련
- ‘20.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개정

- '21. 9.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4.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 '24. 9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 '24. 12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기관
- 추진절차 : 교육수요 파악 → 교육과정 개설 및 실시 → 결과 보고

2. '25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양성 교육 실시

-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25. 3 / '25. 9.)
- ※ '25년 신규양성 교육 참여자 : 1,245명

☐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25. 12.)

3. '26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사회 전문가 신규양성 교육 실시

-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26. 3 / '26. 9.)

☐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 중인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26. 11.)

☐ 소요예산 : 총113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13	113	113	113	0.0	
- 국 비	▪ 일반회계	113	113	113	113	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강사료 103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전 문 인 력 양 성	전 문 인 력 역 량 강 화	교 육 실 시 횟 수	3 회	3 회	계 획 결 과 보 고
'24	전 문 인 력 양 성	전 문 인 력 역 량 강 화	교 육 실 시 횟 수	3 회	3 회	계 획 결 과 보 고
'25	전 문 인 력 양 성	전 문 인 력 역 량 강 화	교 육 실 시 횟 수	3 회	3 회	계 획 결 과 보 고
'26	전 문 인 력 양 성	전 문 인 력 역 량 강 화	교 육 실 시 횟 수	3 회		계 획 결 과 보 고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 당 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등을 통한 소수언어* 구사자 인력풀(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통해 위촉된 통역 인력풀 중 인원수가 3명 이하인 언어

☐ 과제 내용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추진을 통한 소수언어 통역인 확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년~현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을 통한 소수언어 통역인 확보
- ‘25. 9월 통역 언어풀(pool) 36개 언어(393명) 중 통역인이 3명 이하인 언어는 20개(35명)

<소수언어 통역인 현황>

(단위: 명)

연도	언어(통역인)	언어별 상세 현황
2022	소수언어 통역인 18개 언어(36명) 위촉	- 우르드어 3, 타갈로그어 3, 싱할라어 3, 인도네시아어 3, 터키어 3, 힌디어 3, 포르투갈어 2, 말레이어 2, 스와힐리어 2, 카자흐어 2, 타밀어 2, 페르시아어 2, 미얀마어 2, 키르기즈어 1, 말라얄람어 1, 친어 1, 캄보디아어 1, 트위어 1 (스페인어 2, 일본어 1 제외)
2023	3개 언어(3명) 신규 위촉	- 광둥어 1, 다리어 1, 편자브어 1
2025	3개 언어(3명) 신규 위촉	- 아제르바이잔어 1, 암하라어 1, 타밀어 1

○ '23. 5.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법무부훈령) 개정

- '22. 8월 통역풀 확대를 위해 통역의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통역료를 인상하였으며, 이를 통역인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훈령에 반영

※ (난민전문통역인) 30분 당 2만 5천원 → 3만원으로 인상

※ (난민전문통역인이 없는 소수언어) 30분 당 2만 5천원 → 3만원으로 인상

○ '24. 5. 난민심사 화상면접 정식 운영

- '23. 12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을 도입, '24. 5월부터 정식 운영을 통해 지방 거점기관의 통역인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추진절차

- 소수언어 구사자 확충을 위해 해당 언어 난민통역인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인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대상으로 포섭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 절차를 통과한 147명(29개 언어)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어, 암하라어, 타밀어 등 소수언어 구사자 3명을 신규 확보

□ 난민심사 화상면접 보호소 등 확대 시행

- '25. 4월 화상면접을 보호소 등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통역인의 국가 중요·보안 시설 출입에 대한 부담 완화

3. '26년도 추진계획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연중)

○ 통역 인력풀(Pool) 확대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홍보 강화 및 통역인 처우 개선방안 마련

○ 통역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통역인 교육 및 평가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431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예산에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통역인 확대	인증제 사업 추진	1건	1건	보고서 등
'24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통역인 확대	인증제 사업 추진	1건	1건	보고서 등
'25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통역인 확대	인증제 사업 추진	1건	1건	보고서 등
'26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통역인 확대	인증제 사업 추진	1건		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61
담당자	5급 최민수	이 메 일	choims9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을 통한 직무역량 제고 및 정책환경 대응력 강화

☐ 과제 내용

- 출입국관리직 전문 시험과목으로 「이민법(학)」 도입

※ '76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시 「국제법(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선정된 후 상당한 시간 경과 및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8. 12. ~ '19. 11.)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협의
- ('19. 12.) 「출입국관리직 전문시험 도입에 관한 연구」 실시
- ('21. 10. ~ '21. 12.) 출입국관리직 전문 시험과목 도입에 관한 '국민여론 수렴',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공청회'
- ('22. 4. ~ '22. 12.)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 전문과목 도입을 위한 법령·정책 연구」
- ('23. 12.)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목 변경 권한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부여
- ('24. 5.) 「이민법(개론)」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추가(안) 마련

※ 인사혁신처, 「이민법(개론)」의 선택과목 추가 확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24. 9.)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인사혁신처, 관계 기관(전문가)

2. '25년도 추진 실적

☐ 이민법 수험서 감수('25. 6.)

○ 한국이민재단에서 발행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시험 대비용 수험서 「이민법 예상출제 문제집」 문항 감수

※ (감수자) '25년 출입국관리직 5급 시험 합격자 8명

☐ 관계기관 업무협약('25. 9.)

○ 이민법(학) 기본서 신규 발간 등 수험서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3. '26년도 추진계획

☐ 관계기관 업무협약(연중)

○ 출입국관리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필수과목으로 「이민법(개론)」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대학(원) 이민 관련 학과 신설 및 이민법(학) 기본서 추가 발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공무원(출입국 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 제출 및 공유	결과 공유 및 활용	1건	1건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인사혁신처 업무협약	업무협약 실적	1건	1건	출장 결과보고서
'24	공무원(출입국 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목 반영	「이민법」 과목구성(안)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1건	1건	관련 보고서
'25	공무원(출입국 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 반영	업무협약 실적	연 1회	1회	관련 보고서
'26	공무원(출입국 관리직) 시험과목 개편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 반영	업무협약 실적	연 1회		관련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당자	6급 석봉준	이 메 일	bj85seok@gmail.com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출입국관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단위 이민정책 수요발굴·자문 및 이민 행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과제 내용

- 이민행정 분야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 운영,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지원 등
 - 지방 출입국관서와 시·도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가칭)지역 이민 주민위원회 신설 등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과제 추진 연혁 (경과)

- ('23. 9.)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안건 논의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 지원
 - ('23. 9.)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관한 국가정책수요 의견 제출 (법무부 → 행정안전부)
 - ('23. 12.) '2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지자체 이민정책 강화” 내용으로 국가정책수요 의견 반영(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24.)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24. 5.)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안건 논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지자체

○ 추진절차 :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연구용역 수행 → ‘(가칭)지역이민 주민위원회’ 구축(안) 마련 → 지자체 협의 → ‘(가칭)지역이민 주민위원회’ 구성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3.)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

○ 중앙·지방 협력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를 설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 방안 논의

□ ('25. 3.)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교육부, 산업, 중기부)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16개 광역지자체 중 14개 광역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하고 쿼터 배정(총 5,630명) → ('25. 4.)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3. '26년도 추진계획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을 통한 이민행정 분야의 중앙-지방 협력 체계 지속

□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및 협력 거버넌스 강화 추진

○ 광역지자체 지역 현안 및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지자체·민간단체·대학 등과 연계·협력하여 지역맞춤형 이민정책을 발굴·추진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시범사업 수립 논의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광역단위 이민협력 회의	1회	1회	개최 실적
'24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방안 연구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1건	1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5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방안 논의	중앙-지방 거버넌스 구축 논의	1회	1회	회의 결과 보고서
'26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광역 이민협력 강화 방안 마련	중앙-지방 거버넌스 간담회 등 개최 및 시범사업 수립 추진	2회		간담회·협의회 개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당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kiw120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을 통한 이민정책 개발
 -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민간전문가, 지역연구원 등 연구계, 광역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이 협력하여 이민정책 연구 저변 확대

☐ 과제 내용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 플랫폼인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포럼·간담회 개최 등으로 네트워크 연구 결과 정책화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 중앙-지방-연구계 합동 이민정책 협력·발전을 위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안 마련
 - 광역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대상 ‘지역이민행정 연구 네트워크’ 참여 접수 (‘23. 8. 9. ~ 18.)
 - 광역지자체 12개, 지역연구원 11개,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완료
 - 법무부-광역지자체 이민정책 협력·추진 정책세미나 개최(‘23. 8.~9.)
 -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23. 11.)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24. 6.) '인구위기 시대,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24. 9.)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이민행정학회·이민정책학회)
- 중앙부처, 지자체, 이민정책연구원 및 지역연구원이 참석하여 외국인 정책 발표, 질의응답 등 종합토론회 개최 (권역별 진행)
 - ※ 서울(6. 13), 대구·경북·강원(6. 27~28), 광주·전북·전남·제주(9. 26~27), 부산·울산·경남(10. 31.~11. 1.), 대전·세종·충북·충남(11. 21~22), 경기·인천(12. 4.) 등 총 6회 개최,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총 609명 참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총 46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성 단체

*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및 광역지자체(12개), 지역연구원(31개)

○ 추진절차 : 네트워크 구성 → 포럼 및 간담회 개최, 연구총서 발간 → 정책화(외국인정책위원회 중앙·지방실무분과위원회 상정)

2. '25년도 추진 실적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25. 1.)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방안 회의 개최

-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및 6개 지역연구원(서울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 정책화 지원, 연구범위·내용(공동연구, 연구총서 발간 등), 협력 체계 구축 등 활성화 방안 논의

○ ('25. 7.)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MOU 체결 및 이민정책포럼 개최

- (MOU 체결) 이민정책연구원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31개 지역연구기관이 함께 지역이민정책 현안 과제 공동 발굴·수행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 (이민정책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이민정책 모색을 위해 '지역기반 비자 정책'과 '지역기반 동포정책'을 주제로 정부, 연구계·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이민정책 토론의 장 마련

3. '26년도 추진계획

- ☐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및 연계 강화 지속 추진
 - 포럼·간담회 개최 및 참석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추진
 -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지역연구원 연구 자료 공유 및 중복 연구 방지 방안 마련 등 협력·활성화 기준 마련 및 구체화
 - 총서 발행 등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합동 연구 결과물 도출 등
- ☐ 소요예산 : 비예산
 - ※ 세계인의 날(3-2-1-1) 예산 전용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포럼, 간담회 등 개최	1회	1회	개최 실적
'24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포럼, 간담회 등 개최	2회	4회	개최 실적
'25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포럼, 간담회 등 개최 및 참석	1회	2회	개최 실적
'26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민-관-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포럼, 간담회 개최·참석 ·네트워크 기반 마련 ·합동 연구 협의·성과 등	2회		개최 실적, 기반 마련, 총서 발행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당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kiw120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역 단위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추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및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2조(기능)에 따라 이주·이민 관련 조사·연구·자문 및 교육훈련 수행

☐ 과제 내용

- (연구) 저출생·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는 국가·지역 단위 발전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의 수립·활용을 지원하는 종합·체계적 연구 수행
- 주무부처(법무부) 정책현안 및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증거 기반의 연구과제 수행
- (교육) 지방소멸 위기 및 외국인 주민 수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및 유관기관 종사자, 국민 등 대상의 이민정책 인식개선 목적 교육사업 수행
- (협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외 이민정책 관련 전문 학술활동 지원 및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07.)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1958호)」 발효
- ('09.12.) IOM이민정책연구원 개원(경기도 고양시)
- ('14.07.)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조약 제2196호)」 개정
- ('20.05.) 이민정책연구원 청사 이전(경기도 고양시 → 서울시 양천구)

○ ('23.0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연구원 설립 및 국가 지원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 ('25.03.) 이민정책연구원 청사 이전(서울시 양천구 → 경기도 과천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법무부 일반회계(민간경상 국고보조금, 단위사업: 국제이민 협력-이민정책연구원 운영사업) 예산으로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인구구조변화·지역소멸 등에 대응하는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및 교육·협력사업 강화

○ (연구) “이민과 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심층분석” 등 중장기 중점과제 및 “이주민 사회보장체계 적용범위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등 기본과제 수행

※ 중점연구 2건, 기본연구 9건, 수탁연구 6건, 연구총서 2건, 통계시리즈 1건, 정책리포트 2건, 워킹페이퍼 2건, 협동연구보고서 1건, 이슈·통계브리프 21건 등 총 46건

○ (교육)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문화로 접근하는 이주시리즈” 등 교육컨텐츠 제작·배포

○ (협력) 대통령실(저출생수석실 간담회), 연세대(학생실습 운영), 일본 와세다대(이민정책 관련 논의), Carework Network('25년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과 이민정책 관련 협력 사업 수행

☐ 이민데이터센터 신설, 교육센터 확대

○ 이주·이민데이터 관련 분석역량 강화 및 교육 플랫폼 구축

- 이주·이민데이터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빅데이터 및 AI 활용 역량 강화 등

○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운영 및 전문 콘텐츠 제공

- 국민, 유관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3. '26년도 추진계획

- ☐ 이민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중점·기본 연구과제 수행 및 지역 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협력 강화 등
- (정책연구실·이민데이터센터 운영) 증거 기반의 과학적·체계적 이민정책 설계 연구 및 데이터 개방 추진
 - “AI를 활용한 이민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준개방형 취업비자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내 전문취업비자 외국인 실태조사” 등 과학적·체계적 이민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중점·기본 연구 과제 확대 시행('25년 11건→'26년 25건)
 - 매월 체류 외국인 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시행 및 리포트 발간, 데이터 활용 방법 설명 세미나 개최 등 증거기반 정책수립 지원
- (이민자 인식개선 교육) 전문 콘텐츠(외국인 혐오 예방·인권침해 방지, 산업현장 안전교육 등) 제작·배포 및 이민정책 교육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임금·경제분석센터 신설) 정책연구실 내 임금·경제분석센터를 신시하여 직종·산업별 임금요건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통해 현행 취업 비자의 임금요건 적정성 검증

☐ 소요예산 : 총 3,78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2,268	2,562	3,455	3,786	9.6%	
- 국 비	▪ 일반회계	2,268	2,562	3,455	3,786	9.6	
	▪ 특별회계						
	▪ 기 금						
-지 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연구사업비 산출내역(1,406백만원, '25년 대비 + 133%)

○ 이민정책연구 1,203,000,000원

- 이민정책통계 데이터베이스 운영 107,000,000원
-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사업 84,000,000원
-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1,000,000원
- 이민행정연구 국제협력 4,316,000원
- 이민정책연구 전문저널 ‘이민연구’ 발간 7,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이민정책연구 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183점	228점	$(A \times 10) + (B \times 7) + (C \times 5) + (D \times 3)$ ※ 연구유형별 A : (기본/수탁)연구보고서 B : 정책보고서/통계시리즈 C : 정책브리프/워킹페이퍼 D : 이슈/통계브리프
'24	이민정책연구 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236점	297점	$(S \times 20) + 10(A \times 10) + (B \times 7) + (C \times 5) + (D \times 3)$ ※ 연구유형별 S : 중점연구보고서 A : (기본/수탁)연구보고서 B : 정책보고서/통계시리즈 C : 정책브리프/워킹페이퍼 D : 이슈/통계브리프
'25	이민정책연구 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259점	397점 (43건) *9월 기준	상동
'26	이민정책연구 원 기능 강화	이민정책 연구 강화	이민정책 연구 실적 (정량지표)	330점	-	상동

※ 목표치 산출근거 : 지난 2년 목표치 평균 점수 x 당해연도 연구사업비 증가율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1
담당자	7급 박근유	이 메 일	geunyou25@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법무부 이민정책 추진방향 설정, 정책·법령 개선 관련 자문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설치

※ '11년부터 운영된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

☐ 과제 내용

-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정책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이민정책위원회」 활성화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2.) 「이민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법무부훈령 제1406호)

- ('22. 11.) 제1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및 제1회 회의 개최

※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22. 11. 25. ~ '24. 11. 24.)

- ('23. 11.) 제2회 회의 개최

- ('24. 6.) 제3회 회의 개최

- ('24. 11.)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개정

- 「이민정책위원회」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장관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개최

2. '25년도 추진 실적

☐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및 회의 개최

○ ('25. 9.) 제2기 위원 위촉* 및 제4회 회의** 개최

* (구성) 외부위원 18명을 위촉하여 전체 위원 수 총 20명(당연직 2명 포함)

** (안건) ①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②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middle-skill) 양성 제도 도입, ③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④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검토

○ ('25. 12.) 제5회 회의 개최

3. '26년도 추진계획

☐ 「이민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 법무부 이민정책 비전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회	1회	결과보고서
'24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회	1회	결과보고서
'25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회	2회	결과보고서
'26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3회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당자	6급 석봉준	이 메 일	bj85seok@gmail.com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체류, 국적, 난민, 교육 등 이민 행정 각 영역에서 급증하는 비대면 민원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포털과 유관 기관 간 시스템 추가 연계, 출입국·이민행정 대민 통합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상세 분석 및 정의, 구축전략 및 이행세부계획 수립 및 단계별 실행 설계 내역 도출

☐ 과제 내용

- 출입국·이민행정 대민 포털 개편 범위, 세부 설계 및 방향성 정의
 - 정보화전략 검토 및 출입국·이민행정 대민서비스 업무 전반적인 개선 방안 도출, 업무/시스템 환경 분석 및 구축 계획에 따른 법제도 개정 사안 마련
- 온라인 민원시스템 기능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정·제도·시스템적 장애요인 진단 및 개선 방안, 시스템 별 최적의 웹, 앱 유형 도출 및 개발 방안
- 지능형 이민행정 대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세 개발 요건 도출
 - 출입국·이민행정 대민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및 기능 분석, 시스템 개발 요건 정의, 대민 플랫폼의 민원정보 공유체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통계/시각화 기능 설계
- 전자적 방식의 출입국민원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 현행 전자적 업무처리 유형 및 업무절차 분석하고 전자서식(e-form)

도입, 제출서류 간편화를 위한 업무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

○ 지능형 이민행정 대민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 수립, 예산 산정 등 이행 방안 수립

- 하이코리아, 사회통합정보망 등 웹사이트 통합 및 웹사이트 내 하위 시스템 세부 구성 방안 등 대민 플랫폼 구성 및 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7.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3. 1. 사업예산 신청

○ '24.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24. 11.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 사업에 포함된 과제 중 2개의 사업과제가 다부처 사업으로 별도 추진되는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철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예산확보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ISMP 예산 신청 자료 작성(1/4분기)

☐ ISMP 예산 신청(2/4분기)

☐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완료(4/4분기)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분석과 제안요청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구축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3. '26년도 추진계획

- ☐ ISMP 사업 수행(1/4분기)
- ☐ 2027년 본 사업 구축 예산 신청(2/4분기)
- ☐ 사업 완료(3/4분기)
- ☐ 소요예산 : 총 44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448	100%	
- 국 비	▪ 일반회계				448	1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 산출내역

○ 사업 용역비 : 448 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4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통과 여부	통과	미달성(철회)	관련 문서
'25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ISMP 추진	ISMP 예산 확보 추진	예산 확보	확보	확보	관련 문서
'26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포털 개편 ISMP 추진	ISMP 사업	사업 완료	100%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9
담당자	7급 박은배	이 메 일	korboy11@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시스템 노후화로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는 사회통합 정보망을 재구축하여, 신규 사회통합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과제 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 향후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비대면 화상교육,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온라인 평가 시스템, 결제 시스템 등 도입

○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정보망 개편

- 모바일 사회통합정보망 구축, 다국어 서비스 지원,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 전자민원으로의 전환 등 포털 전면 개편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 3.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반영

○ '22. 7.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사업자

○ 추진절차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확보 →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과제번호 : 5-3-1-1)에 포함시켜 추진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전화번호	02-2110-4146
담당자	5급 주도현	이 메 일	joodh9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실물 신분증의 신뢰성, 내구성, 보안성, 정보보호 취약성 등을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 외국인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이용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외국인 신분 확인 체계를 확립하고 모바일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전자민원 활성화

☐ 과제 내용

- 공통 플랫폼 개선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수용 운영을 위한 기반 증설
- 발급·카드관리·연계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의 발급 관리, NFC R/W 장비 도입, 공통 플랫폼 공동 이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등 구축
- 민원 알림 서비스 구축
 - 민원 알림 정보의 제공 및 국가 재난 상황의 외국인 대상 알림 강화를 통한 필요 정보 적시 전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1. 10. 과제 추진, '22. 7. 과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23. 2. 기재부 예산 신청

- 시급성에 따라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사업」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도입)사업」으로 분리하여 기재부 예산 신청

○ '23. 6.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23. 11.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도입)사업」 예산 수용

○ '23. 12.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안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실적 : 37,446건('25.12.31.기준)

3. '26년도 추진계획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목표 실적 : 40,000건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년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근거 마련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법 개정	관련 문서
'24년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율	100%	100%	사업완료 보고서
'25년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발급건수	33,000건	37,446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통계자료
'26년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건수	40,000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통계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9
담당자	7급 박은배	이 메 일	korboy11@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비대면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같이 계좌개설 등의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과제 내용

- 법적 근거 마련
 - 금융회사 등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요청 시 이에 대한 결과 회신 근거 마련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 12. 「출입국관리법」 개정
- 2023. 5. 시스템 구축 완료
- 2023. 9. 서비스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5)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확대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응답) 건수 확대 추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출근거
'23	외국인등록증진위 확인서비스시행	외국인 금융편의 제고	진위확인 응답 건수	400,000회	449,906회	시스템 응답 실적
'24	외국인등록증진위 확인서비스시행	외국인 금융편의 제고	진위확인 응답 건수	1,560,000회	2,992,660회	상동
'25	외국인등록증진위 확인서비스시행	외국인 금융편의 제고	진위확인 응답 건수	2,760,000회	4,182,665회	상동
'26	외국인등록증진위 확인서비스시행	외국인 금융편의 제고	진위확인 응답 건수	3,360,000회	-	상동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7
담 당 자	6급 박원진	이 메 일	pike2062@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입국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분석 자료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전략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 지원

☐ 과제 내용

-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해 수집된 외국인 입국자의 일자별 추이, 국적·연령대·성별·국내체류 예정지·여행목적·여행기간·출도착지 등 분석
- 방한 외국인의 지역별 방문 현황 등을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 지자체·관광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추진 경과

- 법무부-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분석 협력 MOU 체결('22. 4.)
- '우리 동네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시각화 자료 제공 ('22. 4.)
- '우리 동네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시각화 일시 중단 ('23. 3.)

☐ 추진체계

- 추진 주체 : 한국관광공사, 법무부(MOU) → 지방자치단체, 주무 부처
- 추진 절차 : 관광공사, 법무부 데이터 공유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제공

2. '25년도 추진 실적

☐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 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 추가 연장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으로 인해 분석 일시 중단

3. '26년도 추진계획

☐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 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 추가 연장에 따라 분석 일시 중단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일시중단	일시중단	
'24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일시중단	일시중단	
'25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일시중단	일시중단	
'26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분석모델 개발 및 공개	공개율 (%)	일시중단	일시중단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전화번호	02-2110-4474
담당자	5급 김유신	이메일	ky599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외국인 체류허가 등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국익 위해자 사전 차단을 위한 AI 심사지원 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전자적 방식의 외국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AI 분석기반 확립
 - 비자, 체류허가 등 외국인이 입력하는 모든 정보(신원정보·입국목적 증명서류 등)를 전자적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기존 체류 접수체계 개편
 - 민원인은 재외공관·출입국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사증·체류 신청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 ※ (현행) 모든 외국인이 동일 서류(통합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서에 제출
 - (개선) 민원인의 체류자격에 맞춘 필수 데이터를 스스로 입력(온라인)
- AI를 활용한 체류 심사 지원체계 구축
 - 연간 4백만 건 이상 접수되는 외국인 체류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AI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지원 체계 구축
 - 여권, 학력·경력증명서, 재정증빙 서류 등 정형화된 서류에 대해 AI가 위·변조 여부 탐지
 - 제출서류의 OCR 및 텍스트 인식으로 자동분류 및 필수서류 누락 여부를 자동 검출함으로써 민원 신청서류를 과학적으로 접수
- 위험도 평가 및 국익위해자 사전 차단
 - 과거 불법체류, 범죄이력, 출입국기록, 사증발급기록 등을 종합하여 체류허가 신청인의 위험등급을 자동 부여함으로써 국익위해자 사전 차단 및 심사기간 단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해당 없음('26년 신규사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26년 신규사업)

3. '26년도 추진계획

☐ AI 기반 국가안전 체류 모델 개발 사업계획 수립

○ AI 기반 국가안전 체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신청(631백만원)

☐ 소요예산 : 없음

※ 향후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반영 예정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6	AI를 활용한 체류허가 접수·심사 체계 개선	AI 기반 국가안전 체류 모델 개발	사업계획 수립	1건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전화번호	02-2110-4059
담당자	5급 나영미	이메일	laym7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이주 관리와 이주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인 GCM 목표의 자발적 이행력 확보

☐ 과제 내용

- 관련법률·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국경 및 체류 관리, 이주자 인권보호 등 23개 GCM 목표의 주기적 점검 등 이행방안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6. 9.) 유엔 총회, 「인간 이동의 국제협력을 위한 뉴욕 선언」을 통해 GCM 수립 약속

- ('18. 12.) 유엔 총회, GCM 승인 결의(한국 등 152개국 찬성)

※ 미국, 헝가리 등은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대

- ('21. 3.)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GCM 이행점검 회의(방콕)

※ 화상(수석대표: 주태국대 공사, 우리 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참석)

- ('22. 5.) 제1차 국제이주점검포럼(IMRF)* 개최(뉴욕)

* GCM 이행점검 및 논의를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 간 협의

※ 대면(수석대표: 주유엔대 차석대사, 우리 본부: 외국인정책과 주무관(화상 참석))

- ('25. 2.)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GCM 이행점검 회의(방콕)

※ 대면(수석대표: 주태국대 공사, 우리 본부: 외국인정책과 주무관(화상 참석))

○ ('26. 上.) 제2차 국제이주점검포럼(IMRF) 개최 예정(뉴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유엔 이주네트워크(UNNM)* ⇌ 법무부(외국인정책과) ⇌ 관계 기관(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

* UNNM(UN Network on Migration)은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GCM 이행 지원기구로, 국제이주기구(IOM)가 사무국·조정자 역할을 함

2. '25년도 추진 실적

☐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GCM 이행점검 회의 대응('25. 2.)

○ GCM 이행 현황과 성과 등에 관한 발표 자료 작성, 회의 내용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

※ 외교부와 공동 대응

3. '26년도 추진계획

☐ 제2차 국제이주점검포럼(IMRF) 대응('26. 上.)

○ 회의 자료 작성 및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등

※ 외교부와 공동 대응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국제기구 요청 대응 및 이행방안 검토	대응(이행) 방안 마련	1건	1건	관련 보고서
'24	GCM 자발적 이행점검 강화	이행실적 자체 점검 기반 마련	실적점검 협의체 구성·운영	1회 이상	1건	운영 실적 보고서
'25	GCM 자발적 이행점검 강화	이행점검 회의 대응	협의체 운영 및 이행점검 회의 대비	1회 이상	1회	관련 공문 및 보고서
'26	GCM 자발적 이행점검 강화	이행점검 회의 대비	이행점검 회의 대비	1회 이상		관련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7
담당자	6급 석봉준	이 메 일	bj85seok@gmail.com

1. 과제의 개요

☐ 목적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국의 국제이주 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 과제 내용

○ OECD 이주작업반 참여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여국으로 '국제이주전망 보고서' 기초 자료 제공 등 협력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23.) OECD 이주작업반 하위 전문가그룹인 '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여 의사 사무국에 전달
- ('23. 6.)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 대한민국, OECD 이주작업반 집행부로 선출
- ('23. 10.) OECD '2023년 OECD 이주 전문가그룹 연례회의'(국제이주통신원(SOPEMI)) 참석
- ('23. 11.)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제이주부 전문가 방문, 회의·토론회 등 개최
- ('24. 6.)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대한민국, 이주작업반 집행부로 활동)
- ('24. 10.) OECD 이주 전문가 그룹(SOPEMI) 연례 회의 참석

- ('24. 10.) OECD 제146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회의 온라인 참석
- ('24. 2. ~ 9., 총 5회) OECD 이주 흐름 예측 TF(MAP : Migration Anticipation and Preparedness) 회의 온라인 참석

○ OECD 이주작업반 협력

-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발간('24. 7.) 협조
 - OECD 경제국 구조미션단 실무 논의 ('24. 3.) 및 통계 제공 등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 검토 및 의견 개진
- OECD 설문 답변서 제출
 - 보건인력 이주 관련(OECD 이주작업반 제출, '24. 8.)
 - 해외간섭 관련(외교부 제출, '24. 9.)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추진절차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매년 국제이주전망 보고서 작성 기초자료 (통계, 주요 정책 현황) 제출

2. '25년도 추진 실적

□ OECD 이주작업반 참여

- ('25. 4.) OECD 제146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온라인 참석
- ('25. 4.) OECD '난민을 위한 안전한 경로' 보고서 의견 제출
- ('25. 5.) OECD 이주작업반(WPM) 정례회의 참석(프랑스, 파리)
- ('25. 5.) OECD 유학생 정책 업데이트 요청 회신
- ('25. 6.) OECD 국제이주 통계포럼 온라인 참석

- ('25. 6.) OECD 국제이주전망 보고서 중 대한민국 부분 검토 의견 회신
- ('25. 9.) 제15회 아시아 노동이주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참석
 - 국적·통합정책단장 “대한민국 노동이주 최신동향과 정책(Latest trends and politics in labor migration in Korea)” 주제로 화상 발표

3. '26년도 추진계획

☐ OECD 이주작업반 참여

- (1~4분기)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등
- (2분기)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 (4분기) '2026년 OECD 이주 전문가그룹(SOPEMI) 연례회의' 참석

☐ 소요예산

-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협력 강화(5-4-1-4) 예산에 포함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3	16.7	18.1		12.7	
- 국 비	▪ 일반회계	13	16.7	18.1		12.7%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국외여비

-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국외출장비

{일비(30\$×7일) + 식비(81\$×7일) + 숙박비(176\$×6일) + 항공료 235만원}
× 2명 = 10,199천원

- OECD SOPEMI 참석 국외출장비

{일비(30\$×5일) + 식비(81\$×7일) + 숙박비(176\$×6일) + 항공료 235만원}
× 2명 = 10,199천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 적	산 출근 거
'23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이주작업반, SOPEMI 참석	2회	2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4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이주작업반, SOPEMI 참석	2회	2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5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관련 회의 참석	2회	2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6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OECD 이주작업반 참여	OECD 이주작업반, SOPEMI 참석	2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당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kiw120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대테러 등 관련 정보공유 확대, 테러 분자의 입국 사전 차단 등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를 통한 대한민국 및 전 세계 테러 방지

☐ 과제 내용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업무 공조 확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에 출입국관리공무원 파견 등 협력 방안 논의(’ 23.~’ 2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

2. ’25년도 추진실적

☐ UN대테러실(UNOCT) 상호 기관 간 인적교류 논의

- 전문연구원(Fellowship) 또는 고용휴직 직위 신설 등 한국의 대테러·이민·국경관리 전문가를 파견 등 논의

3. ’26년도 추진계획

☐ 과제 종료(’ 24.)

- 해당 과제가 국제기구와의 업무 공조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5-4-1-4)”에 포함되어 이 과제에 포함

☐ 소요예산 : 종료(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전화번호	02-2110-4022
담당자	6급 이황원	이 메 일	Qpavk12@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외 출입국·이민 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민·이주·국경 관리 정책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주요 현안 발생 시 다자간 국제협력 체제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채널 구축
-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우리 이민정책과 연관성 있는 다자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 * APT 이민청장회의, ANDEX 회의, 도쿄 출입국포럼 등
- 국내외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ANDEX, 아세안+3 이민청장회의 등 글로벌 협력체와 세미나에 지속 참석
- UNHCR, IOM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출입국·이민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추진절차 :
 - (국제회의 참가) : 국제회의 일정 사전 조사 또는 국내외 초청장 수신
 - 주제에 따른 참석 여부 결정 → 회의 참석 →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내부 공유

- (고위급회의 개최) 정책수요 및 대상 국가 선정 → 회의 의제 선정
→ 회의 실시 → 결과 보고 → 보고서 내부 공유

2. '25년도 추진 실적

- 한-필리핀 출입국관리 고위급회의 개최('25. 5.)
-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주한러시아 총영사, 주한중국 총영사, 인도네시아 하원 입법위원회 부의장,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부 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 7회 진행
- 난민재정착에 관한 실무회의(WGR), OECD 이주 전문가그룹 연례회의, 아세안 + 한·중·일 이민청장 회의, UNHCR 집행이사회 등 국제회의 6건 참석

3. '26년도 추진계획

- 그 간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던 네트워크를 미주·유럽 국가들로 확대하고, 해외 이민당국과의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입국·이민 분야에 대한 국가별 최신동향과 아이디어 공유
- 특히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일본·유럽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출입국·비자·체류 관련 불편사항 해소하고, 미국·캐나다 등 서구 이민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최신 이민 동향 파악, 정책 반영

☐ 소요예산 : **총 182백만 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218	219	191	182	△4.7	
- 국 비	▪ 일반회계	218	219	191	182	△4.7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본부기본경비-국제회의 참석-여비

○ 국제이민협력-이민정책개발지원-여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출근거
'23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체계유지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4	22	결과보고서
'24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체계유지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4	23	결과보고서
'25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체계유지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4	14	결과보고서
'26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	다자간 국제협력체계유지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수	15		결과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02-2110-4018
담 당 자	7급 오정음	이 메 일	oje0622@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ODA(공적개발원조)와 이민을 접목하여, ODA 수원국 국민, 한국과 수원국의 상호 발전(개발) 방안을 정책화
 - 인재양성(송출국 국민) → 이주(유입국) → 귀환(송출국)의 순환이주를 통해 송출국과 송출국 국민, 유입국의 삼중이득 달성

☐ 과제 내용

- 법무부와 KOICA가 협력, 한국의 ODA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발굴
 - 국내 이민자 수가 가장 많으면서 ODA 대상국인 동남아 지역에서 우선 시작 후 확대
 - ※ <예> 해외 현지 직업훈련원의 우수 수료자에게 한국으로 취업·진학 기회 제공, 귀국 시 본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또는 창업 지원
- '이주-개발 넥서스 프로그램 실행방안 연구' 연구용역 실시(KOICA)
 - 협력국(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을 대상으로 숙련·전문 인력 양성 및 귀환 자원 관련 연구용역
 - '이주-개발 연계' 해외 전문인력 양성 관련회의 (법무부-KOICA-이민 정책연구원, '24. 3, 7, 8월 등 3회 이상)
 - 베트남 조선용접공 및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범사업 협의 등

2. '25년도 추진 실적

- ('25. 1. 및 7.) 법무부-KOICA '이주-개발 연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행 방안 협의

- ('25. 1.) KOICA 베트남 ODA 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 ('25. 2.) KOICA 베트남 보건인력 양성 등을 위한 ODA 사업 신청
- ('25. 3.) KOICA '개도국 산업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발간
- ('25. 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외국인정책과장)
 -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분장 사무 신설

3. '26년도 추진계획

- 베트남 보건인력 양성 등을 위한 ODA 사업 최종 승인시 용역 입찰 후 '26. 2~3분기부터 관련 사업 시행 예정(KOICA)
- 외교부, 코이카, 복지부 등에서 교육(대상자 선발, 인턴) 및 비자 발급에 관하여 협조 요청 시 법무부에서 적의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관련부처 논의 개시	부처간 회의 실시	1회	1회	회의 참석
'24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연구용역 시행	KOICA 연구용역 실시	1건	1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25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이민과 개발(M&D) 세부방안 협의	부처 및 관계기관 회의	2회	2회	회의 참석
'26	이민과 개발의 정책화	이민과 개발(M&D) 사업 착수	ODA 사업 협조 등 논의	1건		회의 참석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10
담당자	6급 김인우	이 메 일	kiw120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공항공사·이민청 등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우수 이민행정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 출입국 기관과 우호적 관계 조성

☐ 과제 내용

- 개도국 이민당국에 한국의 이민행정 시스템 구축 지원
 - Hi-Korea(외국인온라인민원종합안내), K-ETA(전자여행허가)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우수행정 프로그램을 현지화 및 이식, 현지 이민행정의 효율성 제고
- 개도국 이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수 기회 제공
 - 국내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출입국 공무원에게 행정 관련 연수 기회 제공, 각국 출입국공무원과의 교류 확대 및 행정능력 제고

☐ 과제 추진 경과

- '19.11 KOICA 요청, 미얀마 출입국 현대화 ODA 사업 현지 예비조사 참석 (2020년 미얀마 내부 상황으로 사업 중단)
- '20. 2. 코로나19 발생으로 ODA 현지 사업 중단('22년 하반기 재개)
- '23. 7. 몽골 출입국 담당 공무원 방한연수 강의 제공
- '23. 9. DR콩고 출입국 담당 공무원 온라인연수 강의 제공
- '23. 10~11.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2건(페루, 파라과이) 예비조사 실시
- '24. 10~11.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페루 현지 기획조사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KOICA)
- 추진절차 : 글로벌 사업제안서 제출 → (외교부) ODA사업 선정

2. '25년도 추진 실적

- ☐ 2025년 사업 타당성 심사에서 법무부 정부부처 제안사업 1건 통과, 페루 현지에 대한 ODA 사업 진행 확정
- 페루 이민청 이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 페루 이민청의 이민행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바이오정보 데이터 표준화
 - KOICA의 용역 발주를 통해 페루 현지에서의 시스템 개발사업 진행
- ODA 진행 사업 출입국분야 연수 강의 및 협력
 - 'ANDEX 회원 개발도상국 문서감식 분야 역량강화'사업 추가 제출, 회원국 전체의 수원요청서 수령을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
 - * Asian Network for Document Examination, IOM 아태지역사무소 산하의 협의체로 '24년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았음
 - 법무연수원의 KOICA 라오스·인도네시아 국제연수사업 위탁 운영
 - * 라오스의 건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감시 역량 강화(15명, '25.7.6 ~7.19)
 - 인도네시아 국익위해자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15명, '25.8.31~9.13)
 - 이민정책연구원 몽골 출입국공무원 국내 연수 강의 2회('25. 4.)

3. '26년도 추진계획

- ☐ 개도국 이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수 제공
- 인도네시아 국익위해자 출입국관리 역량강화 3차년도 연수사업(법무연수원)
 - 인도네시아 이민청 직원 15명에 대해 출입국 기관 방문, 관련 내용 강의 제공 등 국익위해자 관리 역량 교육

○ ANDEX 회원국 대상 문서감식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회원국 수원요청서, ANDEX 사무국 요청서 제출 등을 통해 '27년 연수 사업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타부처 예산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페루·파라과이 ODA 사업 추진	예비조사 시행	1건	2건	사업계획서
'24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ODA 사업 협력	ODA 진행 사업 출입국분야 협력	1회	2회	강의, 현장투어 등
			페루·파라과이 사업 진행 (선정시)	1건	1회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25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페루 ODA 사업 추진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 개선 사업 개시	1건	1건	사업계획서 등
'26	출입국분야 우수 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ODA 사업 협력	ODA 진행 사업 출입국분야 협력	1회		강의, 현장투어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전화번호	02-2110-4106 031-288-2262
담당자	4급 유경남, 7급 신유나	이메일	gyeong1@korea.kr unamss@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3	100%	34	34	0.0%
1. 경 제	2	66.7%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1	33.3%	34	34	0.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외국인주민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주요 내용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지자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외국인주민 위원 위촉·운영 현황 조사
 - 지자체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전문성 제고 및 사회통합적 외국인주민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권역별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연간 4회) 추진
 - 재난·재해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 재난안전포털(영문), Emergency Ready App에서 제공 중인 국민행동요령, 재난안전시설 등 재난안전정보의 자동번역 제공
 - 19개 언어* 중 관광객 수, 체류인원 등을 고려한 10개 언어 우선 전문 번역 제공
-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몽골어, 미얀마어, 싱할라어, 벵골어, 우르두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408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409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410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411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3-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411
1-3-3-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413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1-③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415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3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2)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3개	35	34	34	34	0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2개)	-	-	-	-	-	
1-3-3-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	-	-	-	-	비예산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	-	-	-	-	비예산
소계	40인민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실현(1개)	35	34	34	34	0	
4-1-1-3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35	34	34	34	0	일반예산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4년 11월1일 기준 258만명으로 증가세
 - 국내에 장기(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인구 대비 5.0%로 2006년 외국인주민 수 조사 이래 최대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세
- ※ ('20) 216만명 → ('21) 213만명 → ('22) 226만명 → ('23) 246만명 → ('24) 258만명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거주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적응을 돕는 지원 필요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주민정착지원 정책 사례 발굴·확산(경진대회 개최, '25.11.)
 -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지역별·유형별 등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작성하여 지자체 시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 25.10.)
 - (지자체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주민 담당자 설명회(워크숍)를 통해 시책사업, 통계 등 업무안내 및 중앙-지방 교류 활성화(권역별 4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거주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정책역량 제고 및 맞춤형 시책 확산 지원 필요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지자체 외국인주민 담당자 설명회(워크숍)를 통해 외국인정책 전문성 강화(권역별 4회)
- 재난·재해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III.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1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책 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현황 분석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3-4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4-1-1-3	재난·재해등에 관한 보편적 지원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편(영문사이트 구축)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3-3-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제도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결정 시, 외국인주민 참여기회 확대

☐ 과제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에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 지역 내 자조모임, 나라별 모임 등의 대표들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의견 정책 반영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통보 : '13. 6.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구축·운영 현황 조사 : 매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 운영지침 마련 → 자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25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현황 파악('25. 3.)
 - 192개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운영
 - * 지원협의회 총 위원 1,756명 중 외국인주민 209명(12%) 참여, 자문회의 총 위원 294명 중 외국인주민 57명(19%) 참여('24.12.31. 기준)
 - 조례에 근거한 지원협의회, 자문회의 외에도 대표자회의,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주민 참여기구 구성·운영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운영현황 파악('26. 3.)

- 지자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외국인주민 위원 위촉·운영 현황 조사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42.8%	현황조사
'24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40%	현황조사
'25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40%	현황조사
'26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위원 비율	14%		현황조사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254
담당자	6급 남성진	이 메 일	nsj724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자체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

☐ 과제 내용

- 지자체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전문성 제고 및 사회통합적 외국인주민 시책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행정안전부
- 추진절차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최 → 지방자치단체 참여

2. '25년도 추진 실적

☐ 추진 실적

-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4.11.기준)' 공표('25.10.31.공표)
 - 지자체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통계 분석·발표
-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추진(총 4회, 9월 기준 408명)
 - 1회 경상권 6월, 2회 수도권 7월, 3회 호남권 11월, 4회 충청·강원도권 12월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 계획

- 지자체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 개최(연간 4회 예정)

☐ 소요 예산: 비예산 ※ 법무부 예산 소요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설명회 교육 이수자 수	200명	457명	참석자 수
'2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설명회 교육 이수자 수	200명	609명	참석자 수
'25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설명회 교육 이수자 수	200명	408명 (9월기준)	참석자 수
'26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무원 외국인정책 이해도 제고	설명회 교육 이수자 수	584명	-	참석자 수

* - ('26년) 그간 실적 추세를 고려, 직전 3개년도 평균 참석자 수로 목표치 조정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254
담당자	6급 남성진	이 메 일	nsj7249@korea.kr

4-1-1-3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안전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 및 영문 앱(Emergency Ready App)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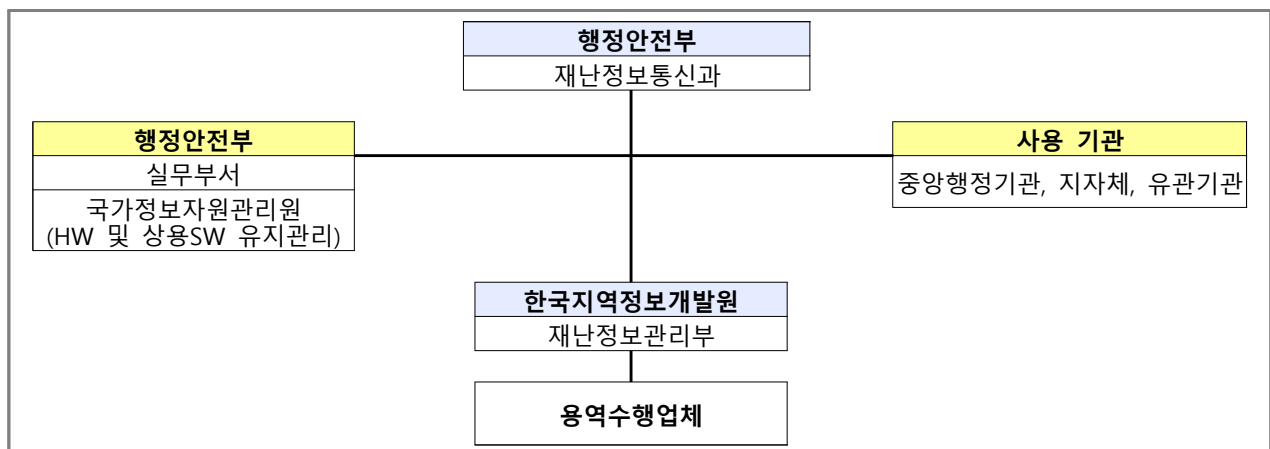
☐ 과제 내용

- 외국인 대상 국민행동요령, 대사관 정보, 시설물 정보 등 77종의 영문 홈페이지(eng.safekorea.go.kr) 운영
-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재난문자(영어·중국어), 대사관, 대피시설 등 29종의 재난안전 정보를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Emergency Ready App(영어/) 서비스 개시('14.3월)
- Emergency Ready App(중국어) 서비스 추가('17.1월)
- Emergency Ready App에 재난문자 영어, 중국어 제공('18.1월)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영문 서비스 실시('20.8월)
- Emergency Ready App(일본어) 서비스 개시('22.8.10)
- Emergency Ready App에 재난문자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제공('24.11월)

☐ 추진체계



2. '25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추진('24. 8월 계약)
 -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재난안전정보(대피시설, 보건시설 등)에 대한 지도 검색 제공
 - 네이버, 카카오 길찾기 기능과 연계하여 대피소 등 각종 시설 경로 안내
 - Emergency Ready 앱 재난문자 번역언어(5종→19종) 및 메뉴·컨텐츠 번역언어(3종→19종) 확대

Emergency Ready App		국민재난안전포털(영문)	
			
개편 전	개편 후	개편 전	개편 후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재난안전포털(영문), 'Emergency Ready App'에서 제공중인 재난·안전정보(국민행동요령, 재난안전시설 등)의 자동번역 내용을 전문 인력을 통한 번역으로 제공하여 보다 명확한 정보 전달

※ 긴급한 속도를 요구하는 재난문자는 자동번역 방식을 유지

- 19개 언어* 중 관광객 수, 체류인원 등을 고려한 10개 언어는 우선 전문번역 제공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몽골어, 미얀마어, 신할리어, 벵골어, 우르두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

※ 나머지 9종 언어는 '27년도 개편 사업 시 추가 번역 예정

☐ 소요예산 : 총 3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35	34	34	0.0	
- 국 비 : 일반회계	35	34	34	0.0	

☐ 산출내역

○ 국민재난안전포털(영문) 유지관리 : 금 33,996 천원

- $309,055,000 \times 10\% \times 1.1 = 33,996,00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최근 5년 평균)	12,100건	19,053	앱 다운로드
'24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전년대비 2% 증가	12,342건	27,322	앱 다운로드
'25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전년대비 2% 증가	27,868건	16,195 ('25.9.30. 기준)	앱 다운로드
'26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Emergency Ready App 이용 확대	연간 앱 설치 건수 전년대비 2% 증가	28,425건		앱 다운로드

5. 담당자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44-205-5287, 5388
담당자	6급 배창환(Emergency Ready App) 7급 박지영(국민재난안전포털)	이 메 일	cert0118@korea.kr pji426@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7	100%	34,346	33,842	△1.5%
1. 경 제	3	43%	30,991	30,297	△2.2%
2. 안 전					
3. 통 합	4	57%	3,355	3,545	5.7%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K-컬처 융합형 한국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 지속 가능한 크루즈관광 성장 기반 구축
- » 타 문화 이해 증진 및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주요 내용

- » K-컬처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 K-팝 콘서트 연계 관광상품 개발, K-드라마와 K-컬처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K-팬덤 대상 VK(Visit Korea)특집관·SNS 계정 운영, K-관광 대표코스 발굴 및 브랜드화 추진 등
-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웰니스 관광 활성화 지속 추진
 - 「치유관광산업법」 시행 계기로 예방·치유 관광 융복합 사업 추진,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 박람회 개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운영 지속 지원(지자체) 등
- » 지속 가능한 크루즈관광 성장 기반 구축
 -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크루즈 선사·업계 초청,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개최 등
-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 문화다양성의 날(5.21.), 문화다양성 주간(5.21.~27.) 운영 및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
-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 FM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국내 거주·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정보 등 제공
 - 시사/보도 프로그램, 교양/정보 프로그램, 음악/오락 프로그램, 제주 특화 프로그램 등 제작·방송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421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422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427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430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①-①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430
1-4-①-② 크루즈 관광 활성화	434
1-4-②-③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438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3-2-②-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442
3-2-②-②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444
3-2-②-③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446
3-3-①-③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449
3-3-②-③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452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8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5)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8개	32,075	34,589	34,346	33,842	△1.5	'의 경우'△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4)	29,038	31,339	30,991	30,297	△2.2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12,237	15,249	16,690	16,376	△1.9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570	570	785	505	△35.7	
1-4-1-5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	-	-		비예산	종료('25)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6,231	15,520	13,516	13,416	△0.74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4)	3,037	3,250	3,355	3,545	5.7	
3-2-2-1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기반 마련	189	198	-	250	250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504	500	500	1,000	100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500	620	1,100	600	△45.4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69	157	160	100	△37.5	
3-3-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1,775	1,775	1,595	1,595	0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 열풍으로 한류 IP·수요 기반 방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필요

※ ('25.7)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35만명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 (K-팝 관련 체험형 관광 예약 증가율) 미국 400%, 대만 575%

○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24년 약 43조 2,800억 원으로, 향후 7년간 연평균 23%의 고성장, 32년 225조원 도달 전망

* 미(美) Fourtune Business Insights('25.6.23.)

-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웰니스관광을 한국관광 대표 콘텐츠화하며,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마케팅 등 성장 지원 필요

· '24년 방한 의료관광객은 전년(61만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117만명 기록

· 방한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820만원으로 일반관광객 대비 4.1배 높은 수치를 보이는 대표적인 고부가관광 산업

※ 일본 44만명(37.7%, 전년대비 135%↑), 중국 26만명(22.3%, 전년대비 132.4%↑), 미국 10만명(8.7%, 32%↑), 대만 8.3만명(7.1%, 550%↑) 順

○ 크루즈관광 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필요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크루즈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3년 3,170만명 수준에서 '27년 약 4천만 명 수준까지 확대 전망 * 출처: CLIA

※ ('25년 크루즈 방한객) 전년대비 49% 증가, 약 109만명으로 전망

- 외래관광객 입국 편의 제도 개선을 통한 방한 유도 및 관광 소비 지출 증·장기적 확대 추진 * 법무부 협의 필요

- 이주배경주민 증가 및 고령화 등 인구구성 다변화로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제고하여 타문화 이해도·포용도 증진 필요
 - 체류외국인 증가('23년 250만명, 전체 인구의 4.9%), 저출산·고령화 심화('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22년 합계출산율 0.78로 역대 최저치), 국제이주 증가 등으로 인구구성이 급변하면서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점차 다양화
 -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
- 사회구성원 간 이념·계층·연령·성별 등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문화다양성 협약 20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10년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인식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
 -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지도) ('22년)35.4%→('23년)24.3%→('24년)27.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국민 포용적 가치확산을 위해 일회성에서 일상으로, 중앙에서 전국으로의 사업 전환 필요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행사 프로그램 추진 확대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신규 국가통계 승인('24.2월) 및 공표('25.2월)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최
 - 교원(초·중등) 및 청소년(중·고교) 대상 교과과정 연계 문화다양성 연수·교육 운영 및 전문인력(문화콘텐츠제작자, 문화기관종사자) 대상 연수 운영
- 저출생·고령화 심화(50년 후 한국 인구 3,600만 명, 2명 중 1명은 65세)로 생산 인구 감소,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116만 명('08)→300만 명 초과 예상('30), 158% 증가) 등 국내 인구 환경 변화 지속

-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체계를 적시에 수립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사회통합 추진
- 사회통합 1차 과제인 의사소통 해결을 통하여 통합 촉진 기반 마련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 K-팝 연계 방한 관광 상품화 지원을 통한 외래객 유치(1.8만명)
- K-드라마영화 등 한류 테마 대표코스 발굴·개선(9건) 및 가이드북 제작
- K-드라마 IP 활용 체험형 전시 기획 및 운영(7~11월, 청와대 사랑채, 누적 방문객 135,484명)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추진

-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실시 및 국내 수용여건 개선, 유치업체 육성 등
 - 한국의료관광대전(해외 3회) 및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료·웰니스 부문, 국내 1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 및 다양한 방한 판촉마케팅 전개
 - 의료관광비즈니스센터 및 유치업체 방한상품 지원제도 등 지속 운영
-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콘텐츠 발굴 확대, 웰니스관광 체험지원 등
 - ‘우수웰니스관광지’ 확대 선정(‘24년 77개 → ’25년 88개) 및 지역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6개소) 지속 지원
 - 융복합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12개사),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11월), 해외 B2B&C 마케팅(10여 건)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실시

○ 크루즈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에 위한 기반 조성

- 크루즈 거점지사 활용 시장별 차별화된 방한 크루즈 유치 마케팅 기반 마련(뉴욕, 도쿄, 상하이, 프랑크푸르트)
- 해외 크루즈박람회 참가*를 통한 국내 크루즈업계 판로 개척
 - * Seatrade Cruise Global('25.4월), Seatrade Cruise Europe('25.9월)
- 크루즈 팸투어 추진(7회)을 통한 국내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화 및 홍보 지원
- 관계 부처, 지자체 등 협력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2회) 및 크루즈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정 20주년 기념 전시 및 포럼 개최

○ 문화다양성 가치 전국 확산을 위한 주간행사 지역연계 개최

-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부산·충북·전남에서 개최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24년 연구 결과물(입문, 기초 단계 교재)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 심화 단계 교재 개발(시범 적용 포함) 및 자문·감수 진행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K-컬처와 K-관광을 융합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 K-팝 콘서트 연계 관광상품 개발

○ K-드라마와 K-컬처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 K-팬덤 대상 한류관광 정보 전달을 위해 VK특집관·SNS 계정 운영

○ K-관광 대표코스 발굴 및 브랜드화 추진

- K-컬처 연계 민·관 협력형 쇼핑문화관광축제를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 수입 확대 촉진
-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지속 추진
 - 「치유관광산업법」 시행(’26.4.) 계기, 사후 치료(의료)에서 예방·치유(웰니스) 관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료·웰니스관광 융복합 사업 추진
 - 의료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선제적 홍보마케팅 강화
 -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박람회 개최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육성지원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운영 지속 지원(지자체 지원)
- ☐ 지속 가능한 크루즈관광 성장 기반 구축
 -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
 - 글로벌 크루즈 선사·업계 방한 초청 확대, 해외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한국크루즈관광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업계 판로 개척
-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 다양화에 따른 타 문화 이해 증진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5.21.~27.) 및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
-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25년 연구 결과물(심화 단계)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 입문, 기초 1, 2단계, 심화 1, 2단계의 교사용 지침서 및 수업용 보조 자료 개발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K-팝 지원대상 콘서트 공모 및 선정 ■ 대표코스 활용 관광 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 ■ K-드라마 IP 활용 체험형 전시 운영계획 수립 ■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한류지원협력과 관광기반과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마케팅	융합관광산업과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웰니스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선정	융합관광산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현장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과정 개발 계획 수립 ■ 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계획 수립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자료 (입문, 기초 단계) 보완·편집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K-팝 콘서트 연계 방한관광 상품화 및 홍보 ■ 대표코스 홍보 및 상품 개발 지원 ■ K-드라마 체험형 전시 조성 세부계획 수립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	한류지원협력과 융합관광산업과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 크루즈 유관기관 협력 및 크루즈 박람회 개최	융합관광산업과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 행사 개최	융합관광산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현장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과정 개발 ■ 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추진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자료 (기초, 심화 단계) 보완편집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K-팝 콘서트 연계 방한관광 상품화 및 홍보 ■ 대표코스 활용 상품 운영 지원 ■ K-드라마 체험형 전시 조성 및 운영	한류지원협력과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융합관광산업과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융합관광산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현장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과정 운영 ■ 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추진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자료 (심화 단계) 보완편집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K-팝 콘서트 연계 방한관광 상품화 및 홍보 ■ 대표코스 활용 지원 성과 정리 ■ K-드라마 체험형 전시 운영 성과 정리	한류지원협력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융합관광산업과
1-4-2-3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융합관광산업과
3-2-2-2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문화정책과
3-2-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현장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과정 운영 결과 환류 ■ 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결과 환류	문화정책과
3-3-1-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체계 수립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자료 (입문, 기초, 심화) 출간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IV.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4-1-1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한류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과제 내용

- (K-팝 콘서트 연계) 지자체·공공기관 주최 K-팝 콘서트 지원(공모 등을 통해 4개 내외 선정), 콘서트 연계 방한상품화 및 한국관광 홍보
- (한류테마 대표관광코스) K-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한류 팬 맞춤형 대표 코스 발굴·개선 및 여행 상품화 지원
 - 대표코스 중 집중홍보 관광지(33개) 프로모션 확대, 인플루언서 활용 대표코스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여행사(OTA) 협업 관광상품 개발 지원
- (K-드라마 체험형 전시) K-드라마 IP(메인 포스터, OST 등) 활용 체험형 미디어 아트 전시 및 드라마 장면을 활용한 관광지 홍보
- (코리아그랜드세일) 민·관 협력형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26.1월 예정)
 - 항공, 숙박, 체험 등 방한 관광 프로모션 및 쇼핑기획전, 웰컴센터 운영, K-컬처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등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민간협력형 K-뷰티 이벤트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26.6월 예정)
 - 외래객 대상 헤어, 뷰티, 패션, 의료·웰니스 등 K-뷰티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이벤트 등 진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22.12.1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한류관광 활성화)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 지자체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코리아그랜드세일) 문체부 →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추진절차

-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수행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한국관광공사,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코리아그랜드세일)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K-팝 콘서트(4개) 연계 방한관광 상품화 지원

○ 한류테마 대표코스 개선(9개) 및 방한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 6개국(일본, 대만 등) 한류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대표코스 활용 관광 콘텐츠 제작 · 홍보

○ K-드라마 IP 활용 체험형 전시 운영(7월~11월, 청와대 사랑채)

- 드라마 주요장면 전시 및 관광지 정보 제공, 미디어아트 · 유리프리즘을 이용한 몰입형 전시 장치 설치(' 25.10월 기준 누적 방문객 135,484명)

○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25.1.15.~2.28.)

○ 2025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25.6.19.~7.18.)

3. '26년도 추진계획

- (K-팝 콘서트) 지원 대상 콘서트 선정(3월), 상품화 및 홍보(5~11월)
- (한류테마 대표코스) 신규코스 발굴·개선 및 여행상품화 지원(2~12월)
- (K-드라마 체험형 전시) 전시 운영 및 드라마 IP 및 콘텐츠 확충(2~12월)
- (코리아그랜드세일) 항공, 숙박, 체험 등 방한 관광 프로모션 및 쇼핑기획전 구성, 월کم센터 공간 조성, K-컬처 체험프로그램 기획 등('25.12월~'26.2월)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분야별(메이크업, 헤어, 패션, 의료·웰니스) 민간 연계 체험·할인 프로모션 구성, 권역별 거점 공간 조성 등(6월 예정)

☐ 소요예산 : 총 16,37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 원)		12,237	15,249	16,690	16,376	-1.9	
-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12,237	15,249	16,690	16,376	-1.9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	-		
- 기 타(○○○○○)		-	-	-	-		

☐ 산출내역

- 한류관광 활성화: 9,500백만원
 - K-팝 관광 활성화(7,200백만원x1식)
 - K-드라마 관광 활성화(2,300백만원x1식)
-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3,270백만원x1식)
 -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지원(3,606백만원x1식)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적	산출근거
'23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0,000	21,240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24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2,000	22,390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25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4,200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26	K-컬처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발굴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K-팝 공연 연계 외래객 유치 인원수(명)	25,000		실적보고서 결과 취합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 한류지원협력과	전화번호	044-203-3340 044-203-3351
담 당 자	주무관 박혜원 사무관 김지민	이 메 일	parkhywn@korea.kr jimin806@korea.kr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873 044-203-2885
담 당 자	주무관 정다희 사무관 한지혜	이 메 일	dada6008@korea.kr fate6583@korea.kr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전화번호	044-203-2849 044-203-2845
담 당 자	주무관 배영환 사무관 윤아람	이 메 일	longlight4u@korea.kr aram@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한 시장 다변화

☐ 과제 내용

- 항만·관광·출입국 인프라 개선 및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강화
 - 항만 인근 복합관광시설·안내센터·대중교통 및 스마트 관광인프라 지원으로 크루즈 관광객 편의 제고
 - 크루즈 개별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수용여건 개선 및 한국형 테마상품 개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크루즈발전협의회 해수부 공동 추진·개최(2016년~)
- 크루즈 거점 지사 운영(2018년~, 4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추진절차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관광산업 기반조성

- 제19회, 20회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상·하반기 각 1회)

- (주요내용) 상반기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제19회, 문체부 주최) 및 하반기 (제20회, 해수부 주최) 회의 참가, 국내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회원 활동 및 기타 대내외 회의 개최·참가
-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 Seatrade Cruise Global참가('25년.4월)
 - (주요내용) 국내 크루즈 기항지 지자체/RTO/항만공사 공동 참가 한국 홍보관 운영 및 크루즈 컨퍼런스 참가, B2B 상담 등
- 코리아 크루즈 B2B 상담회 개최(연중)
 - (주요내용) 글로벌 크루즈 선사 및 전문여행사, 기항지 등 유관기관 초청 비즈니스상담, 기항지 홍보 및 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 추진 등
- 크루즈 거점지사 4개소 운영을 통한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뉴욕, 도쿄, 프랑크푸르트, 상하이)

3. '26년도 추진계획

- ☐ (연중)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마케팅
 - 뉴욕, 도쿄, 상하이, 프랑크푸르트 총 4개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연중)
- ☐ (1분기)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마케팅
 - 뉴욕, 도쿄, 상하이, 프랑크푸르트 총 4개 크루즈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연중)
- ☐ (2분기) 크루즈 유관기관 협력 및 크루즈 박람회 개최
 -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등 행사 개최
- ☐ (3,4분기) 크루즈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 글로벌 주요 선사 담당자 초청 팸투어 개최
 - 크루즈 클래스별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실시 기반 마련

☐ 소요예산 : 총 50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570	570	785	505	△35.7	
-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기 금(관광진흥 개발기금)	570	570	785	505	△35.7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크루즈 외래관광객 유치 350백만원
-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85백만원
- 크루즈 관광산업 기반조성 7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5%	-	한국관광공 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24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5%	261%	한국관광공 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25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5%	집계중	한국관광공 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26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수 증가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5%	-	한국관광공 사 데이터랩 크루즈통계

* 크루즈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율(%):

(당해년도 크루즈 관광객수-전년도 크루즈 관광객수) / 전년도 체류자수

** '20.2~'23.2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입항 금지기간이므로 23년도 실적 산출 불가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887 044-203-2879
담당자	주무관 남재현 사무관 이수진	이 메 일	summerfinn@korea.kr com115@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의료·웰니스 관광산업의 육성 및 홍보마케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관광 경험 제공,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 과제 내용

- 「치유관광산업법」 시행(’ 26.4.) 계기, 사후 치료(의료)에서 예방·치유(웰니스) 관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료·웰니스관광 융복합 사업 추진
- 의료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선제적 홍보마케팅 강화
-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박람회 개최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육성지원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운영 지속 지원(지자체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제12조의2)
- 2010.~ 의료관광 육성 사업 추진, 2017.~ 웰니스관광 육성 사업 추진
- 2014.~2025.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지원, 2026.~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로 개편하여 운영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 추진절차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추진

-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실시 및 국내 수용여건 개선, 유치업체 육성 등
 - 한국의료관광대전(해외 3회) 및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료·웰니스 부문, 국내 1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 및 다양한 방한 판촉마케팅 전개
 - 의료관광비즈니스센터 및 유치업체 방한상품 지원제도 등 지속 운영
-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콘텐츠 발굴 확대, 웰니스관광 체험지원 등
 - ‘우수웰니스관광지’ 확대 선정(‘24년 77개 → ’25년 88개) 및 지역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6개소) 지속 지원
 - 융복합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12개사),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11월), 해외 B2B&C 마케팅(10여 건)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실시

3. '26년도 추진계획

☐ (연중)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의료관광 주요 거점 지사를 활용한 해외 통합 마케팅(연중)

☐ (1분기) 의료 및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 「치유관광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선정
- 우수웰니스관광지 발굴 및 선정

☐ (2분기) 의료·웰니스관광 행사 개최

-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추진

☐ (3분기)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 의료·웰니스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4분기) 의료·웰니스관광 기반조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

○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웰니스관광 협의체 운영

☐ 소요예산 : 총 13,41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6,231	15,520	13,516	13,416	△0.7	
-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지특회계)		3,000	2,700	2,700		
	▪ 기 금 (관광기금)	13,231	9,520	8,116	8,016	△1.2	
- 지방비	▪ 광역시·도비	3,000	3,000	2,700	2,700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방한 의료관광 유치 지원 3,788백만원

○ 웰니스관광산업 육성 4,228백만원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6개소) 5,4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27만명	60만명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집계
'24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29만명	117만명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집계
'25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62만명	(집 계 중)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집계
'26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만명)	75만명	-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집계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873 044-203-2885
담당자	주무관 정다희 사무관 한지혜	이 메 일	dada6008@korea.kr fate6583@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10년)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4년)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과제 내용

- 문화다양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년 주기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민의식, 문화향유 및 창조의 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3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실시
- ('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실시
- ('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시범실시
- ('18년) 정책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실시
- ('20년) 2020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22년) 2022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23년) 2023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실시
- ('24년) 2024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신규승인 완료 및 조사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전문연구기관
- 추진절차 : 조달청 공공입찰 통한 용역기관 선정 → 계약체결 및 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실태조사 법정 조사주기(2년)에 따른 미 실시

3. '26년도 추진계획

☐ 일반국민(15세이상 내국인)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등 조사

☐ 소요예산 : 총 25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89	198	-	250	250.0	
- 국 비	▪ 일반회계	189	198	-	250	250.0	
	▪ 특별회계(회계명)						
	▪ 기 금(기금명)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추진	1	1	연구결과
'24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추진	1	1	연구결과
'25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미시행	미시행			
'2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기반 마련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추진	1	1	연구결과

※ 신규 국가통계 승인('24.7월) 및 법정 조사주기(2년)에 따라 '26년도 실시 예정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15 044-203-2518
담당자	주무관 이다현 사무관 신호심	이 메 일	dahyun123@korea.kr nodoubt@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정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행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 과제 내용

- 국제연합(UN)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문화다양성 주간(5.21.~5.27.) 행사 개최(1회)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공연, 전시, 강연, 포럼,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4.11.29.) 이후 매년 추진(~15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 추진절차 : 위탁계약 체결(문체부·전담기관) → 용역기관 선정(전담기관) → 주간행사 추진(주최: 문체부, 주관: 전담기관) →대금 지급 및 결과보고(전담기관) →감사(문체부)

2. '25년도 추진 실적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주간행사 개최*(5.21.~5.27.)

-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스페셜 큐레이터 10인 선정),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20주년 기념 포럼, 지역 문화다양성 행사 개최(부산·충북·전남문화재단), 체험 프로그램 운영(다양섬 탐험대, 책 읽어 주세요) 등으로 55만여명 참여

3. '26년도 추진계획

- ☐ (1분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
- ☐ (2분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 ☐ (3~4분기)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추진
- ☐ 소요예산 : 총 1,000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500	500	1,000	100.0	
- 국 비	▪ 일반회계	500	500	1,000	100.0	
	▪ 특별회계 (회계명)	-	-	-	-	
	▪ 기 금 (기금명)	-	-	-	-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	-	
- 기 타(○○○○○)		-	-	-	-	

☐ 산출내역

○ 문화다양성 주간 대국민 캠페인 추진 1,00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지원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횟수	1	1	실적보고서
'25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지원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횟수	1	1	실적보고서
'26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지원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최 횟수	1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23 044-203-2518
담당자	주무관 서나현 사무관 신호심	이 메 일	nahyun23@korea.kr nodoubt@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전반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과제 내용

- (유아동·청소년) 교사 그룹이 중심이 되어 범교과* 주제 중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한 교육 현장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 (지역사회문화시설 연계) 지역사회 유아·아동·청소년 이용 시설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실’ 추진
 -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 (민간단체 연계) 기업, 대학의 ESG 및 DEI 활동에 공존과 포용의 문화다양성 가치가 직접적으로 매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특수성 반영한 프로젝트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5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지침서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 ('16년~'17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1기, 4개교),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18년~'19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2기, 4개교),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0년~'21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3기, 3개교), 교사 연구회 1개교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2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4기, 2개교), 교사연구회 1개교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3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5기, 4개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4년) 문화다양성 연구교사 선정 및 지원,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5년) 문화다양성 연구교사 지원(중·고교 각 5명), 유·초·중등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산업단지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진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전담기관
- 추진절차 : 위탁계약 체결(문체부·전담기관) → 용역기관 선정(전담기관) → 교육 운영 → 대금 지급 및 결과보고(전담기관) → 감사(문체부)

2. '25년도 추진 실적

☐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

- (교과연구 지원) 교과연구 교사 선정·지원(30명)
- (전문인력 양성) 교원·문화기관종사자(지역문화재단 등)·문화콘텐츠제작자(감독·작가 등)·성인 대상 직무연관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과정 개발·운영(온·오프라인 연수)
- (찾아가는 교육) 산업단지 관계자,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진행(11개기관, 총 21회)
 - 교육대상별 실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종료('26)

3. '26년도 추진계획

- ☐ (1분기) 현장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지역문화시설·민간단체 연계) 추진계획 수립, 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 ☐ (2-3분기)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 (4분기) 운영 결과 환류

☐ 소요예산 : 총 6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500	620	1,100	600	-45.4	
- 국 비	▪ 일반회계	500	620	1,100	600	-45.4	
	▪ 특별회계(회계명)						
	▪ 기 금(기금명)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현장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지역문화시설·민간 연계) 560백만원

○ 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연구 지원 4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정도(점)	83.4	83.6	실적보고서
'24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정도(점)	84	84.8	실적보고서
'25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정도(점)	84	사업수행중 (~25.12)	실적보고서
'26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종)	2	-	문화다양성법 제13조, 14조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15 044-203-2518
담당자	주무관 이다현 사무관 신호심	이 메 일	dahyun123@korea.kr nodoubt@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 증가, 구성 다변화에 따라 사회통합 1차 과제인 의사소통 해결을 통하여 통합촉진 기반* 마련

※ 한국어 취약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를 통하여 사회통합 연착륙을 도모

□ 과제 내용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한국어 표준교육과정(문체부 고시, '20.11.) 기반의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을 근거로 교재·학습 콘텐츠 등 개발 전략 계획 수립
- 입국 전후별·체류 외국인 체류 경로 및 생애 주기 등 이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장기체류 목적의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내용 체계 구축
- '25년 연구 결과물(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심화 단계)) 수정·보완
- 입문, 기초 1~2 단계, 심화 1~ 2단계의 교재 출간 및 지침서·수업용 보조자료 개발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개발 추진계획(안)

'24년	'25년	'26년
•기초 연구, 만족도요구 조사 등 •교재 모형 및 교수요목 설계 •대표 단원 제작 및 현장 적용 •입문, 기초 단계 집필 ※ 입문, 기초 단계 가본 제작	•전년도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심화 단계 교재 집필 •입문 기초 단계 교재의 부속자료 집필 ▶ ※ 입문·기초 단계 교재 편집·제작, 심화 단계의 교재 가본, 입문과 기초 단계 부속 자료 제작	•전년도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심화 단계 부속 자료(지침서, 보조 자료) 집필 ▶ ※ 결과물의 편집·제작 완료

☐ 과제추진 연혁(경과)

- 2023.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록
- 2023. 1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2024. 1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입문, 기초) 가본 개발
- 2025. 1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심화) 가본 개발

☐ 추진체계

- 추진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법무부(협업)→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심화) 개발

-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쓰일 교재 개발을 고려하여 구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안)

구분		단계	
입문		입국 준비 단계	
기초(초급)	기초 1	입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	생활 한국어 학습 단계
	기초 2		근로 현장 한국어 학습 단계
심화(중급)	심화 1	정착 이후 장기 체류를 위한 단계	직군별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
	심화 2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단계

3. '26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계획

-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지침서, 보조자료) 개발 계획 수립
- 2/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지침서, 보조자료) 개발 착수
- 3/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지침서, 보조자료) 개발 추진
- 4/4분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지침서, 보조자료) 완료

☐ 소요예산 : 총 1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69	157	160	100	△37.5	
- 국 비	▪ 일반회계	69	157	160	100	△37.5	
	▪ 특별회계(회계명)						
	▪ 기 금(기금명)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재 개발 1식×100,000,000원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지침서, 보조자료 개발 등 포함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건수(종)	1	1	실적보고서
'24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 건수(종)	1	3	실적보고서
'25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 건수(종)	2	2	실적보고서
'26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 교육 체계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 건수(종)	5	-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전화번호	02-2669-9742 02-2669-9743
담당자	학예연구관 이보라미 학예연구사 전경선	이 메 일	blee0927@korea.kr sunnyjun@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방송권역 내 거주 및 방문 외국인을 주 청취 대상으로 뉴스와 날씨 등 각종 생활정보, 관광정보 및 한국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송권역 해당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과제 내용

- FM라디오 방송(정규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거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생활·재난 정보 등을 제공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국무조정실 주재 「영어 라디오방송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02년 11월)
결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운영주체로 확정하고 '03년 제주에서 FM영어방송을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예산 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과제 수행주체)
- 추진절차 : 사업자(국제방송교류재단) 예산 교부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

- 한국정보(뉴스, 생활정보, 재난속보 등) 및 K-문화 콘텐츠(K-Pop, 음식, 관광, 트렌드 등) 제공 프로그램 3,949편 제작·방송

3. '26년도 추진계획

☐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계속)

○ 한국/정보, 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949편을 제작·방송하여 1일 24시간 방송

< 아리랑국제라디오방송(영어FM) 분기별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 >

[단위 : 편]

추진시기	한국/정보	인문/교양	문화/예술	제주 특화	특집	비고
1분기	187	360	360	90	-	24시간 방송
2분기	192	364	364	91	-	
3분기	195	355	368	92	-	
4분기	195	276	368	92	-	
연간 전체	769	1,355	1,460	365	0	3,949

☐ 소요예산 : 총 1,595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775	1,775	1,595	1,595	0.0	
- 국 비	▪ 일반회계				1,595		
	▪ 특별회계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1,775	1,775	1,595	0	0.0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정규 프로그램 제작 : 1,413백만원

- 한국/정보 프로그램 : 337백만원(438천원×769편)
- 인문/교양 프로그램 : 428백만원(316천원×1,355편)
- 문화/예술 프로그램 : 491백만원(336천원×1,460편)
- 제주 특화 프로그램 : 157백만원(430천원×365편)

○ 제작지원비 : 182백만원(저작권료, 음반자료 구입, 청취행태조사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75.9%	75.8%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편)	4,317	4,317	프로그램 제작실적
'24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75.7%	75.8%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편)	4,317	4,329	프로그램 제작실적
'25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75.7%	예정 (12월)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편)	3,949	예정 (12월)	프로그램 제작실적
'26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조사	제주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75.8%	-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	Radio 프로그램 제작편수(편)	3,949	-	프로그램 제작실적

5. 담당자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정책관 해외홍보콘텐츠과	전화번호	044-203-3380
담당자	4급 윤경미	이 메 일	ykm70@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5	100%	5,187	6,217	19.9%
1. 경 제	3	60%	4,500	5,500	22.2%
2. 안 전					
3. 통 합	1	20%	687	717	4.4%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1	20%			

추진 방향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및 제도 개선 추진
- 결혼이민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주요 내용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부처 추천제 운영 및 홍보
 - '26년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운영 방안 수립,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제도 홍보
- 고용허가제를 통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 모니터링
 - 음식점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지속 홍보,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운영, 고용 음식점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노사 애로사항 청취 등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 * '24년 90개소, 2,550명 배정 → '25년 110개소, 3,047명 배정
-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
 - 결혼이민여성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통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부처 간 협력
 -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운영,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필요사항 협의 등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458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459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461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463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②-②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463
1-2-③-③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466
1-3.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1-3-①-③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469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①-②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확대	472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5-1-②-②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475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5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5개	1950.5	4,147	5,187	6,217	19.9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	617.5	3,430	4,500	5,500	22.2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비예산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비예산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617.5	3,430	4,500	5,500	22.2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1)	1,333	717	687	717	4.4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333	717	687	717	4.4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						
5-1-2-2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비예산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 안정적 인력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등 공공 부문 인력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 ☐ 음식점업 구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 시범 활용은 높지 않은 상황
- ☐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자녀세대의 성장에 따른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필요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 '25년 주요과제 성과
 - 농업 분야 외국인력(E-8, E-9) 역대 최대 배정으로 농번기 인력 수급 대응
 - * 외국인력(계절근로, 고용허가) : ('23) 5만명(3.5, 1.5) → ('24) 7.7(6.1, 1.6) → ('25) 9.7(8.7, 1.0)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선정·지원 외에 지자체 주도*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도 허용하는 등 운영방식 다양화('25.6. 사업 시행지침 개정)
 -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선정·지원(농식품부 승인)
↳ 전남 해남군 1개소(문내농협) 지자체 자체 사업 운영('25.9.)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25.8., '26.2.시행)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 근거 법제화(법 제10조의2 신설)
 -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지속 및 도입 요건 완화
 - '25년 고용허가 신청·접수 회차별(총 5회)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홍보 추진
 - * (업종) 한식, 외국식, (업력) 5년 이상, (지역) 전국, (직종) 주방 보조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요건 중 직무 범위 완화
 - * ('24. 1차 개선) 업종·지역 확대 및 업력 일부 완화 → ('25. 2차 개선) 홀서빙 직종 확대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을 운영하여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 및 영농지식 수준에 따라 단계별(기초·심화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맞춤형 1:1 농업교육 지원
- 여가부와 협업*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미래세대캠프 운영
 - *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바이오생명센터(김제), 미래환경센터(봉화), 생태센터(부산)에서 장소와 프로그램 진행 등을 협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음식점업 단순노무 외국인력 시범 도입 및 요건 완화 및 고용관리 병행
 - (문제점) 주방보조와 홀서빙 인력을 구분 없이 활용하는 음식점 현장이 많고, 소규모 음식점은 홀서빙과 주방보조 인력을 따로 고용할 여력 없음
 - * 내국인 근로자나 다른 비자 외국인력도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를 광범위 수행하고 있어 E-9 비지만 직종 제한 실효성 낮은 상황
 - (개선)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 범위에 홀서빙 업무(음식서비스 종사원, 45311) 추가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에 일(日) 단위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5: 90개소 → '26: 110p)
- ☐ 공공 기숙사 건립 확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 도모
 - * '22~'23년 10개소, '24~'26 10개소, '25~'27 10개소, '26~'28 5개소, 총 35개소 건립 추진
- ☐ 고용허가제를 통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 모니터링
 - 음식점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지속 홍보
 -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을 운영하여 사전에 외국인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외국인력(E-9) 고용 중인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근무 여건 자율 개선 유도

☐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및 정착지원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개선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AI 등 디지털 교육 신규 도입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방안 수립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고용허가 신청·접수 회차별 홍보 및 희망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운영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연중) ■ ‘26년 사업 담당자 설명회(’ 26.1~2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3-1-3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6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연중)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 승인(∼’ 26.2월) ■ 교육 운영 기관 선정 및 교육 대상자 모집(∼’ 26.3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고용허가 신청·접수 회차별 홍보 및 희망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운영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상반기 현장점검(’ 26.5~6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3-1-3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6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 협의회(’ 26.5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지역별 업무 담당자 및 멘토 사전교육(~ ‘26.4월) ■ 농업 및 정착지원 교육과정 진행 (‘26.4~10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고용허가 신청·접수 회차별 홍보 및 희망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운영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담당자 워크숍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교육 현장 점검(‘26.6~9월) ■ 교육 만족도 조사(‘26.9~11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2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개선(협조)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 영 및 홍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고용허가 신청·접수 회차별 홍 보 및 희망 사업주 대상 사전교 육 운영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하반기 현장 점검(’ 26.10~11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1-3-1-3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협조)	■ ‘27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심 사협의회(’ 26.12월)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결혼이민여성농업교육 워크숍 (‘26.11~12월) ■ 교육결과 및 정산보고(‘26.12 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2-2-2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개선(협조)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H-2등)를 점수제로 평가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국내 정주유도

☐ 과제 내용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부처추천제 운영 및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 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제도 홍보 등
 -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을 위해 농업·어업·제조업·뿌리산업·건설업·조선업 등 산업별 별도 쿼터 운영 중(법무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숙련기능인력 제도시행('17년)
-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19년)
 - * 농업쿼터 : ('19) 50명 → ('21) 50 → ('22) 150 → ('23) 1,600 → ('24) 1,600 → ('25) 1,600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K-point E74) 본격 시행('23.9월)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24.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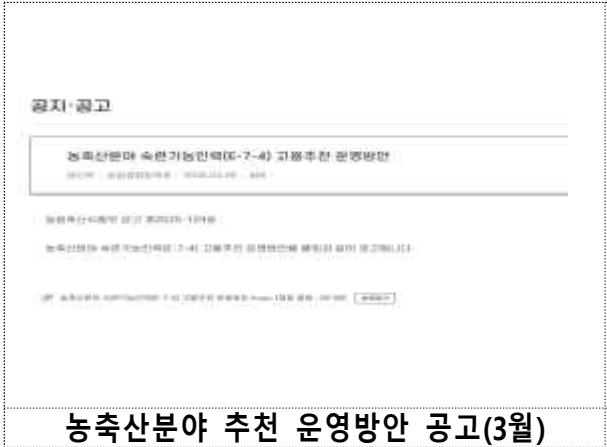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농식품부 · 해수부 · 산업부 등(협조)
- 추진절차 : 쿼터배정(법무부) → 부처추천제 운영(각 부처)

2. '25년도 추진 실적

-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 운영('25.8. 기준 실적 : 561명)
- '25년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운영방안 수립(2월), 도농인력 중개플랫폼 온라인 홍보(분기별 1회)

<주요 홍보 실적>

 농축산분야 추천 운영방안 공고(3월)	 온라인 홍보 배너(분기별 1회)
--	--

3. '26년도 추진계획

- ☐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부처추천제 운영 및 제도 홍보
 - '26년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운영방안 수립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 농촌인력중개센터,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	숙련기능인력 온라인 추천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100%)	구축 완료 (100%)	
'24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홍보실적(건)	4회 (분기별1회)	완료 (100%)	
'25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홍보실적(건)	4회 (분기별1회)	완료 (100%)	
'26		숙련기능인력 제도 홍보	홍보실적(건)	4회 (분기별1회)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4
담당자	5급 이종화	이 메 일	sajanabi@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에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으로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과제 내용

- '26년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지속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추진 결정(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3.11.27.)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1차 개선(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4.7.19.)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2차 개선(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4.5.15.)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 농림축산식품부(부), 음식점업 관련 협회(협조)
- 추진절차 : 차년도 E-9 도입운용계획 수립(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신청·접수 기간 공고(고용부) → 홍보(고용부·농식품부) 및 희망 사업주 사전 교육(농식품부, 음식점업 관련 협회)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부) → E-9 도입(고용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E-9 고용사업장 모니터링(농식품부, 음식점업 관련 협회)

2. '25년도 추진 실적

- ☐ 음식점업 단순노무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시범 운영 요건 개선 및 지원
 - (허용요건 2차 개선) 음식점업 특성(소규모,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 범위에 홀서빙 업무(음식서비스 종사원, 45311) 추가
 - *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25.5.15.) / 적용시점: (기존 사업장) 고용계약서 변경 후 바로 적용, (신규 사업장) '25. 3회차 신청부터
 - (고용관리 병행) E-9 고용사업장 주기적 모니터링(반기 1회) 및 애로사항 청취
 - * ('24.下~) 입국 초기 / 외식협회 회원사 → ('25.下~) 반기 1회 / E-9 근로 고용 사업장
- ☐ 고용허가제를 통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 모니터링
 - 음식점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지속 홍보
 - 농식품부 누리집·SNS, 음식점업 관련 협회·지자체 및 배달앱의 사업주 전용 채널 등 연계 홍보
 -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을 운영하여 사전에 외국인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외국인력(E-9) 고용 중인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근무 여건 자율 개선 유도

3. '26년도 추진계획

- ☐ 고용허가제를 통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 모니터링
 - 음식점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지속 홍보
 - 매 분기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기간 집중 홍보
 -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을 운영하여 사전에 외국인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외국인력(E-9) 고용 중인 음식점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노사 애로 사항 청취 실시

☐ 산출내역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해 당 없 음 ('24 신 규)					
'24	음식점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시범 추진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허용요건 1차 개선	-
'25	음식점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추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도입 안정화	고용허가 신청·도입을 위한 홍보 등 지원	지속 도입	허용요건 2차 개선	-
'26	음식점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추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도입 안정화	고용허가 신청·도입을 위한 홍보 등 지원	지속 도입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전화번호	044-201-2170
담당자	5급 이미영	이 메 일	mylee2009@korea.kr

1-3-1-3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주관)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과제 내용

-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간 MOU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 농협이 고용한 후 일(日) 단위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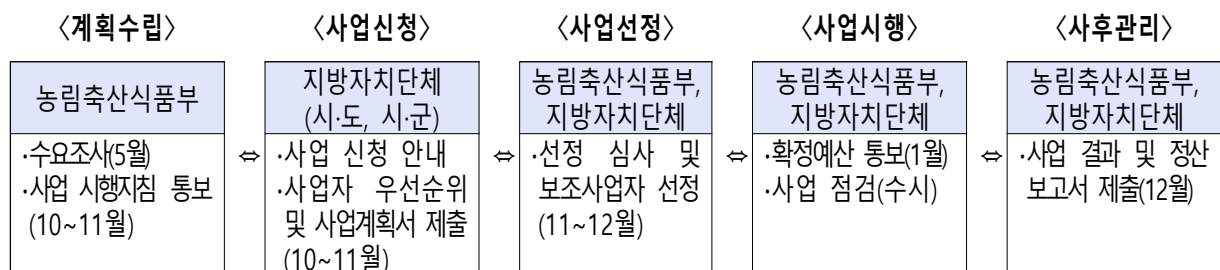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5개소)
-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본사업 추진(19개소)
- 202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70개소)
-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90개소)
-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110개소p)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협업)→ 지자체, 농협중앙회

○ 추진절차



2. '25년도 추진 실적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24: 90개소, 2,550명 배정 → '25: 110개소, 3,047명)

○ 공공형 계절근로 조기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선정·지원 외에 지자체 주도* 운영 방식도 허용('25.6. 사업 시행지침 개정)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선정·지원
↳ 전남 해남군 1개소(문내농협) 지자체 자체 사업 운영('25.9.)

3. '26년도 추진계획

☐ 분기별 추진계획

○ 사업담당자 이해 제고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26.1분기)

○ '26년 상반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 현장점검('26.2분기)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담당자 워크숍('26.3분기)

○ '27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26.4분기)

○ '26년 하반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 현장점검('26.4분기)

☐ 소요예산 : 총 11,0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정부안)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235	6,860	9,000	11,000	122.2	
- 국 비	▪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농특)	617.5	3,430	4,500	5,500	122.2	
	▪ 기 금	-	-	-	-	-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	-	-	-	
	▪ 시·군·구비	617.5	3,430	4,500	5,500	122.2	
- 기 타		-	-	-	-	-	

☐ 산출내역

○ (공공형 계절근로) 110개소×개소당 100백만원×국비 5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소수(개소)	19개 소	19개소	지자체 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현황
'24				70개 소	70개소	
'25				90개 소	90개소	
'26				110개 소	-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1
담당자	5급 김동우	이 메 일	amurokdw@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촌 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 과제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10~)

- 농업종사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단계별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현장실습, 농촌역사·문화 등을 교육

○ 1:1 맞춤형 농업교육('09~)

-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여성 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작물재배 실습 등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영농정착지원('09~)

-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배우자, 시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농촌·농업의 이해과정,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을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 1. 과제 추진
- 2010. 1. 예산 및 교육인원 확대
- 2019. 1. 청소년 과정 신규 운영
- 2020. 1. 단계별 농업교육 세분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 →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영농정착 지원

- 기초농업교육, 농기계 사용법,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 교육, 가공 실습 등 6차 산업교육 등을 통해 영농후계인력으로 육성(161명p)
- 결혼이민여성과 전문여성농업인을 1:1로 연계하여 작물재배 전과정, 마케팅 및 선진 재배농법 견학 등을 통해 전문 농업교육 제공(252명p)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지역 내 이해증진 프로그램 및 농촌·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탐색·체험 교육(550명p)

3. '26년도 추진계획

☐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총 71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333	717	687	717	4.4	
-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농특회계)	1,333	717	687	717	4.4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결혼이민여성농업교육) 717백만원

- (단계별 농업교육) 384백만원 = 15개소 × 100% × 25.6백만원
- (1:1 맞춤형 농업교육) 200백만원 = 250명 × 100% × 800천원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133백만원 = 550명 × 100% × 242천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출근거
'2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교육 인원 확대	교육수료 인원(명)	1,984	2,258	농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서
'24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교육 인원	교육수료 인원(명)	930	1,465	농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서
'25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교육 인원	교육수료 인원(명)	930	-	농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서
'26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실시	교육수료 인원(명)	800		농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전화번호	044-201-1566
담당자	5급 남경원	이 메 일	njyuan@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지속되어 농업분야 근로인력 부족 문제 심화
 - 농업분야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E-8)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과제 내용

-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분야 확대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현장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농업분야 계절근로 배정 확대('23: 35,604명→ '24: 61,248→ '25: 86,948)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법무부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 계절근로(E-8) 체류기간 연장(최장 3개월의 범위) 허용('23.6.)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범위 확대(APC 등), 최소임금보장 기준 조정('23.6.)
 - 체류기간 상한(5→8개월) 확대, 안전관리 의무준수 강화, 언어소통도우미 배치기준 등 보완('25.9.)
-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1차 사업자 선정('25.10., 법무부)
 - * 2개소 신청에 2개소(경기 포천 1개소지자체 출연기관, 경남 의령 1개소농업법인) 선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 추진절차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지침 마련 등 운영 총괄
- (농식품부)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협의→ 계절근로자 주거여건 개선 (기숙사), 농업고용인력전문기관(농정원, 농협중앙회) 지정·애로사항 상담 등으로 농작업 적응 및 안정적 체류·정착 지원→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 (지자체) 계절근로자 도입, 교육, 관리 등 운영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 '25년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24: 61,248명→ '25: 86,648명)
-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추진('24: 70개소→ '25: 90개소)
-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개정('25.9.)

-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3. '26년도 추진계획

- ☐ '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5.12.)
- ☐ '25년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26.1분기~)
- ☐ '26년 하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6.2분기)
- ☐ '27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26.4분기)
- ☐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필요사항 협의·추진 등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강화	계절근로 배정인원 확대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34,614	34,614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현황
'24				45,631	61,248	
'25				86,648	-	
'26				-	-	

5. 담당자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21
담당자	5급 김동우	이 메 일	amurokdw@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3	100%	977	977	0.0%
1. 경 제	3	100%	977	977	0.0%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 ▶▶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및 외국인 기술인력 선발

주요 내용

- ▶▶ 첨단산업 우수인재 유치제도 정책 홍보 강화
 - 첨단인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 확대
- ▶▶ 뿌리산업 양성대학 선정·운영 및 외국인 기술인력 선발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계획 협약 체결
 - 양성대학 졸업자 대상 기량 검증* 실시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운영 대학 점검 및 연차 평가
 - * 필기·면접·실습 평가를 통해 전문성, 숙련도, 한국어 능력, 가치관·품성 등을 종합 평가
- ▶▶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국내기업 채용박람회 및 소규모 상담회 개최
 - '25년 Global Talent Fair 외국인 유학생 채용관 운영 : 구인 기업 102개 사, 유학생 2,869명 참여
 - 부울경권(부산대) 및 대전·충남권(KAIST) 외국인 유학생 채용 상담회 개최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481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482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483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484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①-③ 첨단산업 글로벌 최상위 인재 확보	484
1-2-②-④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486
1-2-④-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489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03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0개	160	190	977	977	00.0	'의경우'△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과제수)					00.0	
1-2-1-3	첨단산업 글로벌 최상위 인재 확보			797	797	00.0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비예산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160	190	180	180	00.0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산업인력난 심화 및 해외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첨단분야 등 핵심산업은 산업 발전과 혁신을 주도할 우수 해외 인재 유치가 필수적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첨단산업 글로벌인재 확보) 첨단산업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신설 및 K-Tech Pass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정착 지원
 -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교육 커리큘럼 개선 및 개발 추진
 - 해당 대학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업 및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만족도 제고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국내기업과 외국인 유학생의 구인·구직 수요 대응을 위한 Global Talent Fair 및 권역별 채용상담회 개최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 (첨단산업 글로벌인재 확보) 해외인재 유치 전주기(탐색▶입국▶정착) 맞춤 지원 서비스 제공
- ☐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뿌리기업에 숙련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
-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지방소재 구인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수도권 유학생 채용상담회 정례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6년도 운영계획 협약 체결 ■ '26년도 상반기 기량검증 시행	산업부 뿌리산업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3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 첨단인재 거점지역 유치홍보	산업부 산업알자리혁신과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6년도 운영현황 중간점검	산업부 뿌리산업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6년도 하반기 기량검증 시행	산업부 뿌리산업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산업부 산업알자리혁신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26년도 양성대학 연차평가	산업부 뿌리산업팀
1-2-4-2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지방 외국인유학생 취업 상담회 추진 (잠정)	산업부 산업알자리혁신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2-1-3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첨단산업 분야 최상위 인재의 국내유치를 위해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

☐ 과제 내용

- 첨단산업분야 최상위 인재 대상 특별비자 발급 및 정주여건 개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4. 9. 27.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계기 「해외인재 유치전략」 발표
- 20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계기 탐티어 비자 및 K-Tech Pass 프로그램 시행방안 발표
- 2025. 4. 2. K-Tech Pass 프로그램 개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추진절차 : 첨단분야 최상위 인재 대상 정주지원 혜택 제공

2. '25년도 추진 실적 : 제도 신설

- 첨단산업분야 최상위 인재 대상 특별비자 발급 및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 개시
 - 비자 발급절차 신속·간소화, 출입국 우대 등 비자 발급 편의 제고
 - 소득세 감면(50%) 혜택 대상자에 포함 등 정주 애로사항 해소

3. '26년도 추진계획

- ☐ 첨단산업 우수인재 유치제도 정책 홍보 강화
 - 첨단인재 거점지역 중심으로 제도 홍보확대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 소요예산 : 총 797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0	0	797	797	0.0	
- 국 비	▪ 일반회계			797	797	0.0	
	▪ 특별회계					0.0	
	▪ 기 금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기 타							

- ☐ 산출내역
 - 인재유치 거점무역관 운영비, 온라인 구인 지원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	-	-	-	-	-
'25	첨 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첨단산업 우수인재 유치	특별비자 신설여부	신설	신설	관련 문서 등
'26	첨 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첨단산업 우수인재 유치	인재유치 네트워킹 행사 개최여부	4회	-	관련 문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국 산업일자리혁신과	전화번호	044-203-4224
담당자	5급 박성은	이 메 일	seongep1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뿌리기업에 숙련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성대학을 선정, 유학생을 양성하고 졸업 후 내국인 기피 업종인 뿌리산업에 인력 공급

☐ 과제 내용

- (대학 선정·운영)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경험이 우수한 대학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운영
- (기술 인력 선발)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실시하여 기술인력 선발

※ 기량검증 : 필기시험, 면접, 실습평가를 통해 전공 뿌리기술 분야의 전문성, 숙련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품성 등을 종합 평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4. 10. 양성대학 3개(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대학 선정
- 2015. 10. 양성대학 5개(거제대, 군장대, 아주자동차대, 인하공전, 전주비전대) 추가 선정
- 2016. 9. 뿌리산업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지표 개발
 - NCS 세분류,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 활용
- 2017. 11. 양성대학 1개(산업기술대) 추가 선정
- 2018. 1. 양성대학 2개(조선대, 인하공전) 선정 취소
- 2019. 1. 양성대학 1개(산업기술대) 선정 취소
- 2020. 1. 양성대학 2개 추가 선정(경기과기대(표면처리), 영남이공대)

- 2022. 12. 양성대학 3개 추가 선정(경기과학기술대(금형, 용접), 서정대, 조선이공대)
- 2023. 12. 양성대학 2개 추가 선정(부천대, 인하공전)
- 2024. 2. 양성대학 2개 추가 선정(동원과기대, 충북보건과학대)
- 2025. 1. 양성대학 1개(영남이공대) 선정 취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추진절차

- (양성대학) 양성대학 선정 → 협약 체결 → 양성대학 운영
- (기량검증) 기량검증 공고 → 외국인유학생 신청 → 기량검증 실시
→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2. '25년도 추진 실적

☐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유학생 양성

- 기량검증 신청자(졸업예정자) 377명, 기량검증 합격자 수 290명

☐ 외국인 유학생 기량검증 실시(2회)

- 2025년 2월 졸업자 대상 8개교(군장대, 서정대, 전주비전대, 계명문화대, 경기과기대, 영남이공대, 아주자동차대, 거제대) 기량검증 실시
- 2025년 8월 졸업자 대상 8개교(군장대, 서정대, 전주비전대, 계명문화대, 경기과기대, 영남이공대, 아주자동차대, 거제대) 기량검증 실시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연차평가 위원회 개최('25.12)

- 뿌리산업 양성대학(학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해당학과의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한 종합 점검

3. '26년도 추진계획

☐ 2026년도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계획 협약 체결(1분기)

※ 2025년말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

☐ 2026년 2월 졸업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1분기)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운영 대학 중간점검(2분기)

☐ 2026년 8월 졸업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3분기)

☐ 2026년도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연차평가(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2	선정대학 협약
'24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2	선정대학 협약
'25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0	선정대학 협약
'26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외국인유학생 숙련인력 공급	양성대학(학과) 추가선정	1	-	선정대학 협약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산업공급망정책과	전화번호	044-203-4907
담당자	7급 김정아	이 메 일	ja338@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수요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로 우수인력의 재유출 방지

☐ 과제 내용

-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국내기업 채용박람회 및 소규모 상담회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9.01.07 : 해외전문인력유치사업 추진근거 마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2011.10.06~07 : KIAT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이관, 최초 개최
- 2023.08.21~22 : KOTRA 해외취업·외투기업·외국인 유학생 3종 채용 박람회를 Global Talent Fair로 통합 개최
- ' 25.05.19~20 : Global Talent Fair^{외국인유학생채용관} 17회차 개최
- ' 25.09.18 : 부울경권(부산대) 외국인 유학생 채용상담회 개최
- ' 25.09.25 : 대전·충남권(KAIST) 외국인 유학생 채용상담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추진절차 : 참여기업 모집 → 외국인 유학생 모집 → 박람회 개최

2. '25년도 추진 실적

☐ 2025년 Global Talent Fair 외국인유학생 채용관

○ 일시/장소 : 2025.5.19.(월) ~ 20(화), 10:00 ~ 17:00 / COEX

○ 결과 : 구인기업 102개사, 외국인유학생 2,869명 참여

□ 부울경권(부산대) 외국인 유학생 채용상담회

○ 일시/장소 : 2025.9.18.(목), 13:00~17:00 / 부산대 기계관 국제회의장

○ 결과 : 구인기업 9개사, 외국인유학생 173명 참여

□ 대전·충남권(KAIST) 외국인 유학생 채용상담회

○ 일시/장소 : 2025.9.25.(목), 11:00~18:00 / KAIST 인터내셔널 센터

○ 결과 : 구인기업 10개사, 외국인유학생 156명 참여

3. '26년도 추진계획

□ 수도권 1회, 지방 소규모 상담회 2회 개최

○ (수도권, 2분기)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공동주관으로 “Global Talent Fair (외국인유학생 채용관)”를 개최하여 취업탐색 기회 확대

○ (권역별) 지역 소재 기업·유학생 구인구직 수요 대응을 위해 권역별 소규모 상담회 2회 추진(26년중 대상지역·시기 확정 예정)

□ 소요예산 : 총 18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160	190	180	180	0.0	
- 국 비	▪ 일반회계	160	190	180	180	0.0	
	▪ 특별회계					0.0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장치, 운영비 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개최횟수	1회	1회	개최횟수
'24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개최횟수	1회	1회	개최횟수
'25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개최횟수	1회	3회	개최횟수
'26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개최횟수	3회	3회	개최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전화번호	044-203-4224
담당자	5급 박성은	이 메 일	seongep16@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1	100%	4,385	5,911	0.7%
1. 경 제	1	100%	4,385	5,911	0.7%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주요 내용

-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 확대 및 외국인 환자 권익·편의 증진
 - (유치 채널 확대) 중동 국비 환자 확대 및 해외의료인 연수 다각화
 - *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통한 18개 교육과정 운영
 - (유치기관 관리 강화) 4주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 활성화
 -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의 경우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 지정
 - (환자 권익·편의 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통역지원 강화
- ※ ('22년) 24.8만 명 → ('24년) 117만 명 외국인 환자 유치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495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496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497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498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1-4-②-③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98

I .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1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1개	4,864	4,365	4,385	5,911	34.8	'의 경우'△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0.0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864	4,354	4,385	5,911	34.8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확대·성장*에 따라, '09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를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20) 710억달러→('25) 1,820억달러(Glasgow Research & Consulting Report, '22)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진료환경 개선, 관련 전문인력양성 등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강화 지원을 통해 '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 돌파 발표(4.3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전세계의 의료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중

-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 강화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 외국인 환자 유치채널 확대 및 외국인 환자 권익·편의 증진을 통한 외국
인환자 유치 활성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해당사항	없음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 발표	복지부 보건산업해외 진출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실시	복지부 보건산업해외 진출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제10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복지부 보건산업해외 진출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4-2-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다양화 및 외국인 환자 권익·편의 증진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과제 내용

- (유치채널 확대) 주요국 정부 간 협력 및 외국의료인 국내 연수를 통한 환자 유치채널 발굴·확대
- (환자 권익 및 편의 증진) 외국인환자 권익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의료통역 지원 강화 등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 ('16.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6.10월) 제1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 ('17.1월) 1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시행
- ('18.10월)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 ('22.3월)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
- ('22.6월) '2022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시행계획' 수립
- ('22.12월)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4주기 기준 마련

○ ('23. 5월) '2023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 지원 시행계획' 수립

○ ('24.9월) 제9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출연금, 민간위탁),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민간위탁)

○ 추진절차 : 사업계획보고(진흥원·개발원)→ 사업계획 승인(복지부)→ 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 유치

○ (유치채널 확대) 해외 의료인 국내 연수 다각화를 통해 대외에 한국 의료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의료인 대상 비대면 온라인 연수과정(Medical Korea Academy e-class) 운영('24년 총 54개국 515명 수료)

○ (유치기관 관리 강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인증*하여 의료 질 제고

* (인증기관) '24년 13개 기관 → '24년 15개 기관 인증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의 경우 법무부 우수유치기관 지정 우대

○ (환자 권익 및 편의증진)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실시*

* '24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 총72명 최종 합격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관련 정책 지속 시행

○ (유치채널 확대) 중동 국비환자 확대 및 해외의료인 연수 다각화(연중, 3분기)

-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통한 18개 교육과정 운영(3분기)

○ (유치기관 관리 강화) 4주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활성화(3분기)

-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의 경우 법무부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심사면제)

○ (환자 권익 및 편의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통역지원 강화(4분기)

- 2026년 제1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필기, 실기) 실시

□ 소요예산 : 총 5,911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4,864	4,354	4,253	5,911	39.0	
- 국 비 ▪ 일반회계	4,864	4,354	4,253	5,911	39.0	

□ 산출내역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3,968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지원 : 1,811백만원

○ 사업관리 기본경비 : 132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27만명	60만명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24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27만명	60.6만명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25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70만명	117만명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25.상반기)
'26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수	외국인환자 유치 수(명)	140만명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26.상반기)

5. 담당자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전화번호	044-202-2982
담당자	5급 조철수	이 메 일	anatomy9@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9	100%	2,022	2,030	0.4%
1. 경 제	5	55.6%			
2. 안 전					
3. 통 합*	2	22.2%	2,022	2,030	0.4%
4. 인 권	2	22.2%			
5. 협 력 / 인프라					

*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과제 사업(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 추출 불가로 관련 예산 제외

추진 방향

- ▶ 외국인 노동자 도입으로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 촉진
- ▶ 근무환경 개선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 존중

주요 내용

- ▶ 산업현장 요구 인력 선발을 위해 송출국 현지 훈련 강화
 - ※ 베트남 등 7개국 용접, 금형 분야 등 기능인력 1,434명 훈련('25.9. 기준)
- ▶ 신규 고용허가 업종 확대 필요성 및 노동시장 영향 등 분석·검토
 -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 시범사업 운영성과 모니터링 및 전문가 분석을 거쳐 본사업 전환 방안 마련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외국인 유학생 중 E-7 취업이 어려운 자를 E-9으로 취업 전환 허용
- ▶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근무환경 개선
 -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축산·어업 집중점검, 주거시설 실태조사 실시
-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평생 직업능력 개발 등
- ▶ 외국인근로자 고충 해결 등 권익 보호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임금체불 보증보험 홍보 지속 등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505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506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509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512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1-②-②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훈련 및 관리 강화 ...	512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③-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514
1-2-③-③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516
1-2-③-④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518
1-2-③-⑤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520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②-②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제도	522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①-①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524
3-3-②-①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527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4-1-①-①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530
4-1-①-② 차별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532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9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5)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2)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2)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10개						'의경우'△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5)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비예산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비예산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비예산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비예산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비예산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2-1-2-2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비예산 통합(4-1-1-1)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1,406,431	1,312,644	1,183,359	1,136,304	△4.0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1,986	1,971	2,022	2,030	0.4	
	4.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2)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비예산
4-1-1-2	차별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비예산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력(E-9) 고용 허용해 달라는 현장 요구 확대 지속
-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고 특히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 돌파함에 따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도 부각

* 외국인 체류인원(통계연보, 법무부): ('19) 252만 → ('24) 265만

** 외국인 취업자(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19) 86만 → ('24) 100만

- 외국인력(E-9) 허용 확대 등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면서도 외국인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역사회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노동자도입, 허용업종 요건 완화 등으로 인력난 완화
 - (외국인노동자 도입) 산업별 부족인력, 현장 인력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 결정

* E-9 도입규모(쿼터): ('22) 6.9만 → ('23) 12만 → ('24) 16.5만 → ('25) 13만

- (허용업종 확대) 음식점업·호텔콘도업·택배업 허용요건을 완화해 서비스업 인력공급 노력(' 25.5~)

* ▲음식점업: (직종) 홀서빙 추가,

▲택배업: (직종) 분류 직종 추가

▲호텔콘도업: (지역) 서울·부산·강원·제주·경북, (협력업체)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 계약한 협력업체 → 일정기간 이상 도급계약 체결한 협력업체

- (점수제 개편)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고, 외국인 고용여건이 좋은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점수제 항목 개편(' 25.9.~)

○ 외국인노동자 근로조건 등 권리보호

- (근로조건 보호) 외국인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정기·수시로 지도·점검 실시
 - 특히 폭염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작업 현장, 숙소 실태 등 점검하여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호 노력
 - 임금체불에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통합 감독하여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실질적 개선 도모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선정해 노동관계법령 집중 감독 실시
- (권익보호) 차별없는 일터 조성 노력
 -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노동법 위반 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제도 안내 문자, 리플릿 발송(17개국 번역본)
 - 인권침해 등 집중신고기간(8월, 3주간) 및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 운영(매주 수)
 - 이름 부르기 캠페인 등 노동존중 캠페인 등 실시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류지원

- (훈련지원) 결혼이민자 등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해 산업현장 적응 지원
- (고충상담) 17개국 언어로 24시간 운영하는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 개소해 임금, 근로시간 등 다양한 고충에 대한 답변 제공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중무휴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 다국어상담원(62명) 배치 등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 (지역사회 안착)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9개소)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특화 사업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인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문제 부각
 - 권익보호 제도 안내, 신고·상담의 날 운영, 고충상담 창구 다양화, 사업장 지도·감독 등으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외국인노동자 도입으로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 촉진

- 경기전망, 인력 부족률 등 반영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쿼터 결정
- 직종별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노동 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
-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해 내국인 기피 업종의 구인난 해소

☐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외국인노동자 인권 존중

- 외국인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정기·수시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
 - 특히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고용 제한 강화해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해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특화사업 등 확대,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조기 적응 지원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실시 등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임금·퇴직금 수령에 차별없도록 보호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산업현장 수요 및 현지 인프라 등 고려해 직종 확대 및 표준문제지 개선 등 추진(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가사관리사 안정적 근무 지원(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실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관계부처 현장 실태조사 등 통해 신규 허용업종 확대 필요성 검토(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시스템 점검해 비자정보 연계 정상 작동 확인(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실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등에게 훈련비 등 지원(연중)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내방·전화상담 및 3자통역 서비스 제공(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지도·점검 실시(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4-1-1-2	차별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실시 및 홍보(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산업현장 수요 및 현지 인프라 등 고려해 직종 확대 및 표준문제지 개선 등 추진(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가사관리사 안정적 근무 지원(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실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관계부처 현장 실태조사 등 통해 신규 허용업종 확대 필요성 검토(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시스템 점검해 비자정보 연계 정상 작동 확인(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실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등에게 훈련비 등 지원(연중)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내방·전화상담 및 3자통역 서비스 제공(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실시(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4-1-1-2	차별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실시 및 홍보(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산업현장 수요 및 현지 인프라 등 고려해 직종 확대 및 표준문제지 개선 등 추진(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가사관리사 안정적 근무 지원(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실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관계부처 현장 실태조사 등 통해 신규 허용업종 확대 필요성 검토(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시스템 점검해 비자정보 연계 정상 작동 확인(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실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등에게 훈련비 등	고용노동부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지원(연중)	인적자원 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내방·전화상담 및 3자통역 서비스 제공(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실시(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4-1-1-2	차별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실시 및 홍보(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9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 산업현장 수요 및 현지 인프라 등 고려해 직종 확대 및 표준문제지 개선 등 추진(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1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가사관리사 안정적 근무 지원(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실
1-2-3-3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관계부처 현장 실태조사 등 통해 신규 허용업종 확대 필요성 검토(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4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안 제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1-2-3-5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탄력 대응	■ 시스템 점검해 비자정보 연계 정상 작동 확인(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실
3-3-1-1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등에게 훈련비 등 지원(연중)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3-3-2-1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내방·전화상담 및 3자통역 서비스 제공(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4-1-1-1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실시(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4-1-1-2	차별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실시 및 홍보(연중)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1-2-2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직종별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노동 시장에 적시 공급하여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종의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송출국 현지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해 외국인력 선발
 - 한국어 교과 및 전공 교과(용접 등)로 훈련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송출국에서 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국내 기업에 알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베트남 등 6개 국가* 621명 훈련 실시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 ('24) 베트남 등 5개 국가* 651명 훈련 실시

* 베트남, 네팔,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훈련계획 수립 → 훈련생 모집 신청·선정 →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접수 → 훈련대상자 확정 → 훈련 실시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최종 합격자 선정 → 구직자명부 작성·관리 → 뿌리기업 우선 알선

2. '25년도 추진 실적

☐ 베트남 등 7개 국가* 용접, 금형 분야 등 기능인력 1,434명('25.9월말) 훈련 실시

*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3. '26년도 추진계획

☐ 국내 뿌리 직종 산업현장 수요 및 현지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직종 확대 및 표준문제지 과제 개선 추진

○ (직종 확대) 뿌리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를 고려, 인력난이 심각한 직종 대상으로 우선 도입 검토

○ (과제 개선) 국가별 훈련 여건 및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과제 및 채점 기준 타당성·현장성 제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6개 국가 600명 이상 훈련 실시	5개 국가 651명	내부 자료
'25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7개 국가 700명 이상 훈련 실시	-	내부 자료
'26	송출국 현지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선발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 기능인력 훈련 국가 및 훈련 인원	8개 국가 800명	-	내부 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력수급대응TF	전화번호	044-202-7223
담당자	5급 김정천	이 메 일	hi0011@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활용

☐ 과제 내용

-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기관이 가사관리사(E-9)를 고용하여,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시 외국인력의 활용방식 다양화 검토
- ('2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 수립
- ('2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인증기관 선정 → 시범사업 수행 → 사업평가 및 본사업 추진 여부 검토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

- 이용가정 및 가사관리사의 높은 만족도('24.11월 설문조사)* 등 외국인력의 돌봄가능성 확인, '25.2월 시범사업 연장 의결(외국인력정책위)

* (이용가정) 서비스 품질만족 84%, (가사관리사) 계속근로 희망 73%

-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 및 고용계약 연장 후 83명 근무 중('25.9월말)

☐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여부 검토

- 시범사업 결과,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 모두 높은 만족도 보이는 등 일정 성과
- 다만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력 활용보다 돌봄서비스 체계 전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본사업 확대시행이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은 미추진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기존 가사관리사들은 취업활동기간(~'27.8월) 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가사관리사 사업 시행	가사관리사 도입 및 확대 여부 검토	도입 및 확대 여부 검토	시범 사업 시행	내부자료
'25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가사관리사 사업 시행	가사관리사 본사업 여부 검토	본사업 여부 검토	-	내부자료
'2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가사관리사 사업 시행	가사관리사 안정적 근무 지원	기존 가사관리사 근무 지원	-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45
담당자	5급 최주현	이 메 일	dipelrlo33@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최근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 확대

☐ 과제 내용

-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E-9) 신규 허용방안 마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인력난 심화 업종 대상 E-9 고용 확대 및 H-2 네거티브 허용 방식 전환
- ('24) 음식점업(외국식, 시범) 및 뿌리업종 중견기업(본사 수도권+사업장 비수도권) E-9 허용 요건 개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주관), 신규 허용 업종 관련 주무부처(협업)
- 추진절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각 부처 차관) 상정·의결 → 외국인력 선발·도입

2. '25년도 추진 실적

☐ 서비스업 시범사업 요건 완화를 통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 25.5.)

- 음식점업·호텔콘도업(홀서빙 추가), 택배업(분류업무 추가) 등 직종 확대
- 호텔콘도업 지역 확대 및 요건 완화

* (기존) 서울·부산·강원·제주 /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 체결한 협력업체 → (개선)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라 순차적 확대 ('25.6월 경북 추가) / 호텔·콘도업체와 일정 기간 이상 도급계약 체결한 협력업체

3. '26년도 추진계획

- ☐ (업종 공통) 고용부·관계부처(해당 업계 등) 공동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규 고용 허가 업종 확대 필요성 및 노동시장 영향 등 분석·검토

* 업종 확대 필요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의결 추진

- ☐ (음식점업·호텔콘도업) 관계부처(농식품부·문체부)와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전문가 분석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 방안 마련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E-9 신규업종허용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25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26	현장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허용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확대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여부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공고문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력수급대응TF	전화번호	044-202-7735
담당자	5급 김경은	이 메 일	eunkk33@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E-9 근로자 해외 도입 방식 외에 국내 체류 중인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근로자로 활용하여 뿌리기업 등 현장의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으로 전환하여 인력 활용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 22.1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시 유학생 특례 신설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외국인고용법」 개정 → 사업계획 마련 → 사업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중 (' 24.6., 임이자 의원)

* 유학생 중 E7으로 취업 어려운 지는 E9으로 취업토록 하여 숙련인력 활용 기회 제고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위한 국회 소통 등 적극 지원
 - 법 개정애 따라 관계부처(법무부 등)와 협업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방안 구체화 등 후속조치 진행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법 개정 추진	법 개정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4.6.)
'25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법 개정 추진	법 개정	개정안 발의	-	개정안 발의
'26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법 개정 추진	법 개정	개정안 발의	-	개정안 발의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력수급대응TF	전화번호	044-202-7735
담당자	5급 김정은	이 메 일	eunkk33@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부처(법무부·고용노동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의 입국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주 만족도 제고

☐ 과제 내용

- 사업현장의 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허가제 EPS 시스템간 추가 정보 연계를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4) 비자 발급 시스템 연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정책 결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사업 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스템 연계로 비자 발급 정보 연계 완료

3. '26년도 추진계획

- ☐ 법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과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스템 연계로 비자 발급 정보 연계 완료해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전산 연계 추진	비자 신청시 신청 정보 연계	정보 연계 여부	정보 연계	비자 발급일 연계	내부자료
'25	전산 연계 추진	비자 신청시 신청 정보 연계	정보 연계 여부	정보 연계	-	내부자료
'26	전산 연계 추진	시스템 점검	시스템 점검	시스템 점검	-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2
담 당 자	5급 안성수	이 메 일	power82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근무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추진

☐ 과제 내용

- 근로계약 체결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 및 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시 관련 부처와의 공유 활성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등 근로감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추진절차 : 근로감독 필요 사업장을 선정하여 관할 관서별로 감독

2. '25년도 추진 실적

- ☐ 외국인고용사업장 총 1,492개소 점검(상·하반기 3,000개소 실시 예정)
- ☐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 실시(1차: 3월 2주간, 2차: 6월 3주간)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동 과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4-1-1-1번 과제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과 내용이 유사하여 4-1-1-1번 과제에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 강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1회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내부자료
'25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근로감독 강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1회	-	-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528
담당자	5급 최충운	이 메 일	choi1974@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창업 촉진 및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

☐ 과제 내용

- 결혼이민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적합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의 45%~85% 지원(5년간 300~500만원 한도)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 참여 시 훈련비 전액 지원(단, 취업률 40%미만 직종은 80% 지원)하고,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수강시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지원(1회는 자부담 면제, 2회부터는 자부담 부과)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 ①구직신청(훈련생, 고용센터) ⇨ ②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고용센터) ⇨ ③훈련상담(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 ④훈련과정 수강(훈련생, 훈련기관) ⇨ ⑤훈련비 등 지급(고용센터)

2. '25년도 추진 실적

-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 719명에게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25.9월말 기준)
-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여 참여 독려

3. '26년도 추진계획

-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의 이·전직 등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훈련 수시 공급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 (평생크레딧)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및 심층 경력설계 지원
- ☐ 소요예산 : 총 1,136,304백만원('26년 정부안 기준)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정부안)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406,431	1,312,644	1,183,359	1,136,304	-4.0	
- 국 비	▪ 일반회계	519,043	591,270	580,161	627,325	8.1	
	▪ 기 금 (고용보험)	887,388	721,374	603,198	508,979	△15.6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전체 예산으로 작성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787명	전년수준
'25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	전년수준
'26	취업지원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확대	결혼 이민자 훈련참여 인원	400명	-	전년수준

※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참여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이주청소년의 참여실적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목표 및 실적에서 제외(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 중 내일배움카드 훈련 실시인원으로 목표 및 실적 산정)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4-202-7318
담당자	5급 윤주희	이메일	hha4906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히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효과적으로 지원

☐ 과제 내용

-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계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정책 수립, 사업목표 설정 및 예산 계획 승인)
→ 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 강화

(단위 : 건)

구 분	계	전화상담	3자통화	내방상담	번역지원
2025.9월	340,636	288,315	42,379	8,628	1,314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내방·전화상담 및 3자통역 서비스 제공(계속)

☐ 소요예산 : 총 2,03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정부안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986	1,971	2,022	2,030	0.4	
- 국 비 : 일반회계	1,986	1,971	2,022	2,030	0.4	

☐ 산출내역

○ 상담센터 인건비

- 현지원상담원(52명*2,460,400원*12월)
- 분야별 전문상담원(5명*2,660,090원*12월)
- 시스템 및 통계관리원(2명*2,660,090원*12월)

○ 상담센터 운영비

- 건물관리비(7,000,000원*12월)
- 상담시스템 유지보수(6,000,000원*12월)
- 공공요금(5,000,000원*12월)
- 물품구입(750,000원*12월)
- 안내사업(100원*200,000장)
- 고용허가제 등 실태조사(20,000,000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적	산출근거
'24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실적(건)	42만건	43만건	전년 대비 5% 증가 (내부 자료)
'25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실적(건)	42만건	-	최근 3년 실적 평균 및 E-9 체류인원 고려
'26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실적(건)	42만건	-	최근 3년 실적 평균 및 E-9 체류인원 고려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8
담당자	5급 이태진	이 메 일	43greatway@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근로조건, 산업안전 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하여 노동권 확보 및 법 준수 의식 제고

☐ 과제 내용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고용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숙소 실태조사
- 산업안전부서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수칙 위반 여부 등 산업안전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3~) 매년 상·하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추진절차 :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방관서 별로 점검 실시

※ 계획수립- 자가진단(점검 대상 3배수) - 현장점검 - 위반사항 조치

2. '25년도 추진 실적

- ☐ 외국인고용사업장 총 1,492개소 점검(상·하반기 3,000개소 실시 예정)

- ☐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 실시(1차: 3월 2주간, 2차: 6월 3주간)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3,000개소 대상으로 외국인고용법,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등 위반 여부 지도·점검
 -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축산·어업을 집중점검(점검 물량의 40% 배정)
 - 주거 실태조사 병행 실시 → 주거시설 형태(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등),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 여부 등 확인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00개소	3,000개 소	점검 결과
'25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00개소	-	점검 결과
'26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00개소	-	점검결과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력수급대응TF	전화번호	044-202-7739
담당자	5급 노대윤	이 메 일	nodaeyun199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임금채불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 과제 내용

- 임금채불 보증보험의 경우 민원인 편의 제고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위해 재고용 시 별도 절차 없이 갱신되도록 자동 갱신 방안 추진
-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등록된 현지 계좌로 보험금을 송부하는 자동환급제 내실화
- 휴면보험금의 경우 송출국 현지에서 EPS 센터를 통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 ('19) 베트남, 캄보디아 → ('20)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동티모르, 몽골 → ('21) 네팔, 중국, 필리핀 → ('22) 중국 방문동포(H-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보험사업자

2. '25년도 추진 실적

- ☐ '25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실적: 2,185건 지급 ('25.9월 기준)
- ☐ 임금채불 보증보험 실적: 997건 지급 ('25.9월 기준)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위해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 보험 자동환급제도 홍보 지속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 취업교육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보증보험 홍보 지속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자동 환급 동의율	70%	81%	내부자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제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건수)	전년도 대비 20% 향상	2,422건	내부자료
'25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자동 환급 동의율	75%	-	내부자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제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건수)	전년도 대비 5% 향상	-	내부자료
'26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 실시	자동환급 동의율 제고	자동 환급 동의율	75%	-	내부자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제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건수)	전년도 대비 5% 향상	-	내부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52
담당자	5급 안성수	이 메 일	power827@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성평등가족부

성 평 등 가 족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4	100%	77,124	80,441	4.3%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3	75%	64,184	66,792	4.1%
4. 인 권	1	25%	12,940	13,649	5.5%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주요 내용

- ▶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 홍보
-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통번역, 한국어 교육 등 운영
-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영유아기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및 자녀 대상 학습 프로그램, 취학 전·초등 전 학년 대상 기초학습 지원, 청소년기 정서 상담 및 진로 설계 지원
-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 보호시설(33개소), 상담소(9개소)를 통한 보호·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보호시설·상담소 현장 점검, 보호시설 입소자 만족도 조사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537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538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539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540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증진	
3-2-2-①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540
3-3-1-②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542
3-3-3-③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545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2- 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548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4개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개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4개	60,368	76,859	77,124	80,441	4.3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3)	48,574	64,664	64,184	66,792	4.1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482	462	510	510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15,841	18,110	19,001	19,846	4.4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32,251	46,092	44,673	46,436	6.2	
소계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11,794	12,195	12,940	13,649	5.5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11,794	12,195	12,940	13,649	5.5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다문화가구는 43만 9천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123만9천명('24년 기준)에 이르며 지속 증가 추세

-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학습·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수: ('21) 289,529명 → ('22) 299,440명 → ('23) 308,402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별·편견 해소 도모
-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정착단계 및 자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미래 인재육성
- 다문화가족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 정착과 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한국생활정보안내를 13개 언어에서 16개 언어*로 확대 제공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카자흐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뿐 아니라 장기 정착기 직업훈련 등 지원 강화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 강화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2-1-1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3-3-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가족센터 등을 통해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3-3-3-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언어발달, 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 역량강화 지원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찬탈·강제매매방지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해당사항	없음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현장점검	성평등가족부 찬탈·강제매매방지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0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4-2-2-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만족도 조사	성평등가족부 찬탈·강제매매방지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3-2-1-1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 및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 대상 이해교육 실시

☐ 과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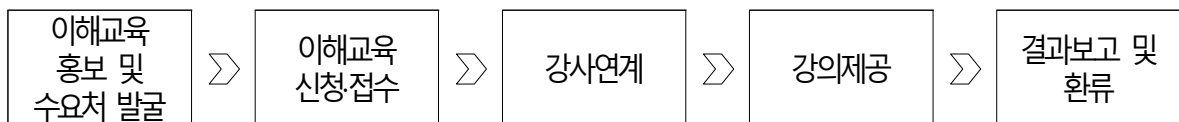
-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연령별 맞춤형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연계
- 이해교육 홍보 및 전문강사 관리, 효과성 조사 등 성과관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11년부터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추진절차 : 온라인 다문화배움터 운영 및 찾아가는 이해교육 운영



2. '25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온·오프라인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실시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운영
 - 학교,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 유관 교육기관에 교육자료 연계를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 저변 확대

3. '26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풀 구축
-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 다문화인식개선 관련 홍보 등

☐ 소요예산 : 총 51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482	462	510	510		
- 국 비	▪ 일반회계	482	462	510	510		26년예산 미확정임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278	312	전년(22년) 실적대비 3% 증가
24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321	439	전년(23년) 실적대비 3% 증가
'25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330		24년 목표치(321) 대비 3% 증가
'26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자 수 (단위:천명)	340		25년 목표치(330) 대비 3% 증가

* 목표치가 전년도에 비해 하향 설정된 경우 그 이유를 표 아래에 기재

5. 담당자

소관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72
담당자	4급 이경운	이 메 일	95okwoon@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종합적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

☐ 과제 내용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 21개소('0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07)38개소→('08)80개소→('09)100개소→('10)159개소→('11)200개소→('12)200개소→('14~)218개소→('20~)228개소→('22)230개소→('23~'24)231개소→('25~)235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성평등가족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가족센터
- 추진절차 : 성평등가족부(사업지침) → 지자체(사업시행)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시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25.8월말 기준) : 434,144명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25.8월말 기준) : 22,088명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운영

☐ 추진일정

- 가족사업안내 지침 교부(1월)
-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역량강화지원 사업 실적 점검(매월)
- 사업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6. 하반기

☐ 소요예산 : 총 19,84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5,841	18,110	19,001	19,846	4.4%	
-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 금 (양성평등기금)	7,594	8,792	9,174	9,546	4.0%	
- 지방비	▪ 광역·시·도비	8,247	9,318	9,827	10,300	4.8%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 국비 7,335만원
 - 400명 × 38.04백만원 × 30~70% = 7,335백만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 국비 2,211백만원
 - 231개소 × 20.1백만원 × 30~70% = 2,211백만원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보조율 : 30~70%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연인원)	60,951명	62,576명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24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이용자수(연인원)	62,779명	60,880명	
'25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및 역량강화 지원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용자수(연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용자수(연인원)	478,061명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26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및 역량강화 지원 이용자수 확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용자수(연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용자수(연인원)	478,061명		

5. 담당자

소관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69 02-2100-6377
담당자	5급 선강희 6급 김지민	이 메 일	zzzam1500@korea.kr kimjimin0815@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글로벌 미래 인재로 육성

☐ 과제 내용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및 청소년기 상담,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년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기초학습 지원 시작(78개소, 90개소)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14.7월~)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09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성평등가족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가족센터
- 추진절차 : 성평등가족부(사업지침) → 지자체(사업시행) → 가족센터·다문화 가족지원센터(사업시행)

2. ' 25년도 추진 실적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진로설계 지원 확대
 - 기초학습 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24) 168개소 → ('25) 183개소
 - 진로설계 지원 : ('22) 78개소 → ('23) 113개소 → ('24) 143개소 → ('25) 135개소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25.8월 기준, 누적 연인원) : 298,578명
- 언어발달지원서비스('25.8월 기준, 누적 연인원) : 123,018명

3. ' 26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영유아기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및 자녀 대상 학습프로그램 지원
- 취학 전·초등 전 학년 대상 기초학습 지원, 청소년기 정서상담 및 진로 설계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 및 진로설계 등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 추진일정

- 세부 운영계획 수립, 예산 교부 : '25. 1월 중
- 홍보 및 참여자 발굴, 세부사업 추진 : '25. 2 ~ 연중
- 사업설명회, 월별 실적 및 현장점검 : 연중
- 사업결과(정산) 보고서 작성, 보고 : ~ '26. 2월

☐ 소요예산 : 총 47,43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32,251	46,092	44,673	46,436	3.9	
-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 금 (양성평등기금)	15,382	22,087	21,432	22,278	3.9	
- 지방비	▪ 광역시·도비	16,869	24,005	23,241	24,158	3.9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6,557백만원
- 이중언어 학습 지원 : 4,772백만원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기초학습, 진로설계) : 10,949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적	산출근거
'23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 수(명)	145,371명	145,371명	
'24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 수(명)	254,399명	289,435명	
'25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 수(명)	254,399명		
'26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수 확대	기초학습 지원 이용자 수(명)	254,399명		

5. 담당자

소관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69 02-2100-6377
담당자	5급 선강희 6급 김지민	이 메 일	zzzam1500@korea.kr kimjimin0815@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지원, 주거 제공,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과제 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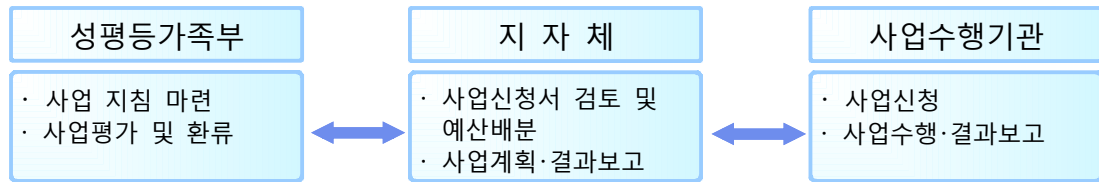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04.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시작(2개소)
- 2009.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별도 사업 분리(복권기금 지원)
 - 이주여성 쉼터 18개소('09),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지원('10)
- 20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신설(1개소)
- 2013.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4개소 확대
- 201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개소 확대(쉼터2, 그룹홈1)
- 2015.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1개소 확대
- 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개소 확대(쉼터1, 그룹홈1)
- 201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 확대
- 2019.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 2020.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4개소 확대
- 2021.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추진절차



2. '25년도 추진 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

○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숙식제공 등 서비스 지원 지속 확대

※ 보호시설 : ('23) 130,020건 → ('24) 134,213건 → ('25.6월) 60,486건(잠정치)

상담소 : ('23) 66,830건 → ('24) 70,810건 → ('25.6월) 36,249건(잠정치)

3. '26년도 추진계획

☐ 폭력피해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한 보호·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연중)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장점검(3/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만족도 조사(3/4분기)

☐ 소요예산 : 총 13,649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11,794	12,195	12,940	13,649	5.5	
- 국 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양성평등기금)	7,350	7,609	7,891	8,363	6.0	
- 지방비	▪ 광역시·도비	4,444	4,586	5,049	5,286	4.7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 6,832백만원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 1,531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적	산출근거
'2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실적	신규		
'2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실적	165,968	209,883	실적보고서
'2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실적	179,360	집행 중	실적보고서
'26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실적	183,100		실적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구	전화번호	02-2100-6582/6447
담당자	5급 이유경, 6급 박은수	이메일	koko2121@korea.kr pes926@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3년 비예산	2025년 비예산	증 감 률
계	2	100%			
1. 경 제					
2. 안 전	2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주요 내용

-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지원
 - 전문건설업체 담당자 대상으로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
 -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안내
- 외국인 부동산거래 조사 지속 실시
 -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 세부계획 수립,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비(非)주택(오피스텔 등)·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 실시
 - ※ 외국인 주택거래('24.6~'25.5. 신고분) 중 이상 거래(438건) 조사 완료, 290건 위법 의심 행위 적발
 - 외국인 비주택·토지거래('24.7.~'25.7 신고분) 중 이상 거래(167건) 조사 진행 중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554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555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557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558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②-⑤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558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②-①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561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2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증감(%)	
합계	2개					'-'의 경우 '△'
소계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	-	-	비예산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	-	-	비예산

Ⅱ.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정책여건

- 건설업 특성과 맞지 않는 **외국인력 규제***로 인하여 **불법인력이 양산**

* 과도한 잔여공기 규제, 이동제한 규제, 재입국특례 미적용 등

- 규제 개선 등 합법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낮거나, 단계적으로 합법 외국인력으로 교체 중인 상황으로 **과도기 상태**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설명회를 통해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추진

*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련 기관(법무부, 건설협회 등)과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정책여건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통한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기행위 적발** 필요

- 110대 국정과제 중 7번 과제(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회복을 위한 주거안정실현)에 외국인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포함*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한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 추진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력 제도 간담회 개최 계획수립('25.3), 수요조사 실시('25.4), 일정 조율 및 간담회 개최('25.4~11)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외국인 주택거래('24.6~'25.5 신고분) 중 이상거래(438건)에 대한 조사 완료 하여 291건의 위법의심행위 적발(~25.10)
- 외국인 비주택·토지거래('24.7~'25.7 신고분) 중 이상거래(167건)에 대한 조사 진행 중(~'25.12)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25.11월 예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①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건설업 숙련기능인력 활용에 따른 제도 안내

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지속 실시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개최	국토부 건설산업과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불법성, 투기성 거래 조사 세부계획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주택 이상거래 기획 조사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非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 조사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IV.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1-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설명회를 통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및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

☐ 과제 내용

-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건설사에 건설업에 활용 가능한 외국인력 비자 제도 종류, 외국인 고용 절차, 규정 등 안내
 -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사의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개선 : '22년 하반기 ~

년도	주요내용	비고
'22	○ 노동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외국인력 합법 활용 및 관리 등, '22.11. 4)	
'23	○ 노동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외국인력 제도개선 및 합법 고용 등 '23. 9.15) ○ 건설업 외국인력(E7-4 등) 정책 설명회('23.11.14) ○ 국회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방안 토론회('23.11.29)	
'24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및 활용방안 간담회('24. 5 ~ '24.10, 총 6회)	
'25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및 활용방안 간담회('25. 7 ~ '25. 11, 총 9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전문건설협회
- 추진절차 : 전문건설협회 16개 시·도회 수요조사 → 설명회 일정 조율 및 계획수립 → 지역별 설명회 개최

2. '25년도 추진 실적

○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및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25. 7 ~ ' 25.11, 총 9회)

<간담회 개최 상세>

순	구분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1	철근·콘크리트 공사협회	'25. 7. 4(금), 14시	서울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110명
2	세종·충남도회	'25. 7.30(수), 13시 30분	충청남도보훈관 1층 기획전시실	95명
3	충북도회	'25. 8. 5(화), 14:00	충북미래여성플라자	60명
4	강원특별 자치도회	'25. 8.12(화), 14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40명
5	인천사회	'25. 8.21(목), 14시	인천상공회의소 1층	45명
6	경기도회	'25. 9. 1(월), 14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고홀	60명
7	경기도회 (의정부)	'25. 9. 8(월), 14시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한울관	40명
8	울산사회	'25. 9.26(금), 14시	울산가족문화센터 A동 대강당	108명
9	서울사회	'25.11.10(월), 17시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시행예정

3. '26년도 추진계획

☐ 설명회 개최

○ 건설업 외국인력 정책 설명회(' 26. 2분기 개최 예정)

- 외국인 고용절차,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개선 및 변경 사항 등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 안내

☞ 전문건설업체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합법 외국인력 고용 유도

☐ 소요예산 : 비예산(전문건설협회 자체 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5회	6회	설명회 개최 횟수
'25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6회	9회 (예정)	설명회 개최 횟수
'26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6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7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6회	-	설명회 개최 횟수
'28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업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	설명회 개최	6회	-	설명회 개최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90
담당자	5급 이연주	이 메 일	yileee90@korea.kr

IV.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2-2-2-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실시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과제 내용

-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추가 기획조사 실시, 토지·비(非)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동향분석 및 기획조사 병행 추진
- 외국인 기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외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거주지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23.8.22 시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2.5. 과제 추진, '24.12.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토교통부, 법무부, 관세청 등(협업) → 한국부동산원
- 추진절차 : 조사대상(부동산거래 신고 中 이상거래건) 선정 → 한국부동산원·국토부 기획조사 후 위반혐의건 관계기관* 조사의뢰 → 관계기관* 처분

* (관계기관)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주택거래('24.6~'25.5 신고분) 중 이상거래(438건)에 대한 조사 완료 하여 291건의 위법의심행위 적발(~25.10)

○ 외국인 비주택·토지거래('24.7~'25.7 신고분) 중 이상거래(167건)에 대한 조사 진행 중(~'25.12)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25.11월 예정)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 세부계획 수립(2분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 조사(3분기), 비주택(오피스텔 등)·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4분기)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투기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비주택, 외국인 토지 조사	2회	2회	보고자료
'24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투기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 조사, 외국인 토지·비주택 조사	2회	2회	보고자료
'25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투기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 조사, 외국인 토지·비주택 조사	2회	2회	보고자료 ('25.12월 예정)
'26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외국인 투기 조사 실시	외국인 주택 조사, 외국인 토지·비주택 조사	2회	-	보고자료

5. 담당자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전화번호	044-201-3590
담당자	5급 고건우	이메일	gwgoh@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해 양 수 산 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3	100%	11,971	10,812	△9.7
1. 경 제	1	33.3%	1,298	1,298	0.0%
2. 안 전	2	66.7%	10,673	9,514	△10.9%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강화,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사업 등 추진
- ▶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 보안 인력 확보

주요 내용

-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활동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 타 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지역협의체 활동, 크루즈 체험단 운영 및 유튜브 등 매체 홍보 등
- ▶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예방 및 위법행위 점검
 - 상·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추진(근로계약 체결현황, 인권침해 여부 등)
 -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 이행점검 협의회 운영
 - 외국인 선원 고충상담센터(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협중앙회) 운영, 고충상담 및 해결 지원
- ▶ 항만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 방지 등 항만 국경관리 강화
 -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 항만 경비초소 신축 등
 - 전국 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566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557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569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570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1-4-①-② 크루즈관광 활성화	570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②-①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제도	574
2-3.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3-②-②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578

I .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3개	8,630	7,816	11,971	10,812	△9.7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1)						
1-4-1-2	크루즈 관광 활성화	1,140	1,098	1,298	1,298	0.0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제도						비예산
2-3-2-2	항만국경관리 선진화	7,490	6,718	10,673	9,514	△10.9	

II. 20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 여건

- 전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감소를 완전히 회복하여 '19년 29.7백만명 → '23년 31.7백만명 → '27년 40.9백만명까지 성장 예상
 - 산업성장기에 외국적 크루즈선의 우리나라 기항을 늘리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크루즈수요 확대 등 추진 필요
- 외국인선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선원 노동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 증가
 - * (고용현황) ('21년) 27,333명 ('22년) 28,281명, ('23년) 30,436명, ('24년) 32,521
 -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및 이탈·불법체류 예방 필요
- 테러 예방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 필요
 - 테러위협 및 무단이탈 사고 등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하여 보안 시설장비 및 인력 확충 필요
 -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확대 등 제도개선, 합동 해외 유치활동 등을 통해 566항차, 10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 방한
-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2회) 및 민관 협의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민·관 이행점검 회의(3회)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24.7.)

-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자격기준 완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교육·훈련, 보안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하여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해 유치활동 강화,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 및 연안크루즈 등 국내 크루즈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 실시로 근로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
-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로 항만보안 최신 정보 공유 및 인력·시설·장비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도모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2026년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항만보안인력 충원	해수부 항만보안안전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Port-Sales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제1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Port-Sales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선원정책과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	해수부 항만보안안전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1-4-1-2

크루즈관광 활성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확대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 여행수지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모

☐ 과제 내용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통해 크루즈산업을 미래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육성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 (국내 수요 확대) 크루즈 체험단 운영 및 방송·유튜브 등 매체 홍보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6. 3.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23. 1.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23. 7.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2024. 2. 2024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 2024. 6.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해부수·문체부 합동)

○ 2024. 7.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2025. 1. 2025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 2025. 7. 제1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기항지(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참석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추진

※ (선사미팅) MSC크루즈('25.5), 로알캐리비안크루즈('25.7), COSTA크루즈('25.9)

(관계기관 공동 포트세일즈) 일본지역 포트세일즈('25.5), 대만지역 포트세일즈('25.6), 중국지역 공동 포트세일즈('25.10)

(국제행사 개최·참석) 미국 크루즈 포럼('25.4), 제1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25.7), Seatrade Cruise Asia 참석('25.12 예정)

(이벤트) 부산지역 외국적선사(로알캐리비안) 크루즈관계자 등 유치 이벤트('25.9)

(지역협의체 활동) 국제행사 간 ACC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발전 방안 논의

○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국제 크루즈 체험단 운영(62명, ' 25.9)

3. '26년도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활동,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사업 등 추진

○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타권역 선사미팅,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행사 개최 및 지역협의체 활동 등 추진(연중)

※ (선사미팅(잠정)) 유럽지역 선사미팅('26.상), 한국 기항지 팸투어('26.11)

(관계기관 공동 포트세일즈(잠정)) 미국지역 포트세일즈('25.4), 대만지역 포트세일즈('25.6), 중국지역 포트세일즈('25.7), 일본지역 포트세일즈('25.9)

(국제행사 개최) 제13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25.7)

(지역협의체 활동)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연례회의 참석('26.下, 잠정)

○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크루즈 체험단 운영('25. 잠정) 및 유튜브 등 매체 홍보 진행(연중)

☐ 소요예산 : 총 1,29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1,098	1,298	1,298	0.0	
- 국 비	▪ 일반회계	840	798	998	998	△0.0	
	▪ 특별회계					0.0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300	300	300	300	0.0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외국적 크루즈 유치(포트세일즈) : 600백만원

- 54.5백만원(행사장 임대, 홍보물 제작, 통역 등 행사진행비)×11개 지역=600백만원

○ 국내 저변 확대 : 248백만원

- 체험단(1인 2백만원×50%×148명) + 매체홍보(100백만원×1편)

○ 국제크루즈 행사지원 : 150백만원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식×150백만원(행사장 임차·조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비>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300백만원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식×300백만원(연사 초청, 컨퍼런스 운영 등 운영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6회	해외 Port-Sales 추진 횟수
'25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6회	해외 Port-Sales 추진 횟수
'26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행사 개최	3회		해외 Port-Sales 추진 횟수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전화번호	044-200-5277
담당자	5급 이종근	이 메 일	modernity@korea.kr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1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제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선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 및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인권개선 필요

※ (고용현황) ('21년) 27,333명 ('22년) 28,281명, ('23년) 30,436명 ('24년) 32,521

☐ 과제 내용

- 외국인 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선사별 선원법령 및 선원근로계약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 근로환경 및 조건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사정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및 인권 개선대책” (‘13.7월)을 마련
- 동 개선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노사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대책 수립 시행('14.5, '15.6, '16.4, '17.4, '18.4, '19.4, '20.6, '20.12)
- 외국인선원이 임금체불, 폭행 등 고충사항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국인콜센터’ 및 수협중앙회 ‘외국인 고충 상담센터’ 운영(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13.1월~)
-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인권보장 및 관리 제도 개선방안(‘20.6월)” 수립 시행

-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20.12월)” 수립, 시행
-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입 공공화를 위한 한-인니 근해어선원 고용노동 협력 MOU 체결(21.5.31)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선장에게 선내 사망자의 시신인도 의무를 규정한 선원법 개정안 시행(21.7.16)
- 외국인선원의 권리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의무화(23.1~)
- 선원의 인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마련하여 발표(24.3.27)
- ※ ①저축금 송금수수료 임금차감금지 등 임금기준 개선, ②이탈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송출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송출구조 개선, ③참치연승선 출항 후 1년 이내 기항지 입항 등 항해기간 단축, ④최소휴식시간(일 10시간, 최소 6시간) 보장, ⑤여권 개별보관함 설치 등 신분증 보관방식 개선, ⑥인터넷 사용시간 보장 등 통신환경 개선
- 외국인 선원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24.7.12.)
- ※ ①외국인선원 도입규모를 정부가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②외국인선원 제도 법적근거 마련, ③외국인선원 고용신고·추천 시 첨부서류 변경(노조의견서→선사 확인서), ④복지기금·선원관리비 투명성 강화, ⑤송출입체계 공공성 강화
- 외국인선원제도의 합리적 고용·관리 방안의 우선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개정(25.3.7.)
- ※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결정시 정부의 최종 결정, 복지기금·선원관리비 투명화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조, 수협중앙회 → 선주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조사반 편성(해양수산부) → 실태조사(노사정 합동) → 결과에 대한 조치(해양수산부)

2. '25년도 추진 실적

-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24.3.27.) 이행 및 점검
 - “원양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민사회, 업계와 민관 이행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연2~4회)
 -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이행점검 회의(‘25.1, ‘25.7, ‘25.10)
- ☐ 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2회)
 - 인권침해의 지표가 되는 신분증 대리보관, 과다송출료 및 이탈보증금을 중심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점검을 시행(‘25.4.~7./‘25.11.~12.)
- ☐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사의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 및 상환을 독려하여 선원의 생계안정 지원(설, 추석)
- ☐ 선원의 인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 ※ ①선원의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압류금지 통장 도입(‘25.9.16 공포, ‘26.3.17 시행) ②여권 등 대리보관금지 적용 범위 확대 (‘25.12) 등
- ☐ 선원근로감독관 정기 직무교육을 통해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인신매매 관련 지식 함양 등 실시(‘25.5. 해양수산인재개발원)

3. '26년도 추진계획

- ☐ 2026년도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상·하반기)
- ☐ 원양어선 등 외국인 선원 인권 개선 추진
 -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 이행점검 협의회 운영(분기별)
-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및 해결 지원(계속)
 -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협중앙회) 운영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 국 인 선 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 조사 실시	2회	2회	실태 조사 계획 수립
'25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 국 인 선 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 조사 실시	2회	2회	실태 조사 계획 수립
'26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외 국 인 선 원 근로실태조사	-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 조사 실시	2회		실태 조사 계획 수립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743
담당자	5급 장순길	이 메 일	ysbada22@korea.kr

2-3.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3-2-2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항만에서의 외국인 관리에 대한 업무 협조체계 정비

☐ 과제 내용

- 항만보안 시설·장비 확충,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에 대한 탐지 및 초동 조치, 역량강화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6. 2.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와 합동으로 '항만보안 강화방안' 수립
- 2016. 1~12. CCTV,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장비 확충
- 2016. 11.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 2017. 1~12. CCTV,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장비 확충 및 보안 시설·장비 기준 등 보완
- 2017. 1~12. 무단이탈 사고 선박에 대하여 입항 금지 등 제재조치* 이행
※ 무단이탈 1회 선박은 6개월 / 2회는 1년 / 3회는 영구 입항금지('16.11.10~)
- 2017. 10. 제주항 무사증 이탈자 방지를 위한 차량형 X-Ray 검색기 도입(3대)
- 2018. 5. 제2차 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시행
- 2019. 4.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정
- 2020.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보안감독관 운영 근거 마련 등

○ 2022. 2.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등 제정(3건)

※ 검색장비 성능인증, 시험기관, 운영 및 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 2022. 8.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보안사고 조치결과에 따른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 지정 근거 마련

○ 2023. 12.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 2024. 7.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24. 8.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증 인식을 제고방안 마련

○ 2025. 7.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수부, 해경청

○ 추진절차 : 부처별 협업을 통한 업무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24.7)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24.7)

-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자격기준 완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교육·훈련, 보안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하여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25년도 항만보안 예산(106.7억원*) 집행 및 차년도 예산(95.1억원) 확보 추진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3,246백만원,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292백만원, 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1,515백만원, 항만보안 역량강화 50백만원 등

☐ 2025 APEC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보안등급 상향(1→2단계) 조치

※ '25. 10. 28. ~ '25. 11.1. 5일간, 영남지역 7개 무역항

☐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추진

※ 부산·인천·울산항 실시설계 완료('24.10) 및 구축 공사 착공('25. 8.~9.) / 여수·광양 및 평택·당진항 실시설계 착수('25. 5.~7.)

3. '26년도 추진계획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인력 확보(1분기)

○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출입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 항만 경비초소 신축 등 항만시설 보안장비·시설 신설(49.6억원)

○ 항만보안인력 충원 및 주기적 항만보안훈련(분기 1회) 실시

☐ 전국항만 합동보안 세미나 개최(4분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국 항만시설(214개)의 보안책임자 및 보안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보안세미나 개최로 항만보안 최신 정보의 공유 및 인력·시설·장비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 개별 항만시설소유자의 합동훈련 준비·시행 부담 경감 및 항만보안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항만보안 현장과 정책·제도의 상호 개선 기대

☐ 소요예산 : 총 9,514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7,490	6,718	10,673	9,514	-10.9	
- 국 비	7,490	6,718	10,673	9,514	△ 10.9	▪ 특별회계 (교통시설)

☐ 산출내역

○ 항만보안시설·장비 신설: 4,964백만원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4,914백만원

- (항만 경비초소 신축) 50백만원

- 항만보안시설 · 장비 유지보수: 4,500백만
 - (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58백만원
 - (항만보안 시설장비 유지보수) 2,423백만원
 - (항만보안리스크 평가 프로그램) 70백만원
 - (일회성 유지보수비) 1,049백만원
- 항만보안 역량강화: 50백만원
 - (전국항만 합동보안세미나 개최) 30백만원
 - (청원경찰 통합채용 필기시험 출제 운영) 2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3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 회	1 회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9조제3항
'24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 회	1 회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9조제3항
'25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 회	1 회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9조제3항
'26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외국인 밀입국 방지	합동보안훈련(세미나) 실시	1 회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9조제3항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전화번호	044-200-5778
담당자	5급 강경덕	이 메 일	kdmania@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률
계	3	100%	12,705	13,278	4.5%
1. 경 제	3	100%	12,705	13,278	4.5%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 인바운드 창업지원체계 구축(해외 우수 창업기업의 쏠 주기 지원)

주요 내용

-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사업
 - SW 분야 해외 우수인력 발굴 및 구인 업체 모집
 -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 채용박람회 개최 등 스타트업과 해외인력 간 매칭 지원
-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 유학생 취업매칭 플랫폼(K-Work) 운영,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선정 및 평가,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 추천, 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천 등
- 외국인 창업자 발굴부터 국내 정착 및 성장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해외 창업팀 선발 및 정착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우수 해외 인재의 창·취업 및 국내 거주·정착 등 원스톱 지원
 - (K-스카우터) 글로벌 네트워크한 기업·기관을 K-스카우터로 지정, 해외 스타트업 발굴 및 추천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추천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585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585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587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589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1-2-①-⑤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589
1-5-①-⑥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592
1-2-⑤-①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597

I. 2025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3개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3)개

2.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	증감	
합계	3개	6,000	9,700	12,705	13,278	573	4.5% 증가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3개)	6,000	9,700	12,705	13,278	573	4.5% 증가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1,600	1,600	1,000	△37.5	'24년 신규
1-2-1-6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지원			3,005	2,678	△10.8	'25년 신규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6,000	8,100	8,100	9,600	18.5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취업)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2.5만명으로 전년대비 19.6%증가('25.8월 기준, 출입국 통계월보)

- 대부분(86.5%)이 국내 취업을 희망(중양회, ' 25.3월 외국인유학생 취업의향 조사)

○ (창업) 내국인 위주로 구성된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혁신 창업 인재를 적극 유치

※ 국내 기술창업기업 중 외국인 기업 비중 약 0.13%, 전체 사업체 중 외국인 비중 0.9% ↔ 주요국가(미국, 싱가포르 등)의 외국인 창업기업 비중은 5~20%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취업)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후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창업) 해외 스타트업의 발굴·유치부터 국내정착 및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취업) 해외(베트남) SW 초급 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후 취업 연계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경력자 채용 매칭 중심으로 사업 운영 필요
- (창업)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 등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및 제품 현지화 등 기업친화적으로 프로그램 개편

* (기존) 오프라인, 대표자 직접 참여 → (개선) 온·오프라인, 임직원 참여 허용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 (취업)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성과관리 강화
- ☐ (창업)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창업 인프라를 확대 조성
- '26년부터 순차적으로 비수도권 3개 권역별(충청·영남·호남)에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조성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선정 ■ 참여기업 및 참가자 모집 ■ 취업매칭(상시)	중기부 청년정책과
1-2-1-6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지원	■ Kwork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 ■ 선도대학 성과평가 및 신규 공고선정 ■ 수출아카데미 운영기관 공고선정 ■ E7-1, E7-4 비자추천 공고	중기부 인력정책과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 K-스카우터 공고·선정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참여기업 및 참가자 모집 ■ 취업매칭(상시)	중기부 청년정책과
1-2-1-6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지원	■ Kwork플랫폼 유지보수 ■ 선도대학 협약체결 ■ 수출아카데미 운영기관 협약체결 ■ E7-1, E7-4 비자추천	중기부 인력정책과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공고·선정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참여기업 및 참가자 모집 ■ 취업매칭(상시)	중기부 청년정책과
1-2-1-6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지원	■ Kwork플랫폼 유지보수 ■ 선도대학 중간평가 ■ 수출아카데미 운영기관 중간점검 ■ E7-1, E7-4 비자추천	중기부 인력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지원 ■ K-스카우터 해외스타트업 발굴·추천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참여기업 및 참가자 모집 ■ 취업매칭(상시)	중기부 청년정책과
1-2-1-6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지원	■ Kwork플랫폼 유지보수 ■ 선도대학 중간평가 ■ 수출아카데미 운영기관 중간점검 ■ E7-1, E7-4 비자추천	중기부 인력정책과
1-2-5-1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지원 ■ K-스카우터 해외스타트업 발굴·추천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중기부 글로벌창업팀

IV. 세부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1-2-1-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 SW 인재와 국내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지원

☐ 과제 내용

- (인재확보) 베트남 주요 대학* 졸업생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 중소기업에 적합한 최적의 인재풀을 발굴·구성하고 기업에 채용 연계 추진

* 베트남 한-베 정보통신대(VKU), 호치민기술대(HUTECH) 등

- (채용매칭) 기업의 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채용박람회 등 취업 연계 행사 개최 추진

- (현지창구) 베트남 우수 SW 인재들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채용지원 데스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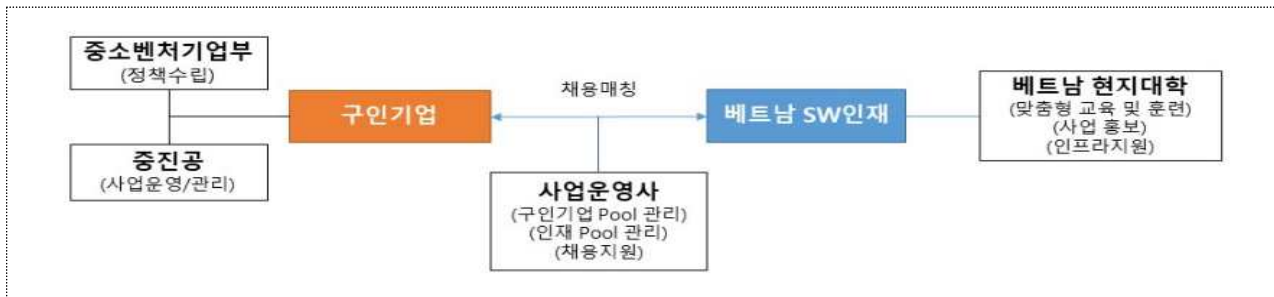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사업추진을 위해 베트남 과기부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인력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 체결(' 23.6월)
-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신규과제로 포함(' 23.8월)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로 포함(' 23.12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추진체계 :



2. '25년도 추진 실적

- ☐ 베트남 현지 대학 졸업(예정자) 60명 대상으로 SW 실무 및 한국어 교육 추진(' 25.6~11월), SW 경력자 94명 취업 매칭 지원(' 25.10월 기준)

3. '26년도 추진계획

- ☐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
- (참여인력 및 기업모집) SW 분야 해외 우수 인재 발굴 및 인력 POOL 구성, 해외인력 채용 희망 구인 기업 모집(' 26.1분기~)
- (취업매칭)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해외 인력 간 맞춤형 매칭 지원(' 26.1분기~)

- ☐ 소요예산 : 총 1,00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	1,600	1,600	1,000	△37.5	
- 국 비 ▪ 기 금 (중진기금)	-	1,600	1,600	1,000	△37.5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 산출내역

- 1,000백만원 = (물량) 200명 × (단가) 5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인력 취업 연계	스타트업 취업 교육 수료율	수료율 (%) = 수료인원/선발	70%	진행 중	국내 유사사업의 교육수료율 기준으로 목표 설정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23년 수료율 72%)
'26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인력 취업 연계	취업자수	취업자수	200명	-	취업자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청년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952
담당자	5급 구자윤	이 메 일	jy1480jy@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공급 및 中企 경쟁력 강화

☐ 과제 내용

① 지역 수요 기반 구인·구직 매칭 확대

- (中企 외국인력 수요조사) 지역 中企 외국인력 현원 및 구인인원 등을 파악하여 기업 수요 기반의 외국인력 양성규모 도출로 미스매치 해소
- (유학생 취업매칭 플랫폼 고도화) 외국인 유학생-중소벤처기업 간 취업 매칭 및 비자추천 등을 통합하여 고도화하고, 구인·구직 매칭 강화

② 국내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역량 제고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에게 인턴십·현장실습 등 취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中企에 전문인력으로 공급
 - * 대학당 150백만원 내외(정부지원금과 대학부담금 3:1 비율 매칭 조건)
- (K-수출전사 아카데미)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에게 수출입 전문교육을 실시, 中企에 수출전문인력으로 공급
 - * 기관당 300백만원 이내(전액 국고보조금)

③ 국내 외국인력 취업비자 전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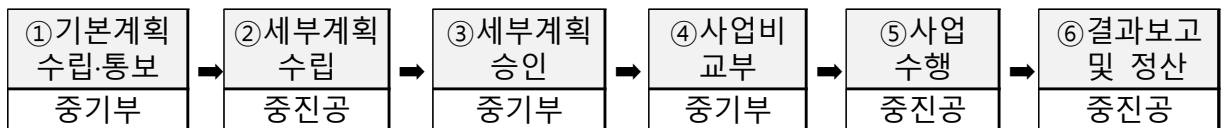
-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에 따라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E-7-1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 지원
 - *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 영업원 등 중기부 24개 직종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등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E-7-4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추천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중소기업 도약 전략(중기부)」의 주요 추진과제 발표('24.4)
- '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 개최('24.7)
-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 마련('24.8)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추진절차



2. '25년도 추진 실적 ('25.9월말 기준)

☐ 中企 외국인력 수요조사

- 지역주력산업, 기술·경영혁신형 中企 41,132개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10,010개사 조사 완료(제조업 비중 71.7%)
- 조사 결과 : 향후 외국인력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 35.9%(3,589개사)

☐ 유학생 취업매칭 플랫폼(K-Work) 고도화

- 비자추천 기능 신설, AI기반 매칭 프로세스 개편, 대내외 시스템 연계 (Open API), 통계 기능 강화 등 플랫폼 전반 고도화 추진^{~10.30.}
- DB 구축('25년) : 구인기업 2,356개사, 구직자 7,007명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 권역별* 10개 대학(일반대 5, 전문대 5)을 선정하여 수도권 편중을 지양 하고, 지역 中企에 외국전문인력 공급 기반 마련^{~'26.2.28.}
- * 경기 3개교, 대전 2개교, 충남 1개교, 충북 1개교, 경남 1개교, 부산 2개교
- 모집 목표 : 1,080명, 교육 인원 : 1,531명(달성률 142.8%)

☐ K-수출전사 아카데미

- 1개 기관(부산외대 학교기업) 선정 완료. 외국인 유학생에게 무역이론(90h), 수출·마케팅 실습(90h), 취업코칭(20h) 등 수출전문교육 제공^{~12.31.}
- 모집 목표 : 300명, 교육 인원 : 469명(달성률 156.3%, 전국 분포)

☐ 비자추천^{E-7-1, E-7-4}

- K-Work 플랫폼과 연계하여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및 비전문인력(E-9) 등을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지원^{상시}
- 비자추천 실적('25년) : E-7-1 32건, E-7-4 25건 등 총 57건

3. '26년도 추진계획

☐ 유학생 취업매칭 플랫폼(K-Work)

- ('26. 1/4분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1월~2월)
- ('26. 2/4분기~4/4분기) 유지보수 추진(기능 고도화 병행)
-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E-7-1에 최적화된 공고 분류 항목 추가 등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 ('26. 1/4분기)
 - '25년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운영대학(10개교) 성과평가(2월)
 - '26년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운영대학 공고 및 선정(~3월)
- ('26. 2/4분기) '26년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협약체결(4월)
- ('26. 3/4분기) '26년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중간평가(~9월)
- ('26. 4/4분기) '26년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성과점검(~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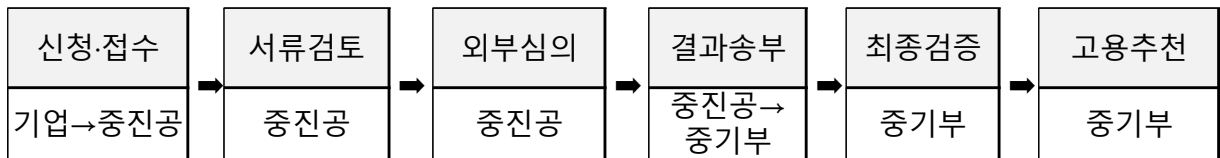
☐ K-수출전사 아카데미

- ('26. 1/4분기) '26년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3월)

- ('26. 2/4분기) '26년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 협약체결(4월)
- ('26. 3/4분기) '26년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 중간점검(~8월)
- ('26. 4/4분기) '26년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 성과평가(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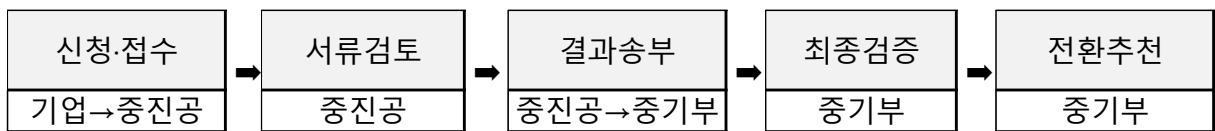
☐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 (연중 상시)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 (연중 상시)



☐ 소요예산 : 총 2,678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	-	3,005	2,678	△ 10.8	
- 국 비						
▪ 일반회계	-	-	3,005	2,678	△ 10.8	

☐ 산출내역

- (유학생 취업매칭 플랫폼) 500백만원 = 유지보수, 홍보 등 500백만원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1,500백만원 = 10개 대학 × 150백만원
- (K-수출전사 아카데미) 300백만원 = 300명 × 1백만원
- (비자추천) 378백만원 = 심의위원회 운영 등 378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 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출근거
'25	비자추천 (E-7-1, E-7-4)	60	중기부 비자추천 완료 건수	60	-	비자추천 건수
'26	비자추천 (E-7-1, E-7-4)	65	중기부 비자추천 완료 건수	65		비자추천 건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443
담당자	5급 이영순	이 메 일	erica0309@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창업자의 발굴부터 국내 정착 및 성장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촉진

☐ 과제 내용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해외 창업팀을 선발하여 국내정착 및 성장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외국인 창업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해외 우수 인재의 창·취업 및 국내 거주·정착 등 원스톱 지원
- (K-스카우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 등을 K-스카우터로 지정하여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추천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혁신성·사업성만 평가하여 신속발급하는 특별비자를 도입하여 해외 스타트업 적극 유치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16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24.7월말 개소), K-스카우터('24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24.11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추진절차
 - (그랜드챌린지) 모집공고 → 평가·선정 → 보육 → 데모데이 → 후속지원
 - (K-스카우터) K-스카우터 선정 → 해외 스타트업 발굴·추천 → 국내정착 지원

2. '25년도 추진 실적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국내 AC의 지원을 받은 외국인 창업팀(40개팀) 대상 데모데이를 열어 후속지원 20개팀을 선발하고,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상금지원 등

☐ 글로벌스타트업센터

- '24.7.31일 센터 개소(서울 역삼동, 약 150평), 외국인 창업 원스톱 상담 창구,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사무공간 및 네트워킹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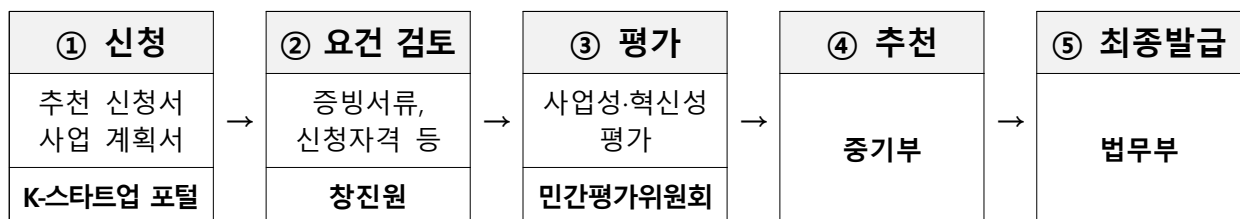
☐ K-스카우터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운영사 4개(공모)를 K-스카우터로 지정,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스타트업 발굴·추천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운용

- 학력·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 추천을 통해 법무부가 최종발급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절차 >



3. '26년도 추진계획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 ('26. 1/4분기) '25년 참가팀 모집 공고 및 홍보(4월~)
- ('26. 2/4분기) '25년 참가팀 신청·접수(4월~5월)

○ ('26. 3/4분기~4/4분기)

- 서류평가, 해외오디션 등 통해 지원 기업 선정(6월~7월)
- 국내 입국한 창업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8월~12월)
- 참가팀 정착도 평가 및 데모데이 통해 Top20 선정(12월)

○ ('27. 1/4분기~2/4분기) '25년 참가팀 후속지원 실시(~5월)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 원스톱 상담창구, 정착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외국인 창업자 커뮤니티 활성화 등 외국인 창업 종합지원

☐ K-스카우터

- K-스카우터 공모 및 지정(상반기) → 창업생태계 홍보 및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추천 (~12월)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 민간평가위원회 정기 개최(매월) 및 특별비자 추천(중기부→법무부)

☐ 소요예산 : 총 9,600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8,100	8,100	9,600	18.5	
- 국 비 ▪ 일반회계	8,100	8,100	9,600	18.5	

☐ 산출내역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4,500백만원 = 113백만원 × 40개사
(글로벌스타트업센터) 3,400백만원 = '26년 센터 운영 3,400백만원
(K-스카우터) 1,200백만원 = 150백만원 × 8개사
(권역별 GSC 조성) 500백만원(설계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적	산출근거
'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건수	20	20	법인 설립 수
'25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건수	20	진행 중	법인 설립 수
'26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외국인기업 국내 법인 설립 건수	20	-	법인 설립 수

5. 담당자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관 글로벌창업팀	전화번호	044-204-7682
담당자	5급 김택선	이 메 일	1025kts@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2	100%	비예산	비예산	0.0%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1	50.0%			
4. 인 권	1	50.0%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 추진
- ▶▶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

주요 내용

- ▶▶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강사단 구성,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보급
 - * 사이버 침해사고, 생성형 AI 활성화 등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다국어 버전으로 제작
-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 외국인과 이민자 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적 내용의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위반사례 공유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604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604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606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607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3-3-②-②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607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4-1-①-④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610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3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1)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1)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3개	1,775	1,775	1,595	1,595	0	'의 경우'△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1,775	1,775	1,595	1,595	0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비예산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1)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비예산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의 기초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할 필요
- ☐ 외국인·이민자 관련 인권침해 및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편견,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필요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교육)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연 21회/ 총 432명, ' 25.8.말 기준)

☐ (정보 제공) 주한 외국인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

○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다국어**(7종)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가별로 맞춤 보급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 편의를 지원

* 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 피해(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예방법,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생성형AI 서비스 이용 방법 등

** (7종) 한국어, 영어,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 정규·특집 등 라디오 프로그램 제공

○ 국내거주 및 방문 외국인 대상 시사/보도, 교양/정보, 음악/오락 등 17개 프로그램 3,955편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송

○ 재난 속보 및 재난 필러를 시의적절하게 방송하여 국내 거주 및 체류 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 수행

※ 재난수신 온라인 시스템 요청 자연 및 사회재난 관련 속보 24시간 수행(총 234건),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관련 필러 방송(총 2,090회)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14회, '25. 9. 기준)를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지원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추진

○ 사이버 침해사고, 생성형 AI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최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 실시

☐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및 인권·문화 존중의식 제고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통해 외국인·이민자·타 문화 등에 대한 편견, 차별적 방송내용 사례 공유 및 심의규정 안내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계획 수립 및 강사단 육성	방미통위디지털 이용자기반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미통위디지털 이용자기반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미통위디지털 이용자기반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주한외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방미통위디지털 이용자기반과
4-1-1-4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3-3-2-2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불편·피해 최소화

☐ 과제 내용

- (교육)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정보 제공) 주한 외국인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13년 : 주한 외국인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및 이동 상담 실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연계)
- 2014년 : 방송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전용 매장 확대 유도
- 2015년 : 방송통신사업자 고객센터 외국어 상담원 확대 유도
- 2016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2017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다국어 책자 제작·보급
- 2018년 : 다문화 이주여성·아동 대상 '방송통신 이용자 도전 골든벨' 개최
- 2019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2020년 :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2021년 : 주한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교재 및 전자책 개발·보급

- 2022년 : 주한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교재 및 전자책 개발·보급
- 2023년 : 다문화가정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대면 교육 확대
- 2024년 : 다국어 교육 교재의 언어 종류 확대(6종→7종) 제작 및 보급
- 2025년 : 주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실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연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추진절차 : 계획 수립(방미통위) → 추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25년도 추진 실적

☐ (교육) 주한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연 21회/ 총 432명, ' 25.8.말 기준)

☐ (정보 제공) 주한 외국인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

-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다국어**(7종)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가별로 맞춤 보급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 편의를 지원

* 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 피해(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예방법,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생성형AI 서비스 이용 방법 등

** (7종) 한국어, 영어,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3. '26년도 추진계획

☐ (1분기)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강사단 구성

- 유관 기관과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주한 외국인의 교육 수요 파악
- 교육 강사단 선발 및 육성 등

☐ (2~4분기)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콘텐츠 제작·보급 및 교육 실시

○ 통신서비스 관련 최근 이용자 피해 동향 및 주한 외국인의 국가별 다양성 등을 고려, 주한 외국인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제작

* 사이버 침해사고, 생성형 AI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법 등을 다국어 버전으로 제작

○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맞춤형 콘텐츠 보급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명)	실적	산출근거
'23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주한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교육제공	통신서비스 교육대상자	1,300	1,691	○ 교육 수료 인원
'24				1,300	672	
'25				700	432 (8월 기준)	
'26				700(예정)	-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번호	02-2110-1527
담당자	5급 김은자	이메일	151781@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과제 내용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를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지원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법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직무)의 방송심의 기능 수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추진절차 : 방송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 방송사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심의규정 및 현안 설명 및 논의(14회, '25. 9. 기준)

3. '26년도 추진계획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계속)

- 외국인과 이민자 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의 방송 관련 심의규정 안내 및 위반사례 발생시 적시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강화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편견·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기능 강화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및 심의 사례 교육	25회	14 (9월 기준)	사안 발생시 수시 회의 개최 및 결과 안내 등
'26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및 심의 사례 교육	25회	-	

5. 담당자

소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전화번호	02-3219-5213
담당자	차장 조혜정	이 메 일	chohj@kocsc.or.kr

소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265
담당자	5급 박민성	이 메 일	mspark1837@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1	100%	2,585	2,630	1.7%
1. 경 제					
2. 안 전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1	100%	2,585	2,630	1.7%

추진 방향

-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 강화

주요 내용

- 국내 상주 외국인 및 이주배경 인구 규모, 인구학적 특성, 지역분포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공표
 - 2025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등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 이민자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한국에서의 고용 상태 및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작성 및 공표
 - 2026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외국인 국제이동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다문화 인구의 인구동태(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공표
 - 20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615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616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618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619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5-3-②-②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619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1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0)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1개	2,453	2,590	2,585	2,630	1.7	'의 경우'△
소계	5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1)	2,453	2,590	2,585	2,630	1.7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2,453	2,590	2,585	2,630	1.7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와 구성 다양화

-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60년만인 2007년 100만명, 2016년 200만명, 2019년 250만명을 돌파하였음
- 코로나19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2020년부터 감소하다가 증가하여 2024년은 약 265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5.2% 수준임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단기, 유학·일반연수, 취업, 결혼이민·영주, 재외동포 등) 및 국적(중국, 동남아, 미국 등)의 다양화 및 다변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현황>

	'07	'10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체류외국인 (만명)	106.6	126.1	190.0	204.9	218.0	236.8	252.5	203.6	195.7	224.6	250.8	265.1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	2.2	2.5	3.7	4.0	4.2	4.6	4.9	3.9	3.8	4.4	4.9	5.2

주) 자료출처: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법무부), * 주민등록인구(각 연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인구 대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통계 수요 증가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국제이동 규모 및 이동자 특성 파악을 위한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25.7.)
-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 총조사 공표('25.7.)
 - 상주 외국인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모집단 정보 제공

- 외국인과 귀화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혼인·이혼·출생·사망에 관한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25.11.)
-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체류실태 및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이민자 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25.5.~6.) 및 결과 공표('25.12.)
 -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대한 기획보도 실시('25.3.)
-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2세 등을 포괄하는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 통계 최초 공표('25.12.)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 강화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총인구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
 - * 국내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 행정자료 활용 인구총조사를 통해 국내 상주외국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통계 및 모집단 매년 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 및 공표
 - 국제인구이동통계 및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생산 및 공표
 - 이주배경인구통계 생산 및 공표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준비(1~3월)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획보도(3월)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6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5~6월)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3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7월)	국가데이터처 인구추계팀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5년 인구총조사 전수조사 결과 공표(7월)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내검 및 집계(7~11월)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4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5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공표(11월)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전국 장래인구추계 공표(12월)	국가데이터처 인구추계팀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6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공표(12월)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2025년 기준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 공표(12월)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5-3-2-2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상주 외국인·이주배경인구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외국인 고용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등을 생산하여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법무부,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관련 외국인 통계의 지속적인 개선·개발 추진 및 통계의 정확성·활용도 제고

☐ 과제 내용

- 국내 상주 외국인·이주배경인구 규모, 인구학적 특성, 지역분포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표
- 이민자의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 환경, 자녀교육 등 한국에서의 고용 상태 및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작성 및 공표

※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의미

- 외국인 국제이동 규모 및 특성에 관한 통계, 다문화인구의 인구동태(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작성 및 공표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인구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검토('08.12.)
- 2010년 기준 등록센서스 방식의 총조사 결과 시산('12.12.)

- 2015년 등록센서스 도입방법 및 제공항목 결정('13.12.)
- 2011~2013년 등록센서스 시산 및 품질점검('14.10.)
-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작성(11월 1일 기준) 및 결과공표(익년 7월)
-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2세 등을 포괄하는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통계 최초 공표('25.12.)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외국인 고용조사를 외국인 종합통계로 확대 발전 가능성 검토('14.2.~15.4.)
- 법무부·국가데이터처 공동 실시 협의('15.6.~'16.1.)
- 조사항목 개발, 표본 추출 등 시험조사 준비('16.2~8.)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시험조사 실시('16.9.)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본계획 수립('16.12.)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실시(매년 5~6월) 및 결과 공표(매년 12월)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 실시(매년 3월*) * '24년은 4월 실시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출입국심사 및 출입국신고서 자료를 기초로 국제인구이동통계 최초 작성('00년)
- 국가통계 승인('04년)(승인번호 제101064호)
- 국제인구이동통계 공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13년)
- 국제인구이동통계 연간 공표(매년 7월)

< 장래인구추계 >

- 국가통계 승인('94년)(승인번호 제101033호)
- 전국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최초 발간('96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최초 발간('98년)
- 다문화인구추계 작성방법 개발('18년)
- 전국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96년 이후 매5년 → '23년 이후 매2~3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98년 이후 매5년 → '24년 이후 매2~3년)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개발 추진('10~'11년)
- '08~'1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혼인, 이혼, 출생, 사망) 최초 공표('11.11.)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고서 외국어 견본 제작 배부('13.8.)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연간으로 공표(매년 11월)

☐ 추진체계

< 인구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추진주체 : 국가데이터처
- 추진절차 : 총조사 실시계획 수립 → 행정자료 입수방안 협의(국가데이터처 및 자료제공기관) → 행정자료(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입수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 → 결과분석 및 공표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추진주체 : 국가데이터처(법무부 공동)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준비(국가데이터처) → 조사지침 교육(국가데이터처) → 현장조사 실시(국가데이터처 지방통계청, 사무소) → 자료처리 및 결과 집계(국가데이터처) → 결과분석 및 공표(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추진주체 : 개인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가데이터처
- 추진절차 : 출입국 심사(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료전송(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유통시스템)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국가데이터처) → 결과분석 및 공표(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 장래인구추계 >

- 추진주체 : 개인 →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가데이터처
- 추진절차 : 자료수집(국가데이터처) → 자료분석 및 추계모형 적용(국가데이터처) → 추계(국가데이터처) → 결과분석 및 공표(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

- 추진주체 : 개인 →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가데이터처
- 추진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준비(국가데이터처) → 조사지침 교육(국가데이터처) → 신고서 접수 및 자료 입력(지자체) → 가족관계등록 정보입수(대법원) → 자료처리 및 결과집계(국가데이터처) → 결과분석 및 공표(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 '25년도 추진 실적

< 인구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 25.7.~12)

-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 총조사 결과 공표 및 모집단 제공('25.7.)
-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 작성결과 최초 공표('25.12.)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기획보도(' 25.3.)

☐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공표(' 25.12.)

- 국내 상주 외국인과 귀화허가자(5년 이내)의 기본항목, 고용, 구직경험, 교육, 소득, 소비, 한국어능력, 체류사항과 비전문취업 및 유학생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국제인구이동통계 >

☐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 25.7.)

- 외국인 입·출국자의 이동 규모 파악, 입국자 성·연령·국적·체류자격별 특성 분석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 2024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 25.11.)

- 다문화 인구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 작성 및 공표

3. '26년도 추진계획

< 인구총조사(상주 외국인 통계 관련) >

☐ 2025년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 26.7.~12.)

○ 2025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규모 및 특성 등 인구총조사 결과 공표('26.7.)

○ 2025년 기준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 작성결과 공표(~'26.12.)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2026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실시(' 26.5.~6.) 및 결과 공표(' 26.12., ' 27.3.)

○ (조사부문)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 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 환경, 자녀교육, 영주·귀화허가자 및 재외동포 등

< 국제인구이동통계 >

☐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

○ 2025년 월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제공(매월)

○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공표('26.7.)

< 장래인구추계 >

☐ 20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 공표(' 26.12.)

<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

☐ 2025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공표(' 26.11.)

☐ 소요예산 : 총 2,63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 만원)		2,453	2,590	2,585	2,630	1.7	
- 국 비	▪ 일반회계	2,453	2,590	2,585	2,630	1.7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인구총조사 >

- 인건비 : 721백만원
- 운영비 : 68백만원
- 여비 : 2백만원
- 업무추진비 : 6백만원
- 민간이전 : 83백만원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 일용임금 : 348백만원
- 운영비 : 1,306백만원
- 국내여비 : 36백만원
- 사업추진비 : 8백만원
- 민간이전 : 40백만원

< 국제인구이동통계 >

- 운영비 : 3백만원

< 장래인구추계 >

- 운영비 : 8백만원

<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

- 운영비 : 1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통계결과 공표	5회		보도자료
'24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통계결과 공표	6회		보도자료
'25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통계결과 공표	5회		보도자료
'26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이민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통계결과 공표	5회		보도자료

5. 담당자

< 인구총조사 >

소관부서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전화번호	042-481-3756
담당자	5급 김민주	이 메 일	minju1101@korea.kr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소관부서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전화번호	042-481-2339
담당자	5급 김성규	이 메 일	daan755@korea.kr

< 국제인구이동통계, 장래인구추계 >

소관부서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인구추계팀	전화번호	042-481-2261
담당자	5급 전택련	이 메 일	juvin@korea.kr

<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

소관부서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전화번호	042-481-2258
담당자	5급 강현영	이 메 일	gusdud12@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경 찰 청

경 찰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4	100%	1,449	1,700	17.3%
1. 경 제					
2. 안 전	3	75%	387	387	0.0%
3. 통 합					
4. 인 권	1	25%	1,062	1,313	23.6%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및 범죄예방 활동 전개
- »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보호 지원

주요 내용

-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관리,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
 - '범죄예방 강화구역' 신규 지정·해제 검토,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 참여
 -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
- »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 추진
 -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 확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실효화
- »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통역 지원 및 홍보 자료 번역 등 맞춤형 예방활동 전개
 - 다문화 위기청소년 발견 시 SPO 1:1 면담·멘토링 실시 등 청소년 및 보호자 통역·상담 지원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630
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631
III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632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632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636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638
4.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2.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4-2-1-2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642

I .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수 : 2개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2개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94	94	94	94 (정부안)	0	
2-1-2-6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분야 단속 강화						
2-2-2-2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293	293	293	293 (정부안)	0	
	4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실현(1)						
4-2-1-2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1,313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 관련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경 찰 청 범죄예방정책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치안활동 전개	■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실시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경 찰 청 범죄예방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 관련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경 찰 청 범죄예방정책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치안활동 전개	■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실시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경 찰 청 범죄예방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 관련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경 찰 청 범죄예방정책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치안활동 전개	■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실시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경 찰 청 범죄예방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2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외국인 관련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경 찰 청 범죄예방정책과
2-2-2-2	준법교육 등 외치안활동 전개	■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실시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경 찰 청 범죄예방정책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1-2-4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의 공동체 치안 강화, 기초질서 확립 · 불법행위 방지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과제 내용

- 외국인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설정,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관리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민 · 관 · 경 협력체계 구축하여 주요 치안 현안 논의 및 대책 마련

☐ 과제 추진 경과 및 주체

- (추진 경과) '13. 8월부터 운영 /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 주체) 경찰청,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시도경찰청 주관 / 유관 기관 · 외국인단체 · 지역주민 등과 협업

2. '25년도 추진 실적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

- (CPTED)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범죄 취약 중심으로 △ 범죄예방시설 설치 · 유지보수 △ 가로 환경 개선 등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

▶ (전북 군산) 외국인 밀집 주거 지역 內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지자체 협조로, 안심반사경 · 고보조명 · 솔라등 신규 설치 및 노후 보안등 ·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6천2백만원)



▶ (대구 성서) 초등학교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LED벽화 · 기초질서 준수 외국어 안내판 등 조성(3천만원)



○ (순찰 강화) 주요 취약장소 · 시간대 기동순찰대 및 내 · 외국인 자살방범대 등 인력 활용하여 가시적 순찰, 합동간담회 등 치안대책 논의

- ▶ (부산 동부) 경찰서장 주관 범죄예방 강화구역(외국인 안전테마 구역) 관련 기능별 범죄예방 대책 논의 및 자살방범대와 합동순찰

※ 합동순찰 중 미작동 보안등 등 범죄예방시설 점검 → 지자체에 통보, 개선 조치

- ▶ (인천 부평) 외국인 밀집지역인 '미얀마 거리' 일대 역전지구대장, 백운 파출소장, 시니어치안지킴이 등이 참여, 합동순찰 및 범죄예방 간담회 추진

※ 순찰시, 미얀마어 범죄예방 홍보 리플릿 자체 제작 · 활용



○ (범죄예방교육) 체류 외국인 ·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준법 의식 제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경기남부 안산단원) 중국, 러시아 등 국적의 외국인 · 다문화 청소년 대상 절도,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 관련 범죄예방 교육

- ▶ (경북 경주) 신경주대, 위덕대, 동국대 WISE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대상(약 600여명) △보이스피싱, 데이트폭력, 스토킹, 마약범죄 예방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법적 주의사항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 외국인 보호와 관련된 규정 안내 교육

※ 경주경찰서 · 市 · YMCA · 동국대 · 위덕대 협업 외국인 치안봉사대(13기) 발대,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 순찰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홍보활동 지원

○ (기타 특수시책) 지역별 치안특성을 분석, △기초질서 단속 △홍보 · 캠페인 △취약시간대 순찰 · 거점배치 강화 등 관서별 맞춤형 대책 추진

- ▶ (경상남도) 경찰, 외국인 유관기관 · 단체로 구성된 외국인 범죄예방 커뮤니티 'Global Net'(네이버 밴드)을 구성, 도내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 홍보(경상남도 가족센터와 협업, 13개국 범죄예방 교육자료 제작 · 공유) 추진

딥페이크(베트남어)	스미싱(태국어)	강제출국 제도(중국어)	외국인 마약(일본어)

- ▶ (경기남부 평택) 외국인 상점 밀집 구역 '명동골목'을 방문, 외국인 상인(20개 상점, 약 40여명) 대상 치안 불안요인 설문 및 범죄예방 홍보물 배포

3. '26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관리,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 (연중)

○ 경찰서별 △등록외국인 수 △외국인 관련 범죄·112신고 현황 △주민 여론 등을 종합, 범죄예방 강화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 검토

- 강화구역(외국인 안전 테마구역)별로 외국인 범죄 관련 인적 취약요소와 현장 점검시 확인한 물적(장소적) 취약요소를 관리

- △지자체와 협업하여 CPTED사업 추진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 등 인력 활용하여 순찰강화 △홍보·캠페인 등 종합적인 예방활동 전개

○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한 유관기관·외국인단체·이주민대표 간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내 외국인 문제해결

※ (주요 사례) 충남경찰청, 지자체, 이산가족센터, 선문대 등 관계기관 참여,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공유 및 기관별 외국인 관련 사업계획 공유 등 협력 방안 논의<충남 이산사>

▶(구성) 경찰서장 또는 범죄예방기능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국인 주민과 유관 기관(지자체, 고용노동청 등)을 필수 참여(외부위원 40% 이상)시켜 운영

▶(운영방식) 반기별 개최, 외국인 범죄·안전 관련 현안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

※ ① CPTED·합동순찰 등 유관기관 협력방안 ②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범죄예방 교육 ③ 내·외국인 합동행사 지원 ④ 외국인 관련 동향 파악 등

☐ 소요예산 : 총 94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도 (저브안)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94	94	94	0.0	
- 국 비	▪ 일반회계	94	94	94	0.0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 37개소×629천원×4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 제 명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산 출 근 거
'25	외 국 인 밀 집 지 역 관 리 강 화	범죄예방 강화구역 (외국인) 운영	운영 개소	24	37	현재 운영개소
'26	외 국 인 밀 집 지 역 관 리 강 화	범죄예방 강화구역 (외국인) 운영	운영 개소	40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2846
담 당 자	경위 이수진	이 메 일	sjl0528@police.go.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적극 참여, 체류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유통 등 각종 범죄 첩보 입수 및 단속

☐ 과제 내용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5개 부처) 참여를 통해, △(국민 안전 위협) 마약·테러, 대포차 등 △(국민 일자리 침해) 건설업·택배업 등 대규모 불법고용 업체 △(불법체류 조장 사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미풍양속 저해) 유흥·마사지 업소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류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합동단속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4년 과제 신설, 합동 단속에 참여하여 19,232명 적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주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추진절차 : 단속 계획수립 및 실시(법무부) → 각 부처 인력 지원 → 합동단속

2. '25년도 추진 실적

- 법무부 주관 단속에 참여하여 1~2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참여 현황〉 ※ '20~'21 미 실시(코로나19)

	'19년	'22년	'23년	'24년	'25년 1차
총 적발 인원(명)	2,806	3,865	20,947	19,232	11,253

※ '25년 제2차 단속 진행 중(9. 29.~12.5)

3. '26년도 추진계획

☐ 정책 여건

- 외국인 피의자는 동기간(1~8월) 대비 1.5% 감소(24,621 → 25,828명), 마약류 범죄의 경우도 동기간(1~8월) 대비 7.8% 감소

※ (외국인 마약사범): 전년 동기간(1~8월) 대비 1,292명 → 1,192명으로 100명(7.8%) 감소

☐ 추진 계획

- 제1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2/4분기)
 -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 병행)
- 제2차 정부합동단속 참여 (4/4분기)
 - 제1차 단속 결과 분석 후 4/4분기에도 단속 참여, 체류 외국인 범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력 제고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참여	참여 횟수	2회	2회	
'25		참여	참여 여부	참여	참여	
'26		참여	참여 여부	참여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전화번호	02-3150-2043
담당자	경감 박택순	이 메 일	pts0322@police.go.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체류 외국인 대상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범죄피해 예방
- 외국인 치안협력단체 활동 증진으로 외국인 관련 범죄 근절 협업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책임감 부여 등 견고한 치안공동체 구축에 기여

☐ 과제 내용

-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 운영) 법무부·외국인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자체 수요 발굴 등을 통해 체류 외국인 대상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 개최·운영
 - 외국인이 자주 접하는 생활 속 범죄 예방·대응 요령, 피해 신고·상담 가이드, 체류 외국인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치안정보 학습 기회 제공
- (외국인 치안협력단체 지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체계적 관리·운영, 현장 중심 범죄예방 활동, 교육·훈련 등 운영지원으로 치안협업 강화
 - 특히, △외국인 밀집지 중심 범죄예방 순찰(경찰 합동순찰 등) △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홍보 등 외국인 범죄예방에 특화된 치안활동 전개

☐ 과제 추진 경과 및 주체

- (추진 경과) '23년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3~'27년)」 수립·시행 이후 '24년부터 신규 세부과제로 선정
- (추진 주체) 경찰청,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경찰청 주관

2. '25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 '25. 1~8월 기준 총 49,463명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실시, 당초 '25년 목표치(49,000명)를 초과 달성

※ 특히, '외국인 관련 기관' 요청 수요가 대폭 늘어난 데는 각 경찰관서에서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 홍보를 활성화한 것도 상당 기여

구분	합계	기관 요청		자체발굴 *
		법무부	외국인 관련 기관 (대학교, 지원센터 등)	
'25년 1~8월	49,463명	1,245명	28,228명	19,990명
'24년 1~8월	34,993명	1,088명	15,004명	18,901명
'24년	49,101명	1,657명	19,332명	28,112명

* '농번기 계절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밀집 마을회관' 등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등

- (예산) 범죄예방 교육자료 제작, 사무용품 지원 등 관련 예산(138백만원) 시도별 적정 분배 및 전액 집행 완료

○ (외국인 자율방범대) 비자 문제 등 지속적·안정적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 모집 홍보 등 단체 유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 '25. 8월 기준 전국 총 59개 단체 · 1,453명 대원 활동 중으로 전년 대비 단체 수는 유사 수준이나 대원 수는 소폭 증가('24년 61개 단체 · 1,354명)
- 1개 단체 기준 月 평균 11.5h(月 6회×2h) 치안 활동 전개(전년도 수준), 주요 활동 유형은 △합동 순찰 △외국인 범죄예방 홍보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등

▶ (최근 3년간 월평균 활동시간) <'23년> 12.5h → <'24년> 11.5h → <'25년> 11.5h

▶ 내국인 자율방범대(월평균 28h)와 대조할 때 비교적 활동량은 저조, 체류 외국인은 생계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많은 시간을 방범활동에 할애하기 어려운 여건

<주요 활동사례>

❖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 '25. 9. 22. / 부산 초량동 외국인 자율방범대 외국인 활동이 많은 부산 동구 텍사스 거리·차이나타운 일대 범죄예방을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 자발적 결성(9. 18.), 합동순찰·기초질서 캠페인 전개	
❖ (경찰 합동 순찰) '25. 1. 23. / 경남 창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설 명절 연휴 기간 경찰 합동 관내 1인 가구 밀집지·상가 등 범죄 취약 지역 예방 순찰 활동, 범죄예방홍보 활동 등 특별치안활동 전개	
❖ (외국인 범죄예방 홍보·캠페인) '25. 5. 25. / 충북 음성 외국인 자율방범대 외국인 거주지역 일대 마약범죄 등 주요 외국인 범죄예방 홍보 활동	
❖ (글로벌 행사 안전관리 지원) '25. 5. 21. / 경남 진주 외국인 자율방범대 '제18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행사장 내 인파 관리·통역 안내 등 지원	

- (예산) 소모품·복장·장비 지원, 다국어 홍보 리플릿 제작 등 관련 예산(155백만원) 시도별 적정 분배 및 전액 집행 완료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 확대 등) 외국인 관련 기관 대상 제도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체 수요 발굴을 통해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적극 시행
 - * '국가별 명절', '농번기(계절 외국인노동자)' 등 외국인이 한데 모이는 시기를 활용
- 교육자료는 범죄 동향·치안 이슈·경찰 시책 등을 반영하여 최신화 하고, 체류 외국인 그룹별 맞춤형 교육 강화로 교육 효과성 제고
 - ※ (그룹별 중점 교육) 결혼이주여성·기정폭력, 외국인 근로자·임금체불, 외국인 유학생·학교폭력 등
-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실효화) 캠페인 등 일회성·이벤트성 성격의 행사보다 범죄예방 순찰 등 실질적인 치안 활동 참여 증진에 초점
 - 경찰관서·외국인 자율방범대 간 월별 순찰 활동계획 사전 협의, 외국인 범죄예방 관련 구체적 목표 공유 및 명확한 임무 등 부여
 - ※ 외국인 대표 등 외사치안협력위원회·지역 공동체치안협의체 등 참여시켜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수립
 - 정보(외사협력관)·여청(피해자보호) 기능 등 유관기능과도 연계하여 외국인 네트워크 정보 공유·지원기관 연계 등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역할 확대

☐ 소요예산 : 총 293백만원

구 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정부안)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293	293	293	00.0	
- 국 비	▪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138	138	138	00.0	경찰청
	▪ 외국인 협력 단체 지원	155	155	155	00.0	경찰청

☐ 산출내역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교육자료·사무용품 등 138백만원<53만원×259개소>
- (외국인 협력단체 지원) 소모품·장비 등 155백만원<(신호봉 20천원+전자호루라기 30천원+기타 소모품 등 50천원)×1,500개>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1~8월)	산출근거
'25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범죄예방교육	교육인원	49,000명	49,463명	외국인 관련 기관 요청 수요 등
'26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범죄예방교육	교육인원	55,000명		'24년 목표치 대비 10% 상승치

○ 외국인 협력단체 운영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협력단체 활성화	단체별 활동 실적	월 2회	월 6회	외국인 자방대 활동 여건 등 고려
'26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협력단체 활성화	단체별 활동 실적	월 15h		단체 기준 적정 월평균 활동시간*

* 단체 활동의 정량적 평가는 순찰 횟수보다 실질적인 활동시간 측정이 바람직(실적 측정 방식 변경)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2866
담당자	경감 어운성	이메일	koreacop113@police.go.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보호·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협업 지원 필요

□ 과제 내용

-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예방활동 및 보호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증가추이) '23년 18.1만명 → '24년 19.3만명 → '25년 20만명
-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는 언어 문제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자료 번역·제작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과제 추진 경과

- (교육부·여가부) '06년부터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한국사회 정착 지원
 - '12년 「청소년보호지원법(제18조·제30조)」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복지 지원 근거 마련
-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다문화가족 맞춤형 예방 활동 전개
 -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탈하는 다문화 청소년 증가, 학교폭력·소년범죄를 저지르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면담 등 재발방지

* 학업을 포기한 다문화 청소년 5,705명('16년~'20년 교육부 통계) 중 1,692명(29.7%)이 학교 내 차별·따돌림 등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정규교육 과정 이탈

*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 이중언어 강사를 통한 동시통역 예방교육 및 다국어 학교폭력 예방 안내서 제작 등 맞춤형 예방 활동 추진 등(대구경찰청)

**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표준 예방 교육자료」 베트남어 번역본 배포('24. 12월)

□ 추진주체 및 추진절차

- (추진주체) △ 교육부(교육정책·지원) △ 여성가족부(가정생활·상담·복지지원)
△ 경찰청(범죄예방·위기청소년 선도·보호)
- (추진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연락망 구축 → 다문화
위기청소년 발굴 → SPO와 1:1 면담 및 멘토링 → 전문기관 연계·지원

2. '25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 강화
 - (예방교육)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사이버
도박·딥페이크 등 급증하는 범죄에 대한 사례 중심 특별예방교육 실시
 - (사후관리) 前日 사건 전수점검·첩보수집 등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발생 사례를 조기 감지, SPO 면담 또는 선도제도 연계 등 사후관리
-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해 既 제작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 표준교육자료(PPT 12종)」 번역 지속 추진
 - ※ '25년은 중국어(1종)를 번역·제작하여 PPT·오디오·영상자료 배포

3. '26년도 추진계획

- (추진전망)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학생의 차지 비중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체 학생 수) '23년 521만명 → '24년 513만명 → '25년 501만명
·(다문화학생 수) '23년 18.1만명(3.5%) → '24년 19.3만명(3.7%) → '25년 20만명(4.0%)

-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다문화가족 내 교육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전국 성인남녀 대상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정교육 부재',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 '폭력적 대중매체 접촉' 順 응답

□ 주요 추진계획

○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

-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통역 지원 및 홍보자료 번역 등 맞춤형 예방활동 전개
- 다문화 청소년 및 학부모가 자가교육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표준교육자료(PPT 12종)」 번역본(베트남어·중국어) 적극 활용·배포

○ 다문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 다문화 위기청소년 발견 시 SPO 1:1 면담·멘토링 실시, 필요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연계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통역·상담 등 지원

□ 소요예산 : 총 1,313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 만원)		833	1,062	1,313	23.6	
- 국 비	▪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예방	525	571	571	0	
	▪ 위기청소년 선도 및 SPO 활동지원	308	491	742	251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예방교육횟수(회)	16,148	19,544	3년 평균 교육 횟수
'25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예방교육횟수(회)	16,633	17,783 (9월기준)	'24년 목표치 3% 상승
'26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예방교육횟수(회)	17,132	-	'25년 목표치 3% 상승

5. 담당자

소관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전화번호	02-3150-1384
담당자	경감 문 지 수	이 메 일	mjs4891@police.go.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해양경찰청

해 양 경 찰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1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안전한 해양 국경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강화
- ▶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주요 내용

- ▶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대응
 - 국제범죄 연관성이 높은 주변국(일·중·러) 범죄정보 공유 강화
 - 해·수산 종사 외국인 대상 간담회 등 커뮤니티를 통한 범죄 예방 및 관리 강화
- ▶ 안전한 해양 국경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등 신종 밀입국·밀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 및 단속활동 추진(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참여)
 - 각 지방청 주관 치안 수요에 따른 테마별 특별 단속 시행
 - 크루즈선 및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단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불법체류 행위 집중단속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648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649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652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653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2-2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653

I .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1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1개					00.0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0	0	0	0	0	
					0	0	비예산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 여건

○ 외국인 유입 가속화

- 국내 어선원 및 해운·물류 분야는 인력난으로 인해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등 외국인 선원의 고용 비율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 문제, 임금 체불, 선내 폭행 등 외국인 선원과 직·간접 연계된 다양한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해양 환경의 변화

- 동북아 해역은 주요 항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마약, 밀수, 밀입국 등 국제범죄 조직의 주요 해상 루트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며,
- 특히, 외국인 선원인 선원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거나 외국적 선박을 범죄에 활용하는 등 그 방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국가간 공조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 정책 전망

○ 다문화 현상 심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내국인의 인력 감소는 비가역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외국인 인력 의존도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외국인 선원 간의 갈등, 한국 문화 부적응 문제, 해양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新안보 위협 대두

- 날로 고도화되는 과학 기술 및 장비의 발전 등으로 선박의 자동화·편리성도 과거 대비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스마트폰·항해장비 등의 발달로 소형선박의 경우 누구든 쉽게 운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형 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의 시도 역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범죄단속 강화

- 다변화하는 국경범죄 대응 및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범죄정보 수집 활동,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 강화 등 적극적 단속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및 국민 생명·재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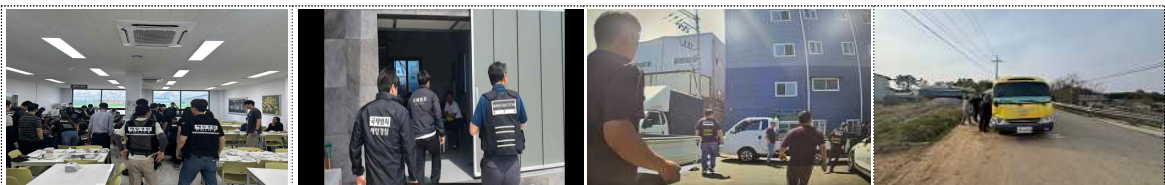
< 주요 범죄 검거 사례 >	
❖ '25. 1. 15. 18:45경 제주항에서 5톤 윈바디 화물차에 은신하고 여객선을 이용하여 제주 도외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 11명과 국내 운반책 1명 등 총 12명 검거	
❖ '25. 3. 8. 14:47경 인천 소청도 남동방 26해리 해상에서 고무보트 이용 밀입국 시도 중인 중국인 2명 검문검색 후 긴급 체포 등 밀입국 미수 사범 검거	
❖ '25. 9. 8. 07:56경 제주 한경면 해안가에 밀입국 의심 선박 발견, 수사 결과 중국 난통시 인근 해상에서 소형보트를 이용 출항하여 제주도로 해상 직접 밀입국 중국인 6명 검거	
❖ '25. 10. 5. 23:38경 육군 레이더기지에서 미식별 선박 확인 요청에 따라 도주하는 모터보트 추적 및 검문검색을 통해 중국 위해에서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 검거	

○ 범정부 합동단속 참여를 통한 안전한 이민 사회 구현

- 범정부 차원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법무부 등 관련기관 업무협약의 추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등 국경범죄 단속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 단속(1차)을 통해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등 단속·검거

√ 5개 권역별 단속전담반(79명) 구성, 불법체류 등 출입국문란사범 총 168명 검거



▲ 불법체류자 정부합동 특별단속

○ 국경범죄에 예방 활동 및 대국민 홍보 등 민·관·군 협력 강화

- 해상 밀입국·밀항·밀수 등 국경침해범죄 행위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및 대국민 신고 안내를 위한 해양 국제범죄 홍보활동 시행

■ 전국 주요 항·포구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국경범죄 취약요소를 최소화 하고, 범죄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유지 등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노력



▲ 유관기관(軍 부대 등) 전국 항포구에 대한 합동점검·분석 활동

■ 국경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 해·수산 종사 외국인 대상 간담회 등 커뮤니티를 통한 범죄 예방 및 관리 강화
- 국제범죄 연관성이 높은 주변국(일·중·러 등) 범죄정보 공유 강화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공조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범죄 대응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등 신종 밀입국·밀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단속활동 추진
-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 크루즈선 및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단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불법체류 행위 등 집중단속
- 국경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훈련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상반기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외사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상반기 테마·수요별 국제범죄 집중단속	외사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하반기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외사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2-2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	■ 하반기 테마·수요별 국제범죄 집중단속	외사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3-2-2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1. 과제의 개요

☐ 목적

-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항, 밀수 등 주요 국경침해 범죄 및 외국인 선원 증가에 따른 각종 범죄(인권침해, 임금 체불 등)의 선제적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 국경관리』를 위해 노력

☐ 과제 내용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테마형 국제범죄」 단속강화 계획 수립·시행으로 권역·시기에 맞는 국제범죄 유형을 분석, 주요 범죄테마 선정을 통한 중점 단속
- 전략적 해양 경비, 밀입국 등 국경범죄 취약개소 파악,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대국민 신고체계 활성화 등 세부 전략 수립 및 이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시행 계획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해양경찰청
- 추진절차 : 직접 수행

2. '25년도 추진 실적

- '25년 주요 정책추진 결과와 동일

3. '26년도 추진계획

- ☐ 밀입국·밀수 등 해양국경 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각 지방청 주관 치안수요에 따른 테마별 특별단속 시행
 - 법무부 주관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 참여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해양국경수호	지방청 별 외국인(대상)범죄 특별단속 횟수(회)	8회	10회	시행 공문
'25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해양국경수호	지방청 별 외국인(대상)범죄 특별단속 시행(회)	8회	10회	시행 공문
'26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해양국경수호	지방청 별 외국인(대상)범죄 특별단속 시행(회)	8회		

5. 담당자

소관부서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 외사과	전화번호	032-835-2269
담당자	경사 신민섭	이메일	backsb37@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국세청

국 세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1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주요 내용

● 불법 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공유 (법무부 업무협약)

※ 법무부가 국세청에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¹⁾요구 법적근거, ²⁾자료종류 및 범위, ³⁾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과세정보 사전수요 신청 시 제공 여부 검토 예정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658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658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660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661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2-1-②-③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감독 및 정보 공유	661
2-2-①-②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663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1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0개					00.0	'의 경우' △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2)						
2-1-2-3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감독 및 정보공유						비예산
2-2-1-2	상설협의체 구성 등 외국인 세금 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비예산 종료('25)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 정책여건
 - 외국인 체류인구가 260만 명을 초과하며 대한민국은 실질적 이민사회로 진입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체류유형이 다양화되고, 지역사회 내 상호이해 및 통합 필요성이 확대

○ 불법체류자 수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약 15% 수준으로 증가 추세

- 인권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간 균형 있는 정책 대응 필요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 25년 주요과제 성과

- 해당 없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이민 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법무부가 국세청에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¹⁾요구 법적근거, ²⁾자료종류 및 범위, ³⁾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과세정보 사전수요 신청 시 제공 여부 검토 예정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계획	없음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계획	없음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1-2-3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공유	■ 법무부에 과세정보 사전수요 신청안내	원천세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0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추진계획	없음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1-2-3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및 질서 있고 정교한 체류관리 체계 구축으로 불법체류 환경억제

☐ 과제 내용

-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년 과제 설정, 2023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수록
 -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업체의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국세청에 없으며,
 - 고용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거짓 비용 계상,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 따라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법무부에 안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협업 요청) → 국세청
- 추진절차 :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사전 업무협의

2. '25년도 추진 실적

☐ 추진 실적 없음

3. '26년도 추진 계획

- ☐ 법무부가 국세청에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자료를 ¹⁾요구 법적근거, ²⁾자료종류 및 범위, ³⁾활용 목적 등을 갖추어 과세정보 사전수요 신청 시 제공 여부 검토 예정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6년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감독 및 정보공유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 안내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 안내 실적	1회	1회	안내 결과 보고서

5. 담당자

소관부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전화번호	044-204-3352
담당자	5급 박상준	이메일	ntskorea1@nts.go.kr

2-2-1-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상설협의체 구성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외국인은 체납 발생 후 출국할 경우 사실상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불가하므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방안이 필요

☐ 과제 내용

- 적시에 출국 규제하여 외국인 체납자가 강제징수 회피 목적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시도를 차단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2년 과제 설정
- 2023년 전산연계시스템 개발 검토
 - 체납세금이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즉각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징수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전산시스템상 전산 연계가 곤란하며,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전산 연계 무산
- 2024년 외국인 세금체납 제재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건의 추진
 -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 하향을 위해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국세청 → 법무부(협업 요청), 기획재정부(법령개정 등 요청)
- 추진절차 : 전산 연계 등을 위한 협의 → 상설협의체 구성 → 법령 및 제도 개선

2. '25년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과제 종료)

3. '26년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3년	외국인 체납세금 방지시스템 마련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 개최 실적	1회	1회	회의보고서
'24년	외국인 체납세금 방지시스템 마련	법령개정 추진	법령개정안 제출 및 법령개정 건의	각 1회	1회	법령개정안

5. 담당자

소관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전화번호	044-204-3017
담당자	5급 성기원	이메일	skw0821@nts.go.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1	100%	비예산	비예산	
1. 경 제					
2. 안 전	1	100%			
3. 통 합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입국과 검역 절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주요 내용

- ▶▶ CIQ 등 관계부처 간 정보제공 체계 강화
 - 감염병 확진자, 접촉자, 중점관리 대상 등 입국자에 대한 관계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
- ▶▶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 개최
 - 전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모니터링 및 방역조치 협의 등 (반기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668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669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670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671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2-3-①-④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671

I .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1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0)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1)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0)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1개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1)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비예산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정책여건

- 국내외 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경 간 이동 확대, 코로나19 이후 신변종 감염병의 위협으로 인한 국경지점에서의 입국과 검역절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필요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법적 근거 마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방역 대응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운영 근거와 기능 제도화를 위해 「검역법」 개정 추진('25. 3. 의원 발의)
- 분기별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공유
 - 전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한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법무처에 안내하여 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 및 안정적인 국경 관리 체계 운영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 여행자 중심의 검역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행자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 등을 구축 중이며 법무처 검역 대응·협력 조정 체계 기반 마련 지속 추진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안내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안내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개최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안내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1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안내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개최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3-1-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유기적 연계]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입국심사와 검역절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 과제 내용

-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한 공항만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 중점관리 대상 입국자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
 - 넥스트 팬데믹 대비 관계 부처 신속 협력체계 구축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2020.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법무부 방역 행정응원 시행(격리통지서 교부 및 입국자 정보 지자체 제공 등)
- 2020.7.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한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체 운영 시작
- 2022.4.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법무부 방역 행정응원 종료
- 2023.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내 세부추진과제 수록
- 2024.7.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정보 운영 협의회 구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질병관리청, 법무부, 관세청 등
- 추진절차 :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2. '25년도 추진 실적

☐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관리지역 지정 안내(분기별 1회 이상)

- 검역감염병의 국외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분기별 1회 정기 안내 및 최신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수시 안내(3회) 추가 실시

* (정기) 1분기 안내('24.12.16), 2분기 안내('25.3.25), 3분기 안내('25.6.23), 4분기 안내('25.9.23)

** (수시) 에볼라바이러스병('25.2.25), 치쿤구니아열('25.7.31), 니파바이러스('25.9.1)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정기 개최(반기별 1회)

-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 및 안전 수요조사, 의견조회 등 위기 시 대비를 위한 정기적 관계부처 간 회의 개최

* 제128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25.6.24.), 제129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25.12월 예정)

3. '26년도 추진계획

☐ CIQ 등 관계부처 간 정보제공 체계 강화

- 감염병 확진자, 접촉자, 중점관리 대상 등 입국자에 대한 관계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 추진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개최 지속

- 반기별 관계부처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모니터링 및 방역조치 협의(반기 1회 개최)

☐ 소요예산 : 해당 없음

☐ 산출내역 :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 치*	실적	산출근거
'23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율(%)	100%	100%	법무부 참여율 (13회 전수 참여)
'24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율(%)	100%	100%	법무부 참여율 (4회 전수 참여)
'25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율(%)	100%	100%	법무부 참여율
'26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유기적협력체계 운영 강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참여율(%)	100%	100%	법무부 참여율

5. 담당자

소관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전화번호	043-719-9203
담당자	5급 정우재, 7급 양은아	이 메 일	aaassa@korea.kr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재 외 동 포 청

재 외 동 포 청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6	100%	1,349	4,186	210.3%
1. 경 제	1	16.7%		3,090	100%
2. 안 전	3	50%			
3. 통 합	2	33.3%	1,349	1,096	△ 18.8%
4. 인 권					
5. 협 력 / 인프라					

추진 방향

- ▶▶ 국내 체류 동포 지원 확대
-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및 이해도 제고

주요 내용

- ▶▶ 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 장학생 및 취업훈련생 선발·관리,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체계 수립, 취업 및 정착지원을 위한 지자체·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및 이해도 제고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지속 확대 실시('25년 70회 → '26년 74회)
 - 재외동포 이주 역사의 배경 등 국내 교과서 수록 추진
- ▶▶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지속 추진
 - 국내 거주 동포 관련 지자체·민간단체 사업 지원 및 협업 추진
 - 국내 거주 동포 맞춤형 교육과정 고도화 및 과목 개발

|| 목 차 ||

I . 2026년 시행계획 총괄	677
I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678
III . 주요정책 추진계획	682
IV .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684
1.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1-2-④-⑥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684
2.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2-2-①-⑥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686
2-2-①-⑦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689
2-2-①-⑧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691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3-4-②-③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693
3-4-②-④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사업 추진	697

I.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과제 수 : 6개

- ☐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개
- ☐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3)개
- ☐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2)개
- ☐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0)개
- ☐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0)개

2.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추진과제명	예산					비고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	
합계	6개	-	227	1,349	4,395	225.8	
소계	1.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1)	-	-	-	3,090	순증	
1-2-4-6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	-	-	3,090	순증	신규
소계	2.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3)	-	-	-	-	-	-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	-	-	-	비예산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	-	-	-	비예산
2-2-1-8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	-	-	-	-	비예산
소계	3.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2)	-	227	1,349	1,305	△3.3	-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227	253	209	△17.4	-
3-4-2-3	- 교과서 수록, 학술포럼 등 인식 개선	-	193	218	168	△22.9	-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34	35	41	17.1	-
3-4-2-4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	1,096	1,096	0.0	-

II. '26년 시행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전망

☐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 시급

- 저출생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 역동성 저하

* 생산연령 인구(15세-64세) 전년대비 : ('21년)△14만1천명, ('23년)△27만7천명

- 우수 재외동포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여 경제활동 인구 유입에 기여할 필요

☐ 복수국적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국회 등의 관심 강화

- VIP, 미국 동포간담회 시('25.8.24.)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해결” 언급*

*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해결될 순 없겠지만, 재미동포 분들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취지의 「국적법」 개정안 여·야 발의('25년 2건)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7월, 65세→55세),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9월, 65세→50세)

☐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책 공감대 지속 확산 필요

-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가 상승하는 등 정책적 공감의 확산 추세를 확고히 할 필요

<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 결과('24년) >

구 분	점 수		증 감 (B-A)
	2023년도(A)	2024년도(B)	
전 체	59.2	60.7	1.5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의식(25%)*	64.6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25%)**	54.7	57.0	2.3
재외동포의 한국사회 기여도(25%)***	56.6	58.9	2.3
재외동포정책 관련 기본 방향(25%)****	60.7	66.4	5.7

* 해외 이민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

** 재외동포에 대한 한민족 동질감 여부,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 / 친근감 정도 등

*** 재외동포가 한국의 발전(독립운동, 이미지개선, 기업 해외진출) 등에 기여하는 정도

**** 현재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정도 등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

- 한국의 선진국 진입 및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모국으로 귀환하는 재외 동포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21년) 78만명 → ('22년) 80만명 → ('23년) 85만명 → ('24년 및 '25년 8월말) 86만명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 수요 대두

2. '25년 주요정책 추진결과

□ '25년 주요과제 성과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기반 마련

- ('26년도 신규사업 추진) 인재 유치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30.9억원) 확보 완료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중(관련기관 및 전문가 면담 등)

-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 (제도 홍보·설명 강화) 국적제도 미숙지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통합 민원 서비스*」 실시 및 재외공관에 안내문 등 자료 배포

* 재외동포청이 직접 재외동포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찾아가 국적·병역·가족 관계 등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제공

- (안정적 정착 지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심의하는 국적심의 위원회 참여, 동포사회의 입장을 대변한 우리 청 의견 적극 개진

※ 재외동포청은 국적심의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지정됨('24.7.20.)

- (복수국적 제도개선)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25.7., '25.9.), ▲신정부 국정과제(123번) 주요 내용에 '복수국적제도 개선' 포함('25.9.)

-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활동 추진

- (국내 교과서 수록 추진)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사회과교육 연구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재외동포청 세션 운영('25.8.), ▲'26년 발간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 내용 반영 추진** 중

*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반영 방안 연구』('25.3.)

** 콘텐츠(읽을거리) 반영 관련 현장 적합성 검토 완료('25.7.), 심의·감수 중

- (이해교육 실시) 초·중·고등·대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70회 실시하여, 국내·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추진) 국내 대표적인 학회* 등 정책전문가 집단과의 국내·외 학술대회 연계를 통한 재외동포정책 공동체 구축 및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향상 추진
-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재외한인학회 등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세미나 추진 현황 >

일정	협력기관	주제(안)
2.10.(월)	인천대학교	재외동포 이해와 정책 이슈
4.25.(토)	한국정책학회	재외동포 정책의 통합적 발전과 실행 전략
7.14.(월)	한국정치학회	‘제28차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 연계 진행
8.30.(토)	한국사회과 교육연구학회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반영 방안(사회과)
9.2.(화)	국회 (이재강 위원실 외)	제주 4·3 재외한인 및 해외입양인의 권익 증진
11.1.(토) 예정	재외한인학회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관련 주제 등
12월 중(예정)	한국사회학회	재외동포의 국내동포 정착 관련 주제 등

○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25년도 신규사업)

- 지자체 거주 동포 정착지원 사업(15개 지자체*/16개 사업) 지원
- * 선정 지자체 : 시흥, 안산, 김해, 양산, 경북, 경주, 광주, 광주 광산구, 인천, 전북, 군산, 충북, 제천, 청주, 음성
- 국내 거주 동포 관련 민간단체 11개 사업 지원
 - 국내 거주 동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12월 완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복수국적 허용연령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미비
- 적극적인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
- 재외동포 인식 제고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 및 주요언론에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
-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토대로 정정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 활동 실시

- 국내 거주 동포가 밀집 거주 중인 일부 기초지자체는 조직·예산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항

- 지자체별 예산 상황을 감안한 국고보조율(현행 50%) 상향 추진

3. '26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본격 실시

: '국내 유입 → 적응 → 취업 → 정주'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동포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 등 지원, 한국어 및 한국이해 교육과 함께 개별 학교의 학업 적응 지원
-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청년 대상 취업 교육·훈련비 지원, 커리어 멘토링, 동포 특화 취업설명회 개최 및 취업매칭 강화 등 취업연계 지원
-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추진, 정주·생활지원 등 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거주·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국적제도 관련 재외동포 애로사항 최소화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모색

- 관계부처 TF,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법무부·복지부·병무청 등과 협의 지속 추진,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및 이해도 제고

-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조성을 위한 내국민 대상 교육 활동 실시
 - 국내 교과서 수록 지속 추진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 이주역사의 배경, 모국 발전 기여 사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지속 확대 실시('25년 70회 → '26년 74회)

☐ 국내 거주 동포 정착지원 지속 추진

- 국내 거주 동포 관련 지자체·민간단체 사업 지원 및 협업 추진
 - 국정과제(123번 재외동포 지원 강화) 이행을 위한 국내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지자체·민간단체와 협업 강화
- 국내 거주 동포 맞춤형 교육 과정(고도화) 및 과목 개발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1. 1/4분기 주요 추진계획 (5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6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 대학(원)생 및 취업훈련생 선발 심사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병역 설명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3-4-2-3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추진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상반기 수요조사 및 교육 일정 수립 ■ 학술포럼(세미나) 실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4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지원(선정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 동포 맞춤형 교육 과정(고도화) 및 과목 개발 연구용역 실시 ■ 민간단체 보조사업 공모 및 심의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 TF팀

2. 2/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6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 대학(원)생 및 취업훈련생 선발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 병역 설명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8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상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상반기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및 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 학술포럼(세미나) 실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4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지원(현장 점검) ■ 동포 맞춤형 교육과정(고도화) 및 과목 개발 시범운영 실시 ■ 민간단체 보조사업 시행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 TF팀

3. 3/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6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 선발 학생 및 취업훈련생 국내 적응 지원(사무국 운영 등)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병역 설명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8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상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관련 간담회, 학술행사 등 개최 ■ 하반기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교육 일정 수립 및 실시 ■ 학술포럼(세미나) 실시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실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4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지원(보조금 2차 교부) ■ 동포 맞춤형 교육 과정(고도화) 및 과목 개발 배포 ■ 민간단체 보조사업 성과 중간 점검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 TF팀

4. 4/4분기 주요 추진계획 (6개)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계획	담당부서
1-2-4-6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 선발 학생 및 취업훈련생 국내 적응 지원(사무국 운영 등)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병역 설명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2-2-1-7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2-2-1-8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개선	■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상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3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관련 간담회, 학술행사 등 개최 ■ 하반기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 학술포럼(세미나) 실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3-4-2-4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 사업별 결과 보고 및 평가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 TF팀

IV. 세부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2-4-6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및 국가경쟁력 제고, △과거 재외동포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선제적인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추진

☐ 과제 내용

-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학업 및 취업·정착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 양성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123번) 동포역량 극대화(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정착 지원)

※ 대통령 공약사항 :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유치·정착 프로그램 확대·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 추진절차 : 선발계획 수립 → 장학생 및 취업훈련생 모집공고 → 장학생 및 취업훈련생 선발 → 사업 추진

2. '25년도 추진 실적(신규사업)

-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사업 '26년 예산(정부안) 확보(30.9억원)

- ☐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및 전문가* 면담(9월)

*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3. '26년도 추진계획

- ☐ 장학생 및 취업훈련생 선발·관리(연중)
- ☐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체계 수립(연중)
 - 직업훈련기관 연계, 산업체와의 MOU 체결 등
- ☐ 취업 및 정착지원을 위한 지자체·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연중)
- ☐ ‘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연중)
- ☐ 소요예산 : 총 3,090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고
예 산(단위:백만원)					3,090	순증	신규
- 국 비	▪ 일반회계				3,090	순증	신규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 산출내역('26년 정부안 기준)
 - (학업지원) 2,245백만원 / (취업지원) 845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6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학업·취업·정착 지원 강화	누적 수혜자 수	200명	-	관련 문서 (결과보고서 등)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8
담당자	4급 김가이	이 메 일	kkasey0728@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제도 이해 제고를 통한 재외동포 피해 최소화

☐ 과제 내용

- 안내자료 배포, 재외공관 안내 강화 등 복수국적제도 홍보 활동 추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24.1월)
-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반영('24.9월)
-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반영('25.2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법무부(협업), 병무청(협업)
- 추진절차 :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한 국적·병역 제도 설명, 재외공관 등을 통한 홍보

2. '25년도 추진 실적

☐ 국적·병역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강화

- 재외동포 거주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온·오프라인)를 활용하여 국적·병역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제공

구분	회차	일시	대상
온라인	제1차	'25.1.21.	일본(주나고야(총), 주니가타(총), 주삿포로(총))
	제2차	'25.3.25.	서남아(주스리랑카(대), 주인도(대), 주뭄바이(총))
	제3차	'25.4.24.	홍콩(주홍콩(총)), 카자흐스탄(주알마티(총))
	제4차	'25.6.25.	라오스(주라오스(대))
	제5차	'25.6.30.	체코·스페인·바르셀로나 브리즈번(병무청과 협업)
	제6차	'25.9.24.	과테말라(주과테말라(대))
	제7차	'25.10.15.	인도네시아(주인도네시아(대))
	제8차	'25.10.28.	미국(주호놀룰루(총))
오프라인	제1차	'25.3.11.-3.13.	우즈베키스탄(주우즈베키스탄(대))
	제2차	'25.6.15.-6.19.	멕시코(주멕시코(대))
	제3차	'25.9.4.-9.6.	태국(주태국(대))
	제4차 ^{예정}	'25.11.5.-11.7.	싱가포르(주싱가포르(대))

○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병역 제도 홍보 강화

- 재외공관에 국적·병역제도 관련 자료* 배포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안내문(2월), 국외병역자원 관리 업무 매뉴얼(3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 및 절차 안내(3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6월), 국적 및 병역 안내서(7월), 국외여행허가 등 관련 법령집(7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리플릿(8월), 국외여행허가제도 홍보 영상(8월) 등

- 순회영사 활동 중 국적·병역 제도 안내

3. '26년도 추진계획

☐ 국적·병역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강화

○ 재외동포 거주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온·오프라인)를 활용하여 국적·병역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제공

○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병역 제도 홍보 강화

- 재외공관에 국적·병역제도 관련 자료 배포

- 순회영사 활동 중 국적·병역 제도 안내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이해 제고를 통한 피해 방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3회	3회	관련 문서
			국적·병역 제도 안내서 배포 등 재외공관 홍보 독려	4회	4회	관련 문서
'25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이해 제고를 통한 피해 방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8회	12회*	관련 문서
			국적·병역 제도 안내서 배포 등 재외공관 홍보 독려	4회	8회	관련 문서
'26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 홍보·설명 강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이해 제고를 통한 피해 방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9회	-	관련 문서
			국적·병역 제도 안내서 배포 등 재외공관 홍보 독려	4회	-	관련 문서

* '25.9. 기준 9회 개최, '25.12.까지 3회 추가 개최 예정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전화번호	032-585-3182, 3183 02-6399-7167
담당자	5급 윤현주, 박현옥, 고경순	이 메 일	bonita402@korea.kr angela70@korea.kr kokes@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재외동포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지원

☐ 과제 내용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등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적심의위원회에 의견 적극 개진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24.1.)
- 국적심의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정책국장) 위촉('24.7.20.)
 - ※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24.7.20.)
-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반영('24.9.)
-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반영('25.2.)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재외동포청 · 법무부 협의

2. '25년도 추진 실적

-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허가 사항의 유연한 적용 및 재외동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국적심의위원회 참여

- 2025년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동포 구제를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유연한 적용 등 의견 적극 개진

* '25년도 제1회 국적심의위원회('25.3.13.^{분과위}, 3.27.^{본회의}), 제2회 국적심의위원회('25.6.26.^{분과위}, 7.10.^{본회의}),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25.11.6.^{분과위}, 11.20.^{본회의})

3. '26년도 추진계획

☐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의 유연한 적용 등 동포 사회의 입장 대변한 우리 청 의견 적극 개진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재외동포 구제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4회	3회	관련 문서
'25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재외동포 구제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3회*	3회**	관련 문서
'26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재외동포 구제	국적심의위원회 참석	3회***	-	관련 문서

* '25년 국적심의위원회 실제 개최 횟수에 따라 목표치 수정(4회→3회)

** '25.9월 기준 2회 참석, '25.11. 참석 예정

*** '26년 국적심의위원회 실제 개최 횟수에 따라 목표치 변동 가능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전화번호	032-585-3181
담당자	7급 김은정	이메일	eunj127@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국익 증진

☐ 과제 내용

-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관계부처(법무부 등)와 협업하여 복수국적제도 개선 방안 모색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24.1.30.)
-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완료('24.11.)
- 관계부처 재외동포 TF 구성·운영('25.7., '25.9.)
- 신정부 국정과제(123번) 세부실천과제에 '복수국적제도 개선' 포함('25.9.)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법무부(협업)
- 추진절차 : 제도 개선 검토 및 관계 부처·기관 협업

2. '25년도 추진 실적

☐ 관계부처 재외동포 TF* 구성·운영

* 비자 통합 및 복수국적제도 개선 TF(단장-동포청 차장, 관계부처 국장 참석)
: 대통령실, 재외동포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고용노동부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H-2, F-4 비자통합 포함) 관련 부처 간 회의 시행(1차(7.25.), 2차(9.4.))

※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거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8.7.)에서도 동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

- ☐ 신정부 국정과제 123번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의 세부실천과제에 ‘복수국적제도 개선’ 포함(‘25.9.)

《 미국(워싱턴D.C., ‘25.8.24.) 동포간담회 시, VIP 언급 사항》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해결될 순 없겠지만, 재미동포 분들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3. '26년도 추진계획

- ☐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법무부·복지부 등과 제도 개선 방안 협의(연중)
- ☐ 설명·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연중)
- ☐ 소요예산 : 비예산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피해 최소화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2회	2회	관련문서
'25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피해 최소화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3회	3회	관련문서
'26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피해 최소화	제도 개선 관련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4회	-	관련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과	전화번호	032-585-3158
담당자	4급 이명재	이메일	mjlee2036@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과의 유대감 및 사회 통합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내국민의 지지 확보
- 국내 학생, 국민, 공무원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및 재외동포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기반 마련

☐ 과제 내용

-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 관련 기관, 교사, 교과서 집필진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학술행사 등을 개최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학생(초·중·고 및 대학), 국민,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재외동포 역사·모국발전 기여 사례 강의
 - (학생 및 국민) 재외동포 관련 강사 파견 및 강연 시행
 - (공무원) '나라배움터' 내 재외동포 이해교육 이러닝 콘텐츠 활용 교육 시행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재외동포 학술포럼 또는 간담회 개최 등
 -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재외동포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 학회, 연구소 등 관련기관·단체와 공동개최 시행 검토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시행을 통하여 재외동포, 우리 국민, 전문가 등 대상으로 주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종합 만족도 등 조사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24.1.30.)
-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유관기관(교육부, 국내 대학 등), 전문가 단체
- 추진절차
 - (교과서수록) 관계기관과 협업 추진
 - (이해교육) 수요조사 실시 → 일정 수립 및 강사 매칭 → 이해교육 강연 시행 → 결과 보고
 - (학술 포럼, 정책 만족도 조사 등) 용역 수행기관 선정 → 계약 체결 → 용역·행사 실시 → 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

2. '25년도 추진 실적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추진

-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재외동포청 세션** 운영('25.8.)

*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반영 방안 연구』('25.3.)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25 연차학술대회」와 연계하여 <탈경계 시대의 재외동포 이해교육(사회과)> 주제로 동포청 세션 운영

- 국내 교과서 내 재외동포 내용 수록* 관련, 교육부와 지속 협의

* '26년 발간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 내용 반영 추진 중, 콘텐츠(읽을거리)에 대한 현장적합성 검토 완료('25.7.), 심의·감수 중

- 총 66개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70회* 실시

* 대학교(20회), 고등학교(5회), 중학교(15회), 초등학교(30회)

- 총 7회에 걸쳐 학회, 대학교, 국회와 협력하여 학술포럼, 정책포럼 실시

3. '26년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교과서 수록 추진(연중)

- △국내 교과서 내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산 추진, △차기 개정 교육과정 및 학습 성취기준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한 학술행사 등 개최, △교육부 지속 협의 등

☐ 수요조사를 통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추진

- (1분기) 상반기 수요조사 시행 및 교육일정 수립
- (2분기) 상반기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및 하반기 수요조사 시행
- (3분기) 하반기 교육일정 수립 및 재외동포 이해교육 시행
- (4분기) 재외동포 이해교육 전문가 업무협의 및 결과 보고 실시 소요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세미나 추진(연중)

- 전문기관 및 정책전문가 집단의 국내·외 학술대회 연계를 통한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향상 추진
- 재외동포 사회 위상 변화, 국내 체류 동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수요 증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주제 선정

☐ 소요예산 : 총 209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	227	253	209	△17.4	
- 국 비	▪ 일반회계	-	227	253	209	△17.4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세미나 128백만원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 41백만원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40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4	재 외 동 포 에 대 한 인 식 개 선	재 외 동 포 에 대 한 긍 정 적 인 식 확 산	정책학술포럼 개최/ 홍보콘텐츠 개발/ 만족도 조사 실시	각 1회	1회/ 2회	관련 문서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및 동포정책 추진 기반 마련	「찾아가는 재 외 동 포 이 해 교 육」 실적	20	27	관련 문서
'25		재 외 동 포 에 대 한 긍 정 적 인 식 확 산	교과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정책학술포럼 개최/ 만족도 및 인식개선 조사 실시	각 1회	1회/	관련 문서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및 동포정책 추진 기반 마련	「찾아가는 재 외 동 포 이 해 교 육」 실적	24	70	관련 문서
'26		재 외 동 포 에 대 한 긍 정 적 인 식 확 산	교과서 관련 간담회, 학술행사 등 개최 / 정책학술포럼 개최/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실시	각 1회	1회/	관련 문서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환경 및 동포정책 추진 기반 마련	「찾아가는 재 외 동 포 이 해 교 육」 실적	74	-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과	전화번호	032-585-3155 032-585-3157
담당자	5급 김성준, 6급 장현석	이 메 일	sjkim0303@korea.kr hsjang23@korea.kr

1. 과제의 개요

☐ 목적

- 국내 거주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주·정착 지원 및 권익 신장 도모

☐ 과제 내용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진
 - 동포 다수 거주지역,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수행(지자체 보조)
- 국내 거주 동포 맞춤형 교육 과정(고도화) 및 과목 개발
 - 교과 과정 고도화(청소년 대상 심화·선택 과목 개발)
 - 노년층·성인층 맞춤형 교과목 신규 개발
- 국내 소재 동포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민간단체 보조)

☐ 과제 추진 연혁(경과)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24.1.30.)
- '25년 사업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외동포청, 지자체, 국내 민간단체, 연구 용역 기관 등
- 추진절차
 - (지자체지원) 사업 공모 → 선정위원회 개최 → 보조금 지급 → 결과 보고
 - (교육과정) 조달청 입찰 → 계약 → 연구용역 → 시범 운영 → 결과 보고
 - (단체지원) 사업 공모 → 심의위원회 개최 → 보조금 지급 → 결과 보고

2. '25년도 추진 실적

☐ 국내 거주 동포 지원 확대

○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거주 동포 정착지원 사업(15개 지자체/16개 사업) 지원
 - 선정 지자체 : 시흥, 안산, 김해, 양산, 경북, 경주, 광주, 광주 광산구, 인천, 전북, 군산, 충북, 제천, 청주, 음성
- 국내 거주 동포 관련 민간 단체 11개 사업 지원
- 국내 거주 동포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12월 완료)

3. '26년도 추진계획

☐ 국내 거주 동포 지원 확대

- (1분기) △지자체 보조금 교부 △동포 맞춤형 교육 과정(고도화) 및 과목 개발 연구용역 실시 △민간단체 보조사업 공모 및 심의
- (2분기) △지자체 보조사업 현장점검 △동포 맞춤형 교육 과정(고도화) 및 과목 개발 시범운영 실시 △민간단체 보조사업 시행
- (3분기) △지자체 보조사업 중간보고 및 보조금 2차 교부△동포 맞춤형 교육 과정(고도화) 및 과목 개발 배포 △민간단체 보조사업 성과 중간 점검
- (4분기) △사업별 결과 보고 및 평가

☐ 소요예산 : 총 1,096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증감율(%)	비 고
예 산(단위:백만원)		-	-	1,782	1,782	0.0	
- 국 비	▪ 일반회계			1,096	1,096	0.0	'25년신규
	▪ 특별회계						
	▪ 기 금						
- 지방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국내 거주 동포 지원 확대

- (지자체 보조사업) 18개 지자체 × 38.1백만원 = 686백만원

※ 지자체도 국고보조 외 지방비로 686백만원 편성

-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1식 × 355백만원 = 355백만원

- (민간단체 보조사업) 14개 사업 × 3.6백만원 = 51백만원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 도	과제명	성 과목 표	성 과지 표	목 표치	실적	산출근거
'25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 추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관계부처·기관 등과의 협의 횟수	3회	-	가최 횡수 (관련 문서)
'26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사업 추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관계부처·기관 등과의 협의 횟수	5회	-	가최 횡수 (관련 문서)

5. 담당자

소관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국내동포지원TF팀	전화번호	032-585-3281, 3283
담 당 자	6급 김나영, 김성환	이 메 일	nykim23@korea.kr willjurist@korea.kr